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와 공동행동
非核·平和のための日韓市民社会の連帯と共同行動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포럼

非核・平和のための
日韓国際フォーラム



| 2019년 5월 30일(목) ~ 31일(금), 서울

| 2019年 5月 30日(木) ~ 31日(金), ソウル

프로그램

Program

5/30(木)

10:00~12:30	전체회의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6층 성당
14:00~17:00	주제별 워크숍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①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해, 한반도와 일본에 비핵·평화의 확립을 ② 격동의 동아시아, 한일 시민사회 연대의 과제 ③ 한일 여성 연대를 통한 동북아시아의 비핵화, 평화, 성평등을 향하여 ④ 핵의 반인도적, 반환경적 영향

5/31(金)

10:00~12:00	전체회의 및 폐회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
13:00~14:00	기자회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プログラム

5/30(木)

10:00~12:30	全体会議 フランシスコ教育会館聖堂（6階）
14:00~17:00	分科会(Workshop) フランシスコ教育会館 ① 核兵器のない世界にむけて、日本と朝鮮半島に非核・平和の確立を ② 激動の東北アジア、日韓市民社会連帯の課題 ③ 日韓女性連帯を通じた東北アジアの非核、平和、ジェンダー平等 ④ 核の非人道的、反環境的影響：被爆、核被害

5/31(金)

10:00~12:00	全体会議・閉会 ソウル市庁（市民庁）テピョンホール
13:00~14:00	記者会見 光化門、世宗文化会館前の階段

목차

	Opening (한국여성단체연합, 전일본민의원) 11
	연대발언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 21
	전국노동조합총연합 오다가와 요시카즈 의장 (전쟁하게 하지 마라·9조를 부수지 마라! 총궐기행동실행위원회 공동대표) 3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상진 부위원장 42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 야스이 마사카즈 사무국장 47
Keynote Speech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김강연 사무처장 53
	신일본부인회 카사이 키미요 회장 60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원익선 교무 65
	조셉 거슨 미국 친우봉사회(AFSC) 안보경제프로그램 디렉터, 평화와 군축 및 공동안보캠페인 대표 71
	①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해, 한반도와 일본에 비핵·평화의 확립을 91
주제별 워크숍	② 격동의 동아시아, 한일 시민사회 연대의 과제 105
	③ 한일 여성 연대를 통한 동북아시아의 비핵화, 평화, 성평등을 향하여 133
	④ 핵의 반인도적, 반환경적 영향 185
	공동주최단체 소개 및 메시지 263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국제포럼 실행위원 명단 263

目次

	Opening (韓国女性団体連合, 全日本民医連)	11
	連帯発言 (韓国原爆被害者協会, 日本原水爆被害者団体協議会)	21
	全国労働組合総連合議長 小田川義和 (戦争させない・9条壊すな!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 共同代表)	32
	全国民主労働組合総連盟(民主労総)副委員長 イ・サンジン	42
	原水爆禁止日本協議会事務局長 安井正和	47
Keynote Speech	平和と統一を開く人々事務処長 キム・ガンヨン	53
	新日本婦人の会会長 笠井貴美代	60
	円仏教ソングジュ聖地守護非常対策委員会 円仏教教務 元永常	65
	米国親友奉社会(AFSC)安保経済プログラムディレクター, 平和と軍縮及び共同安保キャンペーン代表ジョセフ・ガーソン	71
	① 核兵器のない世界にむけて、日本と朝鮮半島に非核・平和の確立を	91
分科会 (Work shop)	② 激動の東北アジア、日韓市民社会連帯の課題	105
	③ 日韓女性連帯を通じた東北アジアの非核、平和、ジェンダー平等に むけて	133
	④ 核の非人道的、反環境的影響：被爆、核被害	185
	団体紹介とメッセージ	263
	非核・平和のための日韓国際フォーラム実行委員リスト	

안 내

■ 오시는 길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지하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방면으로 5분, 시청역 1번, 12번 출구(덕수궁방면)에서 덕수궁길을 따라 15분

버스 (서울역사박물관 앞 하차)

파랑색 간선버스 : 160, 260, 270, 271, 300, 370, 470, 471, 600, 601, 702A, 702B, 704, 720, 721

초록색 지선버스 : 7019

빨강색 광역버스 : 9701, 9709, 9710, 2300, 2500

일반 좌석버스 : 1002

▶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철 시청역 4번 출구, 을지로입구역 1-1번 출구 쪽 시청역 방면 지하연결출구
마을버스 종로 09, 종로 11, 공항버스 6001, 6002, 6005, 6015, 6701, 간선버스
101, 150, 402, 405, 501, 506, 지선버스 172, 472, 504, 700, 1020, 1711, 7012,
7016, 7017, 7018, 7019, 7022, 7212, 8000

주차요금 : 평일(09:00-18:00)

10분당 1,000원

案内

▶ フランシスコ教育会館

地下鉄5号線 西大門駅 京郷新聞社方面 徒歩5分

地下鉄1号線、2号線 市庁駅1番出口, 12番出口
徳寿宮方面 徒歩15分

▶ ソウル市庁 市民庁

地下鉄1号線、2号線 市庁駅4番出口

오키나와의바람 연대메시지

비핵 · 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 포럼에 부쳐

동북아시아의 비핵 · 평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피폭된 사람 10명 중 한 명이 한반도 출신자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치료도 보상도 받지 못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피폭 2세와 피폭자 원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분의 수도 적지 않습니다.

핵무기는 7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도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핵 폐절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은 평화를 희구하는 사람들의 바람이자 전쟁 피폭국 일본이 지향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핵 폐절과 동북아시아의 평화 구축에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포럼의 성공과 참가하신 여러분의 건승을 빌며 연대의 인사를 바칩니다.

참의원 의원 이토카즈 케이코(오키나와의바람 대표)

沖縄の風 連帯メッセージ

非核・平和のための日韓国際フォーラムによせて

北東アジアの非核・平和のために地道な活動をされておりますみなさまに心より敬意を表します。

広島・長崎で被爆した人の10人に1人が朝鮮半島出身者と言われているようですが、いまだに、治療も補償も受けられず苦しんでいる方がいらっしやいます。また、被爆二世や被爆者援護法の適用を受けられない方も少なくありません。

核兵器は70年以上経っても人々の身体と心に癒えることのない苦しみを与えるものであることを肝に銘じなければなりません。

核廃絶と北東アジアの平和と安定は、平和を希求する人々の願いであり、戦争被爆国日本のめざす道でもあります。

私も、みなさまと手を携えて核廃絶と北東アジアの平和構築に力を尽くす所存です。

最後に、本フォーラムのご成功と、ご参加のみなさまのご健勝をお祈り申し上げ、連帯のご挨拶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参議院議員 糸数慶子(沖縄の風)

OPENING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상임대표

韓国女性団体連合常任代表 ベック・ミスン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KWAU)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국제포럼 인사말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상임대표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일국제포럼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포럼을 빛내주시고자 함께 해주신 내외부의 손님들과 일본 한일 시민사회의 평화 연대에 힘을 보태기 위해 먼 길 달려와 주신 코라손 파브로스 사무총장님, 조셉 거슨 박사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포럼을 함께 주최한 신일본부인회,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 전국노동조합총연합, 전일본민주의료기관, 협력단체인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 전쟁하지않겠다!9조부수지말라!총궐기행동실행위원회의 평화운동가 여러분께도 한국단체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럼이 개최되기까지 매주 민주노총 13층 회의실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수고하신 실행위원회 여러분, 한국과 일본의 소통을 맡아 조율하신 이준규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한·일 양국 시민단체들이 한반도 동아시아 지역의 비핵, 평화, 그리고 핵 없는 세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반도의 비핵과 평화를 향한 역동적 변화를 볼 때, 이 포럼은 시의적절합니다. 한반도에서는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을 시작으로 남북을 가로막았던 거대한 얼음장벽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을 오가며 웃음 가득한 대화를 나눌 때, 남북한 감시초소를 철거하고, 남북 철로 잇기의 시작이 선언될

때, 우리 속에 굳게 자리한 얼음덩어리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일본 시민사회, 한반도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열망하는 세계의 시민들에게도 큰 공명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교착상태로 보이지만 한반도의 비핵과 평화를 위한 큰 걸음은 우리들의 삶과 의식 속에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여정이 동북아 평화를 향한 길로 이어지도록 한일시민사회의 단단한 연대와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핵은 우리 모두의 당연한 위협입니다. 한·일 양국 피폭자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전쟁의 위협과 공포가 상존하는 한반도에서, 동북아시아에서, 핵의 불안정성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일상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왜곡시킵니다. 후쿠시마와 동해안 지역에서의 경험은 한·일 양국 시민사회에 군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탈핵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핵발전과 핵무기가 가득한 땅에서의 평화는 근본적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가 연대해야 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정으로서의 평화, 결과로서의 평화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지를 숙고해야 합니다. 평화의 과정과 결과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뒤에 남기지 않는 평화이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 여성의 목소리와 역할이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우리가 구축할 평화는 성평등한 평화이어야 합니다. 평화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고 평화를 만들어갈 책임과 권리는 우리 모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비핵과 평화를 동아시아와 세계의 비핵화를 위한 계기로 만들어가기 위해, 성평등한 평화를 상상하기 위해, 피폭자들의 치유와 경험을 우리들의 지혜와 나침반으로 삼기 위해 오늘의 포럼이 의미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非核・平和のための日韓国際フォーラム』
開会及び全体会議の挨拶

ベック・ミスン (韓国女性団体連合・常任代表)

みなさま、こんいちは。

非核・平和のための日韓国際フォーラム

本日、日韓国際フォーラムにご参加頂いた全ての方々を感謝申し上げますとともに歓迎いたします。今回のフォーラムを引き立とうと内外から、特に日本、日韓市民社会の平和連帯に力を添えるために遠方から駆けつけてくださったコラソン・バルデス・ファブロス事務総長、ジョセフ・ゴスン博士に深く御礼申し上げます。今回のフォーラムを共に主催した新日本婦人の会、原水爆禁止日本協議会、全国労働組合総連合、全日本民主医療機関連合会、協力団体である日本原水爆被害者団体協議会、戦争させない・9条壊すな！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の平和活動家の皆様にも韓国団体を代表して深く感謝申し上げます。そして、フォーラムが開催されるまで毎週民主労総13階の会議室に集まり膝を突き合わせて苦勞した実行委員会の皆様、韓国と日本の意思疎通担当を務め、調整したイ・ジュンギョ先生にも感謝いたします。

本日のフォーラムは日韓両国の市民団体が朝鮮半島、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非核、平和、そして核なき世界を模索するために設けられました。昨年からは始まった朝鮮半島の非核化と平和に向けたダイナミックな変化を踏まえますと、タイムリーな集まりだと思います。朝鮮半島では昨年4・27板門店宣言を皮切りに、南北を遮った巨大な氷の壁が溶け落ちていきます。南北首脳が、板門店を歩き来しながら微笑みを浮かべた対話を交わす時、南北側の監視警戒所を撤去し、南北間の鉄道連結を始めると宣言した時、私たちの心の底にわだかまっていた氷塊が溶け始めました。朝鮮半島で始まった平和へのプロセスを見守っている日本の市民社会、朝鮮半島の戦争終結と平和を熱望する世界の市民たちにも共鳴し、大きな反響を呼び起こしたかと信じています。現在は膠着状態に見えるが、朝鮮半島の非核化と平和に向けた大きな一歩は私たちの暮らしと意識の中に引き戻しにくい変化を作り出しました。朝鮮半島の平和への旅程が東北アジアの平和に向けた道につながるよう韓日市民社会の固い連帯と努力が必要な時期です。

核は私たち皆の当面の脅威であります。日韓両国の被爆者の苦痛は現在進行形として存在します。戦争の脅威と恐怖が常に存在する朝鮮半島で、東北アジアでの核の不安定性は私たちの見えない日常を実質的に脅かして歪曲させます。福島と東海岸地域での経験は経験を通して、日韓両国の市民社会へ軍事だけでなく、日常での脱原発を強く訴えています。核発電と核兵器が満ちた土地での平和は根本的な平和にはなれません。日韓両国の市民社会が連帯すべき理由がまさにそこです。

最後に私たちはプロセスとしての平和、結果としての平和がどのような姿を

すべきかを深く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平和へのプロセスと結果は誰も排除しない、誰も置き去りにしない平和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過程に女性の声と役割が排除されてはいけなし、私たちが構築する平和は、ジェンダー平等な平和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平和は社会構成員の暮らしを左右するもので、平和をつくっていく責任と権利は、私たちみんなが果たすべき役割であるからです。

朝鮮半島の非核と平和を東アジアと世界の非核化に向けた契機としてつくっていくため、またジェンダー平等な平和を想像するため、そして、被爆者たちの癒しや経験を私たちの知恵と羅針盤にするために、今日のフォーラムが有意義な討論の場になる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전일본민의원)

키시모토 케이스케 사무국장

全日本民主医療機関連合会事務局長 岸本啓介
Japan Federation of Democratic Medical Institutions(Min-iren)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 포럼 개최 총회 인사

2019년 5월 30일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
사무국장 키시모토 케이스케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저는 일본에서 참가한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의 사무국장 키시모토 케이스케라고 합니다. 저희 단체의 활동에 관한 소개는 자료에 있으니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동료들과는 그린 병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사의원, 보건의료학생단체 길벗 등과 25년 넘게 상호 젊은 직원 간 평화 연수 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집과 같은 단체입니다.

핵무기 폐절과 관련하여 한 마디 덧붙이자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인류사상 최초로 원자력 폭탄이 떨어진 그 날에 히로시마 시로 들어가 희생자를 치료하다가 100세에 돌아가신 의사 히다 순타로 씨 등, 조직에서는 일관되게 이 과제를 목표의 하나로 보고 임해 왔습니다.

미일 두 정부가 핵무기로 인한 심대하고 비인도적인 피해를 숨기고 있는 와중에 피폭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피폭자의 입장에 서서 의료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아무리 의료에 힘써도 전쟁과 핵무기의 사용과 빈곤이 있는 한 건강권, 생명은 절대로 지킬 수 없다, 이런 입장에서 운동을 추진해온 조직입니다.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 포럼에 참가하신 여러분. 오늘, 비핵·평화의 동북아시아, 한반도와 일본을 만들기 위한 역사를 이끌고 나가기 위해 뜻 깊은 포럼을 이곳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 점을 여러분과 함께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 의미는 앞으로 이틀간 열릴 포럼 속에서 여러 심포지엄 참가자, 게스트들의 입을 통해 말해지고, 의논되고, 공유되고, 또 그 깊이를 더해가겠지만, 몇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확립을 향한 프로세스가 움직이기 시작한 가운데 개최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지구 규모의 격변으로서, 인류사상 최초로 "핵무기금지조약" 발효를 향한 힘찬 걸음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생각할 때, 언제나 글귀 하나가 떠오릅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자신을 구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체험을 통해 인류의 위기를 구하자는 결의를 서로 맹세합니다.” 이것은 1961년에 있었던 일본피단협 결성대회선언에 담긴 말입니다.

오늘날 이 거대한 변화의 근원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호소하고 싸워온 피폭자의 존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격동의 변화를 방해하는 세력과 시민이 격돌하는 정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일본 아베 정권의 전쟁하는 나라 만들기를 향한 폭주는 매우 심각하고 사악한 존재입니다. 침략전쟁에 대한 심각한 반성 위에 “두 번 다시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는다”고 비전쟁과 군사력을 가지지 않겠다고 결정한 헌법 9조를 부수고 다시 미국과 함께 일본의 대국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을 지금 일본 시민들이 어떻게 끝내야 하는가도 이번 한일 국제 포럼에서 이야기할 중요한 논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핵무기금지조약이 실현되려 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를 동북아시아에서 최초로 실현하는 것, 이 프로세스 속에서 일본 아베 정권을 끝내는 것, 헌법 9조를 지켜내는 것은 일체화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은 피폭으로부터 75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NPT 재검토회의를 향한 큰 움직임을 시민사회가 만들어야 합니다.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포럼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를 향한 정의로 관철된 토

非核・平和のための日韓国際フォーラム

론을 나누며 한일 양국의 각 과제와 전망, 그리고 연대해야 할 방향과 과제를 확인할 수 있길 바라면서 개회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非核・平和のための日韓国際フォーラム開会総会挨拶

2019年5月30日

全日本民主医療機関連合会

事務局長 岸本啓介

こんにちは(안녕하세요)

ご紹介いただきました、日本から参加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全日本民主医療機関連合会の事務局長の岸本啓介です。私の団体の活動紹介は、資料にあるのでご覧ください。韓国のなかまとは、グリーン病院、人道主義実践医師協議会、保健医療団体連合、社医連、医学生団体のギルバッドなどと25年以上に渡り相互に若い職員による平和研修等を行ってきました。韓国は、ホームのような団体であります。

核兵器廃絶との関連で、一言、付け加えさせていただくと、1945年8月6日、ヒロシマに人類史上はじめて原子力爆弾が落とされたその日に広島市に入り、犠牲者への治療を行い続け、100歳で亡くなった医師の肥田舜太郎など、組織として一貫してこの課題を目標のひとつとして取り組んできました。

日米両政府が、核兵器による甚大で、非人間的な被害を隠し続ける中、被ばく者の声に傾聴し、被ばく者の立場に立って医療を行ってきました。

医療を力の限り頑張っても、戦争や核兵器の使用、貧困があれば、健康権、いのちは絶対に守れない、この立場から運動を進めてきた組織です。

さて、非核・平和のための日韓国際フォーラムにご参加のみなさん。本日、非核・平和の北東アジア、朝鮮半島と日本へ向け、歴史を進めるべく、意義深いフォーラムをここソウルで開催できたことを、みなさまとともに最初に心から喜びたいと思います。

その意義は、これから2日間のフォーラムの中で、たくさんのシンポジスト、ゲストの皆様から語られ、議論され、共有され、深められると思いますが、何点か触れさせていただきます。

第一に、朝鮮半島の非核化、平和体制確立へのプロセスが動き始めた中での開催であることです。

第二に、地球規模の激変で、人類史上初めて「核兵器禁止条約」発行へ向けた力強い歩みが進められていることです。

こうした変化を思うとき、いつもひとつの文書がよみがえります。

「かくて私たちは自らを救うとともに、私たちの体験をとおして人類の危機を救おうと決意を誓い合ったのであります」。この言葉は、1961年に日本被団協さんの結成大会宣言です。

今日のこの巨大な変化の根源は、ぶれることなく訴え、たたかい続けたヒバクシャの存在だったと思います。

第三に、その激動の変化に対して、妨害する勢力と市民が激突している情勢にあることです。

この点で、日本の安倍政権の戦争をする国づくりの暴走は、取り分け深刻で、邪悪な存在であると思います。侵略戦争への深刻な反省の上に「二度と過ちは繰り返さない」と非戦、軍事力を持たないと決めた憲法9条を壊し、再びアメリカとともに日本の大国化をめざして奔走し続けていることです。この政権を今、日本の市民がどのように終わらせるのかも今回の日韓国際フォーラムでの重要な論点であろうかと思っています。

核兵器禁止条約が実現しようとしている新しい世界を北東アジアで最初に実現していくこと、このプロセスの中で日本の安倍政権を終わらせること、憲法9条を守り抜くことは一体的な課題であると思います。

2020年は、被ばくから75年の年になります。また、NPT再検討会議へ向けた大きなうねりを市民社会が作り出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短い時間ではありますが、フォーラムを通じ、自由で、平和への正義に貫かれた討論で、韓日のそれぞれの課題と展望、そして連帯すべき方向と課題が確認できるよう願って、開会のあいさつ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カムサトゥリムニダ)

SOLIDARITY SPEECH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이규열 회장

韓国原爆被害者協會會長 李圭烈 (イ・ギョユル)

Korea Atomic Bombs Victim Association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포럼

이규열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 포럼에 참가해주신, 인류의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시민사회, 회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비핵, 평화의 동아시아”라는 주제로 한, 일 국제포럼을 훌륭하게 준비해주신 관계자 분들, 특히 일본 측 츠치다 야요이님과 한국 측 이준규님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멀리 미국에서 오신 평화, 군축, 공동안전보장캠페인의 의장이신 조셉 거슨 씨와 필리핀에서 오신 아, 태 지역 반핵, 평화의 국제연대를 이끌고 있는 코라손 파브로스 변호사님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구상에 현존하고 있는 핵무기를 폐기하고 평화를 위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마다치 않고 당당히 앞만 보고 가시는 여러분의 인류평화를 위한 행진에 원자폭탄의 피해를 당한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돌아보니 7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우리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에 희생된 영령 앞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 원폭 피해자 중에 한국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원폭이 떨어졌을 때, 히로시마에 7만 명, 나가사키에 3만 명, 모두 10만 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5만 명이 희생되었고, 나머지 5만 명이 생존하였다고 하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섬광과 방사성 물질로 인해 장애를 갖

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시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음하며 고통받는 같은 피폭자 처지에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너는 조선인이잖아.” “너는 나중에 와라.” 하는 말을 들었고, 한국인 피폭자는 오랜 세월 일본의 피폭자와는 또 다른 차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피폭된 지 10년 후, 일본은 상세한 피폭 실태 보고서, 원폭에 대한 소설과 시, 그림책, 영화, 노래, 많은 사진집, 드라마가 만들어졌으며, 피폭자를 위한 법률, 원호단체, 병원, 그리고 평화 기념상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피폭자를 따뜻하게 예우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피폭자에 대한 대우는, 일본은 물론 한국 국내에서조차 누구하나 그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절망과 굶주림 속에서 가난하고 매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령들이여! 원자폭탄으로 산화한 영령들이여! 구천을 떠도는 영령들이여! 힘드십니까? 괴롭습니까? 한은 없습니까?

하지만 힘드신 것도 괴로운 것도 이제는 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피폭으로 인해 불행해진 당신들의 모습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인류의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시민사회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편안히 잠드소서.

74주년이 되는 금년 추모제에는 정부가 각별한 관심 속에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원자폭탄으로 희생된 피해자의 영혼을 달래주시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2,300여 피해자에게도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폭75주년을 맞이하는 내년 2020년 8월에는 비핵평화를 염원하는 여러분과 같이 전 세계 핵피해자들이 모여 핵무기 철폐와 평화로운 지구촌을 만들자는 결의와 선언을 담아내는 “2020 합천 세계 피폭자 핵피해자 결의대회 및 국제모의법정” 행사를 피해자 단체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합천평화의집 등 지원단체들이 힘을 모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포럼 기간 중에 논의할 기회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한, 일 양국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2019년 5월30일

非核・平和のための日韓国際フォーラムへのあいさつ

2019. 5. 30～31

李圭烈（イ・ギョユル）

韓国原爆被害者協会 会長

非核・平和のための日韓国際フォーラムにご参加くださった、人類の平和と統一を愛する市民社会、会員の皆様、お会い出来てうれしいです。

「非核・平和の東アジアに向けて」というテーマで、素晴らしい日韓国際フォーラムを準備してくださった日本の土田弥生代表及び韓国のイ・ジュンキュ代表のご努力に感謝の言葉を差し上げます。

そして遙々アメリカからいらっしゃった平和・軍縮・共通安全保障キャンペーン議長のジョゼフ・ガーソンさんとフィリピンからいらっしゃったアジア・太平洋地域の反核・平和の国際連帯を率いているコラソン・ファブロス弁護士の来韓を心から歓迎いたします。

地球上に現存している核兵器を廃棄し、平和のための人類の普遍的な価値を上げるため、様々な困難や苦しみにも屈することなく、前に向けて進んでいる皆さんの人類平和への行進に、核兵器の被害者の一人としてもう一度、感謝と激励の言葉をお送りいたします。

振り返ってみると、もう74年という歳月が経ちました。

1945年8月6日と9日、私たちはあの日を忘れることができません。

あの日、犠牲となった霊の冥福を、謹んでお祈りします。

皆さん！原爆被害者の中に韓国人がいたことをご存知でしょうか。

原爆が落ちた時、広島には7万人、長崎には3万人、合わせて10万人の韓国人が日本に住んでいました。その中で5万人が犠牲となり、残りの5万人が生存はしましたが、あまりに多くの人々が閃光と放射性物質によって障害を負いました。その理由を考えてみたことがありますか？

当時の韓国人の国籍は日本でした。ところが、痛みに苦しんでいる同じ被爆者の身として治療を受けようとする、『お前は朝鮮人だろ』、『お前は後で来い』と言われ、韓国人被爆者は長い間、日本の被爆者とは別の差別を忍ば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

被爆から10年後、日本では詳細な被爆実態報告書、原爆関連の小説や詩、絵本、映画、歌、多くの写真集、ドラマなどが作られ、また被爆者に関する法律や援護団体、病院、そして平和記念像などという、様々な方法で被爆者を温かく礼

遇するようになったと聞きました。

しかし、韓国人被爆者に対する待遇はというと、日本はもちろん、韓国国内でさえ誰一人、その存在を認めてくれませんでした。私たちは絶望と飢えの中で、貧しく、非常に苦しい生活をしています。

霊よ！核兵器によって散華した霊よ！安らかな眠りに恵まれていない霊よ！苦しいでしょうか？恨みはありませんか？

でも、辛いことも、苦しいことも、もうすべて 肩から降ろしてもいいのです。

被爆によって不幸になったあなた達の姿をもう二度と繰り返さないために、核兵器を使わせないと、人類の平和と統一を愛する市民社会の皆さんが努力しています。

どうか安らかにお眠りください。

74日目になる今年の追悼式には、政府が格別な関心を見せ、犠牲された方々、そして自分の子供に被害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恐れながら原爆被害者であることを隠し、不安な気持ちで深刻な憂うつ病に苦しんでいる被害者の手を大統領が温かく握ってくれることを、切実に願います。

被爆75年を迎える来年2020年8月には、非核平和を念願する皆さんとともに、全世界の核被害者が集まり、核兵器撤廃と平和な地球村を作ろうという決議と宣言を盛り込んだ「2020 陝川世界被爆者被害者決議大会および国際模擬法廷」を被害者団体と平和と統一を開く人々、陝川平和の家など支援団体が力を合わせ推進する計画です。今回の非核平和のための国際フォーラムの期間中に議論できる機会があ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原水爆兵器を廃棄するために頑張っている皆さんにより大きな一歩を飾る年になることを祈ります。

最後にもう一度、行事の準備に尽くして下さった日韓の関係者の皆さんにも感謝の言葉を差し上げます。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 (일본피단협) 후지모리 토시키 사무차장

日本原水爆被害者団体協議会事務局次長 藤森俊希
Japan Confederation of A- and H-Bomb Sufferers Organizations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 포럼
후지모리 토시키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일본피단협) 사무차장
2019.5.30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국제포럼 출석에 즈음하여 피폭자로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와중, 역사적으로는 종전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기인 1944년 3월, 9번째 아이로 히로시마 시내에서 태어났습니다. 여자 형제 6명과 남자 형제 3명. 그중 초등학생이던 남자 형제들과 초등학생 입학 앞둔 여자 형제 둘은 전쟁 피해를 피하기 위해 히로시마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고, 할아버지, 부모님, 4명의 여자 형제, 1살이던 저를 포함해 8명이 히로시마 시내에 남았습니다. 그 8명 전원이 원폭의 방사선을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13살의 여학교 1학년이던 토시코와 학생들은 히로시마 평화공원의 주택밀집지를 소개하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원폭이 작렬했고, 폭심지 근처에 있던 교사, 여학생을 포함해 676명이 전멸했습니다. 집이 무너져 죽은 사람, 불타고 파괴된 건물에 깔려 죽은 사람, 혹은 열선에 시커멓게 타서 죽은 사람, 그리고 또 혹은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방화용수에 머리를 처박고 죽은 사람, 피부는 불타 늘어지고 눈알은 툭 튀어나온 채 죽은 사람에다 뛰어난 사람들로 가득 찬 강, 만조와 간조 때마다 시체가 이리저리 떠다니던 현장. 그해 말까지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포함해 21만여 명이 목숨을 잃은 그곳은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핵무기를 이용한 무차별 대량 살육.

태평양전쟁 종결 후, 1945년 10월, 유엔이 발족되었고, 이듬해인 1946년 1

월, 제1회 유엔총회가 런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 제1호 결의(원자력위원회의 설립을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되었습니다. 결의에는 위원회의 위탁권한 4항목 3번째에 “핵무기 및 다른 모든 대량파괴무기를 각국의 군비에서 제거한다”고 명기했습니다. 이대로 핵무기 및 다른 모든 대량파괴무기를 각국이 군비에서 제거했다면 핵무기는 세상에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제1호 결의가 채택됐을 때,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뿐이었습니다. 현실은 핵무기가 제거되기는커녕 소련(현재의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으로 핵보유국이 늘어났고, 유엔 밖에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역류하는 세계를 각국은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의 제1호 결의가 있는 지 71년 후, 2017년 7월 7일, 유엔에서 핵무기금지조약을 122개국이 다수결 찬성으로 채택했고,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일본 정부는 핵무기금지조약에 찬성하지 않았고, 조약 교섭 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피폭자는 핵무기금지조약이 제대로 발효되도록 해 한반도, 동북 아시아의 비핵화 및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향해 한국인들과 함께 힘을 다할 것을 표명합니다.

非核・平和のための日韓国際フォーラム

藤森俊希 原水爆被害者団体協議会（日本被団協）事務局次長

2019.5.30

非核・平和のための日韓国際フォーラムへの出席にあたり、被爆者としてご挨拶申し上げます。

私は、太平洋戦争の真っ只中、歴史的には終戦を間近にした時期の1944年3月、9人目の子どもとして広島市内で生まれました。女性6人、男性3人。その内、小学生の男子2人と小学生になる前の女子2人は、戦争被害を避けるため広島市から遠く離れた場所に移り、祖父、父母、4人の女性、1歳の私を含め8人が広島市内に残りました。その8人全員が、原爆の放射線を浴びました。13歳女学校1年の敏子らは、広島平和公園の住宅密集地を疎開するため集まっていた。その時、原爆が炸裂し爆心近くに居た教師、女学生合わせて676人が全滅。家がつぶれ、火がつき破壊された建物に押し潰され、熱線で焼かれ真っ黒になり、熱さに耐えられず防火用水に頭を突っ込んだ者、焼かれて皮膚が垂れ、目玉が飛び出

し、川に飛び込むものは川面にあふれ、満潮、干潮の動きに死体が右往左往。その年の末に広島、長崎合わせて21万人余が命をなくした地獄そのものでした。

2度と起こしてはならない核兵器による無差別大量殺戮。

太平洋戦争が終結し、1945年10月、国際連合が発足し、翌年1946年1月、第1回国連総会がロンドンで開かれ、1月24日、第1号決議（原子力委員会の設立を求める決議）が採択されました。決議にある委員会の委託権限の4項目3番目に「原子兵器および他のすべての大量破壊兵器を各国の軍備から除去する」ことを明記しました。原子兵器および他のすべての大量破壊兵器を各国が軍備から除去すれば、核兵器は世界からなくなったに違いありません。

第1号決議を採択したとき核兵器保有国は米国だけでした。現実には、核兵器が除去されるどころか、ソ連（現在ロシア）、イギリス、フランス、中国と核保有国が広がり、国連の外でインド、パキスタン、イスラエル、北朝鮮が核兵器を保有しました。

逆流する世界を各国は見過ごしてい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国連の第1号決議から71年後、2017年7月7日、国連のもとで核兵器禁止条約を122カ国が賛成多数で採択し、核兵器のない世界に向かって踏み出しました。

残念ながら唯一の戦争被爆国日本の政府が、核兵器禁止条約に賛同せず、条約交渉会議にも出席しませんでした。

被爆者は、核兵器禁止条約を実効あるものにし、朝鮮半島、北東アジアの非核化及び核兵器のない世界へ韓国の人々とともに力を尽くすことを表明します。

Solidarity Speech

필리핀비핵평화연합 사무총장
코라손 파브로스 변호사

非核フィリピン連合事務総長 コラソン・ファブ로스さん
Corazon Valdez Fabros

KEYNOTE SPEECH

전국노동조합총연합회 오다가와 요시카즈 의장

(전쟁하게 하지 마라, 9조를 부수지 마라! 총궐기 행동실행위원회 공동대표)

全国労働組合総連合議長 小田川義和

National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Zenroren)

/ 戦争させない・9条壊すな！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共同代表

비핵, 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 포럼 보고

2019년 5월 30일

동북 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실현을 위한 일본 국내의 대처 현황

전국노동조합총연합회 오다가와 요시카즈

1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와 일본에 비핵, 평화의 확립을!’ 집회와 시위

(1) 6월 7일(금), 8일(토) 양일간, 도쿄 도내에서 팻말 집회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 민주노총, 동아시아 평화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가 참석해 발언을 할 예정이다.

이 집회 등은 ‘전쟁하게 하지 마라, 9조를 부수지 마라! 총궐기 행동실행위원회’(이하, 총궐기 행동실행위원회)와 ‘3.1 운동 100주년 캠페인’(이하, 3.1 캠페인)이 중심이 된 실행위원회가 주최이다.

과제로 내세우는 것은 ‘동북아시아에 비핵, 평화의 확립을!’, ‘아베 정권은 평화의 흐름을 방해하지 마라!’, ‘한일, 북일 시민의 연대와 공생!’ 등의 10항목이다.

참고로, 이 실행위원회에는 원수협 등 이번에 참가한 단체 중 다수가 참가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2) 집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본 국내의 움직임으로서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①일본 국내에서 반핵, 평화 운동을 해온 단체, 개인과 한일의 우호관계 심화 및 북일 국교 정상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청산, 역사인식 공유 등에 관한 운동을 해온 단체, 개인 등이 공동으로 여는 첫 집회라는 점, ②한반도의 비핵, 평화를 둘러싼 정세 변화 속에서 그 흐름에 저항하고 역사의 톱니바퀴를 반대로 돌리려는 일본 정부, 아베 정권에 대한 항의와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시민 집회라는 점이 그것이다.

(3) 또한, ‘3.1 캠페인’은 조선독립운동 100주년의 해인 2019년에 ‘역사를 직시하며 일본과 한반도, 아시아 사람들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나갈 것인가를 다시 묻기’ 위한 강연회, 심포지엄, 집회 등의 개최를 준비한 실행 위원회이다.

이 실행위원회의 대처 성과 또한 계승, 발전시키는 것으로 6월 행동에 대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2 총궐기 행동실행위원회 등 일본의 시민운동의 현재

(1) 2014년 7월 1일 각의에서, 일본 정부는 1981년 정부 답변서 등에서 ‘헌법 상 허락되지 않는다’고 여겨져 온 헌법 9조의 해석을 변경, ‘자국이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타국 간 전쟁에 참가’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헌법의 3대 원칙은 절대적 천황제를 부정한 인민주권, 군사주권을 자기 제약한 항구 평화주의, 그리고 개인의 존엄을 기초에 두는 기본적 인권의 실현이다.

이 가운데 앞의 두 원칙은 청일전쟁(1894년)에서부터 종전(1945년)까지 있었던 전쟁과 조선반도 등에서의 식민지 지배를 한 군사 대국 일본과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여 일본의 독자적인 전력은 전수방위에 한정된 경우장으로 ‘평화의 배당’으로서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전후 일본을 명확하게 분단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따라서, 군사주권의 자기 제약을 없애는 헌법 9조의 해석 개헌은 전전의 군사 대국으로 회귀하는 것임과 동시에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반성 위에 성립한 일본 헌법의 완전 실시를 정부가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받아들여져, ‘또다시 전쟁 전’이 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었다.

그 위기감을 공유해, 오랫동안 분열 상태에 있었던 호헌세력이 대동단결해 결성한 것이 총궐기 행동실행위원회다.

(2) 아베 정권은 2015년에는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합의함과 동시에 이것을 바탕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핵심으로 하는 안전보장법제(이하, 전쟁법)를 제출, 9월에 강행 성립시켰다.

총궐기 행동실행위원회는 전쟁법 성립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주체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전쟁법에 반대하는 학자, 학생, 여성운동 등 시민운동과의 연계를 국회 주변을 중핵으로 해 강화했다.

2015년 6월부터 9월에 걸쳐 거의 매주 있었던 행동은 회를 거듭할수록 참가자가 늘어나며 국회 내에서 야당의 공동 투쟁 논쟁을 유발, 국회 밖의 시민과 국회 안의 야당이 연계 협력을 만들어내는 정치적 변화도 가능케 했다.

총궐기 행동이라는 조직이 운동의 기반을 이루고, SNS 등을 활용하는 학생 등의 발신력이 여론과 사회현상을 만들어내, 다양한 입장에 선 시민이 전쟁법 반대라는 한 가지 목적 하에 행동에 참여해 자주적인 행동에 나서는 상황은 전후 일본의 사회운동 가운데에서도 특필할 만한 것이다.

(3) 전쟁법이 강행 성립된 2015년 9월 직후부터, 법 폐지를 요구하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대규모 서명 행동(2000만 명 목표, 달성 수는 1580만 명)을 총궐기 행동이 제기함과 동시에 총궐기 행동을 포함해 전쟁법을 폐지하는 정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시민운동(‘안보법제 폐지와 입헌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이 결성되었다.

시민연합의 결성은 전쟁 반대라는 한 가지 이슈에 대한 공동 투쟁에서 전쟁법 폐지를 위한 국회 상황을 만들어내고, 정권 교체를 시에야 넣은 정치적 공동 투쟁으로 질적인 발전을 동반한 것이다.

(4) 시민연합은 전쟁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당(야당)에 공동 투쟁을 요구, 야당과 야당의 공동 투쟁의 중개자 역할도 담당하게 되었다. 2016년의 참의원 선거, 2017년의 총선거에서 시민과 야당의 공동 투쟁, 야당과 야당의 공동 투쟁을 전국적으로 이끌어내는 데에 있어 시민연합은 일정한 역할을 했다.

총궐기 행동은 시민연합과 연계하며 매월 19일과 5월 3일 집회를 계속해 나가면서, 아베 총리가 2020년 개헌 시행을 선언한 2017년 가을 이후에는 아베 개헌 반대 대규모 서명(목표 3000만 명)을 2004년부터 9조 개헌 반대 운동을 계속해온 ‘9조 모임’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오늘날까지 그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시민의 대중적인 운동 후원 덕분에 야당의 공동 투쟁이 유지되고, 국회에는 전쟁법 폐지법안이 제출되었으며, 국정 선거를 중심으로 통일 후보와 공통 정

책으로 아베 정권에 대항하는 상황은 코앞에 닥친 2019년 참의원 선거에서도 실현되어가고 있다.

3 아베 9조 개헌과 한반도, 아시아와의 관계

(1) 일본의 헌법은 그 제정 직후부터 ‘점령군에 의해 강요된 헌법’이라며 재군비를 요구하는 보수파의 공세가 강해, 제9조를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고 있으며, 해석 개헌이 반복되어 왔다.

그 시작은 1950년 8월의 경찰예비대 창설이었다. 직전 6월에 발발한 한국전쟁에 ‘유엔군’으로 미국이 참전, 일본을 점령하기 위해 주둔 중이던 미군이 한반도로 보내졌고, 국내의 치안 유지에 ‘공백’이 생겼다는 이유로 일본의 재군비가 시작되었다.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와 동시에 미일 안보조약이 체결되며 헌법 위에 군사동맹이 존재하는 기이한 상황이 되었다.

1953년 7월에 한국전쟁의 휴전 협정이 체결되고 그 이듬해에 미일 상호방위협정이 체결, 일본이 자국 방위에 한정된 군비를 추진하게 되면서, 7월에 자위대가 창설되었다.

(2) 냉전이 종결한 후인 1991년에 발발한 걸프전은 미국이 일본에 ‘피를 흘리는 동맹’을 한층 더 강하게 요구하게 만들었고, 이는 1992년 PKO법 성립으로 이어지게 된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때에 실제로 전투가 이뤄지지 않는 비전투지역에서의 활동에 한정해 미군과의 무력행사의 일체화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자위대가 파견되었다. 세계적 규모로 자위대가 미군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최근의 해석 헌법은 미국이 패권주의를 강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경군비 하에 경제 대국화한 일본에 군사적 부담을 요구하는 압력을 이용해 진행되었다.

(3) 이러한 경과 속에서 2015년의 전쟁법 강행과 이번의 헌법 9조 개헌의 움직임이 존재한다.

전쟁법을 강행할 때엔 중국의 군사 및 경제 대두를 ‘안전 보장 환경의 변화와 각박함의 고조’를 구실로 삼는 일이 되풀이되었다.

아베 총리가 헌법 9조 개헌을 언급할 때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반복되는 탄도 미사일 발사를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미증유의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 강조하고 있다.

2018년 12월에 일본 정부는, 향후 5년 간 27조 4700억 엔을 군사비에 들이는 대군확(大軍擴)계획을 결정했는데, 이때에도 앞서 말한 구실이 이용되었다.

(4)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에서 미일 안보 하에 있는 일본이 독자적으로도 군사적 우위성을 높이기 위해 자위대의 군대화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헌법 9조 개헌으로 이어진다.

한반도의 유엔군 역할도 맡고 있는 재일 미군의 3/4이 집중되어 있는 오키나와에 현민의 반복된 반대 의사 표명(일례로 2019년 2월에 있었던 기지 건설 찬반을 묻는 현민 투표에서는 투표자의 7할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매립을 강행할 때에도 동북아시아에서의 안전보장 환경과 오키나와의 지정학적 조건을 내세웠다.

역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동북아시아, 한반도의 평화 확립은 일본의 평화 운동, 호헌 운동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4 이번 포럼에 갖는 기대

(1)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1919년 3.1 운동과 1960년 4.19혁명이 명기되어 있으며, 2016년부터 있었던 촛불 집회를 헌법에 기술하자는 논의도 있다고 들었다. 민족 독립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투쟁이 한국 사회를 형성한다는 인식이 공유된 것의 반영이라고 보인다.

일본의 운동에서는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전전과 전후를 단절한 것으로 보고, 다시 전전으로 되돌리지 않는 것을 중핵으로 둔 시민운동이 현재 고양되어 정치 변화로 이어지는 발전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그러한 차이를 확인하는 한편으로 조직된 단체까지 포함하는 시민운동이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는 인식은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상호 간 운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의 시민사회에 의거한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정을 지향하는 연대된 행동을 함께 만들어내는 논의를 더욱 다지고 싶다.

(2) 일본에서는 마치 개헌 책동의 강화와 보조를 맞추듯이 한국, 북한에 대한 혐오가 현재화하고 있다. 정부와 언론이 그것을 부채질하기도 한다.

거기에는 북한의 납치문제,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 나아가 영토 문제 등을 정치 문제로 만들고 있는 일본 정부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만행에 대한 반성과 보상을 개인 수준에서라도 추진하는 것과 역사적 사실조차 수정하려 들지 않는 움직임에 항거한

운동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동시에 시민운동 레벨에서 다양한 과제를 통한 교류를 쌓아가고, 공통된 행동을 늘려나가길 제안하고자 한다. 일본과 한국의 법 제도와 관습에는 공통점이 많으며, 대기업의 강한 사회적 영향력에서 파생되는 문제에도 공통점이 적지 않을 것이다.

(3) 이번 포럼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 한국전쟁의 종결과 평화 안정, 재일, 재한 미군의 주둔과 기지 문제, 북한과의 대화 촉진 등과 같은 점에서 시민운동 레벨에서 협력, 공동해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를 하나로 모으게 되길 기대한다.

非核・平和のための日韓国際フォーラムへの報告

2019年5月30日

東北アジアの安定と平和の実現を求める日本国内の取り組みの現状

全国労働組合総連合・小田川義和

1 準備が進む「朝鮮半島と日本に非核・平和の確立を！」の集会とデモ

(1) 6月7日(金)、8日(土)の二日間、東京都内で標記の集会等が予定されている。

韓国からも、国際補償運動記念事業会、民主労総、東アジア平和会議、参与連帯、韓国進歩連帯が発言予定である。

この集会等は、「戦争させない・9条壊すな！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以下、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と「3.1朝鮮独立運動100周年キャンペーン」（以下、3.1キャンペーン）が中心になって呼びかけた実行委員会が主催する。

掲げる課題は、「東北アジアに非核・平和の確立を！」、「安倍政権は平和の流れを邪魔するな！」、「日韓・日朝市民の連帯と共生！」などの10項目である。

ちなみに、この実行委員会には、原水協など今回参加の団体の多くが参加し、積極的な役割を担っている。

(2) 集会は次の点で、日本国内取り組みとしては画期的なものである。

①日本国内で反核・平和の運動に取り組んできた団体、個人と、日韓の友好関係の深化や日朝の国交正常化、日本の植民地支配の清算、歴史認識の共有などの運動に取り組んできた団体、個人等が共同する初めての集会であること、②朝鮮

半島の非核・平和をめぐる情勢の変化がある中で、その流れの抗い、歴史の歯車を逆転させようとする日本政府・安倍政権への抗議と政策転換を求める市民集会であること、である。

(3) なお、「3.1キャンペーン」は、朝鮮独立運動100周年の節目の2019年に、「歴史を直視しながら日本と朝鮮半島やアジアの人びととの平和な関係をいかに築くのかを問い直す」ための講演会、シンポジウム、集会などの開催を呼びかけた実行委員会である。

この実行委員会の取り組みの成果も受け継ぎ、発展させることとして6月行動の準備が進められている。

2 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など日本の市民運動の今

(1) 2014年7月1日の閣議で日本政府は、1981年の政府答弁書などで「憲法上許されない」としてきた憲法9条の解釈を変更して、「自国が攻撃を受けていなくても他国同士の戦争に参加」する集団的自衛権行使を容認する決定を行った。

日本国憲法の三大原則は、絶対的天皇制を否定した人民主権、軍事主権を自己制約した恒久平和主義、そして個人の尊厳を基礎に置く基本的人権の実現とされる。

このうちの前二つの原則は、日清戦争（1894年）から終戦（1945年）までの間の戦争と朝鮮半島などでの植民地支配を行った軍事大国の日本と、ポツダム宣言を受け入れ日本独自の戦力は専守防衛に限定した軽武装で、「平和の配当」としての経済成長を追い求める戦後日本とを明確に分断するものと受けとめられてきた。

したがって、軍事主権の自己制約を取り外す憲法9条の解釈改憲は、戦前の軍事大国への回帰の方向であると同時に、日本軍国主義への反省の上立つ日本国憲法の完全実施を政府が放棄するに等しいものとの受けとめと、「再びの戦前」への危機意識が広がった。

その危機感を共有し、長らく分裂状態にあった護憲勢力が大同団結して結成したのが、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である

(2) 安倍政権は、2015年には「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日米ガイドライン）の改訂に合意するとともに、これを裏付け、集団的自衛権の行使を核心とする安全保障法制（以下、戦争法）を提出し、9月に強行成立させた。

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は、戦争法成立阻止のたたかいを主体的に強めるとともに、戦争法に反対する学者、学生、女性運動などの市民運動との連携を、国会周辺での集会を中核にして強めた。

2015年6月から9月にかけてのほぼ毎週の取り組みは、回を追うごとに参加者が

増え、国会内での野党の共闘した論戦を誘発し、国会外の市民と国会内の野党との連携協力関係を作り出すという政治的な変化も生み出した。

総がかり行動という組織が取り組みの基盤を支え、SNSなどを活用する学生などの発信力が世論と社会現象を作り出し、様々な立場の市民が戦争法反対の一点で行動に参加し、自主的な行動に立ち上がる状況は、戦後日本の社会運動の中でも特筆されるものであった。

(3) 戦争法が強行成立させられた2015年9月直後から、法の廃止をもとめ運動が開始された。大規模な署名行動(2000万人目標・達成数は1580万人)を総がかり行動が提起するとともに、総がかり行動を含め戦争法を廃止する政治の実現をめざす市民運動(「安保法制の廃止と立憲主義の回復を求める市民連合(以下、市民連合)」)が結成された。

市民連合の結成は、戦争法反対というシングル・イシューの共闘から、戦争法廃止のための国会状況を作り出し、政権交代を視野に入れた政治的共闘への質的な発展を伴ったものであった。

(4) 市民連合は、戦争法廃止を公約する政党(野党)に共闘を迫り、野党と野党の共闘を橋渡しする役割も担うこととなった。2016年の参議院選挙、2017年の総選挙で、市民と野党の共闘、野党と野党の共闘を全国的に作り出す上で市民連合は一定の役割を果たした。

総がかり行動は、市民連合の取り組みと連携しつつ、毎月19日や5月3日の集会を継続するとともに、安倍首相が2020年改憲施行を打ち上げた2017年秋以降は、安倍改憲反対の大規模署名(目標3000万人)を9条改憲反対の運動を2004年から継続してきた「九条の会」とも共同して取り組みなど、活動領域を広げて今日に至っている。

市民の大衆的な運動の後押しがあって、野党の共闘が維持され、国会には戦争法廃止法案が提出され、国政選挙を中心に統一候補と共通政策で安倍政権に対抗するという状況は、目前の2019年参議院選挙でも実現しつつある。

3 安倍9条改憲と朝鮮半島、アジアとの関係

(1) 日本の憲法は、その制定直後から「占領軍による押し付け憲法」だとして再軍備を求める保守派の攻撃が強く、第9条をめぐるせめぎ合いが続き、解釈改憲が繰り返されてきた。

その最初は、1950年8月の警察予備隊の創設であった。直前の6月に勃発した朝鮮戦争に「国連軍」としてアメリカが参戦し、日本占領のために駐留していた米軍が朝鮮半島に送られ、国内の治安維持に「空白」が生じたとして日本の再軍備が開始された。

1952年4月に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の発効と合わせて日米安保条約が締結され、憲法の上に軍事同盟が存在するいびつな状況となった。

1953年7月に朝鮮戦争の休戦協定が結ばれた翌年に日米相互防衛協定が締結され、日本が自国防衛に限定した軍備を進めることとなり、7月に自衛隊が設置された。

(2) 冷戦が終結した後の1991年に勃発した湾岸戦争は、アメリカから日本に対する「血を流す同盟」への圧力を高め、1992年のPKO法成立につながる。

2003年のイラク戦争に際し、戦闘が現に行われていない非戦闘地域での活動に限定し、アメリカ軍との武力行使との一体化を行わないとの「条件」で、自衛隊が派遣されることになった。世界的規模で、自衛隊がアメリカ軍を補完する役割を持つことになった。

近年の解釈改憲は、アメリカが覇権主義を強めるもとの、軽軍備のもとで経済大国化した日本に軍事的負担を迫る圧力を利用して進められた。

(3) これらの経過の上に、2015年の戦争法強行や、今の憲法9条改憲の動きがある。

戦争法強行の際には、中国の軍事・経済の台頭を「安全保障環境の変化、厳しさの高まり」とする口実が繰り返された。

安倍首相が憲法9条改憲に言及する際には、北朝鮮の核兵器開発や繰り返しの弾道ミサイル発射を「我が国の安全に対するこれまでにない重大かつ差し迫った脅威」が強調されている。

2018年12月に政府は、むこう5年間に27兆4700億円を軍事費につぎ込む大軍拡計画を決定したが、その際にも前述の口実が使われた。

(4) 朝鮮半島をはじめとした東北アジアで、日米安保のもとの日本が、独自にも軍事的優位性を高めるために自衛隊の軍隊化をめざす動きが、憲法9条改憲につながっている。

朝鮮半島の国連軍の役割も担う在日米軍の4分の3が集中する沖縄に、県民の繰り返しの反対の意思表示(例えば、2019年2月に行われた基地建設への賛否を問う県民投票では、投票者の7割が反対の意思を表明した)にもかかわらず、日本政府が埋め立てを強行する際にも、東北アジアでの安全保障環境や、沖縄の地政学的条件が持ち出される。

歴史的にも、現実的にも、東北アジア、朝鮮半島の平和の確立は、日本の平和運動、護憲運動と直接的な影響を持っている。

4 今回のフォーラムへの期待

(1) 大韓民国憲法の前文には、1919年の3.1独立運動と、1960年の4.19革命が明記され、2016年からのキャンドルデモを憲法に記述する論議もあると聞く。民

族独立と民主化を求める市民のたたかいが、韓国社会を形作るとの認識が共有されていることの反映だと考える。

日本の運動では、先にも述べているように、戦前と戦後を断絶したものにとらえ、再びの戦前に後戻りさせないこと中核においた市民運動が、いま昂揚し、政治変化につなげる発展がめざされている。

そのような異なりは確認しつつも、組織された団体も含む市民の運動が社会の変化を作り出す力であることの認識は共有できると思う。

その点で、互いの運動の経験を共有化し、両国の市民社会に依拠した東北アジアの平和の安定をめざす連帯した取り組みをともに作り出す論議を深めあいたい。

(2) 日本では、改憲策動の強まりと歩調を合わせるように、韓国、朝鮮に対するヘイトが顕在化している。政府やマスコミが、それを煽る状況もある。

そこには、北朝鮮の拉致問題、慰安婦問題や徴用工問題、さらには領土問題などを政治問題化している日本政府に一義的な問題がある。

その点で、朝鮮を植民地とした蛮行への反省と償いを個人のレベルでもすすめることや、歴史の事実さえ修正しようとする動きに抗した運動を積み上げることが必要だと考える。

同時に、市民運動レベルで、様々な課題での交流を深め、共通した取り組みを増やしていくことを提案したい。日本と韓国の法制度や慣習には共通点も多く、大企業の社会的影響力の強さから派生する問題でも共通点は少なくないと思う。

(3) 今回のフォーラムでは、朝鮮半島の非核化、朝鮮戦争の終結と平和の安定、在日、在韓米軍の在留と基地問題、北朝鮮との対話の促進などの点で、市民運動のレベルで協力、共同して具体化できる取り組みを論議し、合意を一つでもつくりだせることを期待した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상진 부위원장

全国民主労働組合総連盟(民主労総)副委員長 イ・サンジン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KCTU)

한국 일본 노동자·민중이 동북아 평화 시대의 주인이 되자!

반갑습니다! 비핵·평화 한일 국제포럼에 참가하신 일본대표단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상진입니다.

먼저 반인륜적 범죄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투하로 희생된 일본인, 한국인 모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더 이상 인류가 핵무기로 인한 희생이 없어야 한다는 과제를 가지고 70년 넘게 평화운동에 나선 원수협 동지들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듯이 작년부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변화는 동아시아에 새로운 평화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27일, 한반도 남북 정상은 [관문점선언]을 통해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 시대가 열리었음”을 전 세계에 선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나아가 북미 정상은 [싱가포르 성명]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후 남과 북은 평양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의 약속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또한 군사분야합의를 통해 70년 넘게 지속되어온 남북 군사적 대치를 완화시키고 신뢰에 기초하여 군축으로까지 나아갈 것을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핵 실험장 폐쇄에 이어 미사일 시험장도 해체했으며, 합의대로 미군 유해 송환도 있었습니다. 올해 2차 북미 회담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한발 더 진전시켜야 했으나 미국의 과도한 요구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북미가 합의한 대로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상응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제에 미국도 동시병행적으로 적대정책을 폐기하는 담보를 해나가면 한반도에 평화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의 핵무기만이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 정책도 폐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핵 위협을 빌미삼아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고, 강화할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미국은 한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과 북한을 고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을 겨냥해서 불법 배치한 한국의 사드 체계는 당장 철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에 편승한 일본 아베 정부는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합법화하고, 안보법제(전쟁법) 개정으로 일본 평화헌법 폐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북핵 위협을 내세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는 반복정책을 중단하고,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는 일체의 정책과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평화의 시대를 맞아 미국과 일본 정부는 더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핵을 포함한 모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원수협을 포함한 일본 평화운동이 추진하고 있는 핵무기금지조약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물론 한국, 일본, 북한 모두 가입하도록 하는 운동에 한국도 주목해야 합니다. 더불어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등 일본의 식민지배 사과와 배상 등의 조치는 일본이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도록 하는 기본 전제입니다.

한국은 국민촛불로 희대의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군사적 대결과 갈등이 아닌 평화를 향한 정세를 맞고 있습니다. 냉전반공 분단체제에 기생해왔던 수구보수 정당과 세력들은 정면에서 한반도 평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집권 2년이 지난 지금, 한국사회가 해결할 많은 개혁 과제에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노동제일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나 정규직화를 약속하며 잡았던 손은 삼성 재벌 이재용의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동존중 사회 약속에서 뒷걸음쳐 ILO 핵심협약 비준조차 머뭇거리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마저 포기했습니다. 한국 노동운동은 이러한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와 노동법 개악을 막기 위해 다시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남북관계 개선, 북미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결국은 한반도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실현이라는 정세의 요구와 과제 역시 노동자·민중이 앞장서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실천과 투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대결로 점철된 동아시아 역사, 전쟁의 위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

非核・平和のための日韓国際フォーラム

는 현실을 넘어 평화의 새 시대를 여는 세계사적인 현장에서 있습니다. 3차 대화를 앞두고 북미 사이에 거칠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세계 평화애호민중의 평화에 대한 절실한 염원을 거스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나서도록 한국과 일본 노동자·민중이 실천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은 평화협정 체결로 구체화됩니다.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 평화를 이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핵·평화 한일 국제포럼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평화애호 민중들의 단결과 투쟁으로 반평화 세력의 기도를 막아내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냅시다. 한국과 일본 노동자·민중이 평화 새 시대, 새 역사의 주인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韓国と日本の労働者・民衆が東北アジアの平和な時代の主人公になろう！

こんにちは。非核・平和韓日国際フォーラムにお越しくくださった日本代表団の韓国訪問を歓迎しながら、感謝申し上げます。民衆労総副委員長を勤め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イ・サンジンと申します。

まず、反人類的な犯罪である原爆投下によって犠牲になった広島・長崎の日本人、韓国人の方々に哀悼の意を表します。尚、これ以上核兵器による犠牲がないようにするという課題をもって70年以上平和運動に取り組んできた原水協の同志たちにも敬意を表します。

私たちが経験しているように、去年から韓半島(朝鮮半島)を中心とした変化は東アジアに新しい平和の時代の兆しを見せています。去年4月27日、南北首脳は板門店宣言を通して「もはや戦争はなく、新たな平和の時代が開かれた」と全世界に宣言し、韓半島の非核化を約束しました。そして、米朝首脳はシンガポールで開催された首脳会談の共同声明を通して、新しい米朝関係、恒久的な韓半島の平和構築と完全な非核化を通して、核なき韓半島の実現を再確認しました。以降南北はピョンヤン共同宣言を通して、南北の約束を強固にしました。尚、軍事分野合意書を通しては70年以上続けられてきた南北の軍事的な緊張の緩和と相互信頼に基いた段階的な軍縮に合意しました。北朝鮮は核実験場とミサイル試験場を閉鎖し、合意通り米兵の遺骨も返還しました。今年は第2次米朝会談を通してシンガポールで宣言された共同声明をより一層進展させるべきでしたが、米国の過度な要求のため、合意に至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米朝が合意したように韓半島の平和体制を構築するためには、北朝鮮の非核化への努力に答えて、同時に米国も敵対政策の撤廃を約束することで韓半島に平和が実現できます。韓半島の非核化には北朝鮮の核兵器の廃棄だけでなく、米国の核の傘政策の廃棄も含まれています。これ以上、北朝鮮の核兵器を言い訳に韓半島と東アジアで韓米日の同盟を構築・強化する大義名分が立たなくなりました。しかし、今も米国は韓米日の同盟を強化しながら中国と北朝鮮を孤立させようとする目論んでいます。したがって、中国を狙って不法配置した韓国のサード(THAAD; 高高度迎撃ミサイルシステム)は直ちに撤去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のような米国の東北アジアでの覇権戦略に便乗した日本の安倍政権は集团的自衛権を合法化し、安保法制(戦争法)の改定により、日本平和憲法の廃止を諦めていません。安倍政権は北朝鮮の核の脅威を盾に自分の政治権力を維持するためだけの反朝政策を中断し、韓半島の再侵略を謀る一切の政策と行動を中止すべきです。平和の時代を迎えた今、米国と日本政府はこれ以上韓半島と東北アジアで核兵器の使用は勿論のこと、戦争が起きないように努めるべきです。以上のような観点から、原水協をはじめとして日本の平和運動が推進している核兵器禁止条約に、核保有国は勿論韓国、日本、北朝鮮も加入させようとする運動に韓国も注目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尚、慰安婦問題、強制徴用問題など日本の殖民支配の謝罪と賠償などの処置は、日本が平和の時代に進むための基本前提となります。

韓国は国民のろうそくデモで希代の国政壟断を犯した朴槿恵(パク・クネ)氏を退陣させ、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府に政権が交替されて以来軍事的な対立と葛藤ではなく平和のために取り組んできました。冷戦・反共の分断体制に寄生してきた守旧・保守政党とその勢力は韓半島の平和ムードに対して真っ向から反対しています。韓国の国民たちは文在寅政権に対して大きな期待をしていました。しかし、政権が交替されてから2年が経った今、韓国社会において解決すべき改革課題から後退しています。労働第一、まず非正規労働者に会い、正規化を約束しながら取り合った手はサンスン財閥の李在鎔氏の手が変わってしまいました。労働を尊重する社会という約束から後退して、今はILO核心協約の批准すらも進まない状況で、最低賃金の引き上げも諦められています。韓国の労働運動はこのような政府の労働政策の後退と労働法の改悪を阻止するために再び闘争の準備をしています。尚、文在寅政権が推進してきた南北関係の改善、米朝会談のための努力は評価していますが、韓半島の非核化と平和協定の同時実現という時代の要求と課題に答えるためには、労働者・民衆が先立たなければ成し遂げられないということを明確に認識して、実践と闘争を準備しています。

非核・平和のための日韓国際フォーラム

対立が続けられてきた東アジアの歴史、戦争の脅威から逃れられていない現実を乗り越えて、新しい平和の時代を切り開く歴史の現場に、今私たちは立っています。3次会談を控えている米朝は激しい綱引きをしています。世界の平和主義者たちの平和に対する切実な願いが裏切られることはないと思います。また、そうなるためにも韓国と日本の労働者・民衆が実践行動に移るべきです。韓半島の平和体制の実現は平和協定の締結によって具体化されます。韓半島の平和は東アジアの平和に繋がります。だからこそ今回の非核・平和韓日国際フォーラムは非常に重大な意味を持っています。

韓国と日本の平和主義者たちが団結と闘争をもって反平和の勢力の企みを防ぎ、韓半島と東アジアの平和の新しい未来を迎えましょう。韓国と日本の労働者・民衆が新しい平和の時代と新しい歴史の主人公になりましょう。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원수협) 사무국장 야스이 마사카즈

原水爆禁止日本協議会(原水協)事務局長 安井正和

The Japan Council against Atomic and Hydrogen Bombs(Gensuikyo)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 포럼 보고

2019년 5월 30일 일본원수협 사무국장

야스이 마사카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기본 방향, 일본의 운동 과제

일본 참가자를 대표해 한일 국제 포럼 실현을 위해 애써주신 한국의 운동, 참가 단체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1. 국제 포럼의 중요한 의의

한일 국제 포럼은 지난 2006년 이후 13년 만에 개최되는 것인데, 일본과 한국의 평화운동은 그동안에도 매년 8월의 원수폭금지세계대회와 3.1 비키니 데이, 2010년 NPT 재검토회의 뉴욕 행동을 비롯해, 일관되게 연대와 공동(共同)을 발전시켜왔다.

이번 포럼은 중요한 정세 속에서 열리고 있다. 작년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실현할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다. 그것이 결실을 이루려는 기로에 선 지금, 이 지역 양국의 운동에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

세계적인 핵무기 폐절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로를 맞이하고 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NPT 재검토회의 제3회 준비위원회에서는, NPT 제6조의 의무와 핵무기 보유국에 의한 ‘자국 핵군비의 완전 폐절’을 달성하는 ‘명확한 약속’을 비롯한 지금까지 이룬 합의의 실행을 둘러싸고 핵무기금

지조약 추진세력과 핵무기 보유국의 대결이 펼쳐졌다. 지금 날카롭게 지적되고 있는 점은 핵무기는 안전하다는 보장 하에 핵 억지력을 허용하는가, 아니면 폐절이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내세울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핵무기가 없는 세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불가결한 과제다.

피폭 75년, 2020년 NPT 재검토회의에 앞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시민들과 함께 일본의 식민지 지배 하에 징용당했다가 피폭된 분들과 양국의 피폭자가 손을 마주잡고 비인도성을 고발하는 선두에 설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여론과 운동으로, 각 나라에서의 투쟁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한일의 연대를 발전시켜 동북아시아에서 비핵과 평화의 압도적인 목소리를 내자. 그것이 핵무기가 없는 평화로운 아시아와 세계를 실현하는 힘이 될 것이다. 포럼은 이러한 연대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2.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기본 방향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은 합의 없이 끝났지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도 있다.

첫 번째는,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일체적으로 진행해야지만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화는 비핵화의 보상이 아니다. 경제 제재 완화 선행도 싱가포르 선언과 다르다. 두 번째는, 상호 신뢰를 키워가며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6년 6개국 협의 공동성명에 담긴 ‘약속 대 약속’, ‘행동 대 행동’의 제기는 중요하다.

이번 회담의 결말은 이 두 가지 방향이 관철되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오랫동안 대립관계에 있었던 양국이 작년 북미정상회담 6.12성명에 따라 끈기 있게 교섭을 계속해나가야 한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의 한반도 정세 변화를 만들어온 것은 시민의 여론과 운동에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한국전쟁 경험에서 만들어진 반전 여론, 민주주의를 실현한 ‘촛불 혁명’, 일본에서는 ‘핵무기만은 절대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의 확산이 그것이다. 2016년 4월에 피폭자가 외친, 모든 나라의 정부에 핵무기금지조약의 참가를 요구하는 ‘피폭자 국제 서명’은 그 수가 940만이 넘었고, 그중 찬성한 지자체 수장의 수는 20현 지사를 비롯해 1259명, 즉 7할이 넘는다. 일본 정부의 핵무기금지조약 조인 및 비준을 요구하는 지자체 결의도 전 지자체의 21%, 377로 확산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핵무기금지조약을 탄생시킨 반핵여론이 있다. 향후 귀추를 좌우하는 것도 여론의 힘이다.

3. 일본 운동의 과제

일본의 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직면한 과제는 ‘장외’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체된 아베의 외교를 타파하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핵무기의 참화를 경험하고 그 비인도성을 아는 피폭국에 걸맞게 핵무기가 없는 동북아시아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정책, 핵무기 금지조약의 서명 및 비준과 핵 억지력(핵우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헌법 9조를 살려 군사 우선에서 평화적 해결로 이니시어티브를 발휘하는 것이다. 북일 간에도 납치문제의 선행이 아니라, ‘북일 평양 선언’에 근거한 포괄적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반핵 여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피폭 75년, ‘피폭자 국제 서명’의 목표인 2020년을 위해 운동을 크게 전진시켜야 한다. 2020년에는 뉴욕에서도 국제적인 공동 행동도 계획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평화 해결에 역행하는 아베 정권의 ‘전쟁하는 나라’ 만들기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일본원수협도 ‘전쟁하게 하지 마라, 9조를 부수지 마라! 총궐기 행동실행위원회’에 함께해 공동 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월 3일 ‘헌법집회’에는 6만 5000명이 참가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광범위한 공동(共同)이 실현되고 있다. ‘총궐기 행동실행위원회’는 이 포럼에도 협찬하고 있다.

핵무기금지조약에 서명, 비준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금지조약을 지지하는 야당들과도 공동 투쟁에 나서고 있다. 7월에 있을 참의원 선거에서 피폭국이자 9조를 가진 나라에 걸맞은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4. 한일 반핵평화운동의 연대

향후 전망에 대해. 일본의 반핵평화운동은 일본의 군국주의와 식민지주의의 근본적인 반성과 보상을 국가에 요구해왔다. 그것은 일본 민주주의의 근본 문제이자, 자신들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인식 위에 한일의 반핵평화운동의 더 큰 발전이 있다. 그리고 이번 국제 포럼을 통해 재한 피폭자에 대한 원호와 연대, 지원을 강화해 나갈 기회로 삼고 싶다.

마지막으로, 상호 운동의 역사, 문화, 입장,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배워나가며 연대를 다지는 것. 시민과 정당의 공동(共同)을 발전시키는 것. 이것들을 토대로 해 동아시아 운동의 연대를 전망하고 싶다.

非核・平和のための日韓国際フォーラムへの報告

2019年5月30日 日本原水協事務局長

安井正和

朝鮮半島非核化と平和の基本方向、日本の運動の課題

日本の参加者を代表して日韓国際フォーラム実現のために尽力された韓国の運動、参画団体のみなさんに対し深い感謝を表明する。

1、国際フォーラムの重要な意義

日韓国際フォーラムは、前回2006年以来13年ぶりの開催だが、日本と韓国の平和運動は、その間も毎年8月の原水爆禁止世界大会と3・1ビキニデー、2010年NPT再検討会議のニューヨーク行動をはじめ、一貫して連帯と共同を発展させてきた。

今回のフォーラムは重要な情勢のもとでひらかれている。

昨年の南北首長会談と米朝首脳会談の合意によって、朝鮮半島の非核化と平和体制を実現する可能性が生まれつつある。いま、それを実らせるのかどうかの岐路にあり、この地域の両国の運動には特別の責任がある。

世界的な核兵器廃絶をめざすうえでも重要な岐路をむかえている。先にニューヨークの国連本部で開催されたNPT再検討会議第3回準備委員会では、NPT第6条の義務と核兵器国による「自国の核軍備の完全廃絶」を達成する「明確な約束」をはじめとするこれまでの合意の実行をめぐり、核兵器禁止条約推進勢力と核兵器国との対決が繰り広げられた。今鋭く問われていることは、核兵器は安全の保証との核抑止力を許すのか、それとも、廃絶が安全の保証であることを大勢にするのか、ということだ。これは核兵器のない世界、朝鮮半島非核化・平和の実現にとっても不可欠の課題だ。

被爆75年、2020年NPT再検討会議にむけて、広島・長崎市民とともに、日本の植民地支配によって徴用され被爆した人びとと、両国の被爆者が手を取りあって非人道性を告発する先頭に立つ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

そして、カギを握っているのは世論と運動であり、それぞれの国でのたたかいが決定的に重要である。そのうえに日韓の連帯を発展させ、北東アジアから非核と平和の圧倒的な声を発信しよう。それが核兵器のない平和なアジアと世界を実現する力になる。フォーラムは、こうした連帯を発展させる重要な意義をもって

いる。

2、朝鮮半島の非核化と平和の基本方向

2月ハノイの米朝首脳会談は合意なく終わったが、そこから見えてくる教訓もある。

一つは、平和体制と非核化を一体的にすすめてこそ前進できる。平和は非核化の見返りではない。経済制裁緩和先行もシンガポール宣言と異なる。二つ目は、相互信頼をつちかひながら段階的にすすめてこそ前進できる。2006年の6か国協議の共同声明の「約束対約束」「行動対行動」の提起は重要だ。

今回の会談の結末は、この2つの方向が貫かれなかった結果と言える。長年対立関係にあった両国が、昨年米朝首脳会談6・12声明にそって粘り強く交渉を続けることを要求する。

強調したいのは、今日の朝鮮半島情勢の変化をつくりだしてきたのは市民の世論と運動にある。それは韓国の朝鮮戦争の体験からの反戦世論。民主主義を実現した「キャンドル革命」。日本でも「核兵器だけは絶対つかってはならない」の声の広がりがある。2016年4月に被爆者がよびかけた、すべての国の政府に核兵器禁止条約の参加を求める「ヒバクシャ国際署名」は940万筆を超え、そのうち自治体首長の賛同者は20県知事はじめ1259人、7割を超えている。日本政府の核兵器禁止条約の調印・批准を求める自治体決議も全自治体の21%、377に広がっている。

国際的には、核兵器禁止条約を誕生させた反核世論がある。今後の帰趨を左右するのも世論の力だ。

3、日本の運動の課題

日本の運動は何をすべきか。直面する課題は「蚊帳の外」といわれる安倍外交のゆきづまりを打破すること。

必要なのは、一つは、核兵器の惨禍を体験し、その非人道性を知る被爆国にふさわしく、核兵器のない北東アジアと世界をめざす政策、核兵器禁止条約の署名・批准と核抑止力（核の傘）からの脱却である。二つは、憲法9条を生かし、軍事優先から平和的解決へのイニシアチブを発揮すること。日朝間も拉致問題先行でなく「日朝平壤宣言」にもとづく包括的交渉を行うことが求められる。

決定的に重要なのは反核世論の発展にある。そのために、被爆75年、「ヒバクシャ国際署名」の目標である2020年にむけた運動を大きく前進させる。2020年にはニューヨークでも国際的な共同行動も計画される。

もう一つは、平和解決に逆行する安倍政権の「戦争する国」づくりに反対する

非核・平和のための日韓国際フォーラム

たたかい。日本原水協も「戦争させない・9条壊すな！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に加わり共闘の発展に奮闘している。5月3日の「憲法集会」には6万5000人が参加した。これまでにない広範な共同が実現している。「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は、このフォーラムにも協賛している。

核兵器禁止条約に署名、批准する政府をもとめて、禁止条約を支持する野党とも共闘をめざしている。7月には参議院選挙があり、被爆国であり、9条をもつ国にふさわしい政治を実現するために全力を尽す。

4、日韓の反核平和運動の連帯

今後の展望について。日本の反核平和運動は、日本の軍国主義と植民地主義の根本的反省と補償を国に求めてきた。それは、日本の民主主義の根本問題であり、自らの問題でもあるからだ。この認識の上に、日韓の反核平和運動のさらなる発展がある。また、今回の国際フォーラムを通じて、在韓被爆者への援護・連帯、支援を強める機会としたい。

最後に、お互いの運動の歴史、文化、立場、意見を尊重し、学び合いながらの連帯を築くこと。市民と政党との共同を発展させること。それらを土台に東アジアの運動の連帯を展望した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김강연 사무처장

平和と統一を開く人々(ピョントンサ)事務処長 キム・ガンヨン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SPARK)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및
일본의 군사적 대외 팽창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으로
비핵-평화의 동아시아를 구축하자!

김강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비핵-평화의 동아시아 건설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및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군사적 대외팽창 저지를 기본 요건으로 한다. 북미 간 핵대결이 지속된다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고 핵 도미노가 동아시아를 휩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군사적 대외팽창은 지난날 일제에 의한 군국주의적 침략전쟁과 식민 지배의 재현으로 동아시아 평화의 블랙홀로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2018년은 남북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북미 싱가포르 성명 채택으로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기가 사라지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향해 거보를 내디딘 역사적인 해였다. 그러나 올해 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길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북의 선비핵화 조치와 ‘전부 아니면 전무’ 식 협상 방식을 고집하는 트럼프 정권의 일방주의가 싱가포르 성명을 진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합의 채택을 가로막았으며, 이에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도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름길은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 성명에서 밝힌 대로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에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된 원인은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에서 대결과 전쟁을 끝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북미 불가침조약과 함께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을 국제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가장 확고하게 담보해

주는 방안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대북 적대 정책의 일환인 제재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즉각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야 한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협정 체결과 양립할 수 없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원인인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대북 선제공격과 체제전복을 요체로 한 한미동맹의 대북 작전계획(작전계획 5027→작전계획 5015)과 이에 의거해 실시되는 한미연합연습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과제는 실현되기 어렵다.

지난 시기는 물론 현시기에도 한미연합연습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그 진전을 가름하는 관건적 요소다. 아직은 그 모멘텀이 살아 있는 김정은-트럼프 정권 간 한반도 비핵화 협상도 언제라도 한미동맹에 의해 파탄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연례 한미연합연습을 중단시킨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한미 공군과 해병대의 연합연습, 사드 전개 훈련 등 대북 공세적 훈련은 한반도 비핵화의 정치외교적 해법이 설 자리를 빼앗고 북한의 맞대응을 불러와 비핵화 협상을 질식시키게 된다.

한미동맹의 대북 공세적 연합연습은 한반도 평화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과 그 후속 합의도 가로막고 있다. 미국은 동맹을 명분으로 한 한미 간 공조를 앞세워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마저 가로막음으로써 관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이행을 꺾방 놓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한미동맹이 계속 존속된다면 잠재적 전쟁공동체로서의 한미동맹은 그 대북 공세적 속성으로 말미암아 한반도 평화체제를 파괴하여 북한을 다시 핵보유로 내몰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설령 대북 공세성이 약화된다고 하더라도 한미동맹은 지금보다도 더욱더 중국을 직접적인 적대 대상으로 겨냥하게 됨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달성 후 평화체제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도, 그리고 현시기와 미래의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한미동맹은 한시라도 빨리 해체되어야 한다.

비핵-평화의 동아시아 구축을 위해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대외 팽창 기도를 저지해야 한다. 미국의 등에 올라타 대외 군사적 개입을 노리고 있는 아베 정권의 야욕은 집단자위권 행사(2014.7.1)와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2015.4.27), 안보법 제·개정(2015.9.19), 공세무기 도입, 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 강화 등에서 압축적으로 나타난다.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소위 해석개헌을 통해 국제분쟁에 무력 개입

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으로,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와 교전권을 영구히 포기한 평화헌법(9조)을 무력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무력행사 3요건’(1972)을 개악한 ‘무력행사 신 3요건’(2014)은 그 규정이 매우 모호해 자위대가 3국 분쟁에 무력 개입할 수 있는 길을 무한정으로 보장해 주는 만병통치약이 되었으며, 이로써 ‘전수방어’ 원칙은 사장되었다.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게 될 지역은 일본을 둘러싼 지정학적 성격상 주로 동아시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군사적 개입은 최우선적으로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다. 아베 정권이 예시한 집단자위권 행사의 유형, 아베 총리와 각료들의 발언, 특히 개정 미일방위협력지침과 중요영향사태법, 존립위기사태법 등은 대북 선제공격과 남한에 대한 군사적 침략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회의(2015.7.28)에서 “일본에 대한 공격 의지가 없는 국가에 대해서도 ‘무력행사 신 3요건’이 충족되면” 공격할 수 있다며 그의 침략 의도와 호전성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또한 나카타니 겐 당시 방위상은 중의원 회의(2015. 5. 28)에서 “미국이 국제법상 위법적인 (대북) 선제공격을 하는 경우에도 ‘무력행사 신 3요건’만 충족시키면 집단자위권을 발동하”겠다는 위헌·위법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남한 동의 없이 남한 영역에서 작전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남한 주권 침해요 침략이다. 중요영향사태법은 남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반도 유사시 일본 국내법보다는 미일방위협력지침이 더 규정력을 갖게 될 것이며, 미국이 남한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한 미국의 요구에 따른 자위대의 남한 침탈은 예정된 수순이다. 존립위기사태법은 동의 규정조차 두지 않고 있다.

유엔헌장(51조)은 개별자위권이든 집단자위권이든 ‘무력공격(armed attack)’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베 정권이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에 가담하거나 일본 독자적으로 대북 선제공격에 나설 의사를 숨기지 않는 것은 아베 정권이 일제 군국주의적 전쟁과 침략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즈모의 항공모함으로의 개조, 해병대(수륙기동단) 창설, F-35 스텔스기 대량 도입 등은 한반도를 비롯해 동아시아와 지구적 차원에서 자위대의 선제공격과 군사력 투사 능력을 갖고자 하는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적 대외팽창 야욕을 뒷받침해주는 군비증강이다.

이러한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적 대외 침략 기도는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 개정에 성공하게 된다면 또 하나의 날개를 달게 된다는 점에서 평화헌법 수호는 일본을 넘어 한국 등 동아시아 평화세력들의 공동의 절박한 과제다.

아베 정권은 한반도 무력 개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집단자위권 행사와 함께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에도 공(?)을 들여왔다. 미일은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MD)을 먼저 구축한 다음 이를 매개로 한일 군사협력을 정보와 작전 영역으로 확장하고, 여기에 군수 분야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한일 ‘물품·용역 상호제공협정(ACSA)’까지 체결해 한일군사동맹을 결성함으로써 미국을 정점으로 한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한미일 연합 MD 훈련으로 한미일 MD 구축에서는 큰 진전을 이뤘으나 과거 일제 침략에 대한 한일 간 정치외교적 갈등의 심화로 전면적인 군사동맹으로의 발전은 주춤거리고 있다.

그러나 미일, 한미동맹의 일체화를 축으로 한 한미일 및 미일호 동맹 구축과 호주·한국·일본의 나토 파트너십 가입에 따른 나토와 일미, 한미, 미일호 동맹과의 연계 강화는 동아시아에서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한층 심화시킴으로써 비핵-평화의 동아시아 건설에 결정적 장애로 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과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군국주의적 대외 팽창 저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서도, 일본이 과거의 침략 역사를 반성하고 주변국가와 선린평화관계를 맺음으로써 명실상부한 정상국가—평화헌법 개정으로 군대 보유를 명문화하는 방식의 보통국가화가 아니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관건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한일 시민진영 간 단결과 투쟁이 절실히 요구된다.

朝鮮半島の非核化と平和協定及び日本の軍事的對外膨張阻止のための共同闘争へ 非核－平和の東アジアを構築しよう！

高永大 (コ・ヨンデ) / 平和と統一を開く人々 共同代表

非核－平和の東アジアの建設は、朝鮮半島の非核化と平和協定締結及び日本の軍事大国化と軍事的對外膨張の阻止を基本要件とする。朝米間の核対決が持続すれば朝鮮半島に戦争が勃発し核ドミノが東アジアを襲う可能性を排除できず、日本の軍事大国化と軍事的對外膨張は、過日の日帝による軍国主義的侵略戦争と植民地支配の再現により東アジア平和のブラックホールになる可能性が濃厚だからだ。

2018年は、南北の板門店宣言と平壤宣言、朝米のシンガポール声明の採択により、朝鮮半島で核戦争の危機が無くなり、朝鮮半島非核化と平和協定締結に向かって大きな一步を踏み出した歴史的な年であった。しかし今年初めのハノイで

の朝米首脳会談の決裂により朝鮮半島非核化と平和協定締結の道に暗雲が垂れ込めている。北朝鮮の非核化先行」と「オール・オア・ナッシング」式の協議方法に固執するトランプ政権の単独行動主義が、シンガポール声明を進展させるための新たな合意採択を妨害したのであり、これによって板門店宣言と平壤宣言も履行されずにいる。

朝鮮半島非核化を達成するための近道は、朝米首脳がシンガポール声明で表明したとおり、米国の北朝鮮への体制保障にある。北朝鮮が核兵器を持つことになった原因は、北朝鮮の体制を脅かす米国の北朝鮮敵視政策にある。朝鮮半島平和協定の締結は、朝鮮半島で対決と戦争を終結させ平和体制を構築することによって、朝米不可侵条約とともに米国による北朝鮮の体制保障を国際法的に制度的にもっとも確固として担保する方案である。米国が本当に朝鮮半島非核化を達成しようとするなら、北朝鮮敵視政策の一環である制裁にしがみつくなはなく、直ちに朝鮮半島平和協定の締結と平和体制構築に乗り出さなくてはならない。

韓米同盟は、朝鮮半島非核化及び平和協定の締結と両立しえない。韓米同盟は、北朝鮮の核兵器保有の原因である米国の北朝鮮への敵視政策そのものだけといえる。北朝鮮に対する先制攻撃と体制転覆を要とした韓米同盟の対北朝鮮作戦計画（作戦計画5027→作戦計画5015）とこれに依拠して実施されている韓米合同演習が続く限り、朝鮮半島非核化と平和協定の締結は実現しがたい。

過去はもちろんのこと現時点でも、韓米合同演習は朝鮮半島非核化協議においてその進展を分けるキーポイントといえる要素だ。今はまだそのモメンタムが生きている金正恩－トランプ政権間の朝鮮半島非核化協議も、いつでも韓米同盟によって破たんさせられる可能性がある。トランプ大統領が毎年実施される主要な韓米合同演習を中断した後も継続されている韓米空軍と海兵隊の合同演習、サード展開訓練など北朝鮮に対する攻撃的訓練は、朝鮮半島非核化の政治外交的解決法が成立する余地を奪い、北朝鮮の対決姿勢を呼び起こし、非核化協議を窒息させることになる。

韓米同盟の北朝鮮への攻撃的合意演習は、朝鮮半島平和の架け橋の役割をすることになる南北「軍事分野合意書」の履行とその後続合意をも妨げている。米国は同盟関係を理由とした韓米間の共助を押し立ててケソン工場団地の再稼働と金剛山観光の再開までも妨害することで板門店宣言と平壤宣言の履行を妨げている。

朝鮮半島非核化が達成され平和協定が締結されたとしても、韓米同盟が存続し続けるなら、潜在的戦争共同体としての韓米同盟は、その北朝鮮に対する攻撃的屬性によって、朝鮮半島の平和体制を破壊して北朝鮮を再び核保有へと追いや

危険性を持っている。仮に北朝鮮への攻撃性が弱化するとしても、韓米同盟は今よりいっそう中国を直接的な敵対対象として狙うようになり、それによって朝鮮半島はもちろん東アジアの平和が大きく脅かされることになるだろう。

朝鮮半島非核化と平和協定締結を早めるためにも、朝鮮半島非核化と平和協定の達成後の平和体制の安定的な維持のためにも、そして現在と未来の朝鮮半島と東アジアの平和のためにも、韓米同盟は一刻も早く解体されねばならない。

非核-平和の東アジア構築のためには、日本の軍事大国化と対外膨張の企てを阻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米国に便乗して対外軍事介入を狙っている安倍政権の野望は、集团的自衛権行使(2014.7.1)と日米防衛協力指針の改正(2015.4.27)、安保法の制・改定(2015.8.19)、攻撃兵器の導入、太平洋地域での同盟強化などにおいて圧縮して表れている。

安倍政権の集团的自衛権行使は、いわゆる解釈改憲を通じて国際紛争に武力介入できる道を開いたものであり、国際紛争の解決手段としての武力行使と交戦権を永久に放棄した平和憲法(9条)を無力化したものだ。これとともに「武力行使の3要件」(1972)を改悪した「武力行使の新3要件」(2014)は、その規定が非常にあいまいで、自衛隊が第3国紛争に武力介入できる道を無限定に保障してやる万能薬になったのであり、これによって「専守防衛」原則は死蔵された。

日本が集团的自衛権を行使することになる地域は、日本を取り巻く地政学的性格上、主に東アジアになるほかない。だが東アジア地域でも日本の集团的自衛権行使と軍事的介入は、最優先で朝鮮半島を狙っている。安倍政権が例示した集团的自衛権行使の類型、安倍総理と閣僚たちの発言、特に改正された日米防衛協力指針と重要影響事態法、存立危機事態法などは、北朝鮮に対する先制攻撃と韓国に対する軍事的侵略の可能性を示唆している。

安倍総理は、参議院本会議(2015.7.28)で『日本に対する攻撃の意志がない国に対しても「武力行使の新3要件」が満たされれば』攻撃できると述べ、彼の侵略意図と好戦性をいかに明らかにした。さらに中谷元防衛相(当時)は、衆議院本会議(2015.5.28)で『米国が国際法上違法な(北朝鮮に対する)先制攻撃をする場合にも「武力行使の新3要件」さえ満たせば、集团的自衛権を発動する』という違憲-違法な発言をためらわなかった。

日米防衛協力指針は、朝鮮半島有事に際して自衛隊が韓国の同意なく韓国の領域で作戦を遂行できるよう保障している。韓国の主権侵害であり、侵略である。重要影響事態法は韓国の同意を得るように規定しているが、朝鮮半島有事に際して日本の国内法より日米防衛協力指針のほうが規定力を持つことになるのであり、米国が韓国軍の戦時作戦統制権を行使している限り、米国の要求に従う自衛隊の韓国への侵奪は予定されたレベルである。存立危機事態法は同意規定さえ置

いていない。

国連憲章（51条）は、個別自衛権であれ、集団的自衛権であれ、「武力攻撃（armed attack）」に対する防御次元でのみ許容している。それでも安倍政権が米国の対北朝鮮先制攻撃に加担したり日本の独自の対北朝鮮先制攻撃に出る意思を隠していないことは、安倍政権が日本帝国主義の軍国主義的戦争と侵略を目論んでいるという事実を明確に示している。

いずもの航空母艦への改造、海兵隊（水陸機動団）創設、F-35ステルス機の大量導入などは、朝鮮半島をはじめ東アジアと地球的次元で、自衛隊の先制攻撃と軍事力投射能力を持つとする安倍政権の軍国主義的対外膨張の野望を支える軍備増強である。

このような安倍政権の軍国主義的対外侵略の目論見は、安倍政権が平和憲法改正に成功することになればさらにもう一段階進展することになるという点で、平和憲法を守ることは日本を越えて韓国など東アジアの平和勢力の共同の切迫した課題である。

安倍政権は、朝鮮半島への武力介入のための制度的装置の一つとして集団的自衛権行使とともに韓米日軍事同盟の構築にも精魂（？）を込めてきた。米日は韓米日ミサイル防衛網(MD)を先に構築してから、これを媒介に韓日の軍事協力を情報と作戦領域へと拡張し、ここに軍需分野の協力を制度化する韓日「物品・役務相互提供協定(ACSA)」まで締結して韓日軍事同盟を結ぶことで、米国を頂点とした韓米日軍事同盟を構築しようとしているのだ。サード配備と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の締結、韓米日の合同MD訓練により韓米日MD構築では大きな進展を実現したが、過去の日本帝国主義の侵略に対する韓日間の政治外交的な対立の深まりによって全面的な軍事同盟への発展はもたついている。

しかし日米同盟と韓米同盟の一体化を軸にした韓米日及び米日豪同盟の構築と、オーストラリア・韓国・日本のNATOパートナーシップ加入にともなうNATOと日米、韓米、米日豪の同盟との連携強化は、東アジアで中国との軍事的対決をいっそう深化させることで非核-平和の東アジア建設に決定的な障害となるだろう。

朝鮮半島の非核化と平和協定締結、日本の軍事大国化と軍国主義的対外膨張の阻止は、朝鮮半島の「平和と繁栄、統一」のためにも、日本がかつての侵略の歴史を反省し周辺国と善隣平和の関係を結ぶことによって名実共に世界のリーダー-国家-平和憲法の改悪で軍隊保有を明文化して普通の国になるのではなく-へと生まれ変わるためにも、かなめとなる課題に他ならない。このために、これまでのどんな時よりも切実に韓日の市民陣営間の団結と闘争が求められている。

신일본부인회 회장 카사이 키미요

新日本婦人の会会長 笠井貴美代

New Japan Women's Association (NJWA/Shinfujin)

한일국제포럼 전체회의

일본의 여성운동과 비핵·평화, 성평등

신일본부인회

회장 카사이 키미요

<일본 여성운동의 원점>

신일본부인회(약칭:신부인)는 창립 57년, 비핵·평화, 성 평등을 목표로 운동하고 있는 유엔 NGO의 여성단체입니다. 단체의 목표로 핵무기 폐기, 헌법 개약 반대, 군국주의 부활 저지, 생활의 향상, 일본의 독립과 민주주의, 여성해방, 국제연대를 내걸고 전국에서 풀뿌리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아시아 침략전쟁·식민지 지배의 가해국이자 핵무기가 사용된 유일한 전쟁피폭국의 여성으로서 전쟁 이후 평화의 굳은 결의로 출발했던 것이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여성운동은 권리가 없는 채로 전쟁에 협력 당했던 전쟁 이전의 고통의 경험을 거쳐, '신부인'도 참가하는 국제부인년연락회(国際婦人年連絡会)는 “평등 없이 평화 없다”, “평화 없이 평등 없다”를 표어로 일본의 주요한 34개 단체가 공동 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쟁 찬양과 젠더 적대의 아베 정권에 맞서>

지금 일본의 여성들은 아베 정권에 맞서 9조 개헌을 반대하고, 핵무기 금지 조약의 비준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속에서 활약하며, 성 평등 이슈에서도 #MeToo 운동과 연대해 성추행이나 성폭력, 성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로 새로운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역대 정권 중 가장 여성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정권입니다. 개헌 추진의 우파 언론인 요미우리신문은 역대정권의 지지율을 조사해, 전쟁법, 개헌, 소비세 증세 등의 강경적인 정책이 그 요인이라 분석했습니다. 자민당의 개헌 초안은 ‘전쟁 포기’의 9 조와 세트로 ‘양성 평등’의 24 조를 개악해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한다”¹⁾는 문구를 포함시켜, 여성을 집에 묶어두는 시대착오적인 가족제도 부활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의 3·11 동일본대지진·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일본의 여성과 시민사회에 “잘못된 일에 나서자”는 기운을 높여, 무언가 있으면 국회 앞에 달려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베 정권에 의한 전쟁법 강행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레드 액션²⁾이나 젊은 엄마들의 “누구의 아이도 죽이지 말라”는 슬로건 등,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부인’은 지금 ‘아베 9 조 개헌 NO!’와 ‘피폭자 국제 서명’의 ‘평화의 2 개 서명’에 빨강과 파랑의 현수막을 내걸고 몰두해 각 150 만, 200 만 명을 목표로 각각 115 만, 111 만 명의 서명을 모았습니다. ‘개헌 NO!’ 서명은 오키나와 헤노코 신기지 건설 강행과 미군 고액 무기의 대량 구입, 소비세 증세 등 아베폭주정치의 분노와 불안을 담아내 어디서든 대화가 활기를 띠게 하고, 이 여론의 확대가 자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개헌 발의를 막아내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핵무기금지조약은 그 전문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 및 안전의 촉진, 달성에 있어 불가결한 요소’로 여성의 역할을 명기했습니다. ‘신부인’은 “핵전쟁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라”라는 걸음을 계속해왔으며, 일본 원수협과 함께 유엔에 보낸 핵무기폐기서명은 ‘신부인’ 만으로도 1978년 이래 1600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조약 채택의 유엔회의에서는 피폭국 여성 대표로서 발언, 세계의 시민사회와 함께 국제 정치를 움직여왔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내년의 NPT 재검토회의는 금지조약의 발효와 핵 보유국, 동맹국 사이의 싸움이 성패를 쥐고 있습니다. 피폭국인 일본정부가말로 역할을 다하라고, 부모와 아이들이 피폭의 실상을 배우고, 원폭에 대한 전시를 시민회관과 은행에서 열고, 거리와 지역에서 서명으로 대화하고, 지자체와 정부에 제출하는 의견서 운동을 확대하고, 풀뿌리로부터 아베 정권을 포위해 퇴진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선거로 매듭짓기>

- 1) 2012년 자민당 제안 일본 개헌안 24-1(신설) : 가족은 사회의 자연스러운 기초적 단위로 존중된다.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한다.
- 2) 평화에 대한 열정을 나타내는 붉은 옷을 입고 헌법 개악과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과 안보관련 법안 등의 반대를 호소하는 도쿄 여성들의 액션

‘위안부’ 문제의 한시라도 빠른 해결은 미룰 수 없습니다.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 하에 여성을 성 노예로 삼은 인권 유린의 전쟁범죄입니다. 일본정부가 전쟁 책임을 진지하게 마주 하고, 한사람 한 사람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되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는 인권문제입니다. ‘신부인’은 1992년 이래 문제해결을 요구, 피해여성의 재판 지원 기금과 전체 중학교 역사 교과서 기술 등의 운동을 했고, 2003년에는 ‘위안부’ 문제 공격의 배후에 개헌우파단체 ‘일본회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재빨리 간파하고 각지에서 반격해왔습니다. 2015년의 한일합의 후에, 정권과 언론이 “언제까지 해결이 끝난 일을 되풀이할 것이냐”는 한국 비판 일색의 이상한 대응에도 강력히 비판해왔습니다. 일본이 가해국이기엔 일본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가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배상하는 것. 그리고 교과서 기술, 공인의 폭언 금지와 반박 등 진지한 반성으로 받아들여지는 조치를 취할 때야말로 피해 여성과 국제사회에 수용될 수 있습니다.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총리와 여당 자민당, 공명당 세력을 소수로 몰아가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에도 필수적입니다. ‘신부인’은 특정 정당은 지지하지 않지만, 시민과 야당의 공동의 단일후보 실현과 그 승리를 위해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정권을 바꾼 한국의 투쟁을 배워, 아베 정치를 대신해 동북아시아에서부터 비핵·평화, 성 평등을 제기하여 세계의 SDGs³⁾의 흐름으로 나아가는 정치 실현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日韓フォーラム開会総会・日本側基調報告
日本の女性運動と非核・平和、ジェンダー平等

新日本婦人の会会長 笠井貴美代

<日本の女性運動の原点>

新日本婦人の会(略称:新婦人)は、創立57年、非核・平和、ジェンダー平等めざして運動している国連NGOの女性団体です。会の目的に、核兵器廃絶、憲法改悪反対、軍国主義復活阻止、生活の向上、日本の独立と民主主義、女性の解放、国際連帯を掲げ、全国で草の根から活動しています。これは、日本がアジア

3)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줄임말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뜻한다.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공동목표로 빈곤, 성 평등, 기후 등 17개의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고 있다.

への侵略戦争・植民地支配の加害国であり、また核兵器が使われた唯一の戦争被爆国の女性として、戦後、平和の固い決意で出発したことが土台となっています。日本の女性運動は、無権利なまま戦争に協力させられた戦前の痛苦の経験をへて、新婦人も参加する国際婦人年連絡会は「平等なくして平和なし」「平和なくして平等なし」を合言葉に、日本の主な34団体が共同して行動をすすめています。

<戦争賛美とジェンダー敵視の安倍政権に立ち向かって>

今、日本の女性たちは、安倍政権に立ち向かって、9条改憲を許さず、核兵器禁止条約の批准を求める市民社会のなかで役割を發揮し、ジェンダー平等でも、#MeToo運動と連帯してセクハラや性暴力、性差別を許さないと声をげ、新たな行動に立ちあがっています。

安倍政権は歴代政権のなかで最も女性に嫌われている政権です。改憲推進の右派メディア読売新聞が歴代政権の支持率を調べ、戦争法、改憲、消費税増税などのタカ派的な政策がその要因と分析しました。自民党の改憲草案には、「戦争放棄」の9条とセットで「両性の平等」の24条を改悪し、「家族は助け合う」の文言を盛り込み、女性を家に縛る時代錯誤の家族制度復活をねらっています。

しかし、2011年の3・11東日本大震災・原発事故は、日本の女性や市民社会に「おかしいことに声をあげよう」との機運を高め、何かあれば国会前に駆けつけるスタイルを定着させました。安倍政権による戦争法強行に反対して、女性のレッドアクションや、若い母親の「だれのこどももころさせない」のスローガンを生みだし、たたかいが続いています。

新婦人は今、安倍9条改憲NO!とヒバクシャ国際署名の「平和の2署名」に、赤と青の横断幕を掲げてとりくみ、各150万、200万を目標に、それぞれ115万、111万をあつめています。改憲NO!署名は、沖縄の辺野古新基地建設強行や米国製高額武器の爆買い、消費税増税など、安倍暴走政治への怒りや不安の受け皿となり、どこでも対話がはずみ、この世論の広がりが自民党が多数の国会で改憲発議をくいとめる力になっています。

核兵器禁止条約前文は、「持続可能な平和及び安全の促進、達成にとって不可欠な要素」と女性の役割を明記しました。新婦人は、「核戦争から子どもを守れ」と歩み続け、日本原水協とともに国連に届けた核兵器廃絶署名は新婦人だけでも1978年以来1600万を超え、条約採択の国連会議では被爆国女性の代表として発言、世界の市民社会とともに国際政治を動かしてきたことは私たちの確信です。来年のNPT再検討会議は、禁止条約の発効と、核保有国と同盟国でのたたかいが成否を握っています。被爆国日本政府こそ役割を果たせと、親子で被爆の実

相を学び、原爆展を地域の公民館や銀行で開き、毎月街頭や地域で署名で対話し、自治体から国への意見書運動を広げ、草の根から安倍政権を包囲し、退陣を迫る活動を強めています。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を、選挙で決着を>

「慰安婦」問題の一刻も早い解決は待たないです。侵略戦争と植民地支配のもとで、女性を性奴隷とした人権じゅうりんの戦争犯罪です。日本政府が戦争責任に真剣に向き合い、一人ひとりの被害者の人権が回復されない限り、解決できない人権問題です。新婦人は1992年以来、問題解決を求め、被害女性の裁判支援基金や全中学校歴史教科書に記述させるなど運動し、2003年には「慰安婦」問題への攻撃の背景に、改憲右翼団体、日本会議の存在があることをいち早く見抜いて、各地で反撃してきました。2015年の日韓合意とその後、政権とメディアが「いつまで解決ずみのことを蒸し返すのか」と韓国批判一色の異常な対応をとっていることを厳しく批判してきました。日本が加害国であり、日本政府の責任が問われているのです。加害の真相を究明し、事実を認めて謝罪し賠償すること、また、教科書への記述、公人の暴言禁止と反駁など、真摯な反省と受け取られる措置をとってこそ、被害女性と国際社会に受け入れられるものとなります。

7月の参院選で安倍自公勢力を少数に追い込むことがこの問題解決にも不可欠です。新婦人は特定の政党は支持しませんが、市民と野党の共同候補の実現とその勝利へ会をあげて支援しています。市民の力で政権を変えた韓国のとたかいに学び、安倍政治に代わって、北東アジアから非核・平和、ジェンダー平等を発信し、世界のSDGsの流れをすすめる政治の実現へ、全力をあげます。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원익선 교무

円仏教ソングジュ聖地守護非常対策委員会 円仏教教務 元永常
The Won-Buddhist Emergency Committee
to Guard the Sacred Site at Seongju

원불교의 사드철폐운동과 한반도 평화구축

원익선

(원불교 교무, 원광대학교)

1

2년 전인 2017년 4월 26일과 9월 7일 양일에 걸쳐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전쟁무기 사드가 배치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의 박근혜 전 정권과 문재인 현 정권이 연이어 행한, 국가법을 붕괴시킨 불법적인 사건이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양 정부의 불법은 법적으로 단죄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냉혹한 국제적인 힘의 논리, 즉 약육강식의 세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이는 얼마나 불의한 일인지 모른다. 아마도 세계의 역사는 이러한 모순과 부조리가 판치는 세계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역사는 도도하게 인류의 핵심 가치인 정의와 평화의 길을 걸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 한반도에는 20세기 두 차례 인류의 살육이 이루어진 세계 대전과 이후 동서의 냉전의 여파가 그대로 온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냉전의 초기에 갈라지고, 전쟁으로 다시 한반도를 초토화시킨 후에 두 조각으로 고착화된 이 땅의 아픔을 백성들은 고스란히 온 몸으로 겪고 있다. 이것은 현대 민주주의국가에 대한 외세에 의한 강제적인 군사행위다. 이는 한반도는 일제의 식민지 강점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엄밀히 말해 자주독립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의미한다. 1990년대에 냉전이 와해되었음에도 지구의 마지막 남은 역사의 사실적 현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과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지만 한반도 평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현재는 교착상태에 있다. 그만큼 이 분단의 장벽은 견고한 것이다. 더욱이 이 소성리는 원불교의 성지다. 제2대 지도자인 정산 송규 종사(鼎山 宋奎 宗師, 1900-1962)와 그의 아우 주산 송도성 종사(主山 宋道性 宗師, 1907-1946)가 나고 자랐으며, 구도의 땅인 동시에 스승을 찾아 순례를 떠난 엄연한 종교의 성지다. 수많은 원불교의 신도들이 순례하던 그 길 위에 한국과는 관계가 없는, 미국의 대중국, 대러시아를 향한 미사일 방어망을 위한 사드와 레이더가 들어와 있는 것이다. 오늘날 현대의 전쟁은 공격무기나 방어무기는 구분 할 수 없다. 평화 앞에서는 전쟁을 위한 군대나 무기는 쓸모가 없다. 그러한 군대와 무기가 정의와 평화를 외치는 성자의 혼이 깃든 종교의 성지에 배치되었다는 것은 인류 최후의 보루인 종교를 말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2

원불교는 사드철폐운동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종교가 가르치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송규 종사가 자신의 평생의 가르침을 요약한 계송인 “한 울안 한 이치에 한 집안 한 권속으로 일원세계 건설하자(同源道理, 同氣連契, 同拓事業)”는 평화의 삼동윤리(三同倫理)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의 스승이자 원불교의 창시자 소태산 박중빈(少太山 朴重彬 大宗師, 1891-1943)의 일원주의(一圓主義)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가르침이다. 송도성 종사 또한 1945년 해방된 조국을 향해 세계 각지에서 고향을 찾아 귀향한 전 재동포를 구호하는 사업을 이끌다가 순교했다. 이러한 원불교의 순교정신을 재현하고 있는 중이다.

즉 원불교의 기본 정신인 사무여한(死無餘恨, 죽어도 여한이 없다)의 정신으로 ‘불의는 죽기로써 하지 않고, 정의는 죽기로써 실천하라’는 가르침을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중이다. 원불교의 재가출가 신도들은 24시간 사드가 들어간 길목인 진밭교의 평화교당을 지키고 있다. 어떠한 무장도 하지 않고 오직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중이다. 밝으면 밝히는 대로 이들은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다 내놓고 있다. 이보다 더 비장하고 이보다 더 처절한 싸움은 없을 것이다. 이 평화교당은 사드가 들어가기 한 달 전 원불교 교무들이 순례길을 회복시켜달라고 요구하면서 맨 바닥에 앉은 그 자리에 사드를 반대하는 백성들이 처준 천막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이 평화교당이야말로 이 땅의 백성들이 원불교, 아니 한국의 모든 종교에게 정의와 평화를 지켜달라는 눈물로써 호소하는 상징의 장소이며, 인권, 정의, 평화, 생명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사드를 둘러싼 이기적인 욕망의 자본주의, 폐쇄적인 국가주의, 맹목적으로 우주의 질서에 도전하는 과학

의 복합적인 무지로부터 지구를 지켜주는 세계의 성전이라고 본다. 따라서 여기에는 기독교와 천주교 또한 종교의 울을 넘어 가열차게 동참하고 있다.

3

전쟁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악은 자신의 세력을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전쟁을 통해 그 본성을 드러낸다. 원불교의 사드철폐운동 또한 단순히 성지회복운동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세계의 모든 전쟁을 부정하는 연장선에 이 운동의 본질이 있다. 한반도에는 세계 모든 힘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악의 중심에 원불교가 들어와 있다. 원불교는 모든 종교의 가르침을 수용한다. 불교의 불살생의 계율, 기독교와 천주교의 경전 <성경>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평화는 정의의 열매’라는 가르침을 계승하고 있다. 모든 악의 제1의 악인 살생을 이 지구에서 추방하기 위한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구축은 세계평화의 전제가 될 것이다.

세계 최고의 군비와 군대를 보유한 미국의 직간접적인 폭력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내는 것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불신과 적대감으로 무장한 그 무지를 폭로하고, 그 무지를 해체하는 길로 나아갈 것이다. 사드는 곧 죽음을 의미한다. 이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살려내는 길 위에서 오직 곧게 가고 있다. 이러한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종교적인 역할, 그것이야말로 세계를 파멸에서 지켜내는 등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원불교가 존재하는 한, 사드는 반드시 철폐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도전으로 향할 것이다. 또한 전 세계의 군대와 전쟁무기를 철폐하는 한반도로부터 담대한 평화의 전초기지를 구축해 낼 것이다. 소성리는 이처럼 지구평화를 향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 출발점이 되고 있다.

사드철폐운동은 원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한 원불교의 여러 사회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다. 또한 이 운동을 통해 원불교평화행동이라는 단체를 키워냈다. 이들의 활동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드철폐운동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탐욕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실질적인 평화구축을 위한 단체로서 맹렬히 활동하고 있다. 사드로 인해 현대불교로서의 원불교가 내건, 전 지구를 불토낙원으로 만드는 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무기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평범한 교훈을 현실화하며, 전쟁 없는 지구를 만들기 위해 세계로 나아가는 조직으로 발돋움 하는 중이다.

円仏教のサード撤廃運動と韓半島平和構築

元永常

(円仏教教務、円光大学校)

1

ちょうど二年前である2017年4月26日と9月7日、両日にかけて慶尙北道星州郡草田面韶成里に戦争武器サード（THAAD、高高度ミサイル防御体系）が配置された。これは、大韓民国の朴槿恵前政権と文在寅現政権が続けて行った、国家法を崩壊させた不法的な事件である。現在まで両政府は、法的な処罰を受けていない。その理由は、冷酷な国際的な力の論理、すなわち、弱肉強食の世界が支配されているからである。顧みると、これはどれだけ不正義のことなのか。おそらく世界の歴史は、このような矛盾と不調理がはびこる世界として構成されているのかも知れない。それにも関わらず、歴史は人類の核心価値である正義と平和の滔々たる道を歩んできていることも事実である。

しかし、相変わらず、この韓半島では20世紀に人類の殺戮がなされた二回の世界大戦と、それ以後東西の冷戦の余波が、そのまま温存されていることを見せている。冷戦の初期に分かれて、戦争がまた韓半島を焦土と化した後に固着されたこの地の痛みを百姓は、余すことなく背負っている。これは、現代民主主義国家に対する、外勢による強制的行為である。韓半島は日本帝国主義から解放されたが、厳密に言えば自主独立の主権を行使できない現実を意味する。1990年代冷戦が瓦解されたにも関わらず、最後に残ったこの歴史の事実的な現場がこの韓半島である。

二回の北米頂上会談と三回の南北頂上会談が開かれたが、韓半島の平和を解決できずに、現在は膠着状態に陥っている。それほどこの分断の障壁は堅固なことである。この韶成里は円仏教の聖地である。第二代目の指導者であった鼎山宋奎宗師（1900－1962）と彼の弟である主山宋道性宗師（1907－1946）が生まれ、育ち、また求道した地であり、ついに巡礼に出かけた厳然たる宗教の聖地である。多くの円仏教信者たちが巡礼したその道に、韓国とは関係がない、米国の対中国、対ロシアに向けたミサイル防御網におけるミサイルやレーダーが配置されている。現代の戦争は、攻撃武器でも防御武器でも区分ができない。平和の前では戦争のための軍隊も武器もなんの用にたたない。そのような軍隊を武器が、正義と平和を説破する聖者の魂がこもった聖地に配置されたのは、人類最後のとり

である宗教を抹殺することと変りがない。

2

円仏教は、サード撤廃運動を通じて、自分の本格的な道を歩み始めた。なによりも宋奎宗師が自分の一生涯の教えを要約した偈頌である「同じ囲い、同じ理致をもって、同じ家、同じ眷属が、同じ仕事場、同じ働き手として、一円世界を建設しよう（同源道理、同氣連契、同拓事業）」という平和の三同倫理を実践しているのである。これは、彼の師匠であり円仏教の創始者である^{ソテサンバクジュンビン}少太山朴重彬大宗師（1891-1943）の一円主義を、より具体的に実践するための教えである。宋道性宗師は、1945年に解放された祖国に向けて、世界各地から故郷に帰ってくる戦災同胞を救護する事業を率いている間に殉教した。このような円仏教の殉教精神を彼の故郷で再現しているのである。

即ち、円仏教の基本精神である死無余恨（死んでも残る恨みはない）という精神で、「不義は死をかけてしないし、正義は死をかけて実践せよ」という教えを、全ての力を注いで実践している。円仏教の在家出家信者たちは、24時間サードが入っていった道であるジンバッキョウ（진밭교）の平和教堂を守っている。どんな武装もせずに、専ら非暴力で抵抗している。踏めば踏まれるとおり、彼らは身魂をなげうっている。これより悲壮な決議とこれより凄絶な戦いはないだろう。この平和教堂は、サードが入る一ヶ月前に、円仏教教務（教役者の名称）たちが、巡礼の道を回復させてくるよう要求しながら、道の上に座り込んだその場所にサードに反対している民衆が張ってくれた天幕から始まった。

私は、この平和教堂こそこの地の百姓たちが、円仏教、いや、韓国の全ての宗教に正義と平和を守ってくれるよう涙で訴える象徴の地であり、人権、正義、平和、生命の最後の堡壘であると思う。これは、サードを取り巻く自己中心的な欲望の資本主義、閉鎖的な国家主義、盲目的に宇宙の秩序に挑戦している科学の複合的な無知から地球を守ってくれる世界の聖殿であるといえる。従って、ここを中心にキリスト教とカトリックもまた宗教の壁を越えてサード反対運動に力強く参加している。

3

戦争は突然起らない。悪は自分の勢力を集めるために、けっこ長い間に東奔西走しながら、最後にその本性を現わす。円仏教のサード撤廃運動もまた単純に聖地回復運動だけを固執していない。このような世界の戦争準備や戦争自体を否定する延長線に、この運動の本質がある。韓半島では世界すべての力の角逐場に

なっている。このような悪の中心に、円仏教が入ってある。円仏教は、すべての宗教の教えを受容している。例えば、仏教の不殺生の戒律、キリスト教やカトリックの経典である「聖書」のイサヤ書に書かれた「義の実りは平和であり、義の結実は永遠なる平安と安全である」という教えを継承している。全ての悪の中で一番の悪である殺生をこの地球から追放するための運動の前に立っているのである。韓半島の平和構築は、世界平和の前提になるだろう。

世界最高の軍事費と軍隊を保有している米国の直間接的な暴力からこの地を守ることだけではなく、世界全ての国家が不信と敵対感で武装したその無知を暴き出し、その無知を解体する歴史を創っていく。サードは文字通りに死を意味する。この死から生命を救上げる道の上で、専らまっすぐに行っている。この不正義に屈しない宗教的役割、それこそ世界の破滅から守ってくれる燈台の役割である所以である。円仏教が存在する限り、サードは必ず撤廃されるだろう。そして、これを契機に、真なる韓半島の平和定着のための挑戦に向いていく。なお全世界の軍隊と戦争武器を撤廃する、韓半島から大胆な平和の前哨基地を構築していこう。韶成里は、このように円仏教にとっては、地球平和に向けた新しい歴史を書く出発点になっている。

サード撤廃運動は、円仏教の組織である環境連帯を始め、円仏教の様々な社会団体が参加している。サード撤廃運動を通じて、円仏教平和行動という団体を育ち挙げた。この団体のメンバーたちの活動は、全国に拡散していつている。サード撤廃運動だけではなく、我らの貪欲を除去することから質実的平和構築まで平和団体として猛烈に活動している。サードのきっかけに、現代仏教としての円仏教が掲げた、全地球を仏土楽園に変貌させる道に乗り出している。武器では平和を守れない平凡な教訓を現実化し、戦争なき地球を作り上げるために、世界の中に入っていく組織として成長している。

Keynote Speech

조셉 거슨 미국 친우봉사회(AFSC) 안보경제프로그램 디렉터, 평화와 군축 및 공동안보캠페인 대표

Joseph Gerson (PhD)

米国親友奉社会(AFSC)安部經濟プログラムディレクター,
平和と軍縮及び共同安部キャンペーン代表ジョセフ・ガーソンさん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외교와 연대: 미국에서의 활동과 관점

조셉 거슨 박사

한일국제포럼, 서울, 5월 30-31일, 2019

이렇게 특별하고 중요한 행사를 조직하고 저를 초대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분단을 초래하고 군사정권을 지원했으며, (트루먼 대통령도 일본과의 전쟁이나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잔혹한 식민지배를 끝내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의 원폭 투하라는 범죄를 저질렀고, 북한과의 핵전쟁 위기를 셀 수 없이 일으켰으며, 최근에는 ‘빅딜 아니면 노딜’으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실패로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에서 온 저에게 이번 국제포럼에 참여하고 배우는 것은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일본 원수협과 많은 협력을 해왔으며 많은 한국 평화·민주화운동 단체들과 함께 일하고 배워왔습니다. 금지도서를 읽었다는 ‘죄’로 독재정권에 의해 13년 동안 투옥되고 고문당했던 한 한국 케이커 교도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한 일은 제게 가장 생생하게 남아있는 기억 중 하나입니다. 함께 DMZ에 갔을 때 그가 얼마나 한반도의 분단에 고통 받았고 통일을 염원하는지 느낄 수 있었던 것도 기억합니다.

2003년,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 2세는 존 볼턴과 함께 세계를 다시 재앙적인 핵전쟁의 위기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 활동가들과 의회 멤버들을 미국으로 초청하여 재앙적인 전쟁을 막아야 하는 긴급한 절박함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바로 최근에는 뉴욕에서 “변화하는 세계 속 증가하는 핵의 위험:

새로운 사고와 운동 건설”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명한 미국 지식인이자 학자인 노암 촘스키는 최근에 평화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은 너무나 커서 놓쳐버릴 수 없다. 실패의 비용은 너무나 혹독한 것이어서 생각할 수 없다. 현재 중단되고 있는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한국 시민과 세계인들에게 필수적이다.”라고 썼습니다.

한반도 민중을 핵전쟁으로 몰아넣으려는 도널드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위협 전에는, 제2의 한국전쟁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북한 정권 교체” 훈련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부추기는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반대, 실제로는 아무런 외교적 노력도 안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오바마의 헛된 “전략적 인내”에 대한 비판, 제주 해군 기지와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 투쟁은 미국 평화운동에서 중심적 의제는 아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재앙적인 침공 이래로, 미국 평화운동은 미국 정부가 중동과 중앙아시아에 개입해 시리아, 리비아, 예멘으로 전쟁을 확산시키는 것을 막는 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괴적인 제2의 한국 전쟁의 위협이 임박한 정세는 우리의 활동을 자극했습니다. 기존의 미국 평화 운동가들과 한국계 미국인들이 한데 모인 전국적 'Korea Peace Network'(KPN)가 창설되었고, Women Cross DMZ(위민크로스디엠지)와 KPN의 협력을 촉발시켰습니다. 이 협력의 첫 결실 중 하나는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과 저명한 역사가 브루스 커밍스의 회담과 함께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국 회의와 의회 로비 날이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이 클린턴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북한과 포괄적 협정을 협상하여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합의는 클린턴이 선거위기 때문에 평양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엇나가게 되었습니다. 부시는 부패한 정치 관료들과 공화당이 장악한 대법원에 힘입어 우리 민주주의를 전복시키고 표를 훔쳐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존 볼턴과 부시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박살내고 북한과의 포괄적 협정을 폐기했습니다.

외교를 통한 평화와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페리와 커밍스로부터 배우기 위해 전국의 주요 평화활동가들이 KPN 회의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는 두 가지 이유로 개발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김씨 왕조를 지키고, 북한의 독립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경제 발전은 김정일의 우선순위에서 세 번째 목표, 덜 중요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연사들은 이산가족 상봉의 필요성과 한국전쟁에서 사망한 미군 유해의 송환을 주선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외교적 길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잠재적인 지정학적 변화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종식

되고, 북한이 비핵화되고, 정상적 국교 관계가 수립될 수 있다면 북한이 세계경제에 완전히 참여하고, 미군과 미국의 경제력을 수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대북 핵위협 역사와, 한국 평화체제의 요소로서 동북아 핵무기자유구역(nuclear weapons-free zone) 가능성도 이야기되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레토릭과 전쟁준비로 위기를 고조시키던 그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올림픽 외교에 감격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를 군사적, 잠재적 핵대치에서부터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으로 이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기적이 일어날 거라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고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쌍중단'(freeze for freeze)을 요구했습니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선언은 우리의 희망을 넘어섰습니다. 양측이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다음 단계를 밟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쌍중단은 성문화되었습니다.

다음날, 워싱턴에서 로비 일을 위해 모인 우리들은 민주당 의원들과 그 참모들과의 만남에 분노하고 우울해졌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자신의 재선 여부에 영향을 줄 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지지도 하지 않았을 작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싱가포르 선언의 모호함에 초점을 맞추었고, 트럼프에게 향후 북미 외교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함으로써 트럼프에 대한 우리의 호소를 좌초시켰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사방의 정치세력을 의식하며 우리 운동은 지속적인 외교 프로세스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단계로서, 우리는 한국 전쟁 종전 선언과 특히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을 가로막는 경제 제재의 완화를 요구했다. 그러면 북한이 호응하여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의원 18명의 지지를 받아 로 칸나 하원의원이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을 종결하는 법안을 용기 있게 발의함으로써 우리 운동을 진전시켰습니다.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계 미국인과 북한 내 가족들의 상봉을 추진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역시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우리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단계적 평화 외교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고무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한국 전쟁 종전 선언에 합의하고 영변 원자로 폐쇄 대가로 각자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볼튼 국가안보보좌관과 폼페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옆에 자리를 잡고 비핵화 요구를 '빅딜 아니면 노딜'로 끌고 간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정상회담의 실패, 문 대통령이 시작한 외교의 파탄 가능성, 거기에 수반되는 군사적 위험을 안고 원점으로의 복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놀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2002년 당시 볼턴 국무부 차관보는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의 취소를 촉구했는데, 미국은 이 합의를 온전히 이행할 의지를 한 번도 보인 적 없습니다. 그는 또한 북한을 (실존하지도 않는) '악의 축'의 3번째 멤버로 꼽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발표한 기사는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과 정권교체를 주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와 볼턴 모두 지배욕이 가득하고 잔인하지만 그 둘의 야망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성공한 외교정책이 거의 없습니다. '화염과 분노' 위협으로 돌아가는 것은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의 실패를 부각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적어도 앞으로 1년 반 정도는 외교 국면을 살려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3차 북미정상회담에 열려있다는 사실과, 북한이 다시 재앙적인 기근에 직면함에 따라 식량 지원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볼턴은 '빅딜 아니면 노딜' 노선에서 전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볼턴-폼페이오 강경노선이 미국의 외교 및 군사 정책을 장악한 상황에서 대화의 가능성은 작지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이란은 갖고 있지 않은데도, 트럼프, 볼턴, 폼페이오 등이 북한 비핵화를 추동하는 일보다 테헤란에서 이슬람 공화국을 전복하는 데 더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은 슬프고 모순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이곳 동북아시아에서는 귀중한 시간을 벌어들이지도 모릅니다.

미국에서는 북한과의 지속적인 외교를 촉구하고, 로 칸나 의원의 평화협정 입법에 대한 지지를 구축하고, 문 대통령의 평화체제 외교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모색, 한국 및 다양한 국가의 평화운동, 핵 군축세력과 연대하는 행동 등에 주력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전략을 짤 때 우리는 먼저 상대방의 취약점과 균열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 진공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스트-포스트 냉전 시기의 혼란 속에서 미국의 패권주의는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부상했습니다. 중국의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은 유럽까지 뻗어나가고 있으며, 중국은 유일하게 미국과 1:1로 맞붙을 수 있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대적 쇠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시무시한 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 대한 경쟁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일본의 평화헌법을 뒤집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군국화된 민족주의의 재앙을 알고 있는 일본시민들의 강력한 대중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핵보유국들은 핵무기금지조약(TPNW)으로 9개 핵보유

국(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볼튼, 폼페이오,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새롭고 예상치 못한 동맹세력들을 마주할 수 있는 역동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과 일본 시민은 지정학적 현실 속에서 함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일해야 하는 운명입니다.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의 위험성과, 핵 및 첨단 무기 경쟁의 본질적인 위험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이 역동적이고 불확실한 순간이 제공하는 기회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핵무기금지조약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군사주의적 억압과 타협하는 대신에 생명을 살리는 국가 정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이 이행해야만 하는, 새로운 정치적 규범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오늘 포럼의 관점과 같이 외교적 대화를 지지하고, '쌍중단'을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중대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저항 수단을 고안해내야 합니다. 평화운동의 동맹세력을 확대하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예방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창출해야 합니다. 연구자, 교육자, 학생, 관광객, 사업가, 정치인 등등 다양한 주체들의 교류로 전쟁 발발의 가능성을 극도로 낮추는 인간관계의 거미줄을 짜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포럼과 같이 국제적 평화 운동의 단결과 인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책 대안을 통해 우리는 정부가 전쟁 대신에 외교를 추구하도록 이끄는 정치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자 앤젤라 데이비스는 "나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을 바꿀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상상력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도 이와 같은 결심을 합니다. (한반도와 그 밖의 지역들의) 평화와 핵무기의 제거, 정의가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평화운동은 한국과 일본의 평화운동과 연대하며 여러분이 여는 길을 따를 것입니다. 외교의 재건과 한국전쟁의 종식을 촉구하며,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협상,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저해하는 제재 해제, 핵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상상력과 결단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Diplomacy and Solidarity for Korean Peace & Denuclearization:
U.S. Actions and Perspectives
Joseph Gerson (PhD)
International Forum, Seoul, May 30-31, 2019**

I want to thank everyone who organized this unique and important conference for inviting me to participate. It is an honor to be invited to contribute to and learn from this International Forum, especially given the United States' history of dividing Korea, imposing and supporting dictatorships here, its criminal A-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that Truman understood weren't necessary to end the war with Japan or Tokyo's brutal colonization of Korea, Washington's numerous threats and preparations to initiate nuclear war against North Korea, and the recent all or nothing diplomacy that led to the failure of the Hanoi summit.

Over the years, in addition to my many collaborations with Gensuikyo in Japan and the U.S., I have been privileged to work with and learn South Korean peace and democracy organizations. Among my most vivid memories was a visit hosted by a Korean Quaker who had been jailed for thirteen years and tortured by the dictatorship for the "crime" or reading the wrong book. I remember too the trip that he and I took to the DMZ during which he shared with me the emotional pain of Korea's division and his hopes for reunification. In 2003, when Bush II, with the help of John Bolton, again brought us to the brink of catastrophic nuclear war, I was privileged to host Korean activists and parliament members who came to the U.S. to stress the possibility and urgent imperative of avoiding a catastrophic war. Most recently, I was happy for our "Growing Nuclear Risks in a Changing World: New Thinking and Movement Building" conference in New York.

Noam Chomsky, the most widely respected U.S. public intellectual and scholar, recently spoke for our movement when he wrote that “The promise is too great to be lost, the costs of failure are too grim to contemplate. It is imperative for the people of Korea, and of the world, to devote themselves to ensuring the success of the initiatives that are now haltingly underway.”

Until Donald Trump’s “fire and fury” threat to inflict a nuclear holocaust on Koreans, education and organizing about the dangers of a second Korean War, opposition to the US–ROK regime change military exercises that fueled the DPRK’s nuclear weapons program, campaigning to go beyond Obama’s futile “strategic patience” non–diplomacy with the DPRK, opposition to the Jeju naval base and to stop THAAD deployment were not central currents of the U.S. peace movement. Since the disastrous invasions of Afghanistan and Iraq, the movement had focused on ending Washington’s endless Middle East and Central Asian wars which have expanded into Syria, Libya and Yemen.

The imminent threat of a devastating second Korean war kicked our movement into higher gear. It led to the creation of the national Korea Peace Network which brings together tradition U.S. peace activists and a growing number of Korea–Americans, and sparked KPN collaborations with the inspired women of Women Cross the DMZ. Among the first fruits of this collaboration was a national conference and Congressional lobby day in Washington, D.C. that featured talks by former U.S. Secretary of Defense William Perry and the renowned historian Bruce Cummings. You will recall that in the final year of the Clinton presidency, Perry negotiated a comprehensive agreement with North Korea that would have prevented the DPRK from becoming a nuclear weapons state. That agreement was derailed when Clinton opted not to travel to Pyongyang to finalize the

midst our election crisis. Bush, with the connivance of corrupt political officials and the Republican dominated Supreme Court, were subverting our democracy and stealing the election. Months later, urged on by an undersecretary of state named John Bolton Bush sabotaged Kim Dae-Jung's Sunshine Policy and trashed the comprehensive agreement.

That KPN conference brought together leading peace advocates from across the country to learn from Perry and Cumings, who stressed that diplomacy leading to peace and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was possible. They explained that North Korea's nuclear arsenal was developed for two reasons: to preserve the Kim dynasty and to defend North Korean independence and sovereignty. North Korean economic development, they said, was Kim's third but lesser priority. Other speakers at the conference highlighted the need for family reunifications and the diplomatic openings that could be created by arranging repatriation of the remains of U.S. soldiers killed in the Korean War.

Beneath it all, there was a recognition of potential geopolitical shift. If the Korean War could be ended, North Korea denuclearized, and normal relations established, they might provide the way for the DPRK to fully engage in the global economy and to make accommodations with U.S. military and economic power. References were also made to the history of U.S nuclear threats against North Korea and to the possibility of a Northeast Asian Nuclear Weapons-Free Zone as an element of a Korean peace system.

Then, as Washington and Pyongyang dangerously escalated their rhetoric and preparations for war, we were thrilled by Moon Jae-in's inspired Olympic diplomacy, and we did all that we could to reinforce it. President Moon successfully walked a very reluctant Trump back from the brink of the military and potentially nuclear confrontation to the historic

Singapore summit. We did not expect miracles in Singapore. Instead, we pressed for a freeze-for freeze outcome: North Korea committing to extend the cessation of its nuclear and missile tests in exchange for the U.S., South Korea and Japan cancelling their regime change-oriented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reducing sanctions.

The summit's final declaration exceeded our hopes. Freeze for freeze was codified, as was the commitment by both sides to take the next steps toward peace and denuclearization.

The following day, many of us who had gathered for a lobby day in Washington were angered and depressed by our meetings with Democratic members of Congress and their staffs. Most of them were determined not to provide any support for our tyrant that might contribute to his reelection. Most focused on the vagueness of the Singapore declaration and rebuffed our appeals to challenge Trump from the left by demanding that he provide a roadmap for future U.S.- North Korean diplomacy.

In the months that followed, recognizing the entrenched political forces on all sides, our movement urged continued diplomacy. As next steps, we called for a declaration that would end the Korean War as well as for reduction of sanctions - especially those blocking trust building engagemen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ur expectation was that North Korea would reciprocate.

With the support of former President Jimmy Carter and 18 other members of Congress, Ro Khanna, who is among the most far sighted and courageous Congressional representatives, advanced our campaign by introducing legislation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Another less urgent bill, introduced more recently by Representative Meng that many of us are supporting urges President Trump to make reunions of Korean-Americans with their families in North Korea a priority.

We were encouraged when the media began reporting that the Hanoi summit would advance step-by-step peace-making diplomacy. Most major news outlets anticipated that Trump and Kim Jung-un would agree to declare the end of the Korean War and would provide for establishment of diplomatic offices in their respective capitals in exchange for shuttering the Yongbyon reactor.

We were shocked when National Security Advisor Bolton and Secretary of State Pompeo took the seats next to Trump and made their all or nothing denuclearization demands. The result, as you know, was the failure of the summit, the possible collapse of the diplomacy initiated by President Moon, and a return to square one with its attendant military dangers.

We shouldn't have been surprised. In 2002, then Under Secretary of State in Bolton urged cancellation of the 1994 Agreed Framework, an agreement which the U.S. apparently never intended to fully implement. He also urged that North Korea be named the third member of the non-existent "axis of evil." And the last article he published before joining the Trump administration advocated military action against and regime change for North Korea.

While both Trump and Bolton are brutal men with the need to dominate others, their ambitions do not precisely coincide. Trump has few, if any, foreign policy successes to point to as he heads into next year's determinative presidential election. Returning to "fire and fury" threats and the loss of even the façade of diplomacy would highlight the failure of his Korean initiatives. So, he needs to keep diplomacy alive, at least for another year and a half. This helps to explain his signaling that he remains open to a third summit and his decision to support food assistance as North Korea faces yet another catastrophic famine. However there has

been no stepping back from his Bolton enforced all or nothing demands. So, openings - small though they may be - remain despite the Bolton-Pompeo hard liners having seized control of U.S. foreign and military policies.

There is also the sad and contradictory truth that, even as North Korea has nuclear weapons and Iran does not, Trump, Bolton and Pompeo are more committed to overthrowing the Islamic Republic in Teheran than to winning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This may buy precious time here in Northeast Asia.

In the U.S., this leaves our movement focused on urging continued diplomacy, building support for Ro Khanna's peace agreement legislation, finding ways to support President Moon's peacemaking diplomacy, and acting in solidarity with peace and nuclear disarmament forces in Korea and beyond.

Friends, as we strategize, we need to consider the changing lay of the land, to identify where our opponents are vulnerable, and where there are cracks in the belligerent systems and the stalemate that open opportunities. The challenges we face are not taking place in a vacuum. U.S. hegemony is on the defensive in the interregnum of post-Post-Cold War disorder. China has risen. It's economic power and political influence extend into Europe, and it is increasingly seen at the United States single peer competitor. And, despite their relative declines, the U.S. and Russia's remain great and terrifying powers with competing interests in Northeast Asia. Prime Minister Abe's is campaigning to overturn Japan's peace constitution, but he is being met by powerful popular resistance by Japanese who remember or have learned about the calamities of militarized nationalism. And the non-nuclear weapons states are increasing pressure on the nuclear nine with the Nuclear Weapons Prohibition Treaty. We thus

find ourselves in a dynamic moment which holds the promise of finding new and possibly unexpected allies, as well as diplomatic alternatives to Bolton, Pompeo and Kim dictates.

Koreans, and in different ways Japanese, have been sentenced by geopolitical realities and laws of geopolitics to live and to work for peace and security at the nexus of these forces. The inherent dangers of renewed great power tensions and the nuclear and high-tech arms races they have generated are obvious. But, please do not underestimate the opportunities this dynamic and uncertain moment provides. As we see with the Ban Treaty, insisting on life-affirming national policies, instead of compromising with the forces of militarism and repression, can create new political facts to which the powers that be must respond. In addition to the obvious need to insist on diplomacy, maintaining the freeze for freeze, and taking the next and important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we see in today's Peace Forum, there other means of building resistance: developing allies, generating new ideas to end and prevent war. People-to-people exchanges, including scholars, educators, students, tourists, business men and women, and politicians we can weave the web of human relations that make the possibility of war unthinkable.

More, as in today's forum and related events, increasingly unified cross-national peace movements and our life-affirming policy alternatives can transform militarized political discourses and build the political power that lead governments to pursue diplomacy instead of war.

Angela Davis, the courageous African-American scholar and activist wrote that "I am no longer accepting the things I cannot change. I am changing the things I cannot accept." With imagination and determination, this must be our resolve. Anything less than peace, th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lsewhere, and the presence of justice is unacceptable.

We in the U.S. movement will continue to listen and will take many of our leads from and act in solidarity with our Korean and Japanese partners. In the immediate future, our priority will be pressing for renewed diplomacy, urging an end to the Korean War, and negotiating a Peace Agreement to replace the Armistice, removing the sanctions that impede the Korean peace process and denuclearization, and working for a nuclear-free world. With imagination and determination, we can overcome.

非核平和のための日韓国際フォーラム — 2019年5月30-31日、ソウル
朝鮮半島の平和と非核のための外交と連帯
米国の行動と展望
ジョゼフ・ガーソン (博士)

このユニークで重要な会議に私を招待してくださったことに感謝します。とりわけ朝鮮半島を分断し、ここに独裁を押し付け、支援した米国の歴史、トルーマンが日本との戦争や日本の野蛮な朝鮮半島の植民地支配終結には不必要と知っていながら行なった広島・長崎への犯罪的な原爆投下、北朝鮮への米国政府の無数の威嚇と核戦争準備、そしてハノイでの首脳会談失敗に導いた最近のいちかばちかの外交 — これらすべてを考えると、国際フォーラムで発言し学ぶ機会をいただいたことをうれしく思います。

長年にわたり、日本や米国での原水協との多くの協同に加え、私は韓国の参与連帯や他の平和民主団体とともに活動し、そこから学ぶ榮譽を得てきました。最も生々しく記憶に残っていることの中には、「悪い本を読んだ罪」で独裁政権により13年に渡って投獄され拷問されたクウェーカー教徒に招かれた訪問があります。一緒に軍事境界線に出かけたとき、彼は、朝鮮半島の分断がもたらす心の痛みと統一の希望を話してくれました。2003年、息子のブッシュがジョン・ボルトンの助けを借りて再び私たちを破滅的な核戦争の瀬戸際に立たせたとき、私は米国を訪れた韓国の活動家と議員たちを受け入れる機会に恵まれ、破滅的な戦争を

避ける可能性と緊急性を強調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ごく最近では、「変わる世界の増大する核の危険：新しい考え方と運動の構築」をテーマにしたニューヨークの会議でイ・テホ氏をフォーラムに迎え、また、彼の代表団との交流をお手伝い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イ・テホ氏の分析と展望は私たちの運動にとって計り知れない貴重なものでした。

最も広く尊敬されている米国の有識者であり学者であるノーム・チョムスキーは最近、「約束とは失わせることのできないほど重要なものであり、失敗の代価は予想もつかないほど厳しいものだ。朝鮮の人々、そして世界の人々にとって、いま断続的に続いているイニシアチブを成功させるために全力を尽くすことが必要不可欠である」と書き、私たちの運動にそのことを話してくれました。

ドナルド・トランプの「炎と怒り」作戦が、朝鮮の人々に核のホロコーストの脅威を与えるまで、第二の朝鮮戦争の危険についての教育や運動の組織、北朝鮮の核兵器計画に油を注ぐレジームチェンジ（体制転換）を狙った米韓軍事演習への反対、オバマの不毛な「戦略的忍耐」・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DPRK)との外交不在を克服するキャンペーン、チェジュ(済州)島の核軍基地建設反対、終末高高度防衛ミサイル(THAAD)の配備中止など、これらの課題は米国平和運動の中心的流れ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アフガニスタンとイラクに対する破滅的な侵攻以来、運動は、ワシントンの果てしない中東・中央アジアでの戦争を終わらせることに焦点を当てていました。それはシリア、リビア、イエメンに拡がっていたからです。

差し迫る破滅的な第二次朝鮮戦争の脅威が、私たちの運動をフル回転させました。それは、朝鮮半島平和ネットワーク(KPN)の立ち上げへと進み、伝統的な米国の平和活動家たちと増加しつつある韓国系アメリカ人を合流させ、KPNと元氣を得た「軍事境界線を越える女性たち(Women Cross DMZ)」との協力で火をつけました。その最初の成果は全国会議の開催とワシントンD.C.での議会請願行動であり、ウィリアム・ペリー元国防長官と著名な歴史家ブルース・カミングスの対談がその呼び物となりました。みなさんはクリントン大統領時代の最後の年、ペリーが、北朝鮮が核保有国になるのを防ぐはずであった包括的合意を交渉したことを思い出すでしょう。その合意は、クリントンがわが国の選挙危機のさなか、最終化のための平壤訪問を行わないことを決め、頓挫しました。ブッシュは、腐敗した高官らや共和党が支配する最高裁などと共謀し、わが国の民主主義を覆し、選挙結果を盗み取りました。数か月後、ジョン・ボルトンという名の国

務次官にせき立てられ、ブッシュは、金大中の太陽政策を妨害し、包括的合意をごみ屑に変えたのです。

朝鮮半島平和ネットワーク（KPN）の会議は、ペリーとカミングスから学ぼうという指導的な平和活動家たちを全国から一堂に集め、二人は、和平に至る外交と北朝鮮の非核化は可能だと強調しました。彼らは、北朝鮮の核軍備が、金王朝の維持と北朝鮮の独立と主権擁護の二つの理由から開発されたと説明しました。彼らが言うには、北朝鮮の経済開発は、金正恩にとって三番目の目標であるが優先度はより低いそうです。他の発言者たちは分断家族の再会の必要性や、外交関係の樹立が朝鮮戦争で死んだ米国兵士の遺骨の本国送還によって創りだせることなどに焦点を当てていました。

そのすべての根底には、潜在的な地政学的変化の認識がありました。もし朝鮮戦争を終わらせ、北朝鮮を非核化し、関係正常化を確立しうるのなら、DPRKが世界経済に全面的に関与し、米国の軍事的・経済的力に順応する道筋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かもしれません。北朝鮮に対する米国の核脅迫の歴史や朝鮮半島の平和体制の要素としての北東アジア非核兵器地帯の可能性などにも言及がありました。

そしてワシントンと平壤が戦争を示唆する発言と準備を危険なまでにエスカレートさせた時、文在寅大統領のオリンピック外交が展開されました。私たちはそのイニシアチブに心を躍らせ、それを強めるためにできるすべての行動を行いました。文大統領は、嫌がるトランプを軍事的かつ潜在的には核の衝突の瀬戸際から引き戻し、歴史的なシンガポール首脳会談へと歩ませることに成功しました。私たちはシンガポールでの奇跡を期待してい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奇跡ではなく、私たちは「凍結には凍結を」の成果を求めました。つまり、北朝鮮が核とミサイル実験を中止し、引き換えに米国、韓国、日本が体制転換を狙う合同軍事演習を止め、制裁を引き下げることでした。

首脳会談の最終宣言は私たちの期待を超えるものでした。「凍結には凍結を」提案は、平和と非核化に向かって次の措置をとるという双方の約束と同様、盛り込まれたのです。

翌日、議会要請行動でワシントンに集まった私たちの多くは、議会の民主党議員や職員との面会で、怒り、失望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彼らの多くは、暴君の

再選に導くような支持はいっさい与えないことを決意していたのです。ほとんどの議員がシンガポール宣言の曖昧さを理由に、トランプに左側から挑戦し将来の米朝外交のロードマップを出すよう求めるべきという私たちのアピールをはねつけたのです。

翌月以降は、どちらの側の政治勢力も凝り固まっていることを見て、私たちの運動は、外交の継続を求めました。次のステップとして、私たちは朝鮮戦争を終結させる宣言と制裁引き下げ、とりわけ南北朝鮮間の信用構築努力を阻んでいる制裁の縮小を要求しました。私たちは北朝鮮がそれに応える措置をとることを期待したのです。

米議会下院のなかでも最も先見の明があり勇敢なロ・コハナ議員は、ジミー・カーター元大統領と18人の下院議員の支持を受け、朝鮮戦争を正式に終わらせるための法案を提出し、私たちのキャンペーンを前進させました。より最近では、メング下院議員がトランプ大統領に韓国系アメリカ人の北朝鮮にいる離散家族との再会を優先課題にすることを求める別の法案を提出しました。この法案の緊急性は前者より低いものですが、私たちの多くはそれを支持しています。

私たちはハノイでの米朝首脳会談が段階的な和平外交を前進させるとメディアが報道し始めたことに元気づけられました。主要報道機関の殆どは、トランプと金正恩は朝鮮戦争の終結を宣言することに合意し、ヨンビョン原子炉閉鎖と引き換えに米朝両国の首都に外交事務所を設置する準備に入るだろうと予想していました。

しかし、ボルトン国家安全保障問題担当大統領補佐官とポンペオ国務長官がトランプの両隣に座り、全部のむか、ご破算にするのかと非核化要求を北朝鮮に突きつけ、私たちは衝撃を受けました。ご存知のように、その結果、首脳会談は失敗に終わり、韓国の文在寅大統領の打ち出した外交路線が破綻する可能性をはらんで、軍事的危険を残したまま、事態は振り出だしに戻ってしまったのです。

しかしそれは私たちを驚かすほど意外なこと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2002年にも、当時国務次官だったボルトンは、1994年に合意した枠組みを破棄しましたが、もともとアメリカにはこの合意を完全に履行する意図は少しもありませんでした。ボルトンは、北朝鮮をありもしない第三の「悪の枢軸」と呼ぶよう求めたこともあります。またトランプ政権に入る前、最後に発表した論文で、北朝鮮に

対し軍事行動を起こし、体制転換を迫るべきだと主張しています。

トランプとボルトンは二人とも横暴で、他者に対する支配欲がありますが、彼らの抱く野望は正確には一致してはいません。来年にも大統領選挙に突入するトランプには、ひけらかすだけの外交成果がほとんどありません。「炎と怒り」の脅しを再び繰り返し、外交の建前さえもかなぐり捨てることは、かえって彼の朝鮮政策の失敗を目立たせることになります。そのためトランプには少なくとも今後あと1年半は北朝鮮に対する外交努力を続け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これがトランプが三回目の米朝首脳会談を受け入れる用意があるという合図を送り、壊滅的な飢饉に見舞われた北朝鮮に対する食料援助を決定した理由の一つです。

しかし、ボルトンが主張する、全部のむか、ご破算にするのかとの非核化要求から少しでも後退することもできません。そのため、ボルトンとポンペオの強硬路線がアメリカの対外政策や軍事政策の主導権を握った今でもなお、たとえわずかでも北朝鮮との会談の可能性を残しているのです。

さらに情けない矛盾した事実は、核兵器を保有しているのは北朝鮮で、イランではないのに、トランプ、ボルトン、ポンペオは北朝鮮の非核化を勝ち取るより、テヘランのイスラム共和国政権の転覆に熱心なことです。このことは、ここ北東アジア地域において貴重な時間稼ぎを可能にするかもしれません。

そのためアメリカ国内の私たちの運動も、アメリカに外交努力を継続させ、コハナ議員提出の和平協定法案への支持を広げ、文在寅大統領の和平外交を支持する方法を探り、韓国内外の反核平和勢力と連帯して行動することを中心に取り組んでいます。

友人のみなさん、戦略をたてるにあたって、地政学的変化を考慮し、私たちのチャンスにつながる相手陣営の脆いところや交戦体制のほころび、行き詰まりなどがどこにあるかを特定する必要があります。私たちが直面する課題は、何も無い真空の場所で起こっ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アメリカの覇権主義は冷戦後以降の無秩序な空白期間の中で、守勢に立たされています。中国が台頭し、その経済力と政治的影響力はヨーロッパにまで広がるとともに、中国はますますアメリカの唯一の競争相手と目されるようになっていきます。

これに対し、米ロ両国はその相対的な衰退にも関わらず、おそろべき強大な大

国でありつづけ、北東アジアでの利益を争っています。安倍首相は日本の平和憲法を改悪するべく策動していますが、軍事的ナショナリズムのもたらした惨禍を忘れていない、あるいはそれから教訓を学んだ日本国民の強い抵抗にあっています。

そして非核兵器国は、核兵器保有9カ国にたいし核兵器禁止条約を力に圧力を強化しつつあります。こうして、われわれは 新しい、おそらくは予想もしていなかった味方が見つかる、そしてボルトン、ポンペオ、キムの強硬策に代わる外交政策が出てくる可能性をはらんだ重大な時期を迎えています。

韓国と日本の両国民は、それぞれ別の方法によって、地政学的現実と法則に沿って、これら勢力の結合点において、平和と安全保障のために活動するよう運命づけられています。大国間に再び生まれた緊張に内在する危険と、それが核・ハイテク軍拡競争を生み出したことは明らかです。しかし、皆さん、どうかこの激動の不確実な時期がもたらしめているチャンスを過小評価しないでください。核兵器禁止条約に見られるように、軍国主義と弾圧の勢力に妥協するのではなく、命を肯定する政策を各国に要求し続けることで、新たな政治的事実が生まれ、大国はそれに対応せざるをえなくなるでしょう。

あくまで外交を追求する必要があることは明らかですが、それに加えて「凍結には凍結を」政策を維持し、朝鮮半島の非核化に向けて重要な次の段階へと進まなければなりません。今日の平和フォーラムは、戦争を終結させ、阻止するには、抵抗を強め、仲間を増やし、新しい考え方を生み出すなど、別の方法があることを示しています。学者、教育者、学生、観光客、ビジネスマン、女性、政治家など人と人との交流によって、私たちは人間関係をつむぎ、戦争なんてありえないとの考え方を広げ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それだけではなく、今日のフォーラムと関連行事のように、国境を越えて平和運動の団結を強めることと生命を肯定する私たちの対案は、軍事優先の政治の議論を変え、政府に戦争ではなく外交を追求させる政治的力を構築することができます。

勇敢なアフリカ系アメリカ人の学者で活動家のアンジェラ・デイビス女史は書きました。「私はもはや自分で変えられないことを受け容れるつもりはない。私は自分が受け入れられないことを変えることにする」と。私たちは想像力と強い

意志をもってこの言葉を自分たちの決意に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私たちは平和と核兵器廃絶、朝鮮半島をはじめとする各地の非核化、正義の存在以下のものは、何事も受け容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

私たちアメリカの運動は、これからも韓国と日本の仲間たちの声に耳を傾け、多くを学び、連帯して行動するつもりです。私たちの当面の優先課題は、新たな外交努力、朝鮮戦争の終結宣言、停戦協定に代わる平和協定の交渉などを求め、北朝鮮の平和プロセスと非核化を妨げる制裁措置をなくし、非核の世界を実現することです。想像力と強い意志があれば、私たちは勝利す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

[Workshop①]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해, 한반도와 일본에 비핵·평화의 확립을

核兵器のない世界にむけて、
日本と朝鮮半島に
非核・平和の確立を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해! 核兵器のない世界に向かって!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고영대 공동대표

平和と統一を開く人々(ピョントンサ) 共同代表 高永大 (コ・ヨンデ)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SPARK)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해!

— 한국과 일본의 비핵 평화의 확립 —

고영대 평통사 공동대표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과 한국과 일본의 비핵·평화 확립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은 당연히 한국과 일본의 비핵·평화 확립을 추동한다. 역으로 한국과 일본의 비핵·평화 확립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역내외 핵강대국들의 이해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고 동맹에 기반한 냉전적 진영 대결이 어느 지역보다 뿌리 깊게 잔존되어 있어 이의 완전한 해결은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7년 7월 8일, 유엔총회가 마침내 TPNW(핵무기 금지 조약)을 채택함으로써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을 위한 또 하나의 주요 관문을 넘어섰다. TPNW은 인류사회가 핵무기의 완전 철폐를 향한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적, 국제법적 발판을 마련한 것이자 NPT의 제한성을 보완하고, 보다 전향적인 또 다른 정치적, 국제법적 합의 도출 가능성을 함의하고 있다.

북한의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의지 천명(2018.4.27./6.12.)은 당장 일본과 남한의 핵무장 가능성을 차단하고 일본과 남한의 비핵·평화 확립의 길을 열었으며,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을 위한 청신호를 밝혔다.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핵무기라는 악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촉매제로 활용하는, 모범적인 핵무기 폐기 사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TPNW가 순조롭게 발효된다면 ICJ(국제사법재판소)로부터 핵무기에 의한 위협과 핵무기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판결을 구해볼 수도 있다.

“핵무기에 의한 위협 또는 핵무기의 사용이 국제법상 어느 상황에서도 허용되는가?”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묻는 유엔총회의 결의(1994.12.15.)에 따라 ICJ는 1996년 7월 8일, “국가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극단적인 상황에서 핵무기에 의한 위협 또는 핵무기 사용이 합법인지 위법인지에 대하여 본 재판소는 확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회피적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ICJ 판결은 핵무기 사용이 “국제인도법의 원칙과 규칙에 반”하며 “모든 측면에서의 핵군축을 유도하는 교섭을 성실히 추구하고 완성시킬 의무가 존재”한다는 등 판결의 다른 내용과도 모순되며, 이에 핵무기 불법화를 통해 핵폐기를 앞당기려는 유엔과 인류사회의 의지와 노력에 반한다.

그러나 ICJ 판결 이후 유엔과 NPT를 중심으로 한 핵무기의 반인도주의적 성격에 대한 인류사회의 인식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는 TPNW의 채택으로 이어졌다. 이로써 핵무기 사용에 대한 ICJ의 회피적 판결의 근거로 된, “핵무기에 의한 위협과 핵무기 사용을 포괄적이고 보편적으로 금지”한 조약이 없다는 상황은 해소되었다.

반면에 핵군축을 완성하여 핵무기 사용과 관련된 ICJ 판결의 모순을 해결하고 핵무기로 인한 국제질서의 불안전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라는 ICJ의 판결 취지는 핵군축의 담보와 핵무기 현대화 및 다양화로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완전히 퇴색되었다.

2017년,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싼 북미 간 핵전쟁 일보 직전의 극한 대결 상황과 현재 이란의 핵개발을 둘러싼 미-이란 간 전쟁 가능성도 한시라도 빨리 핵무기 사용을 국제법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라는 사실을 새삼 일깨우고 있다.

이에 ICJ 판결 직후 영국 대표 히긴스(Higgins) 판사의 “좀 더 심오한 분석을 했더라면 모든 상황에서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착목하면서 핵무기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ICJ의 전향적 판결을 새로 구해보는 것이, 절차상 문제만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핵무기 강대국들의 핵무기 현대화는 핵군축을 형해화함으로써 핵무기 없는 세상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장 한국과 일본의 비핵·

평화 확립에도 큰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는 지상, 해상, 공중 발사 전략, 전술 핵무기와 기반시설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추진되고 있다. NEW START(미러 신전략무기감축협정, 2010년) 뒤편에서 진행한 오바마 정부의 핵무기 현대화 계획은 트럼프 정권으로 계승, 확장되었으며 일부는 개발이 완료되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등도 핵무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의 핵무기 현대화는 질적, 양적으로 미국에 필적하지 못한다.

나아가 미국은 러시아와의 INF(중거리 핵전력) 조약과 이란과의 JCPOA(공동 포괄적 행동 계획)을 탈퇴하고 우주배치 MD 구축을 피함으로써 세계적 차원의 새로운 핵군비경쟁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비핵·평화 확립을 직접 위협하는 새로운 핵무기로는 해상, 공중 발사 저위력(폭발력 10Kt 미만) 탄두 W76-2(SLBM 탑재), 중력폭탄 B61-12와 해상, 공중 발사 핵순항 미사일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무기체계는 미국의 핵사용 문턱을 낮추고 북한 지휘부와 핵시설에 대한 핀포인트 및 지하 관통 공격을 용이하게 해준다.

현재의 북미 간 핵협상 교착상태가 2017년의 극한 대결을 재현하고 끝내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진다면 미국이 이들 신형 핵무기를 대북 공격에 사용하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미국이 남한에 제공하는 핵우산과 초공세적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은 평시 미국의 현대화된 핵무기가 한반도에 동원될 가능성을 높이며, 북미 간 극한 핵대결과 전쟁 가능성은 미국이 남한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남한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남한 핵무장이 일본 핵무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필연이다.

핵무기 탑재 미 함정의 기항과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허용한 미일 밀약(1960), 이와쿠니 주둔 미 해병대 양륙함에 핵무기 반입, 보관(1966), 미일 오키나와 핵무기 배치 밀약(1972), 핵탑재 항모 미드웨이호 요코스카 기항 허용 밀약(1973) 등은 핵무기 반입 시 사전 협의하도록 한 미일신안보조약 6조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1960)과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1967)을 무력화하고 일본을 사실상 핵무기 배치 국가로 만든 사례들이다. 일본 본토 핵무기 반입 밀약 체결(1969), ABM(탄도미사일방어) 무기 도입(1967), 오키나와 핵저장고 건설(2009) 등도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일본을 핵무기 배치 국가로 만들기 위한 미일동맹세력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뿐만 아니다. 2015년 8월 5일, 나카타니 당시 방위상은 “안보법제가 성립되면 법리상 자위대의 핵무기 수송도 가능하다.”며 자위대가 핵작전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저 없이 밝혔다. 나아가 아베 수상은 201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70주년 추모 행사에서 이례적으로 비핵 3원칙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아베 정권의 행보에 포린 폴리시(2015.8.5.)는 “2006년 북한이 핵 실험을 단행하자 아베 총리가 일본이 제한적으로 핵무기 공장을 갖는 것이 반드시 평화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일본의 핵개발 억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신념의 조항으로 남아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북미, 남북 대결과 북한의 핵무장을 빌미로 일본의 보수수구정권은 호시탐탐 일본 핵무장의 길을 노리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비핵·평화 확립을 제도적으로 확고히 다지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동북아 비핵지대 수립을 들 수 있다. 동북아 비핵지대는 이른바 1차 북핵 위기를 겪고 난 후인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 일본, 한국, 호주 등의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 안들은 구체적 방안에서 편차가 커 하나의 안으로 통일시켜 내기 어렵다.

이에 남한과 일본의 시민진영 내에서 논의의 중심에 있었던 우메바야시 선생의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모델(안)’을 둘러싸고 그동안 형성되어 온 몇 가지 쟁점과 관련 입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관련 쟁점들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비핵지대 수립과의 상호관계 문제, 소극적 안전보장(NSA) 제공과 더불어 재래식 무기에 의한 공격 금지를 보장하는 문제, 동맹(적극적 안전보장(PSA)과 비핵지대(NSA)와의 상호관계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각 쟁점에 대한 본 발제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메바야시 안은 북한의 비핵화가 동북아 비핵지대 수립 과정에서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북미 간 협상을 통해 수립된다. 반면에 이삼성 교수는 한반도 평화협정에 동북아 비핵지대 수립에 관한 규범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평화협정 체결도 동북아 비핵지대 수립도 모두 어렵게 만들 뿐이다.

둘째, 우메바야시 안은 재래식 무기에 의한 공격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핵지대 안으로 재래식 무기에 의한 공격 금지를 규정하는 것은 전례도 없

을 뿐만 아니라 비핵지대의 채택을 어렵게 만든다. 재래식 무기에 의한 공격 금지와 재래식 무기의 군축 문제 역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셋째, 비핵지대와 동맹 문제는 핵우산(적극적 안전보장, PSA)과 소극적 안전보장이 공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우메바야시 안(3조 1항 c)은 “ 모든 측면에서 핵무기 또는 그 외의 핵폭발 장치에 의존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핵우산(PSA)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비핵지대 수립을 위한 전제로 당연하다. 이에 대해 이삼성 교수는 PSA와 NSA가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 NSA를 제공한다는 것은 곧 PSA를 포기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비핵지대에 양자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다. 비핵지대에 핵강대국의 핵우산, PSA를 인정하자는 주장은 비핵지대의 정체성을 전면 부정하는 주장이다.

넷째, 동북아 비핵지대가 수립된다면 미국보다는 인근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이 군사작전 측면에서 더 큰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런 불균형을 시정하려면 미국이 First Use 정책을 포기하고 증응발사체제와 MD 개발 수준을 낮추는 것이 동북아 비핵지대의 수립과 유지에 안정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동북아 비핵지대 과제를 세계적 과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유엔총회의 결의가 채택되는 등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일 시민진영이 단일 동북아 비핵지대 안을 만드는 것이 긴요하며, 이에 한일 시민진영 간 단일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출범시켜야 한다.

그러나 핵금지과 폐기의 제도화보다 중요한 것은 핵사용 금지와 폐기를 바라는 민간진영과 정부의 실천이다. 특히 일본은 물론 한국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피폭자를 낸 나라다. 그런데도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에 발이 묶여 TPNW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한일 시민진영은 남한과 일본의 비핵·평화 확립을 위한 첫 걸음으로서 한일 정부의 TPNW 참여를 촉구하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된 후 북한도 TPNW에 참여하고 NPT에 복귀함으로써 동북아 비핵화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핵무기를 투하한 미국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비록 주권면제라는 독소조항에 걸려 과거에도 이 투쟁이 실패했고 현재도 난관에 봉착해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찾아 사과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으며, 이를 예상한 사람도 많지 않았다.

미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투쟁은 이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이지만 유엔총회의 결의를 구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간다면 인류 집단지성이 끝내 성공의 길로 안내해 줄 것으로 믿는다. 이 투쟁이 큰 힘을 받는다면 그 어떤 법과 제도보다 핵사용의 무력화와 핵폐기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核兵器のない世界に向かって!
—韓国と日本の非核平和の確立—

高永大 (코·ヨン데) 平和と統一を開く人々共同代表

核兵器のない世界の建設と、韓国と日本の非核・平和の確立は、相互に密接な関係にある。核兵器のない世界の建設は、当然、韓国と日本の非核・平和の確立を促進する。逆に、韓国と日本の非核・平和の確立は、米国、ロシア、中国など域内・域外の核強大国の利害が強く衝突しており、同盟に基づいた冷戦的陣営対決がどの地域よりも根深く残存しているため、この完全な解決は、核兵器なき世界の建設のための最後の関門を越える過程でもありうるからだ。

2017年7月8日、国連総会がTPNW(核兵器禁止条約)をついに採択したことにより、核兵器のない世界の建設のためのもう一つの主要な関門を越えた。TPNWは、人類社会が核兵器の完全撤廃に向かう過程で新たな政治的・国際法的な根拠を用意したものであると共に、NPTの制限性を補完し、より前向きなもう一つの政治的・国際法的合意が導き出だされる可能性を内包している。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以下「共和国」)が朝鮮半島の「完全な非核化」の意志を明確に宣言したこと(2018年4月27日、6月12日)は、直ちに日本と韓国の核武装の可能性を遮断し、日本と韓国の非核・平和の確立の道を開いたのであり、核兵器のない世界の建設のための青信号を灯した。また、共和国の「完全な非核化」は、核兵器という悪を朝鮮半島平和体制構築という触媒剤として活用する、模範的な核兵器廃棄の典型的事例である。

TPNWが順調に発効するならば、ICJ(国際司法裁判所)から、核兵器による威嚇と核兵器使用とを違法と規定する新しい判決を求めることもできる。

「核兵器による威嚇、又は核兵器の使用が、国際法上いかなる状況でも許されるのか?」について勧告的意見を問う国連総会の決議(1994年12月15日)により、ICJ

は1996年7月8日、「国家の生存自体が危うくなる、極端な状況で核兵器による威嚇又は核兵器使用が合法か違法かについて、本裁判所は確定的な結論を下せない。」という回避的判決を下した。

こうしたICJ判決は、核兵器の使用が「国際人道法の原則と規則に反」し、「すべての側面における核軍縮を誘導する交渉を誠実に追求し完成させる義務が存在」するという同判決の他の内容とも矛盾しており、それゆえ、核兵器の違法化を通じて核廃棄を早めようとする国連と人類社会の意志と努力に反する。

しかし、ICJ判決以降、国連とNPTを中心とした核兵器の反人道主義的性格についての人類社会の認識は飛躍的に発展したのであり、これはTPNWの採択につながった。これにより、核兵器の使用についてのICJの回避的判決の根拠になった、「核兵器による威嚇と核兵器使用を包括的かつ普遍的に禁止」した条約がないという状況は解消された。

反面、核軍縮を完成して核兵器の使用に関連したICJ判決の矛盾を解決し、核兵器による国際秩序の不安定性を根源的に解消せよとのICJの判決趣旨は、核軍縮の停滞と核兵器の現代化及び多様化で核兵器の使用の可能性が大きくなるにつれ、完全に色褪せた。

2017年、共和国の核開発をめぐる米朝間の核戦争一步手前の極限対決状況と、現在のイランの核開発をめぐる米・イラン間戦争の可能性も、一刻もはやく核兵器の使用を国際法的に違法と規定することが至急かつ切迫した課題であるという事実を今更のように教えている。

このため、ICJ判決直後の英国代表ヒギンス(Higgins)判事の「もう少し奥深い分析をしていたなら、すべての状況で違法という結論を下せたかもしれない」という主張に着目しつつ、核兵器の使用を違法と規定するICJの前向きの判決を新しく求めることが、手続き上の問題さえなければ、可能と思われる。

ところが、核兵器強大国による核兵器の現代化は、核軍縮を形骸化することによって核兵器のない世界の実現を遮っているだけでなく、直ちに韓国と日本の非核・平和の確立にも大きな難関を作り出している。

米国の核兵器の現代化は、地上・海上・空中発射戦略、戦術核兵器と基盤施設に至るまで、多方面で推進されている。NEW START(米露新戦略兵器削減協定、2010年)の裏側で進んだオバマ政権の核兵器現代化計画はトランプ政権へ継承・拡張され、一部は開発が完了して実戦配備を控えている。ロシアと中国なども核兵器の現代化を推進しているが、両国の核兵器の現代化は、質的・量的に米国に匹敵しえない。

さらに、米国は、ロシアとのINF(中距離核戦力全廃)条約とイランとのJCPOA

(共同包括行動計画)を脱退し、宇宙配備MD構築を企むことにより、世界的次元の新たな核軍備競争のおそれを生んでいる。

この中でも韓国と日本の非核・平和確立を直接威嚇する新しい核兵器としては、海上・空中発射低威力(爆発力10K t未満)弾頭W76-2(SLBM搭載)、重力爆弾B61-12と、海上・空中発射核巡航ミサイルを挙げられる。こうした兵器体系は米国の核使用ハードルを下げ、共和国の指揮部と核施設に対するピンポイント及び地下貫通攻撃を容易にする。

現在の米朝間核交渉の膠着状態が2017年の極限対決を再現し、朝鮮半島での戦争に最終的につながるとすれば、米国がこうした新型核兵器を共和国に対する攻撃に使わないと断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米国が韓国に提供する核の傘と超攻勢的米韓合同演習と訓練は、米国の現代化した核兵器が平時に朝鮮半島に動員される可能性を高め、米朝間の極限的な核対決と戦争の可能性は、米国が韓国に戦術核を再配置するか、または、韓国が独自の核武装を目論む可能性を排除できなくする。韓国の核武装が日本の核武装につながるのは必然だ。

核兵器を搭載した米艦艇の寄港と航空機の領空通過を許容した日米密約(1960)、岩国駐留米海兵隊揚陸艦に核兵器搬入・保管(1966)、日米沖縄核兵器配備密約(1972)、核搭載空母ミッドウェー号の横須賀寄港許容密約(1973)等は、核兵器搬入時に事前協議するようにした日米新安保条約6条の実施に関する交換公文(1960)と日本政府の非核3原則(1967)を無力化し、日本を事実上の核兵器配備国家にした事例だ。日本本土核兵器搬入密約の締結(1969)、ABM(弾道ミサイル防御)兵器導入(1967)、沖縄核貯蔵庫建設(2009)等も、確かに未遂に終わったものの、日本を核兵器配備国家にするための日米同盟勢力の絶え間ない企図を示している事例だ。

それだけではない。2015年8月5日、当時の中谷防衛相は、「安政法制が成立すれば、自衛隊の核兵器輸送も法理上可能」として、自衛隊が核作戦を遂行す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ためらうことなく明らかにした。さらに安倍首相は2015年8月6日、広島原子爆弾投下70周年追悼行事で、異例なことに非核3原則に言及しなかった。このような安倍政権の歩みに、フォーリンポリシー(2015年8月5日)は、「2006年に共和国が核実験を断行するやいなや安倍総理は、日本が限定的に核兵器工場を保有することは平和憲法に必ずしも違反するのではない、と主張した」とし、「日本の核開発の抑制は、過去のような信念の条項としてはもはや残っていない」と指摘している。このように、米朝および南北の対決と、共和国の核武装を口実に、日本の保守守旧政権は自国の核武装の道を虎視眈々と狙っている。

韓国と日本の非核・平和の確立を制度的に確固としたものにするための方策の

一つとして、北東アジア非核地帯の樹立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北東アジア非核地帯は、いわゆる第1次北の核危機を体験した後の1990年代中盤から、米日韓豪などの専門家によって提起されてきた。しかしこの案は、具体的中味を巡って偏差が大きく、一つの案にまとめていくのが難しい。

これに対し、韓国と日本の市民陣営内で議論の中心にあった梅林先生の「北東アジア非核兵器地帯モデル(案)」を巡ってこの間形成されてきたいくつかの争点と関連する立場を提示してみようと思う。

まず、関連する争点は、朝鮮半島平和協定の締結及び平和体制の構築と北東アジア非核地帯の樹立との相互関係の問題、消極的安全保障(NSA)の提供と合わせて通常兵器による攻撃の禁止を保障する問題、同盟(積極的安全保障(PSA))と非核地帯(NSA)との相互関係の問題など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

各争点に対する本報告者の立場は次の通りだ。

第一に、梅林案は、共和国の非核化を北東アジア非核地帯の樹立過程で同時に達成される課題として設定している。しかし、共和国と朝鮮半島の非核化は、朝鮮半島平和協定の締結と平和体制の構築過程で、米朝間の交渉を通じて樹立される。他方、イ・サムソン教授は、朝鮮半島平和協定に北東アジア非核地帯の樹立に関する規範が盛り込まれるべきだと主張する。これは、平和協定の締結も北東アジア非核地帯の樹立もともに難しくさせるだけだ。

第二に、梅林案は、通常兵器による攻撃の禁止を明示している。しかし、非核地帯案で通常兵器による攻撃の禁止を規定するのは、前例がないだけでなく、非核地帯の採択を難しくさせる。通常兵器による攻撃の禁止と通常兵器の軍縮問題もまた、朝鮮半島平和協定の締結と平和体制の構築過程で解決すべき事案だ。

第三に、非核地帯と同盟問題は、核の傘(積極的安全保障、PSA)と消極的安全保障が共存できるのかという問題であって、梅林案(3条1項c)は、「すべての面で核兵器又はその他の核爆発装置に依存することを完全に排除する。」と明示することにより、核の傘(PSA)を除去すべきだという立場だ。これは非核地帯の樹立のための前提として当然だ。これに対してイ・サムソン教授は、PSAとNSAが共存できると見なしている。NSAを提供するという事は、即ちPSAを放棄することを意味するから、非核地帯で両者が共存できるということは矛盾だ。非核地帯に核強大国の核の傘、PSAを認めようという主張は、非核地帯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全面否定する主張だ。

第四に、北東アジア非核地帯が樹立されるとすれば、米国より近隣国家であるロシアと中国のほうが軍事作戦の面でより大きい制約を受けることになる。こうした不均衡を是正するには、米国がFirst Use政策を放棄して即応発射体制とMD開

発の水準を低めることが、北東アジア非核地帯の樹立と維持に安定を提供することになるだろう。北東アジア非核地帯の課題を世界的な課題にしていくためには、国連総会の決議が採択されるなどの努力も合わせてなされるべきだろう。このために日韓市民陣営が単一の北東アジア非核地帯案を作ることが緊要であり、それゆえ日韓市民陣営間の単一案づくりのための持続的な論議の場をスタート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かし、核の禁止と廃棄の制度化よりも重要なのは、核の使用禁止と廃棄を願う民間陣営と政府の実践だ。特に、日本はもちろん韓国も、地球上で最も多くの被爆者を出した国だ。それなのに、韓国と日本が米国との同盟に拘束されてTPNWに加入せずにいるのは言語道断だ。日韓市民陣営は、韓国と日本の非核・平和の確立のための第一歩として、日韓政府のTPNW参加を促す努力を優先的に行うべきだ。共和国の非核化が達成された後に共和国もTPNWに参加し、NPTに復帰することによって、北東アジア非核化の礎を作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さらには、核兵器を投下した米国政府の反人道的犯罪行為の責任を問う闘いを展開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確かに、主権免除という毒素条項に引っ掛かり、過去にもこの闘いが失敗し、現在も困難に直面している。しかし、オバマ大統領が広島を訪れて謝罪するには数十年がかかったのであり、これを予想した人も多くはなかった。米国政府の責任を問う闘いはこれよりはるかに難しい課題だが、国連総会の決議を求めるなど着実に努力して行くなれば、人類の集団知性が最終的には成功への道に案内してくれるものと信じる。この闘いが大きい力を得るならば、いかなる法と制度よりも、核使用の無力化と核廃棄を早めることになるはずだ。

Workshop①

한일 연대로 비핵·평화,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실현하자

日韓のさらなる協力と連帯を発展させ、
北東アジアの非核・平和、
核兵器のない世界の実現へ

츠치다 야요이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 사무국차장

土田弥生 日本原水協事務局次長

The Japan Council against Atomic and Hydrogen Bombs(Gensuikyo)

第1分科会

土田弥生 日本原水協事務局次長

今日、韓国の市民社会の皆さんとともに、非核・平和のための日韓国際フォーラムを開催することができて、とてもうれしく思います。この計画が生まれたのは、2017年です。北朝鮮の核問題をめぐり、米朝間で核のやり取りも辞さずとの緊張がピークに達していた頃でした。核戦争が起こったら、最も被害を受ける日韓の市民が協力しなければとの思いで始まりました。この取り組みに、10を超える韓国の市民団体の皆さんが協力して準備をしてくださったことに、心から感謝します。また、25人の韓国被爆者が参加してくださったことに感謝します。

日本原水協は、広島、長崎、ビキニの核実験被害を受けた日本の国民が全国的規模で立ち上がった原水爆禁止世界大会から生まれた組織です。世界大会の3目標、核戦争阻止、核兵器廃絶、被爆者の援護・連帯を掲げ、1955年の創立以来、草の根運動を展開しています。

私たちにとって、2017年7月、国連で核兵器禁止条約が採択されたこと、2018

年、歴史的な米朝会談で、情勢が平和的解決、朝鮮半島非核化・平和の方向へ転換したことは、大きな確信と励ましになりました。

現在、米トランプ政権による小型核兵器の開発、INF条約・イラン核合意からの離脱、米・露・中間の軍拡競争など逆流があります。今年ハノイでの米朝会談は、残念ながら物別れに終わりました。しかし、核保有国と言えども、世界の圧倒的多数の国と市民社会が作った核兵器廃絶への流れは、押しとどめることができないと確信します。

なぜなら、私たちは禁止条約を手にかけています。それは核保有国への最大の圧力となっています。その背景には、この条約を生み出した世界諸国民の世論と運動の力があります。朝鮮半島情勢を転換させたのも、韓国で言えばピープルズパワー、世界の多くの政府や市民社会の世論と運動の力です。私は4月末からニューヨークの国連本部で開かれていたNPT準備委員会に参加していましたが、核保有国は彼らが行っている横暴に対する批判を浴び、はっきり守勢に立たされています。

非核・平和の北東アジアの実現は、私たち日本市民にとっても重要な課題です。朝鮮半島非核化・平和は、先生方が述べたように、話し合いで解決し、合意を双方が誠実に実行するしかありません。韓国の市民団体は、現在のチャンスをつかみ、これを実現する決意を固めています。私たちも連帯して、日本での役割、日本政府の態度を変えさせるとの決意を表明します。

安倍政権は被爆国の政府でありながら、核兵器禁止条約に署名も批准もしないと、恥ずべき姿勢をとっています。先日、私はNPT準備委員会を前に、外務省に要請を行いました。彼らは臆面もなく「朝鮮半島情勢の転換は、アメリカの核抑止力のおかげでないのか」と述べました。参加者が、その核抑止力依存を厳しく批判したことは言うまでもありません。

また、安部政権は、「核を含むあらゆる種類の拡大抑止力」で日本を守ってもらうために、日米同盟の強化、集団的自衛権行使についての解釈改憲、戦争法・秘密保護法の強行、沖縄の新基地建設の強行、そして、改憲へと「戦争する国」づくりを走り続けています。史上最高の防衛費、いずれの空母化、F35 ステルス戦闘機の爆買いなど専守防衛を投げ捨てた違憲の大軍拡もその表れです。

しかし、その日本でも変化が起きつつあります。

被爆者が提唱した核兵器廃絶を求めるヒバクシャ国際署名運動がひきつづき広がりが941万をこえ、署名した首長は1205に達しています。これまで別々に運動してきた反核平和団体も、垣根をこえて共同を發展させています。こうした行動は、これまでになかったことです。また、全自治体の2割を超える359自治体が政府に禁止条約への調印・批准を求める意見書を採択しています。

ヒバクシャ国際署名運動は2020年までに世界数億を目標としています。みなさんにも、この残された1年余りの期間に、署名に尽力してもらいたいとお願いします。

日本の平和の世論と運動は昨年、安倍政権の改憲案の国会提出を断念させました。沖縄でも、辺野古の米軍新基地建設に反対する玉城デニー知事の誕生など、米日政府の横暴に反対するたたかいが新たな前進をきり開いています。

来る7月の参議院選挙では、安倍政権に反核平和を願う国民の審判を下す決意です。

私は、今回のフォーラムをステップに、日韓の市民社会のネットワーク化を図り、今後も協力してイベントや行動を行いたいと思っています。双方の政府に禁止条約の調印・批准を求めることなど、共通の課題もあります。ガーソンさんの方から、2020年NPT再検討会議の際に、国際共同行動を行おうとの提案もあります。日韓のさらなる協力と連帯を發展させ、北東アジアの非核・平和、核兵器のない世界の実現へ合流しようではありませんか。

제1분과회

츠치다 야요이 일본 원수협 사무국 차장

오늘, 한국 시민사회 여러분과 함께, 비핵·평화를 위한 일한국제 포럼을 개최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번 행사의 계획이 처음 논의된 것은 2017년입니다. 북핵 문제를 놓고 북미 간에 핵대결도 마다하지 않는 긴장이 절정에 달했던 때였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피해를 입는 한일 시민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번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0개가 넘는 한국의 시민 단체들이 협력하고 준비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25명의 한국 원폭 피해자가 참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일본원수협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비키니의 핵실험 피해를 입은 일본 국민이 전국적 규모로 일어난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로부터 생겨난 조직입니다. 세계 대회 3목표로 핵전쟁 저지, 핵무기 폐절, 원폭 희생자의 엄호·연대를 내세우면서 1955년 창립 이후, 풀뿌리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유엔에서 핵무기 금지 조약이 채택된 것과, 2018년 역사적인 북미 회담으로 인해 정세가 평화적 해결, 한반도 비핵화·평화의 방향으로 전환한 것은 우리에게 큰 확신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 트럼프 정권에 의한 소형 핵무기의 개발, INF조약·이란 핵합의로부터의 이탈, 미·러·중간의 군비 확대 경쟁 등 반대 흐름이 있습니다. 올해 하노이 북-미 회담은 아쉽게도 결렬됐습니다. 하지만 핵보유국이라 할지라도 세계의 압도적 다수 국가와 시민사회가 만든 핵무기 폐절로의 흐름은 멈출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핵무기금지조약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핵보유국에 대한 최대의 압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 조약을 만들어낸 세계 국민의 여론과 운동의 힘이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를 전환한 것도, 한국으로 치면 피플스 파워, 세계의 많은 정부 및 시민사회의 여론과 운동의 힘입니다 저는 4월 말부터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NPT준비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핵보유국은 그들이 벌이는 횡포에 대한 비판을 받아 확실하게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비핵·평화의 동북아시아의 실현은, 우리 일본 시민에게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반도 비핵화·평화는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대화로 해결하고, 합의를 쌍방이 성실하게 실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현재의 기회를 잡고 이를 실현한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연대해, 일본에서의 역할, 일본 정부의 태도를 바꾸게 한다는 결의를 표명합니다.

아베 정권은 피폭국의 정부이면서, 핵병기 금지 조약에 서명도 비준도 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나는 NPT준비위원회를 앞두고 외무성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뻔뻔스럽게 "한반도 정세의 전환은 미국의 핵 억지력 덕분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핵 억지력 의존을 강하게 비판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아베 정권은 '핵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확장억지력'으로 일본을 지켜내기

위해 미일동맹 강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해석 개헌, 전쟁법과 비밀보호법 강행, 오키나와의 새 기지 건설 강행, 그리고 개헌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의 방위비 이즈모의 항공모함화, F35 스텔스 전투기의 폭발 매수 등 전수 방위를 내팽개친 위헌의 큰 군비 확장도 그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본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폭자가 제창한 핵무기 폐기를 요구하는 피폭자 국제 서명 운동이 계속 확대 941만을 넘고 서명한 수장은 120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따로 운동을 해온 반핵 평화단체들도 울타리를 넘어 공동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지금까지 없던 일입니다. 또 지자체들의 2할을 넘는 359개의 자치 단체가 정부에 금지 조약 서명 비준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피폭자 국제 서명 운동은 2020년까지 세계 수억 명 서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도 남은 1년 여의 기간 동안 서명에 주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평화 여론과 운동은 지난해 아베 정권의 개헌안 국회 제출을 단념시켰습니다. 오키나와에서도, 미군의 헤노코 신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타마키 데니 지사의 당선 등, 미일 정부의 횡포에 반대하는 싸움이 새로운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 7월 참의원 선거에서는 아베 정권에 반핵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심판을 내릴 결의입니다.

저는 이번 포럼의 스태프로써 한일 시민사회의 네트워크화를 도모하고, 앞으로도 협력하여 이벤트나 행동을 하고 싶습니다. 한일 정부에 핵무기금지조약의 조인·비준을 요구하는 것 등, 공통의 과제도 있습니다. 조셉 거슨 씨도 2020년 NPT 재검토 회의 때 국제 공동 행동을 하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협력과 연대를 발전시켜 동북아시아의 비핵·평화, 핵무기가 없는 세계의 실현에 합류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셉 거슨 미국 친우봉사회(AFSC)
안보경제프로그램 디렉터,
평화와 군축 및 공동안보캠페인 대표**

Joseph Gerson (PhD)

米国親友奉社会(AFSC)安_レ保_レ経_レ济_レプ_レロ_レグ_レラム_レデ_レィ_レレ_レク_レター,
平_レ和_レと_レ軍_レ縮_レ及_レび_レ共_レ同_レ安_レ保_レキ_レャ_レン_レペ_レー_レン_レ代_レ表_レジ_レョ_レセ_レフ_レ・ガ_レー_レソ_レン_レさん

[Workshop②]

**격동의 동아시아,
한일 시민사회
연대의 과제**

激動の東北アジア、
日韓市民社会連帯の課題

일본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日本の労働運動の現状と課題

전국노동조합총연합회 의장 오다가와 요시카즈

全国労働組合総連合議長 小田川義和

National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Zenroren)

한일 국제 포럼 분과회 2

전노련 의장: 오다가와 요시카즈

민주적 개혁과 평화통일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기본적 인권 실현을 위해 경제투쟁, 정치투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민주노총 여러분, 한국의 시민운동 여러분께 진정한 연대를 표합니다.

저는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회(전노련)에서 온 오다가와 요시카즈입니다. 일본의 운동 현황에 대해서 3가지 측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의 최대 운동 과제는 3년에 한 번, 이번 7월에 열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개정 필요 3분의 2의석을 다시 여권에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로써 아베 총리의 개헌 시도를 단념시키고 정권을 퇴진으로 몰아넣는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운동이 야당에 후보자 조율을 목표로 하는 정책 통일을 요구해, 얼마 전, 선거구에서의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민운동이 정당들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총선까지 세 번 시민과 야당의 공동 투쟁이 성립되어 아베 정권에 도전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30여 년 세월 동안, 일본에는 "공산당은 제외"라는 선별과 배제의 정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평화운동, 원수폭금지운동, 노동운동 등 여러 분야에서의 분열 상황을 낳아, 운동의 통일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분열을 극복하고 평화헌법 수호를 주장하는 거의 모든 운동 단체와 개인을

결집한 것이 바로 2014년에 결성된 "전쟁하지 않겠다! 9조 부수지 말라! 총궐기행동실행위원회"입니다. 오랜 분단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을 다시 '전쟁하는 나라'로 만들려는 아베 정권에 대한 위기감이었습니다. 이 총궐기행동실행위원회에 전노련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미군 등과 함께 해외 군사 행동에 동참하기 위해 추진한, 소위 '안전보장법(전쟁법)' 통과에 반대하는 싸움을 "총궐기행동실행위원회"와 학자나 학생, 여성 등의 단체가 국회 주변과 전국 각지에서 벌인 것이 2015년 5월부터 9월 사이였습니다.

전쟁 법은 강행 통과되었지만 이 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2015년 12월 '민 연합'(안보법 폐지와 입헌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 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야당과 시민 운동과의 연계를 통해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는 32개 선거구 모두 후보자 조정이 진행되어, 그 중 11곳에서 승리하면서 공동 투쟁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2017년 5월 아베 총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고 현행 9조를 무력화시키는 개헌을 2020년에 시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점에서 총궐기행동실행위원회, 시민 연합 등은 "아베 9조 개헌 저지"를 제일의 과제로, 야당의 결속 강화를 요구하며 3000만 명 목표의 서명 행동을 전국에 호소, 국회 내의 수적 열세를 여론의 힘으로 지탱해 왔습니다. 그 덕분에 현시점에서는, 국회의로의 자민당 개헌 원안의 제기조차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베 정권의 호전적이고 격앙된 정치 자세는 남북한의 직접대화나 북미 회담의 기운이 생겼을 때에 "대화를 위한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하거나, 선제공격 가능한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대거 구매하는 것 등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베의 지인이나 친구의 편의를 봐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공문서가 위조되고, 경제정책의 성과를 과장하기 위해 통계부정 집계가 이뤄지는 등 국정사물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의 이런 자세가 민주주의를 침식하고 공동화(空洞化)시켜 헤이트스피치 등의 인권침해가 만연하는 심각한 사회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노련은 노동운동의 기반이기도 한 헌법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베정권의 조기 퇴진을 요구하며 대중운동과 정치투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베 정권 하에서 노동자 보호 법제의 규제 완화, 제도 개악이 연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정기 국회에서는 노동시간 관리를 안 하는 "노동자"를 만들어 내는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노동제(이그젠텐)의 창설이나, 과로사 라인(잔업 시간 월

80시간 이상)까지 시간 외 근무를 인정하는 근로시간법제, 동일 기업 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한정적인 균등 대우를 동일 노동 동일 임금으로 바꿔치기하는 가이드 라인의 책정, 고용 관계에 따르지 않는 노동의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 일괄 법안"이 강행되어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를 단순 노동 분야의 인력부족 해소책으로서 받아들이는 법 개악도 행해졌습니다. 게다가 지금,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인상 등에 의한 사회 보장비 역제를 구실로, '평생현역'을 쫓아내는 움직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노련은 8시간 일하면 늘릴 수 있는 룰의 확립, 직접고용·무기고용 원칙의 일하게 하는 방법을 요구하며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 고령자, 학생, 이주노동자를 싼값에 경기의 조정 밸브로서의 노동력으로 취급하면서, 다국적 대기업의 경쟁력 높이기를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전국 일률 최저 임금 시급 "당장 1000엔, 가능한 한 빨리 1500엔"을 요구하며 전국 각지에서 생계비 조사를 실시하고 여론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7월 참의원 선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 정책은 일국 내 과제일 수도 있지만, 현대 사회는 글로벌 기업에의 부와 힘의 집중이 진행되어, 국경을 넘은 임금, 노동 시간의 덤핑 경쟁이 강요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는, 각국 노동조합의 통일된 국제적 대응이 지연되고 TPP, FTA, EPA 등 신자유주의형 무역협정의 확대되는 등 복잡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서로 간의 꾸준한 교류와 연대를 통한 공동대응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평화헌법 개헌을 포함한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되기'와 같은 맥락에서 미일 안보체제의 재강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위대와 미군 등의 공동 훈련의 증가인데, 앞서 말한 전쟁법이 시행된 2017년에는 연간 66회 공동 훈련을 했습니다.

둘은 주일 미군의 기능 강화입니다. 한반도 유엔군이 배치된 도쿄·요코타 기지에는 오스프리 CV22가 2018년부터 배치되었고 야마구치·이와쿠니 기지에는 스텔스 전투기 F35가 2018년부터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일 미군 기지의 75%가 집중되어 있는 오키나와에서는 주거구역 안에 있는 후텐마 기지를 대체한다는 핑계로 새로운 기지 건설이 추진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이에 2019년 2월 열린 오키나와 현민의 주민 투표에서는, 현민의 53%가 투표, 그 중 70%가 새 기지 건설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2018년 9월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도 후텐마 기지 즉시 폐쇄 철폐, 새 기지 건설 반대를 내세운 지사가 당선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오키나와 현민의 민의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은 건설 예정지 매립 공사를 강행하고, 항의하러 방문한 시민을 경찰 권력으로 배제하는 등, 권력의 남용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의 신기지 건설은 과중한 기지 부담 문제의 해결을 재고하는 것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근간에 관계되는 문제로서 받아들여져 전국적인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키나와를 비롯하여 각지에서 미군 관계자에 의한 강력범죄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군 관계자 범죄 발생 시 1차적 재판권을 미군이 갖는 "미일 지위 협정"의 근본적 재검토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일본과 미국 정부의 사이에, 오키나와의 시정권(施政權)의 반환 시에, "미국은 핵무기를 철거하지만, 위기 때는 다시 반입할 권리를 유지한다"라는 밀약이 교환된 것이 미국 국방성의 문서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의 '핵 억지력'의 핵심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노련은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축소는 곧 동북아시아의 평화의 확립에 영향을 주는 과제"라고 위상을 설정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日韓国際フォーラム 分科会2

全労連議長：小田川義和

民主的改革と平和統一の旗を高く掲げ、恒久的な世界平和をめざす大韓民国憲法の下で、労働者と市民の基本的な人権の実現のために、経済闘争、政治闘争で積極的な役割を發揮されている民主労総の皆さん、韓国市民運動の皆さんに、心からの連帯の意思を表明します。

日本の運動の現状について、3点ほど、全国労働組合総連合・全労連の小田川から報告します。

第一に 今の運動課題の最大は、7月に行われる3年に一度の参議院議員選挙で、憲法改定に必要な3分の2の議席を再び与党に取らせず、安倍首相に改憲を断念させ、政権を退陣に追い込む一步を踏み出すことです。

そのために、市民運動が野党に候補者調整とめざす政策の一致を迫り、先日、選挙区での調整が行われました。

市民運動が政党をつなぐ状況は、2016年の参議院選挙から始まりました。2017年の総選挙も含めて三度目の市民と野党の共闘の成立であり、安倍政権への挑戦です。

1980年代から30年余り、日本では、「共産党を除く」という選別と排除の政治状況にありました。それが平和運動、原水禁運動、労働運動など様々な分野での分裂状況の要因であり統一を困難にしてきました。

その分断を乗り越え、憲法擁護を主張するほぼすべての運動体と個人を結集したのが、2014年に結成された「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です。長年の分断状況を乗り越えた「力」は、再び戦争する国に後戻りさせようとする安倍政権への危機感でした。この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に、全労連も参加しています。

「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と、学者や学生、女性などの団体が、日本の自衛隊がアメリカ軍などと一緒に海外の軍事行動に参加するための「安全保障法制（戦争法）」の成立に反対するたたかいを国会周辺と全国各地で繰り広げたのが、2015年5月から9月の間でした。

戦争法は強行成立されましたが、法を廃止する政府の実現を求めて、2015年12月に市民連合（安保法制の廃止と立憲主義の回復を求める市民連合）が結成されました。

野党と市民運動との連携を迫り、2016年の参議院選挙では32ある一人区すべてで候補者調整が行われ、うち11の選挙区で勝利しまして共闘の「力」を示しました。

2017年5月に安倍首相は、憲法9条に自衛隊を明記し、現行の9条を形骸化させる加憲を行い、2020年に施行することを表明しました。このことから、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市民連合などは、「安倍9条改憲阻止」を第一課題に、野党の結束強化を求め、3000万人目標の署名行動を全国に呼びかけ、国会内の数の劣勢を世論の力で支えてきました。そのこともあって、現時点では、国会への自民党改憲原案の提起すら行わせていません。

安倍政権の好戦的な姿勢とおごり高ぶった政治姿勢は、韓国と北朝鮮との直接対話や米朝会談の機運が生じた時でも、「対話のための対話は無意味」と述べ、先制攻撃可能な武器をアメリカから爆買いすることなどに表れています。また、知人、友人に便宜を図った事実を隠すために公文書が偽造され、経済政策の成果を誇張するために統計の不正集計が行われるな

ど国政の私物化が続いています。安倍政権のこのよう姿勢が、民主主義を侵食し空洞化させ、ヘイトなどの人権侵害が蔓延する社会状況につながっていると深刻に受けとめています。

全労連は、労働運動の基盤でもある憲法と民主主義の危機を乗り越えるために、安倍政権の早期退陣を要求として掲げ、大衆運動と政治闘争を強化しているところです。

第二に、安倍政権のもとで、労働者保護法制の規制緩和、制度改悪が連続して進められています。

2018年の通常国会では、労働時間管理をしない「労働者」を作り出す高度プロフェッショナル労働制（イグゼンプション）の創設や、過労死ライン（残業時間月80時間以上）までの時間外労働を認める労働時間法制、同一企業内の正規と非正規雇用労働者の限定的な均等待遇を同一労働同一賃金にすり替えるガイドラインの策定、雇用関係によらない働きかたの促進などを内容とする「働きかた改革一括法案」が強行され、今年4月から施行されています。また、外国労働者を単純労働分野の人手不足解消策として受け入れる法改悪も行われました。さらに今、年金支給開始年齢引き上げなどによる社会保障費抑制を口実に、生涯現役をせまる動きも強まっています。

全労連は、8時間働けばくらせるルールの確立、直接・無期雇用原則の働かせ方を求めて取り組みを強めています。

また、女性、高齢者、学生、外国人労働者を安価で景気の調整弁としての労働力扱いし、多国籍大企業の競争力高めようとする雇用政策への対抗として、全国一律最低賃金・時給今すぐの1000円、早期の1500円を求め、全国各地で生計費調査を実施して世論に訴えるなどの取り組みを強めています。7月の参議院選挙での争点となる状況も生まれてきました。

労働政策は一国の課題ではありますが、グローバル企業への富と力の集中が進むもとで、国境をこえた賃金、労働時間のダンピング競争が強いられる状況が強まっています。

とりわけ、東アジアでの状況は、労働組合の統一した取り組みの遅れと、TPP、FTA、EPAなど新自由主義型貿易協定の広がりなどもあって複雑な状況にあります。それだけに、継続した交流と足並みをそろえた連帯

の取り組みの強化が求められていると考えます。

第三に、改憲も含む戦争する国づくりとも一体で、日米安保体制の再強化が進められています。

一つは、自衛隊と米軍などとの共同訓練の増加であり、戦争法が施行された2017年には年間66回の共同訓練が行われました。

二つは、在日米軍の機能強化です。朝鮮半島国連軍が置かれる東京・横田基地には、オスプレイCV22が2018年から配備され、機能強化された山口・岩国基地にはステルス戦闘機F35が2018年に配備されています。

在日米軍基地の75%が集中する沖縄では、住宅地の中にある普天間基地の代替との口実で、新たな基地建設が進められようとしています。これに対し、2019年2月の行われた沖縄県民の住民投票では、県民の53%が投票し、その地の7割が新基地建設反対の意思を表明しました。2018年9月の県知事選挙でも、普天間基地即時閉鎖撤去、新基地建設反対を掲げた知事が当選しています。

繰り返し県民の民意が示されたにもかかわらず、安倍政権は、建設予定地の埋め立て工事を強行し、抗議に訪れた市民を警察権力で排除するなど、権力むき出しで事を進めています。

沖縄での新基地建設は、過重な基地負担問題の解決を先送りするとともに、民主主義の根幹にかかわる問題として受けとめられ、全国的なたたかひようになってきています。

なお、沖縄をはじめとして、米軍関係者による凶悪事件が多発していますが、犯罪が発生した際の第一次裁判権を米軍が持つとされる「日米地位協定」の抜本的見直しが、7月参議院選挙でも重要な争点となりつつあります。

なお、日本と米国政府の間には、沖縄の施政権の返還の際に、「米国は核兵器を撤去するが、危機の際は再び持ち込む権利を維持する」との密約が取り交わされたことがアメリカ国防総省の文書で明らかになっています。この点で、沖縄の米軍基地は、朝鮮半島も含めた東北アジアにおける「核抑止力」の要の位置にあります。沖縄の基地負担の軽減の軽減、縮小は、東北アジアの平和の確立にも影響する課題との位置づけで、全労連は取り組みを行っています。

Workshop②

한국의 촛불 혁명, 노동자의 역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동운동의 과제

韓国のキャンドル革命、労働者の役割と 韓半島の平和のための労働運動の課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반전평화통일위원장 변희영
民主労総公共運輸労組副委員長、反戦平和統一委員長 ビョン・ヒョン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

한국의 촛불 혁명, 노동자의 역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동운동의 과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반전평화통일위원장 변희영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반아베’ ‘평화헌법’ 수호를 위해 투쟁하시는 젠노렌 동지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겸 반전평화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희영입니다.

먼저 궁금해 하시는 한국 촛불혁명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박근혜는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가기구가 아닌 비선실세를 통해 국정농단을 저질렀고,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민주노총은 2015년 민중총궐기를 통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되었고, 특히 민주노총 위원장은 3년간 감옥생활을 했습니다. 2016년 10월말, 박근혜 퇴진 국민촛불이 커지기 전에 공공운수노조 소속 철도노조가 민영화저지 파업 투쟁 중이었고, 촛불집회 때 박근혜 퇴진 요구에 일반 국민들이 대거 참여했고, 그 이후 주말마다 수십만에서 수백만까지 모이는 한국의 촛불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촛불혁명의 시작은 노동자들이었고, 민주노총이 조합원을 동원하고, 재정을 내면서 국민 촛불로 이끌어냈고, 문재인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는 경우가 없기에 비합법적 방법이 동원되고, 그 결과 정권교체와 노동자·민중이 원하는 요구가 실현될 때 ‘혁명’이라고 합니다. 몇 달 동안 수천만 명이 거리에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촛불을 들었는데, 이는 비합법적 방법을 뛰어넘은 것으로 전 세계가 한국의 촛불운동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정권교체까지는 이뤄냈으나 노동자·민중의 요구가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의 ‘촛불혁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후 한국촛불이 ‘혁명’으로 불리도록 할 과제가 한국 민중운동에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많은 국민들이 큰 기대를 했습니다. 국정과제에 ‘노동존중’ 포함되었고, 대통령 명령 1호로 비정규직 정규화를 내세우는 것을 보고 노동자들 역시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권 2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은 파기되었습니다. 한국의 임금 기준은 최저임금이 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포기하는 것은 곧 심각한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주 52시간 노동이 법으로 정해졌지만 탄력근로라는 이름으로 노동자가 또다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하는 후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쟁점이 된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 문제도 ILO 가입국 대다수가 비준했음에도 한국은 정치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악을 맞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악을 막아내고, 노동기본권 확보와 누구든지 노조를 만들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오는 7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ILO 협약비준의 핵심 문제인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와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 노동시간단축을 요구하며 공공운수노조도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자·민중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경제 문제 해결을 과거 정권처럼 재벌과 기업에게 의존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결과 노동권 후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분단과 군사적 대결 구도를 이용, 거짓 안보 이데올로기로 70년 가까이 권력을 유지해온 자유한국당 등 극우보수세력의 저항에 굴복하고 있고, 평화시대에 맞지 않게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대폭 인상하는 등 한미동맹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동자가 노동 현안에 대응, 투쟁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운동에 나서는 것은 바로 이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세가 강요한 남북 분단과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한반도 상황은 한국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노동자 권리를 박탈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군사합의, 그리고 70년간 적대관계였던 북미가 싱가포르 성명에서 ‘새로운 북미관

계,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한 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실현되려면 정부 간 협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실천과 투쟁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로 평화체제가 실현되고, 평화를 디딤돌로 통일로 나아가는 것은 곧 보수세력의 기득권이 무너지고, 노동자의 권리와 기본권이 한층 넓게 보장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과제는 누구보다 노동자가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에 민주노총은 올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주요 과제로 결정하고 실천하고 있고,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새 시대는 바로 동아시아 비핵과 평화를 보장합니다. 그 길에 일본의 노동자, 평화 애호세력과 힘을 합쳐 함께 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韓國のろうそく革命、労働者の役割と
韓半島(朝鮮半島)の平和のための労働運動の課題

民主労総公共運輸労組副委員長、反戦平和統一委員長
ビョン・ヒョン

労働者が主人公となる世界、「反安倍」、「平和憲法」のために闘争している全労連の同志たち、こんにちは。本日発表させていただく私は公共運輸労組副委員長兼反戦平和統一委員長を勤め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ビョン・ヒョンと申します。

まず、皆さんが大変興味を持っておられる、韓国ろうそく革命において労働者たちがどのような役割をしたのかについて簡単に説明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今は刑務所にいる朴槿恵(パク・クネ)氏は憲法と国民から与えられた権力を国家機関ではなく民間人(秘線実勢)が国政を壟断するようにしたため、国民たちは立ち上がりました。民主労総は2015年民衆総決起をして、朴槿恵氏の退陣を要求しながら戦いました。その過程で多くの労働者が拘束される中、特に民主労総委員長は3年間投獄生活をしました。2016年10月末、朴槿恵氏の退陣を要求するろうそくデモが大きくなる前、公共運輸労組所属の鉄道労組は民営化を阻止するためのストライキ中でした。ろうそくデモで朴槿恵氏の退陣を要求する際、国民たちの参加が爆発的に増えて、その後毎週末に数十万人から数百万人まで集

まる大規模のろうそくデモに発展しました。韓国のろうそく革命の始まりは労働者たちであり、民主労総が組合員を動員し、財政をサポートすることで国民たちのろうそくを導きだし、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府が誕生しました。

世界的に見て自ら権力を手放すケースがないため、彼らを追い出すためには非合法的な方法が使われたりしました。その結果として政権が交代され、労働者・民衆の要求が実現されることを私たちは「革命」と言います。数ヶ月間数千万人が広場で合法的な方法でろうそくを手にししましたが、これは非合法的な方法乗り越えたことで、全世界が韓国のろうそく運動に注目しています。政権交代は成し遂げられましたが、労働者・民衆の要求はまだ実現できなかったと言えないため、韓国のろうそく革命はまだ現在進行中です。これからは韓国のろうそくデモを「革命」にするという課題が韓国の民衆運動にはまだ残っています。

文在寅政府に国民たちは大きな期待を寄せていました。国政課題に「労働尊重」が含まれて、大統領命令1号が非正規社員の正規化であったことを見て、労働者たちも期待を抱きました。しかし、2年が経った今、文在寅政府の労働政策は後退しています。

2020年まで最低賃金を1万ウォンにするという公約は破棄されました。韓国の賃金基準は最低賃金になっているため、大多数の低賃金労働者と非正規労働者たちにとって最低賃金に引き上げは非常に大事です。最低賃金の引き上げを諦めたことは即ち深刻な格差社会を解決する意志がな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労働時間は週52時間で法に定められていますが、弾力的な労働時間制度という名のもとに労働者たちは再び長時間の労働に苦しむことになりました。最近、争点となったILO(国際労働機構)の基本協約の批准も、ILO加入国では殆ど批准されたのですが、韓国ではILO核心協約の批准を引き換えに労働法を改悪しようとしています。よって、民主労総は労働法の改悪を阻止し、労働基本権の確保と誰でも労組を設立できる権利を勝ち取るために、7月一斉ストを準備しています。特にILO協約の批准の重要なポイントである特殊雇用労働者、非正規職の労働者が労組を設立できる権利の獲得と公共部門の非正規職の正規職への万全たる切換え、労働時間の短縮を要求しながら公共運輸労組も一斉ストを準備しています。

文在寅政府が時間が経つにつれて、次第に労働者・民衆の切実な要求を無視するようになったことは、過去の政権と同じように経済問題の解決を財閥と企業に頼り、彼らの要求を呑んだからでう。そして、それが労働権の後退に繋がって

るのです。尚、南北分断と軍事的な対置を利用し、捏造された安保イデオロギーで70年近く権力を維持してきた自由韓国党などの極右保守勢力の抵抗に屈し、平和の時代に合わなく駐韓米軍の駐屯経費を大幅に引き上げるなど韓米同盟の鎖を断ち切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からです。我ら労働者たちが労働の懸案に対して対応、闘争しながら、韓半島の平和と統一運動に乗り出したのはこの問題とも関係があります。外国に強いられた南北分断といつ戦争が起こるかわからない韓半島の状況は韓国の民主主義を抑圧し、労働者の権利を剥奪する構造を作っていたからです。しかし、去年の南北首脳の板門店宣言、軍事分野合意、そして70年間敵対関係だった米朝のシンガポール共同宣言を通して「新しい米朝関係、恒久的な韓半島の平和体制の構築と韓半島の完全な非核化」に合意したことは私たちに大きな希望を与えてくれました。しかし、平和協定が締結されたとしても、韓半島の非核化と平和体制が実現されるためには、政府の交渉だけに頼るのではなく、労働者・民衆の実践と闘争が必要だということを私たちはよく知っています。平和協定の締結によって平和体制が実現され、そして平和を礎にして南北統一まで発展していくということは、保守勢力の既得権益が崩れ、労働者の権利と基本権がより一層保障される時代になることを意味します。韓半島の平和と南北統一という課題は誰よりも労働者が一番大きな利害関係者であるため、民主労総は今年韓半島の平和の実現を主な課題として定めて実践し、新しい平和の時代を迎えるために闘争していきます。

韓半島の平和、繁栄、統一の新しい時代は、東アジアの非核化と平和を保障します。この道を日本の労働者、平和主義者と力を合わせて取り組んでいきたいと思えま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비핵·평화 실현을 위한 한일 사회운동의 역할

朝鮮半島と東アジアの非核・平和実現のための 日韓社会運動の役割

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국장 김진영
社会進歩連帯政策教育局長 김·진·영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PSSP)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비핵·평화 실현을 위한 한일 사회운동의 역할

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국장 김진영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는 결렬로 끝난 지금, 한반도의 운명은 2017년과 같은 전쟁위기로 돌아갈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다. 위기를 넘어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 간 지속되어 온 한반도 분단과 전쟁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 사회운동·평화운동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한 국제연대의 대중운동적 흐름은 아직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것이나, 현 시점에서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래로 한국 사회운동 내에서 중대 쟁점이 되어온 ‘북핵’의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 일본 평화운동이 아베의 개헌 시도 앞에서 분열을 딛고 2014년 ‘총궐기실행위원회’를 결성하여 공동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2017년 북한의 “핵 무력 완성” 선언은 한국 평화운동에 공공연한 분열의 계기가 되었다.

북미대화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도 핵이다. 동아시아 차원에서도 핵 군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 아베 정권이 ‘재무장’(再武裝)을 꾀하고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를 선언했으며 중국이 1964년 첫 핵실험 때부터 지속해 온 ‘선제적 핵무기 사용 금지’ 노선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은 모든 핵무기에 대한 반대(핵은 인류 절멸의 무기이며, 전투원과 비

전투원의 구별 없이 인명을 파괴하고, 민중이 통제할 수 없는 무력이다.)를 원칙으로, 어떻게 한반도 평화·비핵화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현재 주요한 쟁점들에 대해 입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향후 한일 사회운동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어떻게 하는가?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해석이 여전히 분분하다. 그러나 ‘결렬’이라는 결과 자체가, 미국은 북한에 추가 핵시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영변 핵시설만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서 영변 핵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지만, 비중을 판단하지 않더라도 영변의 폐기는 비가역적인 비핵화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의 상응 조치로 요구한 ‘2016년부터 결정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중 민생에 관련된 부분’은 북한 주요 수출품의 수출 금지, 원유와 정제유 수입량 제한 등 5건의 핵심적 경제 제재다. ‘제재 전면 해제’와 사실상 다르지 않다. 결국 회담은 결렬로 끝났고, 지난 3개월 동안 유의미한 북미대화의 신호는 없었다.

3월 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며 ‘미국과 비핵화 대화와 핵·미사일 실험유예를 유지할지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5월 4일 북한은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20여 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였고 연이어 5월 9일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2발을 추가로 발사하였다. 발사체는 70~200km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최대 사거리가 500km 추정되어 군사분계선에서 발사하면 남한 전역이 사정권이 된다.

2번의 발사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입장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선을 넘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북한에 추가 무력시위를 자제하고 대화에 참여하라는 메시지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는 발사 직후(현지 시간 9일) 미국과 UN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석탄을 운송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아니스트호’를 지난해 압류했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이 선박을 몰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뉴욕 연방법원에 이날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4일, 9일 발사체 발사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대북 제재 완화는 없다”는 강력한 압박일 것이다. 만약 이에 대해 북한이 다시 반발 수위를 높이고, 미국이 다시 대응 수위를 높이는 식으로 흐름이 진행된다면 협상 판이

깨지고 긴장이 고조될 우려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시한 ‘연말’이라는 협상 시한을 고려할 때, 모든 군사행위의 중단과 갈등의 통제가 매우 중요해진 것이 현재 국면이다.

발사체 발사에는 북한이 주장하듯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측면도 있겠으나, 전반적인 상황은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 정권의 전략이 “군사행위를 하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신경 쓸 정도로 중대한 (예를 들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 핵·미사일 실험만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번다”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핵 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던 2018년 4월의 선언을 깨지는 않더라도, 대북제재로 북한 내 식량위기와 주민의 생존권 위협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행보는 위험한 도박이다.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무기 발사로 무력시위를 하는 것 역시 남한 주민에 대한 위협이다. 상호 대응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시간을 끌더라도 미국이 제재 완화로 먼저 입장을 선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는 문제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미 의회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야 한다는 데 초당적인 합의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대이란 공세, 베네수엘라에 대한 개입, 미중 간 무역 갈등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북미협상에도 악재가 되거나, 적어도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 내 관심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결국 북미대화는 어떻게 비핵화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해답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교착 상태에 대한 해답은 비핵화 로드맵과 대북 제재 해제, 평화협정 논의를 양측이 불가분의 관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협상 진척을 위한 비핵화 의제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제기된 협상의제를 고려해 볼 때 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국외 반출과 해제, 나아가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해 북한 핵 시설 일체에 대한 신고와 검증 프로세스에 대한 로드맵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ICBM 문제의 경우 북한의 핵무기 능력(과괴력, 경량화 등등)이 실제 미국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가 드러나게 되고, 핵 신고 역시 북한 핵 능력의 기반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 단계는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북한 정권이 실행할 의사가 없다면 협상이 더 진척되기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객관적 현실이 비핵화의 실질적 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와 일본의 민중이 먼저 동아시아 비핵화를 선언하자

일각에서는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있어 ‘미국의 위협과 패권이 역사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임을 들어, 북한에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비핵화가 되면 북한도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도 한다. 역사적 사실에도, 한미일군사동맹의 호전성과 위협에 대해서도 이견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의 비핵화가 아니라 바로 당장의 비핵화 문제를 다뤄야 한다.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 결단이 북미 교착상태를 푸는 열쇠라는 것은 가치 판단이 아니라 정세 판단이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긴장 완화와 군축의 조치들을 한미 양국에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북한의 핵 개발 의도가 얼마나 정당한지 따질 때 쉽게 간과되는 사실은 북핵은 세계적 핵확산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자, 그러한 추세를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이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핵 보유 시도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모든 핵개발 국가가 궁극적인 목표가 비핵화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것 없다. 핵 보유는 그 자체로 또 다른 핵 보유와 전쟁을 자극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인 주장이다. 따라서 미국의 핵위협을 막는 수단은 ‘핵무기 보유’가 아니라 대중적인 반핵평화운동의 힘이라는 관점을 확고히 지켜나가야 한다.

한반도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1990년 9월 1차 남북 고위급회담이 개시되어, 1991년 9월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국제연합(UN)에 가입하고, 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며,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가서명되고, 1992년 1월 7일 한미연합사가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를 선포했을 때,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최고조에 달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바탕으로, 미군의 핵전력이 한반도 지상에 배치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반도 영해에 진입하는 것을 비판할 수 있었고, 일본이 지속적으로 핵연료를 재처리하며 핵무기 잠재력을 갖추어 나가는 시도를 비판할 수 있었다.

2005년의 <9·19 공동성명> 또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뿐만 아니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준수한다고 약속했다. 즉 <9·19 공동성명>은 미국의 핵공격 옵션이나 한국의 핵무기 개발 욕구에 대해서도 억제효과를 지녔다. 반면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했다고 발표한 직후, 한국과 일본의 보수 세력들은 이를

근거로 핵보유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장기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와 함께 가는 동아시아 비핵·평화의 전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대접하면 일본과 남한도 핵 개발 쪽으로 끌려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과 일본 자민당의 주요 인사들은 2006년 북핵 1차 실험 직후부터 북핵을 근거로 일본의 무장과 핵 보유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일본은 미일원자력협정에 따라 비핵국 가운데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가진 국가로 우라늄 농축기술과 핵폭탄 수 천 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로켓 기술을 비롯한 기술력도 언제든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남한에서도 보수 세력이 꾸준히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해왔고 북핵·미사일의 존재가 여기에 근거가 되었다. 이들의 논리는 “한국의 '핵주권'을 제약하는 세 요소는 1956년 한미원자력협정, 1975년 한국이 가입한 NPT, 1991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이다, 이 중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한의 NPT 탈퇴, 우라늄농축 계획, 핵실험을 통해서 파기되었다. 따라서 미국과 맺은 한미원자력협정만 개정하면 우리도 우라늄 농축과 핵재처리를 할 수 있다. 일본도 1988년 미일원자력협정을 개정해서 핵무기를 갖지 않고도 플루토늄을 보유한 유일한 국가가 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2017년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pm 3.1\%$ 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자위적 핵무기 보유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수야당 지지층은 각각 70~80%가 찬성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52%)이 반대(43%)보다 많았다. 2018년 초 일본 시민 대상 여론 조사를 보면 일본 핵무장 지지의견이 12%로, 절대적으로는 낮은 수치지만 전년도의 5%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

마지막으로, 한반도 민중으로서 억압과 비극의 역사를 인식하더라도 우리가 인류를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은 우리 역시 핵무기를 개발·보유함으로써 강대국의 핵독점과 핵위협을 억지하고 궁극적으로 ‘전 세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핵무기 경쟁의 논리가 아니라, 선도적으로 핵무기 금지를 선언하고 강대국의 핵군축 노력을 압박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쟁과 피폭의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평화헌법과 ‘비핵 3원칙’(핵무기는 만들지도, 갖지도, 들어오지도 않는다)을 온 힘을 다해 지켜오고 있는 일본 시민들의 모습이 좋은 예시다. 이러한 일

4) 여론조사 “핵무장 원하는 일본인 1년새 2배로” (2018-01-08)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nuclearjapan-01082018144838.htm

!

본 시민의 운동이 없었더라면 현재 동아시아 전쟁위기와 군비경쟁은 건잡을 수 없는 지경에 빠졌을 것이다.

2017년 7월 UN에서 채택된 핵무기금지조약(TPNW)은, 핵에 반대하는 국가의 시민들이 핵보유국들에게 핵군축을 압박하는 틀이 될 수 있다.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로 나아간다는 목표로 핵무기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첫 번째 국제적 합의다.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통해 핵보유국이 증가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도 핵군축을 이룰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불평등성을 극복하고 진정한 핵군축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안되었다. 핵무기금지조약 가입국은 핵무기의 개발, 시험, 생산, 비축, 배치 전달, 사용, 사용 위협을 금지한다.

핵무기금지조약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개국의 서명과 발효가 필요한데, 2019년 2월 25일 현재 서명국은 70개국이며 발효국은 22개국이다. 베네수엘라, 베트남, 쿠바 등 북한과 유사하게 미국에 의한 억압을 받아온 국가들도 핵무기금지조약을 발효한 사실은 시사점을 준다. 핵무기금지조약 찬성국은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한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 평가되는 4개국(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9개국은 핵무기금지조약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으며, 또한 한국, 일본 등 미국의 핵우산에 포함된 국가도 불참을 선언했다.

한일 사회운동의 과제

일본 아베 정권의 반민주적, 반노동적, 반평화적 폭거의 정점에 개헌 시도가 있으며, 개헌 저지를 넘어 정권 퇴진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일본 동지들에게 연대를 표한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좀 더 복잡하다. 2016년 촛불의 성과와 문재인 정권의 탄생은 동일시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만이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와 외교 정책도 비판의 대상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회담 결과에도 불구하고 3.1절 100주년 행사에서 ‘미국 공조’와 ‘북미 관계 개선(경제협력)’에 기반을 둔 ‘신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을 발표했다.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와 북한의 세계자본주의 체제 편입을 목표로 하는 신한반도 경제지도 구상의 기초를 재확인한 것이다. (북한의 세계자본주의체제 편입과 북한 노동자의 노동권이라는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신한반도 경제지도 구상은 남북 경협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과 남한 경제위기 탈출구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는 UN과 미국의 대북제재 하

에서 실현이 매우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 기업인 방북 승인 조치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경협을 여전히 북미교착상태의 돌파구로 여기는 것 같은데,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북한의 ‘시간 끌기’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문재인정권의 노동정책이나 한반도 정책에 한계가 있더라도, 이전의 보수정권과 달리 남북대화에 나섰으므로 비판을 최소화하고 지지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에 나선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라는 점 때문에 트럼프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사회운동이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실천하는가일 것이다.

한일 사회운동이 나서서 평화연대의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 동아시아 비핵화, 세계 비핵화를 주장하고 견인하자. 한미일군사동맹 강화와 군비증강을 반대하면서 한일 양국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추동하자.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실현’을 요구하는 대중적 움직임을 만들어 가자. 적어도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북핵·미사일 실험 중단’(Freeze for freeze)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동아시아를 둘러싼 모든 적대적 군사행위와 군비증강을 막아내는 것이 절실하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본 평화헌법 개헌 반대 투쟁, 사드(THAAD) 미사일 철회 투쟁,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대 투쟁 등은 군비대결의 악순환이 아닌 선제적 군축 조치의 선순환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투쟁이다.

비핵·평화를 지향하는 광범위한 대중운동의 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반 중 하나가 오늘 함께 토론하게 된 민주노총, 전노련과 같은 전국적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하며, 평화운동과 노동운동의 끊임없는 소통과 연대를 통해 앞으로 함께 보다 더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만들 것을 기대한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한다.

朝鮮半島と東アジアの非核・平和実現のための韓日社会運動の役割

社会進歩連帯政策教育局長 キム・ジンヨン

米朝首脳会談が合意のない物別れに終わった今、朝鮮半島の運命は2017年のような戦争の危機に戻りかねない岐路に立たされている。危機を越えて、朝鮮戦争以来、この70年間続いてきた朝鮮半島分断と戦争の歴史を終えるためには、韓国

と日本をはじめとする国際社会運動・平和運動の役割が何より重要だ。

そのような国際連帯の大衆運動的な流れはまだ微弱なのが事実だ。ここは様々な原因があることや、現時点では2006年、北朝鮮の1次核実験以来、韓国の社会運動内で重大な争点となった'北朝鮮の核'の問題が足かせになる。日本の平和運動が安倍の改憲の試みの前で分裂を乗り越えて2014年'総決起実行委員会'を結成して共同の対応をしているのとは違い、2017年、北朝鮮の"核武力の完成"宣言は韓国平和運動では公然の分裂のきっかけになった。

米朝対話で最も争点になっている部分も核だ。東アジア次元でも核軍備競争が本格化している。日本の安倍政権が'再武装'(再武装)を凶って米国が中距離核戦力条約(INF)脱退を宣言し、中国が1964年に最初の核実験の時から継続してきた'先制的核兵器使用禁止'路線を再検討している状況だ。

同文は,"すべての核兵器に対する反対(核は人類絶滅の兵器であり,戦闘員と非戦闘員の区別なく人命を破壊し,民衆が統制できない武力だ。)を原則とし,どのように朝鮮半島の平和・非核化を実現するかについて,現在の主要な争点についての立場を提示する。これを通じて,今後の韓日社会運動の課題を具体的に論議できるだろう。

米朝首脳会談の決裂後,朝鮮半島非核化プロセス,どうすべきか。

ハノイ第2次北米首脳会談に対する解釈が依然としてまちまちだ。しかし"決裂"という結果自体が,米国は北朝鮮に追加核施設が存在する状況で寧辺核施設だけを廃棄することを意味ある非核化措置として見なしていないことを示している。北朝鮮の核計画で寧辺(ヨンピョン)核施設が占める比重についても論争があるが,比重を判断しなくても寧辺の廃棄は不可逆的な非核化措置ではないということだ。

一方、北朝鮮が寧辺(ヨンピョン)核施設廃棄の相応措置として、要求した'2016年から決定された国連安保理の対北朝鮮制裁のうち国民の生活に関連された部分'は北朝鮮の主要輸出品の輸出禁止、原油と精製油の輸入量制限など5件の核心的経済制裁だ。"制裁全面解除"と事実上違わない。結局、会談は物別れに終わっており、この3ヵ月間、有意味した米朝対話の信号はなかった。

3月15日、北朝鮮のチェ・ソンヒ外務次官は、平壤(ピョンヤン)で記者会見を開き、'私たちは米国の要求にどんな形であれ、譲歩する意思がない'、'、米国と非核化対話と核・ミサイル実験猶予を維持するのか、近く決定すること'と明らかにした。5月4日、北朝鮮は江原道元山(カンウォンド・ウォンサン)フォード半島

周辺で20発あまりの短距離発射体を発射し、相次いで5月9日、平安北道構成地域で2発を追加で発射した。発射体は70~200kmを飛行したものと分析されるが、最大射程が500km推定され、軍事境界線から発射すれば、南韓全域が射程圏になる。

2度の発射に対する韓米両国の立場は長距離ミサイルを発射する場合、線を超えたのを見なすという'ガイドライン'を提示しながら、北朝鮮に追加武力示威を自粛し、対話に参加しというメッセージだ。しかし、米法務部は、発射直後(現地時間9日)、米国とUN、安保理制裁に違反して石炭を運送した北朝鮮貨物船'ワイズアニストウ号'を昨年差押したという事実を発表し、この船舶を没収するための民事訴訟を、ニューヨーク連邦裁判所に、提起したと明らかにした。公式的には北朝鮮の4日、9日、ロケット発射と関連がないと明らかにしたが、事実上"対北朝鮮制裁の緩和はない"は強力な圧力だろう。もし、これに対して北朝鮮が再び反発の水位を高め、米国が再び対応水位を高めるやり方で流れが進めば、交渉が決裂し、緊張が高まる恐れがある。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総書記が今年最高人民会議で提示した'年末'という交渉期限を考慮するとき、すべての軍事行為の中断と葛藤の統制が非常に重要になったのが現在の局面だ。

発射体の発射には北朝鮮が主張するように韓米軍事演習に対する対応の側面もあるが、全般的な状況は朝米首脳会談決裂後、北朝鮮政権の戦略が"軍事行為をするが、トランプ大統領が直接気を使うほど重大な(例えば米国本土に脅威となる)核・ミサイル実験だけを行わず時間を稼ぐ"のではないかと疑わせる。"核試験と大陸間弾道ミサイル(ICBM)試験発射を中止する"た2018年4月の宣言を差すようなことはなくても、対北朝鮮制裁で、北朝鮮内の食糧危機と住民の生存権の脅威が顕在化した状況でこのような行動は危険なギャンブルだ。韓国全域を射程圏に置く兵器の発射で武力示威を行うことも、韓国住民に対する脅威だ。相互対応の強度を高める方向に進む可能性もある。

根本的には"時間を引き延ばしても米国が制裁緩和に先に立場を旋回するのは事実上不可能"という問題がある。トランプ政府はもちろん、米議会は制裁と圧迫を通じて北朝鮮の非核化を導き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超党的な合意を示している。米国の対イラン攻勢、ベネズエラに対する介入、米中間の貿易葛藤などが続いている状況は、米朝交渉にも悪材料になるか、少なくとも北朝鮮問題に対する米国内の関心を低下させる役割をする。

結局、米朝対話はどのように非核化問題を解決していくのか、解決策なくしては進めない状況に直面している。このような膠着状態に対する解答は、非核化ロードマップと対北朝鮮制裁の解除、平和協定論議を双方が不可分の関係として受け入れ

ることだ。では、交渉の進展に向けた非核化議題は何か。これまで提起された交渉議題を考慮すれば、北大陸間弾道ミサイル(ICBM)の国外搬出と解体、さらに秘密ウラン濃縮施設を含め、北朝鮮の核施設すべてに対する申告と検証プロセスに対するロードマップにならざるを得ない。ICBM問題の場合、北朝鮮の核兵器能力(破壊力、軽量化など)が実際に米国にどれほど脅威になるかが明らかになり、核申告も北朝鮮の核能力の基盤が満天下にさらされるだろう。このため、次の段階は、北朝鮮政権の立場から、寧辺核施設の廃棄とは次元が異なる。しかし、これを北朝鮮政権が実行する意思がなければ、交渉はさらに進むことは難しい。客観的な現実が非核化の実質的な進歩を要求しているのだ。

朝鮮半島と日本の民衆がまず東アジア非核化を宣言しよう

一部では北朝鮮の核と朝鮮半島問題において"米国の脅威と覇権が歴史的かつ根本的な原因"であることを挙げ、北朝鮮にこうした要求をするのは不当だと主張する"(米国を含む)全世界の非核化になれば、北朝鮮も核を保有する理由はない"とも言う。歴史的事実にも、韓米日軍事同盟の好戦性と危険についても意見の相違はない。

しかし、我々は未来の非核化ではなく、直ちに非核化問題を扱わなければならない。北朝鮮の果敢な非核化措置の決断が、米朝のこう着状態を解く鍵であることは価値判断ではなく、情勢判断だ。もちろん、それに相応する緊張緩和と軍縮の措置を韓米両国にも要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に、北朝鮮の核開発の意図がどれほど正当かを考える時、簡単に見過ごされる事実は、北朝鮮の核は世界的な核拡散傾向を反映するものであり、そのような傾向をさらに強化する効果を発揮するという点だ。北朝鮮は、"朝鮮半島の非核化を目標とする核保有の試み"と主張するが、これはこれまですべての核開発国家が究極的な目標が非核化だと主張するのと相違ない。核保有はそれ自体で、さらなる核保有と戦争を刺激するという点でも問題的な主張だ。したがって米国の核脅威を防ぐ手段は"核兵器保有"ではなく大衆的な反核平和運動の力という観点をしっかりと守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朝鮮半島の歴史から教訓を得ることができる。1990年9月1回南北高位級会談が開始され、1991年9月に韓国と北朝鮮が同時に国際連合(UN)に加入して、1991年12月13日<南北基本合意書>が採択され、1991年12月31日<朝鮮半島非核化宣言>が仮署名されて、1992年1月7日、韓米連合司令部がチームスピリット演習中止を宣言した時、朝鮮半島の平和と統一に対する希望と期待が最高潮に達した。

さらに,"朝鮮半島非核化宣言"をもとに,米軍の核戦力が朝鮮半島の地上に配置されるだけでなく,朝鮮半島領海への進入を批判することもできたし,日本が持続的に核燃料を再処理し,核兵器の潜在力を備えた試みを批判することができた。

2005年の<9・19共同声明>また、北朝鮮の非核化措置だけでなく米国が北朝鮮を攻撃したり侵略する意思がないという点を確認し、韓国は<朝鮮半島非核化宣言>を遵守すると約束した。つまり<9・19共同声明>は、米国の核攻撃のオプションや韓国の核兵器開発への欲求についても抑制効果を持った。一方、2006年、北朝鮮が核実験を断行したと発表した直後、韓国と日本の保守勢力からはこれを根拠に、核保有の必要性を主張し始めた。長期的に北朝鮮の核保有とともに行く東アジア非核化の見通しは不可能であることが分かる部分だ。北朝鮮を核保有国として待遇すれば,日本と韓国も核開発に振り回されるためだ。

安倍政権と日本の自民党の主要関係者らは、2006年の1次実験直後から北朝鮮の核を根拠に日本の武装と核保有の必要性を主張してきた。日本は日米原子力協定によって,非核国のうち唯一例外的に核燃料再処理の権限を持つ国家で,ウラン濃縮技術と核爆弾数千個分のプルトニウムを保有している。ロケット技術を含む技術力もいつでも核武装できる水準だ。

韓国でも保守勢力が絶えず独自の核武装を主張してきたし,北朝鮮の核・ミサイルの存在がここに根拠となった。これらの論理は"韓国の'核主権'を制約する三要素は1956年の韓米原子力協定、1975年に韓国が加入したNPT、1991年、朝鮮半島非核化宣言だ、このうち朝鮮半島非核化宣言は、北朝鮮のNPT脱退、ウラン濃縮計画、核実験を通じて破棄された。したがって,米国と結んだ韓米原子力協定さえ改正すれば,韓国もウラン濃縮と核再処理ができる。日本も1988年日米原子力協定を改正し、核兵器を持たなくてもプルトニウムを保有した唯一の国とな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だ。

2017年9月3日、北朝鮮が6回目の核実験を強行した直後、韓国ギャラップが、全国の成人男女1004人を対象とした世論調査(95%信頼水準、標本誤差±3.1%ポイント)によると、回答者の60%は自衛的核兵器保有に賛成する立場を明らかにした。保守野党支持層はそれぞれ70~80%が賛成し、与党の民主党の支持層でも賛成(52%)が反対(43%)より多かった。2018年初め日本の市民対象の世論調査を見ると、日本核武装支持の意見が12%で、絶対的には低い数値だが、前年度の5%比二倍以上増加したという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る。

最後に,朝鮮半島の民衆として抑圧と悲劇の歴史を認識しても,韓国が人類のために選択すべき道は,我々も核兵器を開発・保有することで,強大国の核独占と核脅威を抑止し,窮極的に"世界の非核化を達成できる"という核兵器競争の論理ではなく、

先導的に核兵器の禁止を宣言して強大国の核軍縮努力を圧迫しなければならない。戦争と被ばくの苦い経験をもとに、平和憲法と'非核3原則'(核兵器は作ることも、持ちも、輸入しない)をきた力を尽くして守ってきている日本市民の姿が良い例だ。このような日本市民の運動がなかったなら、現在の東アジア戦争の危機と軍備競争は手のほどこしようもない状況に陥ただろう。

2017年7月UNで採択された核兵器禁止条約(TPNW)は、核に反対する国家の市民たちが核保有国に核軍縮を圧迫する枠組みになることができる。核兵器禁止条約は、核兵器の完全な除去に進むという目標で、核兵器を包括的に禁止する法的に拘束力のある初の国際的合意だ。核拡散防止条約(NPT)を通じて核保有国が増加することは防げても、核軍縮を果たすことはできないため、このような不平等性を克服し、真の核軍縮を果たすための新たな形態の合意が必要だという意味から提案された。核兵器禁止条約加盟国は、核兵器の開発、試験、生産、備蓄、配置伝達、使用、使用の脅威を禁止する。

核兵器禁止条約が実行するためには最低50カ国の署名・発効が必要だが、2019年2月25日現在、署名国は70カ国で、バルヒョグクは22カ国だ。ベネズエラ、ベトナム、キューバなど、北朝鮮と同じく米国による抑圧を受けてきた国家も、核兵器禁止条約を発効した事実は示唆する。核兵器禁止条約への賛成国は、ラテンアメリカ、アフリカ、中東、東南アジアに集中している。一方、核兵器を公式的に保有した5カ国(米国、英国、フランス、中国、ロシア)と実質的な核兵器保有国と評価される4カ国(インド、パキスタン、イスラエル、北朝鮮)など9カ国は核兵器禁止条約署名に参加しておらず、また韓国、日本など米国の核の傘に含まれた国家も不参加を宣言した。

日韓社会運動の課題

日本の安倍政権の反民主的、反労働的、反平和的暴挙の頂点に改憲の試みがあり、改憲阻止を越えて政権退陣の意志を固める日本の同志たちに連帯を示す。

しかし、韓国の状況はより複雑だ。2016年のロウソクの成果と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の誕生は同一視されることはできない。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の労働政策だけが問題ではなく、朝鮮半島と外交政策も批判の対象だ。2次北米の首脳会談の決裂直後、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予想しなかった会談の結果にもかかわらず、3.1節100周年記念行事で、'米国の協力'と、北米関係の改善(経済協力)に基盤を置いた'新韓半島平和体制'構想を発表した。南北経済協力の活性化と北朝鮮の世界資本主義体制の編入を目標とする"新朝鮮半島経済地図構想"の基調を再確認したのだ。(北朝鮮の世界資本主義体制の編入と北朝鮮労働者

の労働権という問題も争点になり得る。)

新朝鮮半島の経済地図構想は、南北経済協力を南北関係の改善による平和体制の構築と、韓国の経済危機からの脱出口として提示する。しかし、これは国連と米国の対北朝鮮制裁の下で実現が非常に不透明だ。それにもかかわらず、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は最近、開城工業団地進出企業である訪朝承認措置に見られるように、南北経済協力を依然として北米こう着状態の突破口と考えているようだが、これが根本的な解決策ではないという点で、北朝鮮の"時間稼ぎ"に寄与すること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懸念する声もあがっている。

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の労働政策や朝鮮半島政策に限界があっても、以前の保守政権とは違って南北対話に乗り出したので、批判を最小化し支持しようという意見もある。しかし、米朝首脳会談に臨んだ唯一の米大統領であるため、トランプを全面的に信頼できないのと同様、重要なことは社会運動がどのような立場を堅持し実践するかだ。

日韓社会運動が出て、平和連帯の観点から、朝鮮半島非核化、東アジア非核化、世界非核化を主張し牽引しよう。韓米日軍事同盟の強化と軍備増強に反対し、韓日両国の核兵器禁止条約への加盟を後押ししよう。北朝鮮の果敢な非核化決断を促し、"朝鮮半島の非核化と平和協定の同時実現"を求める大衆的動きをつくっていこう。少なくとも"大規模な韓米軍事訓練中断と北朝鮮の核・ミサイル実験中断"(Freeze for freeze)のモメンタムを維持しながら、東アジアをめぐるすべての敵対的軍事行為と軍備増強を防ぐことが切実だ。すでに進められている日本平和憲法改憲反対闘争、サード(THAAD)ミサイル撤回闘争、沖縄米軍基地反対闘争などは、軍備対決の悪循環ではなく、先制的軍縮措置の好循環を作り出す重要な闘争だ。

非核・平和を目指す広範な大衆運動の力を作り出せる最も良い基盤の一つが今日一緒に討論することになった民主労総、全労連のような全国的労働組合と考え、平和運動と労働運動との絶え間ない疎通と連帯を通じて今後ともより民主的で平和な東アジアを作ることを期待する"という言葉で締めくくる。

Workshop②

필리핀비핵평화연합 사무총장
코라손 파브로스 변호사

非核フィリピン連合事務総長 コラソン・ファブ로스さん
Corazon Valdez Fabros

[Workshop③]

한일 여성 연대를 통한 동북아시아의 비핵화, 평화, 성평등을 향하여

日韓女性連帯を通じた
東北アジアの非核、平和、
ジェンダー平等にむけて

[발표]

1. 여성이 만드는 동북아 평화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2. 2018년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여성의 성인지적 개입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3. 한일여성의 연대로 비핵·평화,성평등의 동북아시아를 만들자 (KASAI Kimiyo 신일본부인회 회장)

[토론]

4.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글로벌 젠더규범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_)
5. 한일 여성이 함께 하는 ‘가슴과 마음’의 평화운동 (장미란 한국YWCA연합회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Workshop③

여성이 만드는 동북아 평화 :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와 비핵화, 평화구축

女性が作る東北アジアの平和

: 東北亜の多者安保体制と非核化、平和構築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金・ジョンス (平和を作る女性会・常任代表)

20180530

한일여성 연대를 통한 동북아 비핵 평화와 성평등을 향하여

여성이 만드는 동북아 평화

: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와 비핵화, 평화구축

김 정 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9월 19일의 평양 정상회담, 6월 12일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에 사는 이들의 가슴에 지구상 마지막 냉전지역인 한반도에서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평화체제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 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말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은, 한반도에서 비핵평화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절하게 느끼게 한다. 살얼음 건듯 걸어온 평화의 길 속에서 우리는 매우 낙관적이었고, 행복했고 또 평화로웠다. 지난 1년 동안 한반도에 사는 이들은 참으로 오랜만에 전쟁의 긴장과 북한과의 대결에서 오는 피로감 없는 일상을 보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다시 어떻게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더 큰 숙제를 풀어야 하는 중압감에 사로잡혀 있다.

발제자는 오늘 이 숙제를 한일 여성들의 연대를 통해 함께 풀어나갈 실마리를 찾기를 바란다. 2019년 올해는 3.1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휴전협정 66년이 되는 해이다. 10년 후 남북한의 주민들은 휴전협정 76년을 맞이할 것인가? 이러한 비참한 질문에 ‘아니요’라는 답변으로 분단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앞으로 여성들의 평화운동, 한일여성의 연대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만드는 길에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발제자는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 핵의 두려움과 전쟁의 피로감 없는 평화가 도래하려면, 동북아에서 새로운 평화가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여성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제안을 통해 오늘의 발제를 이끌어 가고자 한다.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가 여전히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것처럼, 동북아에서도 평화는 어렵고 사실은 낮은 것이다. 동북아에서 평화는 강대국의 이익을 지켜주는 군사안보나 군사동맹에 의해 유지되는 ‘힘을 통한 평화’(peace by force)만이 그 이름을 떨칠 수 있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안전(safety)과 안녕(well-being), 행복(happiness)을 보장해 줄 인간안보와 정의로운 평화(just peace/ peace with justice)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에서 평화와 번영을 기치로 내걸고 이를 추진한 역사적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1940년대 “대동아 공영권”(Greater East Asia Co-Prosperty Sphere)을 내세우면서 아시아 국가들을 서구 제국주의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번영과 평화를 누릴 새 질서를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한국, 중국, 대만, 버마, 필리핀 등의 동아시아 국가에서 전쟁을 벌였다. 그 전쟁의 이름이 대동아전쟁(Great East Asia War)이다.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일본은 식민지 한국을 약탈하고, 20만 명도 넘는 동아시아의 여성들을 일본군 성노예로 끌고 갔으며, 난징대학살을 자행하였다. 동아시아인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비극의 역사에서 정의, 즉 역사적 정의(historical justice)와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아직도 수립되지 않았다.

한반도의 분단은 동북아시아의 냉전 상황에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관리’되었다. 한반도 분단 체제가 균열을 일으키게 되면서, 냉전 구조에 의해 이득을 얻었던 강대국들은 새롭게 도래하는 동북아 평화체제에서 자국의 국가 이익을 최대한 얻어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판문점 정상회담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중국은 지역적으로 조선반도에 가장 가까운 대국이고, 조선(북한)의 정치에서 큰 후방이고, 경제에서는 최대 경제협력 동반자이면서 동시에 한국(남한) 제1

의 무역 동반자이다. 중국은 또한 조선반도 문제 유엔 프레임의 기둥 중의 하나이다.⁵⁾ 중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실현을 위한 일괄합의는 생각지도 못한다. ... 중국이 조선반도의 평화행진의 길에 참여하는 것은 (중략)... 중국의 국가 이익상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이 참여는 중국의 객관적 요구에 따른 행로이다. 중국은 목소리만 높이는 연출자가 아니라, 단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최후까지 마지막 역할을 진정으로 담당할 것이고, 중국이라는 큰 힘의 지지가 없으면 평화는 결코 실현될 수가 없다.”고 못 박았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 2018년 5월 2일자 사설을 통해 밝힌 중국공산당 당국의 입장이다.⁶⁾

일본의 행보는 매우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역시 일본의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을 지향할 것이다. 자위대에서 일반 군대로, 즉 방어차원이 아닌 공격전쟁을 포함하여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인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일본에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긴장조성은 이른바 ‘평화헌법 9조’⁷⁾ 개헌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었다. 평창 올림픽까지만 해도 남북의 만남에 대해 냉소적이기만 했던 아베 수상은 남북정상회담 뿐 아니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지각변동의 흐름을 뒤늦게 깨닫고,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변동에서 자국의 지분을 확보하고 이해당사자(stake holder)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왔다. 그는 ‘일본인 납치 문제’를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줄 것을 제안하고, 향후 북일정상회담을 개최하여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총리가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한 북일 평양선언(주요내용: 북일국교정상화와 그에 대한 보상으로 경제협력 및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함)에 근거하여 납치와 핵 미사일 등 모든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여 국교정상화를 지향하려 한다. 아베수상은 아울러 “(북미회담 성공을 위해) 한미일, 중국 및 러시아, 국제사회와 확실하게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도 확실하게 역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였다.⁸⁾

평화연구자 정옥식에 의하면,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비로소 북한을

5) 필자주: 중국이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휴전협정 당사국이라는 의미로 당시 북한군, 유엔군, 중공군 사령관이 휴전협정 서명에 참여했음.

6) 인터넷 통일뉴스, 2018년 5월 5일자, 강정구 번역.

7) 일본 헌법 9조 1항: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 발동으로서의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이를 포함한다. 2항: 전항의 목적달성을 위해 육·해·공군 및 기타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交戰權)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8) 인터넷 연합뉴스 2018년 5월 11일자.

적(adversaries)으로 불렸다.9)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두 번째로 방문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적(adversaries)이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세계를 향한 위협을 치워버리며, 북한 국민이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2002년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의 하나로 부르며 선제 핵공격을 통해 절멸(絶滅: 유대-기독교 경전의 거룩한 전쟁의 헤렘 사상의 반영)의 대상으로 악마화까지 나아갔던 것에 비하면 훨씬 진전된 북한 인식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 테이블에 앉기 전에, 미국은 비로소 북한을 적국이지만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북미 비핵화협상을 돌이켜 보면, 미국은 과연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오히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데 있어 북한의 핵이 지니는 역할, 역설적으로 북핵 위협으로 인해 얻게되는 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의 위협이 사실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 유지시키는 명분이 되고, 중국을 향한 ‘아시아 회귀’ 정책의 날카로운 칼을 가릴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단계적·동시적 해결방법을 절대로 수용하지 않고,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북한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괄 타결 방식으로, 트럼프의 정치생명을 연장시키는 카드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시기에 동북아시아 각국들은 자국의 이해 혹은 정치적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견지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도래할 것인가? 이것은 가능성의 영역이고 동북아시아 각국의 노력, 특별히 한일시민사회의 지속적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동북아시아 평화에 대한 구상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제안되었다. 국제정치의 영역에서 대표적 사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선언’이다. 북핵문제 해결의 기본원칙(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의 원칙, the principle of commitment for commitment, action for action)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합의를 이행하기로 함)을 수립한 ‘9.19 공동선언’ 제4항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

9) 인터넷 프레시안 2018년 5월 10일자. “미국이 비로소 북한을 ‘적’으로 부른다.”

상과 함께 이룩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참고: 9.19 공동선언 4항 “(남한, 북한,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하였다.”)¹⁰⁾

우리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대한 협상이 바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 속에서,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찾는 과정에서 구현된다는 차원에서, 동북아 평화 구축의 구조적 맥락을 확인하게 된다. 유사한 내용이 2018년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3조 2항에서 다시 언급되었다.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¹¹⁾는 내용이 그것이다.

발제자는 여기서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9.19 공동성명’에서 제기된 ‘안보협력’(security cooperation)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한미일 군사동맹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2018년 5월 1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주한 미군 감축 논란’에 대해 “한미 동맹간 이슈이지 북한과 협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 박은 데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비핵화나 평화체제와 별도로 동맹은 지속된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는 ‘9.19 공동성명’에서 제시된 동북아에서의 안보협력 구상에 못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냉전 질서가 균열되고 해체된 결과로 얻어질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 군사동맹은 필연적으로

10) (영문) The Six Parties committed to joint efforts for last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 directly related parties will negotiate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t an appropriate separate forum. The Six Parties agreed to explore ways and means for promoting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11) (영문) During this year that marks the 65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actively pursue trilateral meets involving the two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or quadrilateral meetings involving the two Korea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th a view to declaring an end to the war and establishing a permanent and solid peace regime.

냉전시대인 구체제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보 딜레마를 해결하고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한 구상이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가 제창한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이다. 그는 ‘동북아 공동의 집’의 골격으로, 먼저 북핵 문제로 상징되는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공동의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를 우선 조성하고, 이어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긴급 사태에 대해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상설 협력체제의 구축과 공동 환경보호의 실현,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도모하며, 문화 교류와 문화 창조의 장이 되게 하여 궁극적으로 동아시아가 정치와 안보의 공동체가 되게 하자고 제안하였다.¹²⁾ 그리고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경험을 가진 한국이 ‘동북아 공동의 집’ 형성의 이니셔티브를 행사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¹³⁾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와다 하루키 교수가 제안한 ‘동북아 공동의 집’ 구상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라는 안보 협력 제안으로 뒷받침 하고 있다. 이종석 박사는 “다자안보협력체는 동북아에서 양자 동맹을 넘어서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여, 외교안보 분야에서 공통의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목표, 원칙, 규칙, 규범, 의사결정과정을 가지는 협력체가 되어야 한다. 이 체제는 동북아에서 대립과 갈등을 지양하고 불행했던 과거를 순리적으로 청산하여 평화를 보장함으로써 이 지역 모든 국가의 안보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이다.”¹⁴⁾라고 한다.

‘9.19 공동성명을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인 ‘2.13 합의’(2007년)에서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W/G) 설치를 합의하여 그 중 하나로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워킹그룹을 제안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2007년 3월 16일 베이징 주재 러시아대사관에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첫 회의가 열렸는데, 이것이 동북아 지역에서 정부 간 열린 최초의 다자안보대화 모임이었다.¹⁵⁾ 그러나 역사가 알려주듯 동북아 평화를 위한 다자안보 대화는 지속되지 않았고, 반대로 동북아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긴장은 지속적으로 고조되었다.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서 도출된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는 싱가포르

12) 와다 하루키,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서울: 일조각, 2003, 23쪽, 이종석, “‘동아시아’ 연구의 현황과 과제,” 성남: 세종연구소, 2011, 35쪽에서 재인용.

13) 인터넷 한겨레신문 2006년 5월 28일자, “박재규 총장·와다 후루키 대담-‘동북아 협력의 길’”

14) 이종석, “‘동아시아’ 연구의 현황과 과제”, 39쪽.

15) 인터넷 통일뉴스 2007년 3월 16일자.

북미정상회담이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남북관계의 발전과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가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구조를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으로 마련했듯이, 한반도의 평화는 궁극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이 아닌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라는 구도 속에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안보 협력, 혹은 다자안보대화의 밑그림으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이종석 박사 역시 같은 의견을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피력하였다.¹⁶⁾

동북아에서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조성된 냉전의 질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논의를 통해 와해되고 종식될 것이다. 그러나 와다 하루키 교수가 주창한 평등하고 평화로운 ‘동북아 공동의 집’과 같은 평화공동체 구상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구축이나 다자안보대화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중국과 미국과 같은 거대국가가 G2라는 이름으로 동아시아에서 각축을 벌이고, 북한의 경제개발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할 것 또한 우리가 목격할 가까운 미래이기 때문이다.

이종석 박사 역시 동북아 국가 간의 평등하고 호혜적인 공동체 형성이 어렵지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지역 내 시민사회 간의 네트워킹은 기존 국민국가의 위계적 구조를 거부하고 동아시아 내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 지역 내 시민사회들이 독자적으로 혹은 교류와 연대를 통해 만들어 내는 각종 소프트 파워가 개별 국민국가의 권력에 대해 견제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략적 가능성에 주목하고 현재의 경성권력에 비해 미발달 상태인 연성권력의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⁷⁾

동북아에서 여성평화운동은 아직은 미발달한 연성권력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그라들지 않는 지속적인 동력을 가지고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동경-서울-평양-동경에서 남·북·일 여성들이 공동개최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비롯하여, 2000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동경법정을 비롯하여 아시아연대회의의 연례적 개최, 그리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일본·중국·미국·러시아 여성들이 함께 참여한 “동북아여성평화회의”, 그리고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에 사는 동아시아 여성들의 반군사주의 네트워킹 활동 등 동북아에서 국경을 넘어서는 여성들의 평화 활동은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왔다. 또한 GPPAC(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무력분쟁

16) 인터넷 프레시안 2018년 5월 3일자. “한반도 비핵화지대 통해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로”

17) 이종석, “‘동아시아’ 연구의 현황과 과제”, 44쪽.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동아시아 네트워크 역시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참여와 연대 속에서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활동을 지속해 왔다.

현재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One Belt and One Road,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전략과 미국의 동아시아로의 귀환(Pivot to Asia) 정책이 충돌하는 가운데, 한미일 군사동맹이 미국의 대중국 억제 전략의 전선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대결구도 속에서 동북아에서 여성들의 평화운동은 여러 가지 차이와 불균형을 넘어서 동북아에서 공존과 화해, 평화를 향한 공동체로 나아갈 새로운 역량을 형성하여 개별 국민국가들이 집요하게 추구하는 국가이익이라는 한계를 넘어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를 준비하여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발제자는 비록 브레인스토밍 수준이긴 하지만, 동북아 냉전체제 해체 이후 평화체제를 준비하고, 한편으로 오래된 무력 분쟁 이후 재건을 준비하는 북한 및 동북아 평화건설을 위한 여성평화운동의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① 동아시아 비핵군축운동 전개를 통한 반군사주의 운동 지속 : 2018년 5월 2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발표한 ‘세계 군사비 지출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의 경우 미국은 6,100억 달러(1위), 중국은 2,280억 달러(2위), 러시아는 663억 달러(4위), 일본 457억 달러(8위), 한국 392억 달러(10위) 등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과 군사비 증가는 지속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이뤄져도 이렇게 군비경쟁이 지속된다면, 지속가능한 평화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공동의 집’,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와 같이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한일여성평화운동이 동북아의 여성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비핵군축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연구와 조사, 운동전략 수립 등 공동행동을 전개해 나가기 바란다.

②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3자 혹은 4자회담에 동북아 여성시민사회 참여 구조 만들기 : 남북여성들이 남북관계가 경색된 기간 동안 북한 여성들을 거의 만나지 못하다 지난해 겨울과 올해 초 2차례 금강산에서 소규모로 아주 짧은 시간에 만나는 남북여성 상봉모임을 가졌다. 남과 북의 여성들은 단절된 시기 동안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특별히 북한여성들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편이다. 북한연구자들에 의하면 북한사회의 변화, 즉 시장화와 정보화의 주체가 여성이며, 이들이 고난의 행군시절 장마당을 통

해 생존해 왔고, 이제 자본축적의 주체로 등장했다고 한다. 이렇게 변화 발전되는 북한사회와 북한여성들을 한국과 일본의 여성들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2007~12년까지 진행된 ‘동북아여성평화회의’는 본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제체 형성을 위한 여성6자회담을 지향하여 기획되었다. 이제 명실 공히 북한여성들도 참여하는 동북아여성평화회의가 재개되길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간 진행되는 3자 혹은 4자회담에 여성대표성을 확대하고, 회담 기간 중에 1,5 트랙 회담 혹은 NGO 포럼이나 여성포럼을 조직할 것을 각국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여성들의 의지, 지식, 지혜가 모여져서 동북아여성들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고 지켜나가야 할 지속가능한 동북아 평화를 만들어야하기 때문이다.

③ 동북아시아 평화문화 만들기 : 한반도 분단과 동북아의 갈등은 강대국의 divide and rule이라는 구조적 폭력 아래 경쟁과 대립으로 지속되어 왔다. 일제강점기와 침략전쟁 속에서 동북아의 주민들은 각기 다른 역사적 경험 속에 그 경쟁과 대립에서 싹튼 적대감과 불신감을 내면화하며 살아왔다.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나라이고, 비자 없이 자유롭게 여행하며 서로의 음식과 문화에 대해 친밀감을 가지면서도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역사의 문제, 그리고 한반도 분단과 북한의 핵개발로 초래된 긴장으로 한일 관계가 신뢰의 관계로 발전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시민연대가 동북아의 평화문화를 새롭게 만드는 공동의 기획을 통해 갈등과 대립에서 대화와 공존으로 전환되는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기 바란다. 한일여성들의 연대를 통한 평화와 성평등을 앞당기기 위해 논의하는 이 자리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

20190530

日韓女性の連帯を通じる東北アジアの非核平和と性平等に向かって

女性が作る東北アジアの平和：東北亜の多者安保体制と非核化、平和構築

金・ジョン스 (平和を作る女性会・常任代表)

今年の2019年は3.1独立万歳運動100周年になる年であり、休戦協定が結ばれて66周年になる年である。10年後も南北の住民たちは休戦協定76年を迎えるべきなのか?このような悲惨な質問に「いいえ」と答えて分断に終止符を付けたいなら、今後女性たちの平和運動、日韓女性たちの連帯は東北アジアの平和を作る道

へ共に向かえるべきである。

私は「朝鮮半島に新しい平和、核への恐怖や戦争の疲労感のない平和が訪れようにするためには東北亜で新しい平和がスタートされるべきであり、この為女性たちが音頭を取るべきである」という提案できょうの発表を進めたい。

朝鮮半島で本当の平和は相変わらず時間もかかって大変であるように、東北亜でも平和は難しいし実は不馴れなものである。東北亜で平和は強大国の利益を守る軍事安保や軍事同盟によって維持される「力による平和」(peace by force)だけがその名をふるえることが出来た。この地域に住んでいる人々に安全(safety)と安寧(well-being)、幸せ(happiness)を保証してくれる人間安保と正義たる平和(just peace/ peace with justice)はまだ到来してない。

日本は1940年代 "大東亜共栄圏" (Greater East Asia Co-Prosperty Sphere)を掲げてアジアの国々を欧米帝国主義から自由にして繁栄と平和を享受できる新しい秩序を作るという名目で韓国、中国、台湾、ビルマ、フィリピンなどの東アジア国で戦争を起こした。その戦争の名が大東亜戦争(Great East Asia War)である。この戦争を行うために日本は植民地の韓国で略奪して、20万人も越える東アジア女性たちを日本軍の性奴隷にしたし、南京大虐殺を行なった。東アジア人々を苦痛に追い込んだ悲劇の歴史で正義、即ち歴史的正義(historical justice)と回復的正義(restorative justice)はいまだに樹立されていない。

朝鮮半島の分断は東北アジアの冷戦状況で強大国の利害関係によって「管理」された。朝鮮半島の分断体制が亀裂を起こしてから、冷戦構造によって利得を得た強大国は新しく到来する東北亜の平和体制で自国の利益を最大限取るため激しい競争をしている。

中国は昨年4月板門店での首脳会談にたいして次のように主張した。"中国が参加しないと朝鮮半島の非核化と永久的な平和実現のための一括合意は想像も出来ない。... 中国が朝鮮半島の平和行進の道に参加することは.... (中略).... 中国の国家利益上やることであり、またこの参加は中国の客観的な要求による行路である。中国は声だけを高める演出者ではなく、ただ朝鮮半島の平和のため最後まで最後の役割を真に担当することであり、中国という大きい支持が無ければ決して平和は実現できない"。中国共産党の機関誌である<人民日報>の姉妹紙である<環球時報>2018年5月2日字の社説を通じて明かした中国共産党局の立場である。

日本は東北アジアの国際政治の変動で日本の持分を確保して利害当事者(stake

holder)であることを浮彫りにするため積極的に動いてきた。安部総理は「日本人拉致問題」を南北首脳会談や北米首脳会談で議題に取り上げてくれることを提案して、今後日朝首脳会談を開催して2002年当時の小泉純一郎日本総理が訪北して金正日国防委員長と合意した日朝平壤宣言(主要内容:日朝国交正常化とそれに対する報いで経済協力および支援を主な内容にする)をもとにして拉致と核ミサイルなど全ての懸案を包括的に解決して不幸な過去を清算して国交正常化を目指そうとしている。

去る1年間の北米非核化協商を振り替えてみると、米国は本当に北朝鮮と非核化交渉をしたい意志があるのか、疑問を持つ。かえて米国は東アジアで自国の利益を貫けるにおいて北朝鮮の核が持つ役割、逆説的に北の核脅威によって得られる利益をあきらめないだろう。即ち北の脅威が実は日米韓軍事同盟を強化、維持させる名目になるし、中国に向かって「アジア回帰」政策の鋭い剣を隠せる装置として活用できるので、北朝鮮が要求する非核化過程といえる段階的・同時的解決方法を絶対に受容しないで、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最終的で、完全で検証できる非核化)という、北朝鮮が到底受け入れない一括妥結方式で、トランプの政治生命を延長させるカードで活用することに見える。

このように朝鮮半島の非核化と平和体制へ転換される時期に東北アジア各国は自国の利害または政治的利害を貫徹させるため当事者としての役割を堅持していくと思う。

そうなると思えば非核化交渉を通じて朝鮮半島で平和体制が整われて、これによって東北アジアに平和が到来するだろうか？これは可能性の領域であり東北アジア各国の努力、特別に日韓市民社会の持続的な努力の結果だろう。

東北アジア平和に対する構想は今まで数回提案された。国際政治の領域で代表的な事例が北核問題解決のための2005年第4次6者会談で採択された「9.19共同宣言」である。北核問題解決の基本原則(公約対公約、行動対行動の原則、the principle of commitment for commitment, action for actionに入閣して段階的方式で合意を移行するようにする)を樹立した「9.19共同宣言」第4項は東北亜の恒久的な平和と安定が朝鮮半島の永久的な平和体制に関する交渉とともになされることを見せてくれる。

我々は朝鮮半島の永久的な平和体制に対する交渉がこの東北亜の平和と安全のための共同の努力のなかで、そして東北アジアの安保協力増進のための法案と手段を探す過程で具現される次元で、東北亜平和構築の構造的な脈絡が確認することになる。

「朝鮮半島で停電協定から平和協定へ転換されて、恒久的な平和体制が構築されると、日米韓軍事同盟の未来はようになるだろうか？」という質問が自然に提起できる。この問題に対する韓国とアメリカの立場はカン・キョンファ外務部長官が2018年5月11日マイク・ポンペイオ米務大臣に会った後の共同記者会見で「駐韓米軍減縮議論」に対して「韓米同盟間の問題であり北朝鮮との交渉問題ではない」と確認したことから類推して見れる。即ち非核化や平和体制とは別途に同盟は持続されるという意味だと思う。

このような安保のジレンマを解決して東北亜平和共同体を指向するための構想が和田春樹東京大名誉教授が提唱した「東北アジア共同の家」である。彼は「東北亜共同の家」の骨格として、まず北核問題に象徴される朝鮮半島平和問題に対して共同の安全保証のための最小限の前提を先に造成してから地域内で発生する緊急事態に対して人道的に支援する常設協力体制の構築と共同環境保護の実現、経済共同体の形成を図って、文化交流と文化創造の場になるようにして最終的には東アジアが政治と安保の共同体になるようにしようと提案した。¹⁸⁾そして民主化と経済成長の経験を持つ韓国が「東北亜共同の家」形成のイニシアチブを使うべきであると力説した。¹⁹⁾

李・ジョンソク元統一部長官は和田春樹教授が提案した「東北亜共同の家」構想を「東北亜多者安保協力体」という安保協力提案で裏付けている。李・ジョンソク博士は「多者安保協力体は東北亜で両者同盟を越えて多数の国家が参加して、外交安保分野で共通の利害を追求するため目標、原則、規則、規範、意思決定過程を持つ協力体にならないといけない。この体制は東北亜で対立と葛藤を避けて不幸であった過去を純理的に清算して平和を保証することでこの地域のあらゆる国家の安保繁栄を追求することを目標にす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²⁰⁾と言った。

「9.19共同声明」と「2.13合意」で出された東北亜多者安保体制はシンガポール・北米首脳会議やハノイ首脳会議で議論されなかった。しかし南北関係の非核化と平和体制議論が好循環的に行われる仕組みを2018年板門店サミットに設けたように、朝鮮半島の平和は最終的には日米韓軍事同盟ではない東北亜多者安保体制という仕組みで、東北亜平和と安定のための安保協力、または多者安保対話の

18) 和田春樹, <東北アジア共同の家>, ソウル: 일조각, 2003, 23 p., 李ジョンソク, “‘東アジア’研究の現況と課題,” 城南: 世宗研究所, 2011, 35 p で再引用.

19) インタネット・ハンキョレ新聞 2006年5月28日号, “朴ゼギョ総長・和田春樹対談-‘東北亜協力の道’”

20) 李ジョンソク, “‘東アジア’研究の現況と課題”, 39 p.

下図で再議論すべきである。イ・ジョンソク博士も同じ意見を板門店首脳会談以後表明した。²¹⁾

東北亜で韓国戦争停戦協定以後造成された冷戦の秩序は朝鮮半島非核化と平和体制議論を通じて瓦解されて終息するだろう。しかし、和田春樹教授が唱えた平等で平和な「東北亜共同の家」と同じ平和共同体構想は東北亜多者安保協力体の構築や多者安保対話を通じても行なわれにくい。中国とアメリカのような巨大国家がG2という名で東アジアで角逐を繰り広げ、北朝鮮の経済開発をめぐる利害関係が鋭く対立することも、私たちが目撃する近い将来であるためである。

イ・ジョンソク博士もやはり東北亜国家間の平等で互恵的な共同体の形成は難しいが、これに対する代案として、この地域内の市民社会との間のネットワークでは、従来の国民国家の位階的構造を拒否して東アジア内部の不平等を解消するために重要な動力になることができると見た。東北亜で女性平和運動は、まだ萌芽期である軟性権力であり、それにもかかわらず、おさまらない継続的な動力を持って東北亜の平和と協力のために努力してきた。

現在、北米サミットが決裂し、中国の一帶一路 (One Belt and One Road, Belt and Road Initiative, BRI)戦略とアメリカの東アジアへの帰還(Pivot to Asia)政策が衝突する中、日米韓軍事同盟が米国の対中国抑止戦略の前線に位置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対決構図の中で、東北亜の女性の平和運動は、いくつかの違いと不均衡を越え東北亜で共存と和解、平和に向けた共同体に進む新しい能力を形成して、個々の国民国家がしつこく追求する国家利益という限界を超えて、世界史的大転換の時期を準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歴史的責務を持っている。そのような意味で私は、たとえブレイクストーリーミングレベルではあるが、東北亜冷戦体制解除後の平和体制を用意する一方で、古い武力紛争後の再建を備える北朝鮮と東北亜平和構築のための女性平和運動の課題を次のように提案したい。

① 東アジア非核軍縮運動展開を通じる反軍事主義運動持続：2018年5月2日、ストックホルム国際平和研究所(SIPRI)で発表した「世界の軍事費支出の統計報告書」によると、2017年の場合、米国は6100億ドル(1位)、中国は2,280億ドル(2位)、ロシアは663億ドル(4位)、日本457億ドル(8位)、韓国392億ドル(10位)など東北亜で軍備競争と軍事費の増加は続けている。朝鮮半島で平和体制が行われてもこのように軍備競争が続く場合は、持続可能な平和は、実質的に不可能である。したがって、「東北亜共同の家」、「東北亜多者安保協力会議」のように東

21) インタネット・プレシアン2018年5月3日字。“朝鮮半島・非核化地帯通じて東北亜多者安保体制へ”

北亜平和共同体形成のために、日韓の女性平和運動が東北亜の女性市民社会の連帯と協力して、東アジア非核軍縮運動を展開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ため、共同研究や調査、運動戦略などの共同行動を展開してほしい。

② 朝鮮半島平和体制形成のための3者もしくは4者会談の東北亜女性市民社会の参加構造作り：南北女性が南北関係が梗塞された期間中ほとんど北の女性たちに会えないまま、昨年冬と今年の初め、金剛山で2回の小規模で非常に短い時間だけ南北女性たちが再会した。南と北の女性は、断絶された時間のためにどんな変化を経験したのか、特に北朝鮮の女性たちがどんなに変化した生活を送っているのかも正しく知らない方である。北朝鮮研究者によると、北朝鮮社会の変化、すなわち市場化と情報化の主体が女性であり、苦難の行軍時代市場を通じて生存してきたし、今の資本蓄積の主体として登場しているという。このように変化して発展される北朝鮮社会と北朝鮮の女性たちを韓国と日本の女性と会える機会を作るべきである。過去2007～12年までに行われた「東北亜女性平和会議」は、本来朝鮮半島非核化と平和体制の形成のための女性の6カ国協議を目指して企画された。今名実ともに北朝鮮の女性も参加する東北亜女性平和会議が再開されることを願う。その意味で、政府間進行される3者または4者会談に女性代表を拡大し、協議期間中に1.5トラック会談あるいはNGOフォーラムや女性フォーラムを組織することを各国政府に要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東北亜平和共同体形成のための女性の意志、知識、知恵が集まって東北亜女性が参加して一緒に作って守っていくべきの持続可能な東北亜平和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である。

③ 東北アジア平和文化作り：朝鮮半島分断と東北亜の葛藤は強大国のdivide and ruleという構造的暴力の元で競争と対立で持続されてきた。日本植民地時代と侵略戦争の中で、東北亜の住民は異なる歴史的経験の中、その競争と対立で芽生え敵意と不信感を内面化して生きてきた。韓国と日本は、最も近い国であり、ビザなしで自由に旅行できるしお互いの食べ物と文化について親しみを持ちながらも根源的に解決されなかった歴史の問題は、朝鮮半島分断と北朝鮮の核開発にもたらされた圧力で、日韓関係が信頼の関係に発展するまでにはまだ困難が存在している。したがって、日韓市民連帯が東北亜の平和文化を新たに作成する共同の企画を通じて葛藤と対立で対話と共存に転換される平和の文化を形成するための努力を開始してください。日韓女性の連帯を通じた平和と性平等を早めるために議論するこの場がその出発点になることを期待する。終わり。

Workshop③

2018년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여성의 성인지적 개입

2018年以降の朝鮮半島をめぐる平和プロセスと
女性の性認知的介入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チョウ・ヨンジュ (韓国女性政策研究院・副研究委員)

2018년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여성의 성인지적 개입

조영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18년 1월 1일 이후, 한반도 정세

지난 1월 이후 6개월 동안 한반도는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 2017년 연말까지만 해도 한반도에서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감이 들 정도로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와 그에 따른 북미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각고로 노력하는 와 중 2018년 신년사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창올림픽 참여와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전환되었다. 평창올림픽 준비를 위해 북한의 현송월 단장이 방남하였고, 이후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평창올림픽에서는 단일팀을 구성하여 경기를 진행하는 한편, 북한 공연단이 공연을 진행했고, 평창올림픽 이후 답방 형식으로 남한 공연단이 평양을 방문해 공연을 했다. 과거 10년 동안의 공백을 메꾸고 다시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며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최초로 판문점에서 두 정상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특히 북한의 최고 정상이 남한의 땅을 밟은 것은 처음이라는 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후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되기 시작했고, 남한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 대화를 시도했고, 북미 간의 대화 성사를 위한 중간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그 사이 2차 정상회담이 판문점의 북한 측 땅에서 이루어졌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13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2018년에 개최된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한 번의 북미정상회담은 각각의 의미를 갖는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정상회담은 최초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판문점을 방문했다는 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의지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두 번째 정상회담의 경우는 북미회담을 앞두고 긴급하게 남북 정상이 만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즉각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회담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세 번째 정상회담은 다시 한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실질적 조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북미정상회담의 경우 세계사적으로 최초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났고, 만남 이후 북한은 회담에서 약속한 바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취하였다. 이처럼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에서 평화만들기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북미회담 이후 변화된 정세가 만들어지는 것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2019년 2월 27일-28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을 것이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미국을 향해 완곡하면서도 강하게 대화에 나서줄 것을,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 역시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의 진전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쳤다. 미국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한다며 대화에 나설 의지가 충분함을 피력해왔다. 그 결과 2월 하노이에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다시 만났다.

많은 기대와 낙관이 있었던 하노이 정상회담이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했고, 미국 역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북미 간에 충분한 합의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여러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준비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북미 정상회담이 끝이 났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두 정상은 대화의 의지를 밝히고는 있지만,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복구 움직임과 분강지구 등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할 만한 징후들에 대한 논란들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미 상원이 ‘웬비어법’을 재발의하는 등 대북제재의 유지와 강화에 대한 입장들이 발표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움직임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만, 지금의 상황은 무조건적으로 낙관만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5월 4일과 9일 북한은 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다시 한 번 긴장이 조성되는 측면

이 있는 듯했으나, 북한과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 발표가 있었다. 이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한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한국 정부는 ‘평화가 경제다’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18년 8.15경축사와 2019년 3.1절 경축사에서 평화를 강조하며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것이며, 남북경제협력의 강화를 통해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로서 ‘신한반도체제’를 제시하며, 한반도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평화경제’는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적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평화가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고, 경제적 이익이 평화를 유지하게 한다는 것을 함축한 개념이다.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 조성에서 경제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의 유인과 동력으로서 경제가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된다. 특히 북한 당국의 경제적 발전에 대한 요구가 있는 현실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협력과 발전을 위해서는 평화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 대북 제재 해제와 같은 실질적인 평화적 성과가 있어야 경제적 협력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체되고 있는 남북대화, 북미관계 하에서 지난 5월 17일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것과 개성공단 자산 점검을 위한 기업인 방북을 승인할 것을 발표하였다. 최근 북한 식량 사정의 어려움이 알려지면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했고, WFP, UNICEF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800만불을 공여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 4월 30일 개성공단 투자 기업들이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현재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과정에서 남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실행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만들기의 걸음을 지속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과 여성의 참여

2018년 4.27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여성교류가 재개되었다. 4.27판문점 선언 이후 민간 차원에서 남북교류에 여성이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9월 정상회담이다. 특별수행원으로 11명의 여성이 참여하였고, 그 중 기존에 여성교류활동을 한 여성은 1명이다. 그리고 9월 정상회담 이후 여성을 비롯한 사회문화 교류가

추진되면서 민간 차원에서 남북 간에 여러 차례의 만남을 가져왔다. 10월 4일을 기념하는 행사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10.4-6. 평양)를 기점으로 민간 차원에서 평양을 방문하고, 작년 11월 「관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11.3-4)와 올해 2월 새해맞이 공동행사를 금강산에서 치루기도 했다. 10월 행사에는 총 20여명의 남측 여성이 방북하여 행사에 참여했고, 기존에 여성교류를 진행했던 민간단체 여성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6.15남측위원회 여성본부 대표가 참여하였다. 11월과 2월 행사에서도 여성계대표가 참석하여 부문별 모임을 통해 남북 여성의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이 행사들에서 남북한 여성들은 앞으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서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남한 여성들은 2차 북미정상 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성 선언’을 통해 남북여성교류의 정례화와 남북여성협력을 통한 남북여성들의 실질적 삶의 질 개선을 요구하였고, 대북제재를 신속히 해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실질적인 성과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기대를 표하였다. 이러한 여성들의 움직임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이 실천되는 데서 여성들이 주요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현재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데 제약 요소가 되는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표출을 통해 담론과 실천을 만들어가고자 한 것이다.

최근 국제협력 차원에서 남북여성교류도 추진되고 있다. 2018년 5월 24-26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UN정무국 주최의 「동북아 여성·평화·안보 워크숍」에 남한 여성 3명, 북한 여성 2명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2018년 10월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주최로 남북한 여성 학자 교류가 추진되어 남한 여성 1명과 북한 여성 2명 간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지난 2018년 12월에는 Nobel Women’s Initiative 주최 「동북아 여성·평화·안보 라운드 테이블」(2018.12.4.-6, 베이징)이 개최되어 남한 여성 5명, 북한 여성 3명이 참석하였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실천은 남북한 간의 대화와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여성들의 연대를 통해 이루어졌다.

남북한의 여성교류는 처음부터 해외의 여성들과 함께 하면서 국제적 성격을 띠었다. 남북한 여성의 첫 만남이 성사될 수 있었던 데는 남한여성과 일본여성의 연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후 남북한 여성 간의 만남이 유지될 수 있었던 데도 국제적 차원의 이슈를 함께 다루었기 때문이었다. 미약하나마 남북한 간 여성학술교류가 추진된 것도 중국 여성의 역할이 컸다. 최근에는 2015년 분단 70주년을 맞아 5월 24일 ‘평화와 균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에 비무장지대를 도보로 횡단하는 국제여성평화걷기운동(WOMEN CROSS DMZ)이 펼쳐졌다. 여성주의적 가치와 평화주의적 관점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통일운

동이면서 평화운동의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여성들은 남북한을 넘어 국제적 차원에서 연대를 도모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실천을 해왔고, 이는 한반도 평화의 문제가 남북을 넘어 전지구적으로 함께 행동해야 할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앞으로도 남북한 여성들의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만남과 교류, 협력을 추진, 활성화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의 성격 상 남북한을 넘어 국제적 차원에서 여성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3. 향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개입을 위한 과제²²⁾

북미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3월 10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제발전이야말로 가장 절박한 과제라고 천명했고, 3월 10일 ‘과학중시’를 상징하는 김책공대에서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연일 ‘자력갱생’과 ‘경제과업 관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는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4년차를 맞이하는 올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주민들을 설득 및 독려해야 하는 필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미국의 대북제재 공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더 ‘자력갱생’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력갱생’과 ‘경제과업 관철’은 북한 주민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제재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제한적인데 성과는 내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렇다고 경제발전을 포기할 수도 없다. 이 또한 주민들의 삶에 너무 직접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선택할 것은 다시 남한 및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과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천이다.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만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길”이 위기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 닿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대화가 다시 시작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라는 부정의 부정 표현을 통해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고자 했듯, 과거와 같은 대립과 위기의 상

22) 이 부분은 조영주(2019),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 그 후, 남북여성교류의 길”, 『젠더리뷰』에 실린 글임을 밝힌다.

황이 다시 도래하지 않도록 하는 북한 당국의 또 한번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핵실험과 핵미사일 발사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조치들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실천적 조치들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미국의 대북제재가 강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비핵화는 인류의 평화를 위해 당연히 이루어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조건이다.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를 위해 모든 자원을 핵무기 개발에 투입했고,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은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여성들은 자신의 생계와 가정경제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영역의 것들까지 책임을 져야 했다. 이중부담, 삼중부담이라는 말은 덧없을 정도로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책임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공식 노동에 여성이 참여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동원에 여성들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모든 여성이 일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을 책임졌던 보육기관의 유지 부담도 여성에게 지우고, 돌봄 사람이 없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도 개별 여성들이 책임져줄 것을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 주민의 삶, 특히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대북제재 역시 북한 주민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화와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이 대북제재의 효과라고 주장한다. 이번 북미정상회담 이후 다시 대북제재를 이야기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 있다.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욱 강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재가 압박의 요인이 되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도 있다. 하지만 제재만이 유일무이한 방법은 아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서로의 이해를 공유하고 서로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그에 대한 실천을 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신뢰와 신뢰에 상응하는 조치가 대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동력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북한이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약속했던 바를 이행했던 것과 같이 미국 역시 북한의 실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북제재가 북한 당국을 압박하는 유효한 수단일 수도 있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강력한 대북제재는 북한 주민들이 살아갈 길을 좁힐 것이다. 제재를 견뎌내기 위해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동원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고, 북한 주민들은 어려운 삶을 견뎌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일게 될 수 있다. 다시금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고 비핵화의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대북제재 외의 것도 재고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 개발 및 실험, 미국의 대북제재,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는 서로 맞물려 있다. 북한은 국가와 주민의 안위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 하고, 미국은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류의 안전을 침해하는 북한을 저지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그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다.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명분으로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들의 편안한 삶을 목적으로 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있기까지, 그리고 그 후에 다시 한 번 우리 정부의 ‘우선자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의 한반도 정세는 대외 정세와 주변국의 이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남북관계의 자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지난 2018년에 이루었던 남북관계의 진전과 성과는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다시 북한과 미국, 중국과 일본 등 여러 국가들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민간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남북교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문화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민간 교류가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왔고, 사회문화교류, 여성교류가 대화의 물꼬를 트고 서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던 경험이 있다. 대북제재의 국면에서 본격적인 경제협력도 추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작년부터 이어 온 남북의 화해와 대화의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 분야와 여성 교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과거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도 여성들 간의 만남이 성사되었다는 점과 작년 가을부터 남북한 여성들이 교류협력에 대한 마음을 모은 것은 현재 한반도 정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로부터 축적해온 서로에 대한 신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성들의 만남을 지속시킬 수 있었다. 10년에 가까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도 만남과 대화를 통해 쌓아 온 신뢰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이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인 대화와 만남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래서 남북한 여성들은 만남을 통해 대화를 지속시키고 신뢰를 계속 만들어나가야 한다. 작년 한해 남북대화가 재개되면서 다방면에서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졌지만, 북핵문제라는 큰 숙제로 인해 제약을 받기도 했다. 정기간 대화가 우선되다 보니 여러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지금 국면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대화를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더욱 진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의 경험처럼 여성을 비롯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

다.

남북여성교류가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을 위한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우선 남북여성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10년의 남북관계 단절은 여성교류를 비롯한 여성 평화운동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남북여성교류와 여성평화운동의 새로운 세대가 재생산되지 못했고, 과거의 교류와 운동 경험이 충분히 축적 및 전수되지 못했다. 그리고 남북여성교류와 여성평화운동을 전개할 토양도 변화했다. 예상치 못하게 전환된 남북관계의 흐름 속에서 여성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 주체들이 북한과의 만남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꺾어왔던 2018년이였다. 지난 10년의 공백을 하루빨리 메꾸려는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너무나 많은, 다양한 주체들이 남북교류를 추진하려 하면서 오히려 교류협력이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을 야기하기도 했다. 남한은 주체가 다양하지만, 북한은 주체가 다양하지 못한 실정에서 남한의 제안을 북한이 모두 소화하기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 북한 당국에 이해에 맞는, 역량이 있는 부문에서부터 교류가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교류는 우선순위가 되기 어려웠다. 북한 당국의 우선적 이해는 경제협력에 있었고, 북한 내부의 정치적 관계 속에서 북한 측 여성교류의 주체 역량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남측도 마찬가지다. 여성교류 역량이 약하고 여성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웠다. 앞으로 남북여성교류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남북여성교류의 주체적 역량을 키우고 여성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 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남북여성교류 주체 역량은 상호의존적 성격을 띤다. 남측 여성의 역량이 커지면 북측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과거 교류의 경험을 되새겨보았을 때, 남측 주체의 역량에 따라 남북교류의 장에 나오는 북측 주체가 결정이 되었고, 교류 분야의 중요성도 다르게 여겨졌다. 따라서 남북여성교류를 추진하는 데서 남한 여성의 교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산발적으로 계획 및 추진되는 여성교류사업에 대한 계획과 논의들을 함께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남북교류에서 북측과의 만남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만남만을 목적으로 했을 때 결국 소모적인 경쟁만이 남을 뿐이다. 이 역시 10년 전 경험을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대북지원 사업에서나 교류협력사업에서 나타나는 중복성은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했고, 경쟁적인 사업 참여는 소모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보다 10년 만에 재개된 교류협력에서 '선점'을 위한 노력이 더 많은 듯하다. 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교류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똑같이 경쟁하려다가는 다시 또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여성교류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여러 주체들이 함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과거 여성교류의 경험을 복원하여 교류와 협상을 위한 전문적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여성주체들이 함께 여성교류를 준비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작년 남북여성교류를 위해 조직된 여성평화네트워크 등을 통해 다양한 여성들 간의 소통을 시작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만남에 앞서 무엇을 향해, 어떤 의제로 남북여성교류를 추진할 것인지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성평등의 관계에 대한 여성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담론적, 운동적 근거들을 만들어 내며 다양한 위치의 여성들과의 대화를 통해 남북여성교류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명분을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여성교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남북여성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작업들을 민간과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차원에서는 여성교류가 추진된 바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향후의 남북교류협력은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분야별 교류협력에서 민관 협력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성교류에 있어 민관 협력의 경험은 매우 적다. 주로 민간을 중심으로 여성교류가 추진되다 보니, 정부는 민간을 지원하는 차원에 그쳤을 뿐 주도적으로 여성교류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했다. 변화된 국면 속에서 여성교류는 민간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남북여성교류 추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한반도 정세에 따른 시나리오별 여성교류의 전략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주도 하에 남북여성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교류에관한법률 등과 같이 남북교류를 추진하고 지원하는 법률과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여성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와 함께, 현재 상황을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타개해나가기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2차 북미회담을 앞두고 여성들의 입장을 표명하였듯, 현 정세를 여성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를 담론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장의 남북여성 간의 직접적인 교류가 추진되기 어렵다면 국제사회의 장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우리 정부는 오랜 동안 국제사회에서 젠더 이슈와 관련한 활동을 해왔고, 북한 역시 국제적 차원의 움직임에 동참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과 상황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북한 여성이 젠더 이슈를 중심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거나 공

동대응을 하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또는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해 북한 여성과 만남, 학술교류도 추진해봄직하다. 대북제재로 인해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힘들다면 여성의 입장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 사업을 발굴하거나 교류협력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해나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북한 여성의 건강 지원을 위한 사업이나 건강 실태 조사 등의 사업을 구상해보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힘을 받고 현실화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남북여성교류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다. 남북여성교류뿐만 아니라 남북교류와 한반도 평화정착 역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지금 해야 할 것은 남북여성교류에 대한 사회적 설득을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와 그 이후의 상황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노력들이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대화가 중요하다. 지금의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과거보다 진전된 남북여성교류 추진을 위해 무엇을 더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대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2018年以降の朝鮮半島をめぐる平和プロセスと女性の性認知的介入

チョウ・ヨンジュ（韓国女性政策研究院・副研究委員）

1. 2018年1月1日以降、朝鮮半島情勢

2018年以降に三度の南北首脳会談と二度の米朝首脳会談が行われた。2018年に開催された3回の南北首脳会談や第1回目の米朝首脳会談は、それぞれの意味を持つのである。4月27日、板門店で行われた首脳会談は、初めて北朝鮮の最高指導者が板門店を訪問したという点、朝鮮半島の非核化と平和協定締結に対する意思を共有したという点で重要である。第2回目の首脳会談の場合は、米朝会談を控えて電撃的に南北首脳が会って当面の問題を解決しようとしたという点で、即時かつ問題解決中心の会談が行われたという点で意味合いがある。第3回目の首脳会談は、もう一度、朝鮮半島の非核化と平和プロセスに対する意志を確認し、北朝鮮の非核化と関連した実践的措置に対する合意を引き出しており、実質的な朝鮮半島における平和構築に向けた軍事分野での合意へ導いたという点で有意義である。米朝首脳会談の場合、史上初めて北朝鮮と米国の首脳が顔を合わ

せ、その以降、北朝鮮は会談で約束したことを守るための実質的な措置を取った。このように三度にわたる南北首脳会談と米朝首脳会談の成果として平和協定締結など朝鮮半島での平和作りのための実質的な措置が取られるだろうと期待していた。しかし、金正恩委員長の訪韓は実現できず、米朝会談以降、情勢の変化も期待に及ばなかった。その混乱の中、2019年2月27日-28日、2度目の米朝首脳会談が行われたが、具体的な成果を出せなかった。その後、この5月4日と9日、北朝鮮はロケット砲の発射など、再び緊張が高まっているように見えたが、北朝鮮と対話を持続するという米国の立場表明があった。これは南北関係と米朝関係が2018年以前には以前の状態への回帰はしないだろうという期待を持たせる。

停滞している南北対話、米朝関係の下で、この5月17日韓国政府は、北朝鮮側の住民向けの人道支援を推進することと開城(ケソン)工業団地の資産点検のための企業家の訪朝を承認することを発表した。

最近、北朝鮮の食糧事情の厳しさが知られることで、人道支援の必要性が提起され、韓国政府は住民への人道支援は政治的状況と関係なく進めるとし、WFP、UNICEFの北朝鮮の児童、妊婦の栄養支援や母子保健事業など国際機構対北朝鮮支援事業に800万ドルを供与することにした。世界食糧計画(WFP)や国連児童基金(ユニセフ)が進める北朝鮮の児童・妊産婦への栄養支援や母子保健事業に800万ドル(約8億7680万円)を拠出することを決めたと発表した。また、開城工業団地に投資した企業家たちが4月30日に申し込んだ資産点検のための訪朝を承認することにした。このように朝鮮半島の平和へのプロセスの中で、韓国政府ができることは実行するのが、朝鮮半島の平和作りに向けた歩みを持続させるという点で極めて重要である。

2. 朝鮮半島の平和構築プロセスと女性の参加

2018年4・27板門店宣言後、南北女性交流が再開された。民間レベルで南北交流に女性が参加し始めたのは9月の首脳会談からである。そして、9月の首脳会談の後、女性をはじめとする社会文化交流が推進され、南北間に民間レベルでの数回の集まりが設けられた。10月4日を記念するイベント「10・4宣言11周年記念民族統一大会」(10.4-6)を基点として平壤を訪問し、昨年11月には「板門店宣言と9月平壤共同宣言履行のための南北民族和解協議会(民和協)連帯 および再会大会」(11.3-4)を、また、今年2月には「南北共同の2019年迎春の集い」が金剛山で開催された。10月のイベントには、総計20人余りの南側女性が訪朝して行事に参加し、既存の女性交流を進行した民間団体の女性たちと6.15共同宣言

実践南側委員会・女性本部代表が参席した。11月と2月のイベントでも女性界の代表が出席して部門別の集いを通じて南北女性間の出会いの場を設けた。この一連のイベントの中で、南北の女性たちは今後、交流と協力を推進するため、お互いに努力することを約束した。そして南側女性たちは第2回目の米朝首脳会談を控え、「朝鮮半島の持続可能な平和と繁栄に向けた女性宣言」を通して、南北女性交流の定例化や南北女性協力を通じた南北の女性たちの実質的な生活の質の改善を要求しており、対北朝鮮制裁を迅速に解除することを促した。最近、国際協力レベルでも南北女性交流が推進されている。2018年5月24-26日、国連本部・政務局(DPA)主催で北京で開催された「東北アジア女性・平和・安全保障ワークショップ」に南側女性3名、北側女性2名が出席した。また、2018年10月、スウェーデンの安全保障開発政策研究所 (ISDP) 主催で、南北間女性研究者同士交流が行われ、南側女性1名と北側女性2名が会うことができた。そして、2018年12月にはノーベル・ウィメンズ・イニシアティブ(Nobel Women's Initiative)が主催した「東北アジア女性・平和・安全保障ラウンドテーブル」(2018.12.4.-6、北京)が開催され、南側女性5名と北側から女性3名が出席した。このように朝鮮半島の平和をを目指した女性たちの実践は、南北間の対話と協力だけでなく、国際的レベルで女性たちの連帯を通じて行われている。今まで女性たちは、南北を越え、国際的レベルでの連携を図り、朝鮮半島の平和構築に向けた実践行動を行ってきた。それは朝鮮半島における平和の問題が南北を越え、全地球的に一緒に行動し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でもあるからである。これからも南北間女性たちの朝鮮半島の平和構築に向けた出会いと交流、協力を進み、活発化する一方、朝鮮半島の問題の性格上、南北を越え、国際的レベルで女性間の緊密な協力を構築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る。それは、朝鮮半島の平和のみならず、全地球的な平和に向けた女性たちの力を集めていく過程でもあるからである。

3. 今後の朝鮮半島の平和構築プロセスにおける性認知的介入のための課題

朝鮮半島の平和へのプロセスでの性認知的介入は、南北女性間の交流と協力を活性化させることから始めてスタートできる。過去に南北関係硬直の局面でも女性同士の出会いが実現されたという経緯と昨年秋から南北の女性たちが交流協力について心を寄せたのは、現在の朝鮮半島情勢に示唆するところが大きいと思う。過去から蓄積してきたお互いに対する信頼は厳しい状況のに陥っても女性たちの出会いを持続させることができた。10年に近い厳しい時期が続く中で、出会いと対話を通じて積み重ねた信頼は簡単に崩壊しなかった。これは今の状況を打開できる方法は持続的な対話と出会いという点を示してくれる。そのため、南北

女性たちは出会いを通じて対話を持続させ、信頼を作り続けていくことによって南北関係の進展の窓口を多様化する必要がある。南北女性交流が実質的な成果を達成するためには交流協力に向けた準備が非常に重要である。この10年の南北関係断絶は女性交流を含めた女性平和運動の力量を弱める結果を生んだのである。南北女性交流と女性平和運動の新しい世代が再生産されず、過去の交流と運動の経験が十分に蓄積及び継承できなかつた。今後、南北女性交流を進めるためには、南北女性交流の主体的力量を高め、女性交流が推進できる土台作りを優先すべきである。これは、北側に影響を与えかねないという点でより重要である。南北女性交流主体の力量は相互依存的性格を帯びている。南側女性の力量が高まれば、北側女性の力量を高めるのに影響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過去交流の経験を振り返ってみると、南側主体の力量によって南北交流の場に出てくる北側の主体が決定され、交流分野の重要度が高まる傾向があつたと思われる。即ち、南北の女性交流を推進するには南側女性の交流の力量を高めるのが極めて重要である。そのためには散発的に計画及び推進される女性交流事業に対するプランと論議を一緒に行う必要がある。そして重要なのは女性交流を準備して推進する様々な主体たちが一緒に知恵と経験を共有することである。かつての女性交流の経験を復元し交流と交渉のための専門的力量をもつ人材を育成し、多様な女性主体がともに、女性交流を準備させる作業が必要である。昨年、南北女性交流のために組織された女性平和ネットワークなどを通じて様々な女性たちの間での意思疎通をスタートさせるのも考えられる。顔を合わせる前に、何を目指して、どんな議題で南北女性交流を進めるかを着実に準備することが当面の課題であろう。それと朝鮮半島の平和とジェンダー平等の関係に対する女性の立場を明確にして、談論的・運動的な根拠を作り出しながら、様々な立場の女性たちとの対話を通じて南北女性交流のための社会的合意と大義名分を作つ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時期である。南北女性交流協力を推進するための準備とともに、現在の状況を女性たちが主体的に打開していくために積極的かつ多様な側面からトライする必要がある。第2回目の米朝会談を控え、女性の立場を表明したように、現在の情勢を女性の立場から解釈し、朝鮮半島の平和に対する女性たちの要求を談論化することである。そして、直ぐに南北女性間の直接的な交流が推進されにくいのなら、国際社会の場で交流と協力を進めることも考えられる。韓国政府は長い間、国際社会でジェンダー問題と関連した活動を行っており、北朝鮮も、国際的なレベルの動きに参加しようとする試みをしている。このような経験と状況を活かして国際社会で南北の女性がジェンダー問題を中心に一緒に顔を合わせる場を設けたり、共同対応をする機会を作ることもできる。または国際学術会議などを通じて、北朝鮮の女性との出会い、学術交流も推進しても良いでしょう。対北朝鮮制裁に

よって積極的な交流と協力を推進するのが難しいなら、女性の立場で推進する人道支援事業を発掘したり、交流協力アジェンダを発掘するための基礎作業を進めるもある。例えば、北朝鮮の女性の健康支援のための事業や健康実態調査などの事業を構想してみるのも考えられる。

このような努力が支持を得て、現実化するために最も必要なのは、南北女性交流に対する社会的合意である。南北女性交流だけでなく、南北交流と朝鮮半島の平和の定着も、やはりこれに対する社会的合意が形成されたときに実質的な成果を成し遂げることができる。そのようになると国際社会に対する説得も可能になる。したがって、今やるべきことは、南北女性交流に対する社会的説得のための作業であると考えている。米朝首脳会談の結果とその後の状況があまり肯定的ではない中で、南北交流協力推進の正当性を確保するために、朝鮮半島の平和に向けた努力がまた新たな対立の原因になるのを防ぐためには、対話が益々重要である。今の局面を転換させるため、交流と協力を推進する一方で、過去より一層進展された南北女性交流を進めるために、要求されているのは何かを改めえて考え、対話から始めなければならない。

한일여성의 연대로 비핵·평화, 성평등의 동북아시아를 만들자

日韓女性の連帯で非核・平和、
ジェンダー平等の北東アジアを

신일본부인회 회장 카사이 키미요
新日本婦人の会会長 笠井貴美代

분과회 `여성과 평화` 패널토론 발언

한일여성의 연대로 비핵·평화,성평등의 동북아시아를 만들자

신일본부인회
회장 카사이 키미요

오늘 이처럼 한일여성의 본격적인 교류가 실현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여성평화 기금으로 일본의 어머니대회나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초청하고, 저희가 ‘신부인’의 평화기행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만나 뵈는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의의 깊은 포럼을 준비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서로가 깊이 알고지내는 솔직한 교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일연대의 투쟁의 경험

작년부터 한반도의 남북, 북미 간의 역사적인 대화가 진행되고 그 이후의 모색, 또한 핵무기금지조약 발효로 내년의 NPT재검토회의를 성공시키기 위한 활동 등, 세계평화의 새 흐름을 이루는데서 한국과 일본의 여성들과 시민의 투쟁이 큰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땀땀 서로 확인합니다.

이웃나라끼리, 한일양국의 여성과 시민은 서로가 자국에서 평화를 요구하고, 뒤떨어진 여성의 권리 확립을 위해서도 공통된 과제로 싸워왔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일간에 직접 관련된 과제에서도 현재까지 수많은 연대운동이 있었지요. ‘신부인’은 1962년에 결성되었는데 결성 후 첫 평화투쟁이 한일회담

반대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일회담이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에 기초한 핵 군사동맹화, 한반도의 남북분단을 노리는 것이라 간파하고, 당시는 매일과 같이 학습모임이나 반대집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우리의 주간신문도 거듭 열띤 투쟁들을 보도했습니다. 이 한일협정이 오늘날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의 미해결에 이어졌습니다. 또 70년대에는 박정희 독재정권과 맞서 싸우는 한국민중과의 연대, 김대중씨 납치사건으로 주권유린이나 군사정권을 지원하는 일본정부에 대한 항의, 일본인 남성들의 기생매춘관광 반대, 80년대에는 전두환정권에 의한 김대중씨에 대한 엄벌과 탄압에 대해 일본 전국각지에서 일제히 항의하고 역사교과서 왜곡을 반대했습니다. 9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할머니들을 모신 집회 개최를 계속하고 한국으로의 스터디투어나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서의 교류 등, 수많은 활동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비핵・평화를 둘러싼 새로운 국면에서의 우리 활동

작년6월, `신부인`은 성명을 발표하고 여기서 `북미정상회담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일본정부는 이제 평화 추진을 위해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새로운 정세 속에서 일본정부에 대해 비핵・평화, 성평등의 한반도, 동북아시아의 실현에 역할을 다하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비핵・평화의 한반도를 지향하는 그 간의 북미・남북의 합의를 촉진하고 제반 문제의 포괄적 해결과 국교정상화를 지향하는 `북일평양선언`의 실천 등, 자주적인 평화전략을 확립하여 외교노력을 강화시킬 것. 신뢰구축에서 걸림돌이 되는 군사적 대응은 엄격히 견제할 것.

②침략전쟁・식민지 지배의 지난 과오에 대해 반성할 것. 이런 반성 없이는 다른 나라들과의 신뢰 관계도 미래지향적 우호관계도 구축할 수 없다는 것. 일본의 평화헌법 9조 개헌, 오키나와 미군 신기지건설과 기지강화 등, 전쟁하는 국가 만들기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핵무기금지조약을 비준하여 핵무기폐절을 실현하기 위해 전세계에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활동해 나갈 것.

③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성실한 사죄와 배상 등, 피해자의 존엄이 회복되고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신속한 대응을 다할 것.

④역사적 진실을 다음 세대에 이어가는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사실과 어긋나는 혐오발언이나 배타주의를 정권 스스로 견제하고 엄격히 대처할 것.

⑤여성의 인권, 성평등, 평화시책을 비롯한 모든 정책결정의 자리에 여성이 참가할 것. 성추행금지법의 제정, 선택적부부별성제도 등 민법의 개정, 여성차별철폐조약 선택의정서의 비준, 형법의 성범죄 요건의 개정 등을 행할 것.

낙후된 성평등 극복과 `위안부`문제의 해결

올해는 유엔에서 여성차별철폐조약이 채택된 지 40년을 맞는 해입니다. 성평등에서 후진 것은 세계의 149개 나라 중에서 일본이 110위, 한국이 115위이며, 이를 극복하는 것은 한일간에 공통된 과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오랜 투쟁 끝에 현재 #MeToo운동과 연대하여 성추행이나 성폭력, 성차별에 항의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최대의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아베정권입니다. 거짓과 사기를 상투적 수법으로 삼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소위 `여성활약` 정책입니다. 여성을 저렴하고 한번 쓰다버리는 인재로 여겨, 현재 일본에서는 여성노동자의 55.8%가 비정규직이며 `여성의 빈곤`과 `아이들의 빈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베정권은 내각의 각료들 스스로가 성추행 피해자를 비하하는 말들을 퍼부어 2차피해로 내몰고, `LGBT는 생산성이 없다`고 하는 여당 자민당원의 망언을 옹호하는 인권적대시 정권입니다. 정치분야에서 본다면, 지난 4월달의 남녀공동참획추진법이 시행된 지자체 첫 도도부현 의회선거에서 자민당 여성당선자는 불과 3.5%로, 적극적인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성당선자 수의 최고는 일본공산당의 51.5%입니다. 여성의 활약을 가로막는 아베정권의 퇴진이야말로 성평등으로 나가는 지름길입니다.

일본의 여성운동이 자기 과제로 꼭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입니다. 2015년의 한일합의는 그 때까지 완강히 `이미 다 해결되었다`고 한 아베정권이 겉으로는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부인`이 우리의 태도표명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합의는 피해자를 빼고 진행되었습니다. 일본정부가 논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지 여부는 피해자와 국제사회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가 어떤가에 달려 있습니다. 10억엔을 내도 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할 수 없고, 또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조건으로 거론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후 사태는 이러한 우려를 보여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일본정부는 `사과와 반성`은커녕, 합의 직후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강제연행은 없었다”느니, “성노예란 사실과 어긋난다”(16년 2월)고 발언하여 위원회에서 엄격한 비판권고를 제출받게 되었습니다. 아베정권은 지금까지도 `고노담화`를 없었던 것으로 하려고 `검증` 등을 내걸어 획책했는데 이는 모두 다 실패해 결국 `계승하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의 한국정부의 새 방침과 `재단`해산발표를 둘러싸고 아베정권의 대응과 일본의 보수언론 보도는 한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배타주의를 선동하는 논조가 설치는 등 패상한 사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나이 드신 피해자 할머니들의 부보가 계속되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신부인’은 일본정부가 신속히 문제해결에 나서고 언론이나 교육이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를 위해서도 이번 국회 참의원선거에서 아베정권과 9조개헌을 다같이 쓸어버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운동으로 —신부인’의 조직적 특성을 살려

‘신부인’은 평화와 성평등을 지향하고 여성들의 무슨 요구도 받아들이고 운동하는 여성단체입니다. 작년부터는 열사병대책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교실에 에어컨 설치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817억엔의 긴급 예산조치를 취하게 했고, 편의점의 3대기업 매대에서 포르노잡지를 철거시키게 하는 등, 운동에서 큰 성과를 계속 거두었습니다. 아이들의 의료비 무상화 요구운동은 50년간 계속하고 있고 현재는 모든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해마다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벌일 수 있는 것은 전국의 ‘신부인’이 하나로 힘을 합쳐 행동할 수 있는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부인’은 중앙본부, 전국에 47개의 모든 시도부현 지방본부, 지자체 절반에 900개의 지부, 지역과 직장에 8600개의 반 조직이 있습니다. 또 주간으로 발행하는 신부인신문으로 정보나 활동을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어렵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내놓고 신부인신문을 읽고 토론합니다. 직접 만든 전단지들 연간 1200만장 배포하고 SNS에서도 발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지탱하는 것은 한달 900엔의 회비와 성금에 의한 자율적인 재정사업입니다.

2003년에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협의자격을 갖는 NGO단체로 인증을 받았고, 매년 유엔의 여성의 지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고 방청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투쟁 속에서 태어난 ‘레이라 화장품’ 하나를 구입하면 1엔씩을 적립하는 ‘여성평화기금’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여성활동가를 매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 등에 초청하고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류를 계기로, 비핵·평화, 성평등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실현을 위해 한일여성의 연대와 운동이 더욱 전진할 것을 바라면서 제 발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日韓女性の連帯で非核・平和、ジェンダー平等の北東アジアを

新日本婦人の会会長 笠井貴美代

日韓女性の本格的な交流の機会が実現し、大変うれしく思います。女性平和基金で日本母親大会や原水爆禁止世界大会に招いたり、新婦人スタディツアーで訪問し、お会いした方々も多く、この意義あるフォーラムを準備して下さったことに心から感謝を申し上げます。今日はお互いをより深く知る、率直な交流ができればと願っています。

日韓連帯のたたかひの積み重ね

昨年来の朝鮮半島の南北、米朝の歴史的な対話とその後のさらなる模索、また、核兵器禁止条約発効で来年のNPT再検討会議を成功させるとりくみなど、世界の新しい平和の流れをつくるうえで、韓国と日本の女性と市民のたたかひが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ことを、まずお互い確認しあいたいと思います。

隣国どうし、日韓の女性と市民は、それぞれが自国で平和を求め、また遅れている女性の権利を確立するために、共通した課題でたたかってきました。

直接日韓に関わる課題でも、今日に至る多くの連帯運動があることを改めて実感しています。新婦人は1962年に結成されましたが、最初にとりくんだ平和闘争が日韓会談反対でした。日韓会談は、アメリカの北東アジア戦略に基づく核軍事同盟化、南北分断がねらいであると見抜き、連日のように学習会や反対集会が開かれました。私たちの週刊しんぶんも繰り返し熱いたたかひを伝えています。この日韓協定が今日の日本軍「慰安婦」問題や元徴用工問題の未解決につながっています。さらに70年代には、朴正熙独裁政権とたたかう韓国民衆との連帯、金大中氏拉致事件での主権蹂躪や軍事政権支援の日本政府への抗議、日本人男性のキーセン買春ツアー反対、80年代には、全斗煥政権による金大中氏への厳罰と弾圧に各地からいっせい抗議、歴史教科書改ざん反対、90年代から今日まで続く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へハルモニを迎えた集会開催や韓国へのスタディツアー、原水爆禁止世界大会での交流など、多くの活動の積み重ねがあります。

非核・平和めぐる新しい局面での私たちの活動

昨年6月、新婦人は「米朝首脳会談を心から歓迎します 日本政府は今こそ平和の推進へ役割発揮を」と会の声明を出しました。今日の新しい情勢のもとで、日本政府に対して、非核・平和、ジェンダー平等の朝鮮半島、北東アジアの実現へ

役割を果たすよう、次のことを求め、活動しています。

- ①非核・平和の朝鮮半島をめざすこの間の米朝・南北の合意を促進し、諸問題の包括的解決と国交正常化をめざす「日朝平壤宣言」実行など自主的な平和戦略をもって外交努力を強めること。信頼を損なう軍事的対応は厳にいましめること
- ②侵略戦争・植民地支配の過去の誤りに正面から向き合い、反省すること。このことなしに諸国との信頼関係も未来志向の友好関係も築けないこと。9条改憲、沖縄新基地建設や基地強化など戦争する国づくりをやめ、核兵器禁止条約批准はもとより核兵器廃絶の実現へ世界に積極的に働きかけること
- ③日本軍「慰安婦」問題の一刻も早い解決へ、誠実な謝罪と賠償など、被害者の尊厳が回復し、被害者が受け入れられる対応を急ぐこと
- ④歴史の真実を次世代に継承する教育を徹底し、事実を反するヘイトや排外主義を政権自らがいましめ、厳しく対処すること
- ⑤女性の人権、ジェンダー平等、平和施策をはじめ、あらゆる政策決定の場に女性が参加すること。セクシュアルハラスメント禁止法の制定、選択的夫婦別姓制度など民法改正、女性差別撤廃条約選択議定書の批准、刑法の性犯罪要件改正を行なうこと

ジェンダー平等の遅れ克服と「慰安婦」問題の解決

今年女性差別撤廃条約が国連で採択されて40年です。ジェンダー平等での遅れは、世界149カ国中、日本110位、韓国115位で、その克服は日韓共通の課題です。日本でも長いたたかひのうえに今、#MeToo運動とも連帯し、セクハラや性暴力、性差別に抗議の声をあげ、社会問題化させています。

この点でも最大の障害が安倍政権です。ウソとごまかしが常套手段、その最たるものが「女性活躍」政策です。女性を安上がりの使い捨て人材としてしか見ず、女性労働者の55.8%が非正規労働者で、「女性の貧困」「子どもの貧困」を深刻化させています。閣僚自らがセクハラ被害者をおとしめる言動で2次被害を広げ、「LGBTは生産性がない」という自民党議員の暴論を擁護する人権敵視の政権です。政治分野の男女共同参画推進法ができて初の4月の都道府県議選挙で、自民党の女性当選者はわずか3.5%とまったくやる気がなく、ちなみに最高は共産党の51.5%です。女性の活躍を阻む安倍政権の退陣こそが、ジェンダー平等へとすすむ近道です。

日本の女性運動が、自身の課題として、どうしても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が、日本軍「慰安婦」問題です。2015年の日韓合意は、それまで頑なに「解決済み」としてきた安倍政権が「心からおわびと反省の気持ちを表明」したはずでし

た。しかし、新婦人が会の態度表明で指摘したように、被害者ぬきにすすめられ、「最終的、不可逆的に解決」されるかは被害者や国際社会が受け入れるかどうかです。10億円拠出は賠償ではないため被害者の名誉と尊厳の回復にならず、また、少女像撤去の条件に要求するなどの重大な問題がありました。その後の事態は、この懸念どおりとなりました。日本政府は「おわびと反省」どころか、合意直後の国連女性差別撤廃委員会で「強制連行はなかった」「性奴隷は事実と反する」（16年2月）と発言し、委員会から厳しい批判の勧告がだされました。安倍政権はこれまでも「河野談話」をなきものにしようと「検証」などさまざま画策しましたが、それらはことごとく失敗し、最後には「継承する」と言わざるを得ない状況もつくっています。

にもかかわらず、2018年の韓国政府の新しい方針と「財団」解散発表をめぐって、安倍政権の対応と大手商業メディアの報道は、韓国バッシング一色で、さらに排外主義をあおる論調の跋扈など、異様な事態が続いています。

今年も高齢の被害者の訃報が続き、解決は待ったなしです。新婦人は、日本政府が一日も早い問題の解決に踏みだし、メディアや教育が歴史の真実に立脚し積極的役割を果たすことを強く求め、そのためにも、参院選で安倍政権と9条改憲をともに葬り去るため、全力をあげています。

草の根からの運動—新婦人の組織の特徴生かして

新婦人は、平和とジェンダー平等めざし、女性のどんな要求もとあげて、運動している女性団体です。昨年来、熱中症対策として小中学校の教室へのエアコン設置に817億円の緊急予算措置を国にとらせ、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大手3社が成人誌（ポルノ雑誌）撤去を表明するなど、運動の大きな成果が相次ぎました。子ども医療費の無料化を求める運動は50年間継続してとりくみ、全自治体が助成措置をとり、年々拡大させています。

こうした運動ができるのは、新婦人が全国がひとつになって力をあわせて行動できる組織をもっているからです。新婦人は、中央本部、全国47の全都道府県本部、自治体の半分に900の支部、地域や職場に8600の班があり、週刊で発行する新婦人しんぶんで情報や活動を交流しています。みんなの「困った」「おかしい」を出し合い、新婦人しんぶんを読んで話し合い、手づくりのチラシを年間1200万枚配布し、SNSでも発信しています。こうした活動を支えているのが、月900円の会費とカンパによる自主財政です。

2003年に国連の経済社会理事会の特別協議資格をもつNGOに認証され、毎年の国連女性の地位委員会に意見提言し、傍聴しています。安全の願いから生れたレイラ化粧品1本につき1円積み立てる「女性平和基金」で、韓国をはじめ世界

非核・平和のための日韓国際フォーラム

の女性活動家を毎年、原水爆禁止世界大会などに招き、交流しています。

今日の交流を機に、非核・平和、ジェンダー平等の朝鮮半島、北東アジアの実現のために、いっそう日韓女性の連帯と運動が前進することを願い、発言とします。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글로벌 젠더규범

女性・平和・安保に関するグローバルジェンダー規範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ゾ・ヨンスク 韓国女性団体連合 国際連帯センター 所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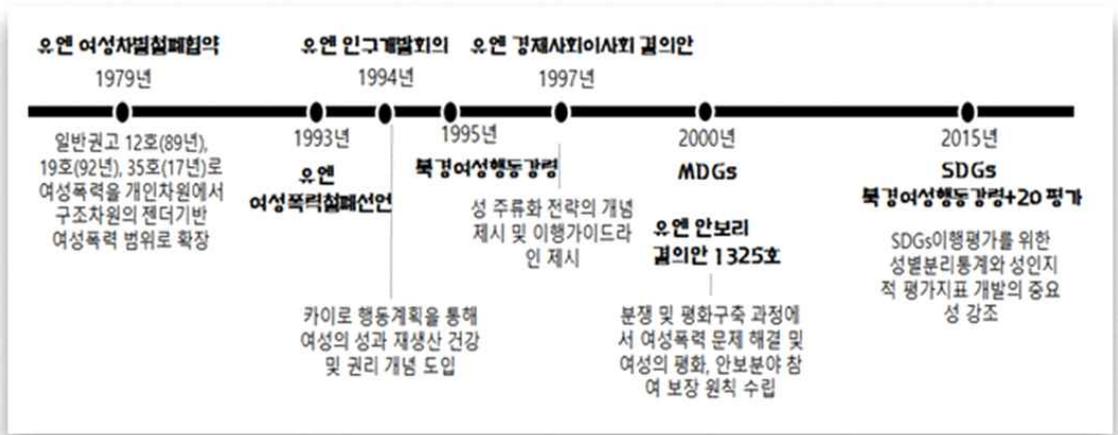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글로벌 젠더규범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1.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1325결의안과 평화·안보 의제의 성 주류화 이행과제

- 1995년 유엔 제4차 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여성선언 및 여성행동강령은 모든 유엔회원국에게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인 성 주류화(mainstreaming gender)의 이행을 요구함. 이후, 북경여성행동강령의 12개 주요관심분야 중 하나인 여성과 무력분쟁 분야에서 성 주류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여성평화 운동가들 사이에서 제기되면서 ‘여성과 국제 평화와 안보 연합(The Coalition on Women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이 결성되었고, 이들에 의해 유엔안보리를 향한 로비가 진행됨.
- 90년대에 “전쟁의 수단으로써의 성폭력”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로 대두하였지만, 문제해결과정에서 당사자인 여성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성평등 관점이 분쟁해결 및 평화건설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한 여성평화 운동가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인 유엔안보리는 2000년 10월 31일 여성, 평화 및 안보에 관한 오픈 세션을 개최하여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1325결의안(이하 안보리1325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 여성·평화·안보의 성 주류화를 향한 유엔의 글로벌 규범 전개과정



- 안보리1325결의안은 분쟁 예방, 분쟁 해결, 평화 유지 및 평화 구축과정에서 여성이 해야 할 혹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였으며, 여성의 완전한 참여와 포함은 지역 사회 내의 평화와 안전을 성취하고 유지하는 모든 면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함. 또한 모든 행위자들에게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모든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 젠더 관점(gender perspectives)을 포함할 것을 촉구함. 또한 분쟁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여성과 소녀들을 모든 유형의 성에 기반한 폭력, 특히 강간 및 폭력적인 충돌 시 특히 널리 퍼진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함.
- 안보리1325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참여(participation), 보호(protection), 예방(prevention), 구호 및 복구(relief and recovery)의 4개로 구성되었으며, 뒤이어 이행을 가속화하거나 또는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후속결의안이 2019년 5월 현재 8개 채택되어 현재 총9개의 여성평화안보 관련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됨.

※ 안보리1325결의안의 4대 영역(pillars)

- ① 참여(participation): 국가, 지역 및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모든 의사 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가시킬 것을 촉구. 갈등의 예방, 관리 및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 평화 협상, 평화유지활동에 여성참여를 요구함.
- ② 보호(protection): 난민 캠프와 같이 긴급 상황과 인도주의적 상황을 포함하여 성과 젠더에 기반한 폭력(sexual and gender based violence, SGBV) 으로부터 여성과 소

- 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요구함.
- ③ 예방(prevention): 국제법 위반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한 개입 전략을 개선 할 것을 촉구. 국내법에 따라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역 여성 평화 운동 및 분쟁 해결 프로세스를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젠더화된 접근법(gendered approaches to reducing fragility)” 채택을 요구함.
 - ④ 구호 및 복구(relief and recovery): 난민 캠프의 민간인 및 인도주의 지원의 본질을 존중하고 난민 캠프 및 정착촌 설계에 여성과 소녀들의 필요를 고려하는 등 젠더 렌즈(gender lens)를 통해 국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호 및 복구조치 진행을 요구함.

※ 안보리1325결의안과 후속결의안 (총9개)

결의안(년도)	유엔안보리 결의안 주요내용
1325(2000)	• 평화협상/인도주의지원/평화유지활동/분쟁 후 평화구축 및 거버넌스 등 모든 과정에 젠더관점 포함과 여성참여 중요성
1820(2008)	• 전쟁수단으로 자행된 성폭력이슈를 평화안보 아젠다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 확인
1888(2009)	• 분쟁관련 성폭력이슈 대응 팀에 젠더전문가를 포함시켜 성폭력에 대한 대응강화 촉구
1889(2009)	• 1325 모니터링과 평가지표 개발 촉구 • 유엔사무총장으로 하여금 평화건설과정 시 여성참여 현황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토록 함
1960(2010)	• 분쟁 하 성폭력에 관한 모니터링과 보고 메커니즘 강조
2106(2013)	• 분쟁 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여성의 정치적/경제적 세력화 위한 노력 강조
2122(2013)	• 여성평화안보 아젠다 이행이 지체되고 있음에 우려 표명 • 국제적 평화안보문제에서 성평등과 여성 세력화가 핵심과제로 포함되어야 함 강조 • 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의 특성을 고려한 안보리 활동 강조
2242(2015)	• 비공식 전문가 그룹의 활동 강조 • 재정과 제도개혁을 포함한 지속적 이행지체 문제 해결노력 촉구 • 폭력적 극단주의와 대테러활동에 여성평화안보 아젠다 통합요구 • 안보리의 여성평화안보 관련 활동방식 개선촉구
2467(2019)	• 남녀 모두에 대한 피해자 중심주의(survivor-centered approach), 피해자를 위한 지원정책의 강화, 남성피해자 지원 및 모니터링과 보고 시 남성피해자 고려 • 분쟁 하 성폭력 문제 대응에서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돌봄서비스 (women's right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care) 지원에 대한 미국반대

2. 2020년 북경여성행동강령 25주년과 안보리1325결의안 20주년 평가

- 2019년 3월 개최된 제63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63)에서는 2020년 예정된 북경여성행동강령 25주년과 1325결의안 20주년을 준비하는 “여성·평화·안보 행동의 가속화(The Road to 2020: Accelerating Action on Women, Peace and Security)”를 선포함. 특히 여성참여 및 젠더 관점이 평화협상과정, 인도주의 지원활동, 평화유지활동, 분쟁 후 평화 구축 및 통치

전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글로벌 규범을 지키지 않는 각국에 대해 ‘이행 격차를 줄여야 한다(close the implementation gap)’ 라는 요구가 제기됨.

- UN Women의 통계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중재(mediation) 책임자의 단 2%, 평화협상 대표 중 단 8% 만이 여성이며, 특히 시리아, 예멘 등에서 진행된 평화회담과정에서 여성은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분석을 제기 하면서, 1325 결의안 20주년을 앞두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6개 문제영역을 제시함.

- ① 시민사회와 여성인권옹호자에 대한 보호 (protecting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and civil society)
- ② 여성·평화·안보 아젠다에 대한 재정 지원의 확대 (expanding financing for the women, peace and security agenda)
- ③ 평화유지활동 관련 제복을 입은 여성의 수를 증원 (increasing the number of women in uniform)
- ④ 분쟁회복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력 확보를 촉진 (promoting women's economic recovery in post-conflict contexts)
- ⑤ 젠더 응답적인 분쟁 분석과 기획의 표준화 (standardizing gender-responsive conflict analysis and planning)
- ⑥ 젠더 포괄적인 평화 과정과 협상의 촉진 (promoting gender inclusive peace processes and negotiations)

- 2017년 OECD/DAC(개발원조위원회)는 분쟁으로 인해 취약해진 국가의 성 평등과 여성세력화를 위한 공여국의 과제를 연구해서 다음과 같은 권고를 제기함.

- ☞ 취약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 평등 관점 변화가 필요, 즉 ‘변화의 주체로서의 여성’이 강조되어야 함.
- ☞ 수동적 희생자나 수혜자가 아닌 평화구축 및 국가건설의 적극적인 행위자인 여성이 정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지원과 역량강화 요구됨.
- ☞ 사회규범을 포함한 불평등한 젠더 권력관계와 취약성의 관계에 대해 초점을 두어야 함. 젠더규범, 특히 남성의 행동규범 개선노력 강조되어야 함.
- ☞ 젠더 불평등이 갈등과 취약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젠더-분쟁-취약성 사이의 모든 연결 고리를 파악한 후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정책프레임을 형성해야 함.
- ☞ 젠더 불평등-분쟁-취약성을 촉발시키는 권력 관계를 이해하도록 젠더 전문가와 협력해야 함.

- ☞ UN 안보리결의안 1325 국가 행동 계획(NAPs)과 평화 및 안보에 관한 국가기관 전반에 걸친 프레임과 거버넌스 참여자, 전문가 사이의 통합성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함.
- ☞ ODA 공여국과 수원국의 UNSCR 1325 NAP 활동을 효과적으로 연계해야 함.

- 여성평화안보 분야의 성 주류화를 이행한 대표적인 국가인 스웨덴은 2014년부터 페미니스트 외교정책(Feminist Foreign Policy)에서 제시된 7대 목표를 이행하고 있음.

- ☞ 목표1: 모든 여성과 소녀들이 인권을 완전히 향유하도록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by all women and girls)
- ☞ 목표2: 모든 여성과 소녀들이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Freedom from physical, mental and sexual violence for all women and girls)
- ☞ 목표3: 분쟁예방, 분쟁해결, 분쟁 후 평화 건설과정에 여성과 소녀들이 참여하도록 (Participation of women and girls in preventing and resolving conflicts and post-conflict peace building)
- ☞ 목표4: 여성과 소녀들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치적 참여와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Political participation and influence of women and girls in all areas of society)
- ☞ 목표5: 모든 여성과 소녀들이 경제적 권리와 역량강화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Full enjoyment of economic rights and empowerment of all women and girls)
- ☞ 목표6: 여성 및 소녀들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of women and girls)
- ☞ 목표7: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을 지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스웨덴 외교부 활동 (Swedish Foreign Service internal activities support and advance the policy)

3. 안보리1325결의안의 성 주류화 이행을 위한 한·일 여성시민사회의 과제

- 한국은 2014년, 일본은 2015년 안보리1325결의안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이하 NAP)을 채택함. 이는 2018년 12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엔회원국 중 안보리1325결의안의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P)을 채택한 79개국(40%) 중에 한국과 일본이 포함되었음을 말해주지만, NAP를 채택한 국가 중에서 이행모니터링과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34개국(43%)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무엇보다도 분쟁 하 성폭력과 젠더 권력관계와의 연계성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분쟁해결과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에 관한 사회적 인정(recognition)을 기반으로(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여성참여와 젠더관점 통합을 위한 활동보장), 여성참여 및 젠더관점 크로스커팅을 지속적으로 담보하는 여성평화운동의 활성화 요구됨.

- 2019년 5월 현재부터 2020년까지 2년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는 북경여성행동강령 25주년과 안보리1325결의안 20주년을 기념하면서 유엔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여성인권 규범에 따른 여성·평화·안보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과정에 한국과 일본의 참여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1979), 유엔인구개발회의 행동프로그램(ICPD PoA 1994), 북경여성행동강령(BPfA 199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5) 등 글로벌 성평등 규범 속에 포함된 여성평화안보 아젠다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여성평화운동전략의 수립이 요구됨. 현재 한중일 동북아 차원의 북경여성행동강령 25주년 기념 토론회가 8월 12~13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임.
- 특히 OECD/DAC 회원국이자 ODA 공여국인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차원에서 분쟁 하 성폭력 방지와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인도주의 지원사업과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할 성평등 전문가 인적 자원(풀)을 양성해야 함. 현재 한국은 외교부 산하에 여성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분쟁 하 성폭력 방지를 위한 여성평화 이니셔티브”를 구성해서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사업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과정에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글로벌 규범에서 제시된 분쟁 하 성폭력 방지 및 여성참여와 젠더관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女性・平和・安保に関するグローバルジェンダー規範

(ゾ・ヨンスク 韓国女性団体連合 国際連帯センター 所長)

1. 女性・平和・安保に関する国連安保理1325決議案と平和安保議題の性主流化移行の課題

- 1995年の国連第4回女性会議で採択された北京の女性宣言と女性の行動規範は、すべての国連加盟国に性平等を実現するための戦略的な性主流化

(mainstreaming gender) の移行を要求した。以降、北京の女性行動規範の12の主な関心分野の一つである女性と武力紛争の分野で性主流化が進んでいないという批判が女性平和運動家たちの中で提起され、「女性と国際平和と安保連合(The Coalition on Women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が結成され、国連安保理に向けたロビーが進んだ。

- 90年代に「戦争の手段としての性暴力」の問題が国際社会の問題として台頭したが、問題の解決の過程で当事者である女性の参加が保障されておらず、結果的に男女平等の観点が紛争解決と平和構築のプロセスに反映されなかったと批判した女性平和運動家たちの問題提起を受けた国連安保理は、2000年10月31日、女性、平和および安全保障に関するオープンセッションを開催し、「女性の平和安保に関する国連安保理1325決議（以下安保理1325決議）」を全会一致で採択した。
- 安保理1325決議案は、紛争予防、紛争解決、平和維持と平和構築の過程で女性がしなければならない、あるいは、既に実行している重要な役割を認めており、女性の完全な参加と包含は、地域社会の平和と安全を達成し維持するすべての面で重要なものとみなされる。また、すべての行為に女性の参加を拡大し、すべての国連平和維持活動にジェンダーの視点を含むことを促す。また、紛争関連の利害関係者に女性と女児のすべてのタイプの性ベース暴力、特にレイプと暴力的な衝突の時、特に蔓延されている性暴力から女性を保護するための特別措置をとるよう要求した。
- 安保理1325決議案の主な内容は、参加、保護、予防、救援と復旧の4つで構成され、続いて移行を加速したり、または内容を補足するための後続の決議案が2019年5月現在8つが採用され、現在9つの女性の平和安保関連決議案が国連安保理で採択された。

※ 安保理1325決議案の4大領域(pillars)

- | |
|---|
| <p>① 参加(participation): 国家、地域、及び国際機関を含むすべての意思決定レベルでの女性の参加を増加させることを促す。紛争の予防、管理、およびトラブルシューティングのためのメカニズムは、平和交渉、平和維持活動への女性の参加を要求。</p> <p>② 保護(protection): 難民キャンプのように緊急事態の人的状況を含む性とジェンダーに基づく暴力から女性と少女を保護するための特別の措置を要求。</p> <p>③ 予防(prevention): 国際法違反に責任がある人を起訴することを含む、女性に対する暴力</p> |
|---|

の予防のための介入戦略を改善することを促し。国内法に基づいて、女性の権利を強化し、地域の女性平和運動と紛争解決のプロセスをサポートする必要がある、そのために「脆弱性を低減するためのジェンダー化されたアプローチ」の採用を要求。

- ④ 救援と復旧(relief and recovery): 難民キャンプの民間人と人道支援の本質を尊重し、難民キャンプや集落の設計に女性と女兒の必要を考慮するなどジェンダーレンズ (gender lens) を介して、国際危機を解決するための救済と回復措置進行を要求。

2. 2020年北京女性の行動規範25周年と安保理1325決議案20周年の評価

- 2019年3月開催された第63回国連女性の地位委員会は、2020年に予定された北京の女性の行動規範25周年と1325決議案20周年を準備する「女性・平和・安保行動の加速」を宣言した。特に女性の参加とジェンダー視点が平和交渉プロセス、人道支援活動、平和維持活動、紛争後の平和構築と統治全般に含まれるべきだと明示したグローバル規範を守らない各国に対して「移行のギャップを減ら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要求が提起された。
- UN Womenの統計によると、1990年から2017年まで仲裁(mediation)責任者のただ2%、平和交渉代表の中でただ8%だけが女性であり、特にシリア、イエメンなどで行われた平和会談の過程で、女性は完全に排除された分析を提起し、1325決議案20周年を控え、迅速な対応が要求される6つの問題領域を提示した。

- ①市民社会と女性の人権擁護者の保護
- ②女性・平和・安保アジェンダに対する財政支援の拡大
- ③平和維持活動に関連制服を着た女性の数を増員
- ④紛争回復過程で、女性の経済力の確保を促進
- ⑤ジェンダー応答的な紛争の分析と企画の標準化
- ⑥ジェンダー包含的な平和過程と交渉の促進

- 2017年OECD/DAC(開発援助委員会)は、紛争のため脆弱になった国の男女平等と女性の勢力化のための供与国の課題を研究して、次のような勧告を提起した。

- ☞ 脆弱な状況に適切に対応するためには男女平等の観点変化が必要とする、すなわち、「変化の主体としての女性」が強調されるべきこと。
- ☞ 受動犠牲者や受益者ではなく、平和構築と国家建設の積極的な行為者である女性が政治的役割が実行できるように、女性のためのサポートと能力強化が求められる。
- ☞ 社会規範を含む不平等なジェンダーの権力関係と脆弱性の関係に焦点をおくこと。ジェンダー規範は、特に男性の行動規範改善努力を強調すること。
- ☞ ジェンダー不平等が葛藤と脆弱性をどのように形成するか、ジェンダー-紛争-脆弱性との間のすべての接続リングを把握してこれに対する対応のため政策フレームを形成すべき。
- ☞ ジェンダー不平等-紛争-脆弱性を触発させる力関係を理解するために、ジェンダーの専門家と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 ☞ UN安保理決議1325国の行動計画(NAPs)と平和と安保に関する国家機関全体のフレームとガバナンスの参加者は、専門家間の統合性と協力を強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
- ☞ ODA供与国と授援国のUNSCR 1325 NAP活動を効果的に連携すること。

- 女性の平和安全保障分野の性主流化を実施した代表的な国であるスウェーデンは、2014年からフェミニスト外交政策で提示された7つの目標を達成している。

- ☞ 目標1: すべての女性と少女が人権を完全に享有するように
- ☞ 目標2: すべての女性と少女が身体的、精神的、性的暴力からの自由
- ☞ 目標3: 紛争予防、紛争解決、紛争後の平和構築の過程に女性と少女が参加するように
- ☞ 目標4: 女性と女兒が社会のあらゆる分野での政治的関与と影響力を発揮するように
- ☞ 目標5: すべての女性と少女が、経済的権利と能力強化を完全に享受するために
- ☞ 目標6: 女性と少女の性と再生産健康と権利
- ☞ 目標7: フェミニスト外交政策を支持して発展させるためのスウェーデンの外交部の活動

3. 安保理1325決議案の性主流化を実施するための日韓女性市民社会の課題

- 韓国は2014年、日本は2015年安保理1325決議の移行のため国家行動計画(National Action Plan、以下NAP)を採用した。これは2018年12月現在、国連加盟国の中で安保理1325決議の移行のための国家行動計画(NAP)を採用した79カ国(40%)の中に、韓国と日本が含まれたことを語ってくれるが、NAPを採用した国の中で実施モニタリングと評価を実施している34カ国(43%)には含まれてないと言える。何よりも、紛争の環境で性暴力とジェンダーの権力

関係との連携性に対する十分な分析がなされていない状態である。紛争解決と平和構築の過程で、女性の役割に関する社会的認定(recognition)をベースに(政策的、財政的支援を基盤にして女性参加とジェンダー視点統合のための活動保障)、女性の参加とジェンダー視点クロスカットを継続的に担保する女性平和運動の活性化が求められる。

- 2019年5月現在から2020年までの2年にわたって進められている北京の女性の行動規範25周年と安保理1325決議案20周年を記念して、国連主導で進められているグローバル女性の人権規範による女性・平和・安保のプロセスについての議論過程に韓国と日本の参加が必要である。そのためには、国連の女性差別撤廃条約(CEDAW1979)、国連人口開発会議の行動プログラム(ICPD PoA1994)、北京の女性行動規範(BPfA1995)、持続可能な開発目標(SDGs2015)などのグローバルな性平等規範の中に含まれている女性平和安保アジェンダの移行を監視し、評価するための、女性平和運動戦略の策定が求められる。現在、日中韓の北東アジア次元の北京女性行動規範25周年記念討論会が8月12～13日の両日、ソウルで開催される予定である。
- 特にOECD/DAC加盟国であり、ODA供与国である韓国と日本は、グローバルレベルで紛争があるところの性暴力の防止と女性の参加拡大のための人道支援事業と開発協力事業に参加する性平等の専門家の人的資源(プール)を養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現在、韓国は外交部傘下に「紛争環境での、性暴力防止のための女性の平和イニシアチブ」を構成して韓国の国際社会への人道支援事業および国際開発協力事業の過程で、女性の平和安全保障に関するグローバル規範で提示された、紛争環境での性暴力の防止及び女性の参加とジェンダー視点の拡大のために努力している。

한일 여성이 함께 하는 ‘가슴과 마음’의 평화운동

日韓女性が共にする「胸と心」の平和運動

장미란(한국YWCA연합회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チャン・ミラン(韓国YWCA連合会平和統一委員会委員長)

한일 여성이 함께 하는 ‘가슴과 마음’의 평화운동

장미란(한국YWCA연합회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1. 정부 간 불통不通에서 여성단체 사이의 대화對話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불행했던 관계의 역사가 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공동의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수준에서 평화와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세계적 수준에서 수많은 의견들이 교환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럴수록 직접 만나 생각을 나누는 일이 중요하다.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 각자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입장과 고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공감대 위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일 두 나라 정부 간 관계는 원만치 않다. 양국 정부 사이의 현안 문제 처리 방식들이 두 나라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부 민간 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고 교류하면서 시민 중심의 동북아시아 평화질서를 모색하는 일이 중요하다. 양국 간 평화를 저해하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평화를 위한 민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민간 여성단체의 역할이다.

2018년 한반도에 평화의 봄바람이 불어왔다. 남북 두 정상에 마주보고 앉아

새소리를 들으며 대화하는 장면을 본 사람들은 자기 눈을 의심했다. 너무 오랫동안 적대적으로 단절된 채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화로 가는 길은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았다. 우리는 실망했다. 그러나 그 실망은 예전과 같은 막막함은 아니었다. 평화의 단초를 이미 보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평화의 불씨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가?

2. 소극적 피해자에서 적극적 주체로

폭력의 피해자일수록 평화가 더욱 절실하다. 전쟁과 갈등 상황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과 성적 지배를 견디며 생명을 낳아 기르며 평화를 소망해 왔다. 여성과 생명과 평화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여성들의 축적된 삶의 경험과 인내의 역사는 여성들의 몸과 마음에 고스란히 새겨져있다. 생명을 품고 낳아 키우는 여성들은 정복과 지배의 논리를 넘어서 생명의 보호와 수호라는 원칙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여성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소극적 피해자’의 위치를 뛰어 넘어서 갈등을 중재하는 ‘적극적 주체’로 나선다면, 여성들이 가부장제 아래에서 ‘당연하게’ 저질러졌던 수많은 억압과 폭력과 모욕의 체험을 ‘평화를 만들어내는 에너지’로 전환시킨다면, 지나친 욕망으로 빚어진 온갖 불의와 폭력에 맞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일어난다면, 작은 평화의 불씨는 큰 불이 되어 평화의 세상을 이루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우리 여성들은 갈등을 힘과 무기와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렵지만 대화와 소통, 협력과 돌봄, 이해와 양보로 갈등을 해결하는 길을 추구한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이 한데 모여 이런 원칙으로 끈질기게 평화를 모색할 때 폭력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진정한 화해, 지속가능한 평화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3. 무감無感과 무관심에서 상대의 고통에 민감敏感한 관계로

진정한 연대는 자기의 고통과 억울함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서로를 잘 알고 하고 이해해 보려고 애쓰며 상대방의 고통의 깊이를 느끼려고 할 때 깊은 연대가 시작된다. 한일 여성연대는 두 국가 사이의 불행했던 과거를 제대로 인정하고 서로를 포용할 때 시작된다. 이제 우리는 상대방의 고통에 민감하게 공감하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피폭자들의 고통과 그 후손들에게로 이어지는 고통을, 숨죽이고 죄인처럼 평생을 살아와 몸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정신대 할머니들의 고통을, 강제로 징용되어 왜곡된 삶을 살아온 할아버지들의 억울함을, 도망가지도 못하고 숨지도 못한 채 고스란히 날벼락을 맞은 후쿠시마 원전 피해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며 일으켜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

4. 지배와 폭력의 세상에서 ‘가슴과 마음’의 운동으로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남에게 소중한 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빼앗지 않는 사회,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지 않는 사회, 폭력과 전쟁과 침략과 지배와 억압과 착취가 없는 사회, 약자를 조심스레 대하고 존중하는 사회, 핵 없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힘써 만들어가야 한다. 좋은 지배, 좋은 폭력, 좋은 전쟁, 좋은 식민주의, 좋은 침략, 좋은 핵은 없다. 모든 억압과 지배와 착취와 전쟁과 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나 사람에게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좋다한들 완전할 수는 없다. 약자들은 늘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늘에 있기가 쉽다. 약자들을 돕는 일이 우리들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모든 인간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류문명의 진보이다. 남의 소중한 것을 빼앗지 않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남과 나누며, 편을 가르고 담을 쌓기 보다는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낮설고 함께 하기에 거림직한 사람에게도 자리를 내어주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운동, 나는 이런 ‘가슴과 마음’ heart and mind에서 시작하는 운동’이 한국여성들과 일본여성들이 함께 손잡고 할 평화운동의 새 지평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평화운동은 처음에는 모두 함께 시작하지만 끝에는 오직 한 사람 밖에 남지 않는 운동이라는 말이 있다. 나는 우리 모두가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日韓女性が共にする「胸と心」の平和運動

チャン・ミラン(韓国YWCA連合会平和統一委員会委員長)

1. 政府間は不通でも女性団体間は對話で

韓国と日本の間には、不幸な関係の歴史がある。私たちは、過去の共通の歴史認識に基づいて、市民社会のレベルで平和と協力のための方策を模索するため、この場に集まった。私たちは、インターネットを介して世界レベルで多くの意見が交換さ

れている世界で生きている。なおさら直接会って考えを分かち合うことが大事である。顔を見合わせて座って、それぞれの胸の内を話すと、相手の立場や痛みをよりよく理解できるようになってそうされたコンセンサスの上で緊密に協力して連携することができる。

近年、日韓両国政府間の関係が円満ではない。両国政府間の懸案問題を処理する方法が両国国民の意思を十分に反映できていない。このような状況では、非政府民間女性たちが一堂に会し、意見を交わし交流しながら、市民中心の北東アジア平和秩序を模索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両国間の平和を阻害する政府の政策に反対し、平和のための民間の声を出すことが、民間の女性団体の役割である。

2018年、朝鮮半島に平和の春風が吹いてきた。南北両首脳が向かい合って座って鳥のさえずりを聞きながら会話する場面を見た人々は自分の目を疑った。あまりにも長い間敵対的に断絶されたまま生きてきたからだ。しかし、平和への道は思うように単純ではなかった。私たちはがっかりした。しかし、その失望は、かつてのような絶望ではなかった。平和の端緒をすでに見たからである。どのようにすれば、平和の火種を再び生かすことができるか

2. 消極的被害者で積極的主体として

暴力の被害者であるほど、平和がさらに切実である。戦争と葛藤状況の中で、女性は暴力や性的支配を耐え、生命を生み出し育て平和を願いつつ生きてきた。女性と生命と平和は一体を成している。女性の蓄積された生活の経験と忍耐の歴史は、女性の体と心にそっくりそのまま刻まれている。命を抱いて生み育てる女性は、征服と支配の論理を超えて生命の保護と守護という原則を追求せざるをえない。女性が恐怖を振り払い「消極的被害者」の位置を飛び越えて葛藤を仲裁する「積極的主体」に出たら、女性が家父長制の下で「当たり前」に行われた数多くの抑圧と暴力と侮辱の体験を「平和を作り出すエネルギー」に変換させると、あまりの欲望にもたらされたあらゆる不正と暴力に立ち向かって正義で平和な世界を作ると起こり立つと、小さな平和の火種は大きな火になって、平和の世界を成す大きな力になるだろう。私たち女性は、葛藤を力と武器と暴力で解決しようとしなさい。私たちは難しいが、対話と疎通、協力と面倒、ご理解と譲歩で紛争を解決する道を追いかける。世界の半分である女性たちが集まり、この原則でしつこく平和を模索するとき、暴力では到底到達できない真の和解、持続可能な平和が定着するだろう。

3. 無感と無関心から相手の苦痛に敏感な関係へ

眞の連帯は、自己の痛みと悔しさだけを話せず、お互いの痛みを理解しようとすることから始まる。お互いをよく知ろうとして理解してみようと努力しながら相手の痛みの深さを感じしようとするとき、深い連帯が始まる。日韓女性連帯は二国間の不幸な過去を正しく認識し、お互いを受け入れるときに開始される。もう私たちは、相手の痛み敏感に共感する運動を開始しなければならない。広島と長崎の被爆者の苦しみとその子孫につながる痛みを、息を殺して罪人のように生涯を生きて、体と心がとてつも無く傷つけられた挺身隊ハルモニたちの苦痛を、強制的に徴用され、歪曲された暮らしを生きてきたハラボジたちの悔しさを、逃げもせず隠れもできないまま、思いがけない災難を被った福島原発被害者の苦痛を分かち合い、お互いを慰め、起こし立てることを、私たちがやるべき最初のことである。

4. 支配と暴力の世界から「胸と心」の運動へ

しかし、私たちはそこからもう一歩進まなければならない。他人の大事なことを自分の利益のため奪わない社会、女性の体を道具化しない社会、暴力と戦争と侵略と支配と抑圧と搾取のない社会、弱者を慎重に配慮しながら尊重する社会、核のない持続可能な社会を努めて作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良い統治、良い暴力、良い戦争、良い植民地主義、良い侵略、良い核はない。すべての抑圧と支配と搾取と戦争と暴力は消えるべきである。

平和な世界を作るために法と制度を正さなければいけない。しかし、人間によって作られて維持されている法や制度がいくら良いとしても完全なものにはならない。弱者はいつも法の恩恵を受けられない陰にいるがちである。弱者助けを私たち生活の一部にするべきである。すべての人間を大切に思って尊重する方向に進むことが、人類文明の進歩である。他人の大切なことを奪うことなく、自分の大切なことを他人と分かち合い、組分けや堀積みよりは自分と異なって考える他人の話をまともに聞くし、不慣れで気にかかる他人にも席を出してくれて、心の扉を開けて、その苦痛を聞いてくれるの運動、私はこのような「胸と心」heart and mindから始まる運動が韓国女性と日本女性が一緒に手をつないで行う平和運動の新しい地平になることを願う。終りに平和運動は、最初は、すべて一緒に始めたが、最後には一人だけしか残らない運動という言葉がある。私は我々みんなが、その最後の一人になることを信じたい。

[Workshop④]

핵의 반인도적, 반환경적 영향

核の非人道的・反環境的 影響：被爆・核被害

좌장 : 우석균

- 1) 지구상에서 다시 피폭자를 만들지 않기 위하여 (후지모리 토시키, 일본피단협 사무차장)
- 2) 가해자 없는 피폭자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
- 3)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향해 (사쿠마 쿠니히코, 히로시마 피단협 이사장)
- 4) 피폭자에게 정의·보상을 (후지와라 히데후미, 후쿠시마생협병원 의사, 전일본민의원 피폭문제위원회 위원장)
- 5) 한국의 핵발전소 노동자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박찬호 반핵의사회 운영위원)
- 6)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따른 피폭 가능성관리기준과 한국내 원자력발전소 방사능폐기물 방출에 따른 주변주민피폭관리기준의 비교 (백도명 반핵의사회 공동대표)
- 7) 한국의 보건의료운동과 반전평화운동 (우석균 인의협 공동대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지구상에서 다시 피폭자를 만들지 않기 위하여

地球上でふたたび被爆者をつくらないために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 후지모리 토시키 사무차장

日本原水爆被害者団体協議会 藤森俊希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 포럼 분과회

2019년 5월 31일

일본피단협 후지모리 토시키

저희 일본의 피폭자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왔으며, 지구상에서 다시 피폭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만들려 힘 쏟고 있는지에 대해 한정된 시간 안에 간결하게 보고하겠습니다.

1945년 8월의 피폭 후 11년이 지나서 피폭자 단체인 일본피단협이 결성되기 까지 미국의 원폭피해 은폐정책과 그를 추종한 일본 정부로 인해 피폭자는 방치되어 왔습니다. 전국의 피폭자가 짊어진 고난과 원폭의 파괴 및 살상능력으로 인한 피해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피폭으로부터 7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유엔 하에서 핵무기금지조약이 여러 나라의 결의로 채택되고, 그 조약을 실효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핵 보유국이 모두 핵무기금지 조약을 거부해 모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핵무기금지조약을 채택하는 의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피폭자의 평균 연령은 82세를 넘었지만, 핵무기를 폐절하고 평화로운 지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표명합니다.

피폭자 단체인 일본피단협(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이 탄생한 것은 1956년 8월 10일, 제 2회 원수폭금지세계대회가 열린 나가사키에서였습니다.

결성대회선언인 ‘세계를 향한 인사’는 고난의 11년간을 돌이켜보면서 “이리하여 우리는 자신을 구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체험을 통해 인류의 위기를 구하자는 결의를 서로 맹세합니다”라고 소리 높여 표명했습니다. 그 이후 오늘날까지 63년간, 피폭자는 ‘자신을 구하’면서 ‘인류의 위기를 구하자’는 높은 결의를 바탕으로 운동의 계승 및 발전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

원폭증 인정 집단소송을 비롯, 피폭자의 병을 구해내려는 노력은 원래 정부가 맡아야 할 일이지만, 피폭자가 직접 집단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9년 8월 6일의 ‘원폭증 인정 집단소송의 종결에 관한 기본 방침에 관련된 확인서’에서 후생노동대신, 피단협과 원고단, 변호단은 ‘정기적인 협의의 장을 마련해 향후 소송의 자리에서 다툼이 필요하지 않도록 이 정기 협의의 자리를 통해 해결을 도모한다’고 명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피단협 결성 60년이던 2016년 4월, 피폭자의 결의를 표명하는 ‘히로시마·나가사키의 피폭자가 호소하는 핵무기 폐절 국제 서명’을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해 호소, 1억이 넘는 서명을 모아 말 그대로 핵무기 폐절이 실행되길 기대하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핵무기금지조약이 2017년 7월 유엔에서 채택되었고, 50개국이 비준서 등을 유엔에 제출해 조약이 발효되었습니다. 현재 23개국(5월 15일 현재)이 비준서 등을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것은 확실합니다.

한국에 계신 여러분도 각자 처한 사항은 다양할 것입니다. 서로 교류를 나누며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실현하는 데 함께해 나갑시다.

非核・平和のための日韓国際フォーラム 分科会

2019年5月30日

日本被団協 藤森俊希

私たち日本の被爆者が何をどのように生き、地球上でふたたび被爆者をつくら
ないために、核兵器のない世界をつくろうと力を注いでいることを、限られた時
間で、簡潔にご報告します。

1945年8月の被爆後11年にして、被爆者の団体、日本被団協を結成するまで、米国の原爆被害隠蔽政策と、それに追随した日本の政府によって被爆者は放置されて来ました。全国の被爆者が背負わされた苦難と、原爆の破壊・殺傷能力による被害をとうてい許すことはできません。

同時に、被爆から72年にして、初めて国連のもとで核兵器禁止条約が、多数の国の決意で採択され、その条約を実効あるものにする努力が世界で進行しています。その一方で、核保有国がいずれも核兵器禁止条約を拒否し、矛盾を生み出しています。ところが、米国では核兵器禁止条約を採択する議会が生まれていません。被爆者の平均年齢は82歳を越えています。核兵器を廃絶し、平和な地球をつくりだす努力を惜しまないことを重ねて表明します。

被爆者の団体、日本被団協（日本原水爆被害者団体協議会）が誕生したのは、1956年8月10日、第2回原水爆禁止世界大会が開かれた長崎でのことでした。結成大会宣言の「世界への挨拶」は、苦難の11年間を振り返ると同時に、「かくて私たちは自らを救うとともに、私たちの体験をとおして人類の危機を救おうという決意を誓い合ったのであります」と高らかに表明しました。以後、今日までの63年間、被爆者は、「自らを救う」とともに「人類の危機を救おう」という高い決意をもとに、運動の継承・発展に力をそそいできました。

原爆症認定集団訴訟をはじめ、被爆者の病を救い上げる努力は、本来政府が受け止めるべきことですが、被爆者が集団訴訟に取り組まざるを得ませんでした。2009年8月6日の「原爆症認定集団訴訟の終結に関する基本方針に係る確認書」で厚労大臣、被団協・原告団・弁護団は、「定期協議の場を設け、今後、訴訟の場で争う必要のないよう、この定期協議の場を通じて解決を図る」ことを明記したにも関わらず、訴訟状態がつづいています。

非核・平和のための日韓国際フォーラム

日本被団協結成60年にあたる2016年の4月、被爆者の決意を表明する「ヒロシマ・ナガサキの被爆者が訴える核兵器廃絶国際署名」を国内はもとより世界に呼びかけ、億を超える署名を集め、文字通り核兵器廃絶が実行されることを期しスタートしました。

核兵器禁止条約が2017年7月、国連で採択され、50カ国が批准書等を国連に提出することで条約が発効します。ただいま23カ国（5月15日現在）が批准書等を提出しており、今後も増えることは確実です。

韓国のみなさんも様々な状況があることと思います。お互いに交流しつつ、核兵器のない世界の実現に取り組みましょう。

가해자 없는 피폭자

加害者のいない被爆者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
社団法人韓国原爆被害者協会陝川(ハプチョン)支部
支部長 沈鎮泰(シム·진테)

가해자 없는 피폭자

한국원폭피해자는 일제 강점기시대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가 일본군 요새 지역과 군수품공장 등에서 강제 노역을 하던중 1945년 8월 6일 08시15분 히로시마와(44만) 3일후 8월9일11시02분 나가사키에(30만) 미군에 의하여 원폭이 투하되어 74만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그 중 한국인피해자도 10만(히로시마 7만 나가사키 3만 일본국 내무성 경보국자료)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우리 한국인피해자는 일본국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폭을 당했다. 그러나 7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첫째, 원폭을 조제 한 미국은 핵무기 실험을 통하여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서 왜 일본국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를 하여 인류사상 유례가 없는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 하게 한 것일까? 또한 전쟁에 광분한 일본군이 미국영토 진주만 전쟁에서 크게 패함으로써 일본국은 더 이상 전쟁의 기력은 없었을 것을 생각하며 핵무기의 원력은 열과 바람으로 폭발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08시15분 햇살이 떠오를 때와 11시02분 햇살이 하늘 중천에 있을 때 투하된 원자폭탄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의심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도 원자폭탄 피해자들에게 사죄 한번 한일 없으며 핵무기를 보유 한 나라이다. 이 세상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평화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원자폭탄 피해자들은 핵무기를 고철로 만들 때까지 핵무기조제 사용을 반대할 것이며 피해자에 대한 미국의 책임인정과 사죄, 배상을 요구할 것이다.

둘째, 전범국 일본은 자국의 원자폭탄 피해자들을 1957년부터 원호법을 적용하여 의료 혜택을 보게 하였다 그러나 재외피폭자는 제외하였다. 우리한국원폭피해자들은 27년 동안 일본국에 소송하여 통달402호 소송에 승소하여 2003년부터 진료비 명목이 있었으나 일본국 피해자와는 차별했고 끈질긴 소송으로 2016년부터 일본국으로부터 진료비 부담을 적용 받게 됐다. 억울한 것은 재판을 오랜 시간을 끌다보니 일찍 진료 한 번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영령들께 사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인 피폭자들은 피폭자인데도 피폭자건강수첩을 일본국에서 발급함으로써 너무나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건강수첩 발급을 받지 못하여 진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피폭자가 있으므로 이런 문제도 하루속히 풀어야 할 과제며 또한 전쟁 방지를 위해서는 일본정부 역시 한국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 반드시 사죄하고 배상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우리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국가가 빈약하여 남의 나라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가서 그들에게 맞아죽어도 항의할 곳 없는 나라 잃은 국민의 비참한 역사를 외면 한다면 어찌 국민이고 나라라 생각 하겠는가. 우리 10만의 원폭피해자들은 해방은 되었지만 전쟁은 대를 이어 가고 있다. 피폭74년 단 한 번도 실태조사 조차 한 사실이 없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경제자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한사람의 목숨도 안타까워하고 국가가 잘 챙기고 있는 것을 눈여겨 볼 수 있다. 당연한일이다. 그런데 국가가 왜 유독 원폭피해자만을 외면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2016년 원폭피해자특별지원법이 제정 되어 3년차 들었지만 원폭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되지 않고 있다. 우리 피폭자들은 일본국에 소송을 하였지만 국가는 돌보지 않았고 2011년도는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여 정신대 위안부 할머니와 똑같이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되었지만 행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 더욱이 1965년 한일수교가 되어 대일 청구권 5억불을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인수하여 모두 산업화에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당시 우리 피폭자들은 어느 종목에 의하여 수령하였는지 외무부에 문의하였으나 국가 기밀상 밝힐 수 가 없다하였고 일본국 오히려 외무상은 포함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2006년 노무현대통령 재직시에 일부만 밝힌 것이 정신대 사할린 원폭이 제외 되었다고 하였다. 국가가 국민을 37년간 속여 기만정책을 하였다. 피폭자도 국민이다. 국적 없는 피폭자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 5. 30.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지부장 심 진 태

加害者のいない被爆者

社団法人韓国原爆被害者協会陝川（ハプチョン）支部
支部長 沈鎮泰(シム・ジンテ)

韓国原爆被害者は、日帝強占期時代、強制徴用により日本に連れて行かれ、日本軍の要塞地域と軍需品工場などで強制労働をしていた中、1945年8月6日08時15分広島(44万)と 3日後の8月9日11時02分長崎(30万)に米軍によって原爆が投下され、74万の人的被害が発生した。そのうち、韓国人被害者も10万(広島7万、長崎3万、日本国内務省警保局資料)の被害者が発生した。

私たち韓国人被害者は、日本国の次に多くの人々が被爆にあった。しかし74年が過ぎた今でも韓国人原爆被害者に対する謝罪と賠償もなされないでいる。

まず原爆を製造したアメリカは、核兵器実験を通じて途方もない被害が発生するということを知りながら、なぜ日本国広島と長崎に投下をし、人類史上類例のない人的、物的被害を発生させたのだろうか？また、戦争に狂奔した日本軍がアメリカ領土の真珠湾を攻撃し、結果的に大きく敗れたことにより、日本国はこれ以上戦争への気力はなかったことを考えると、そして核兵器の原力は熱と風により爆発力があるということを考えて、08時15分、日差しが昇る時と11時02分、日差しが天の真ん中にある時に投下された原子爆弾を、被害者の立場から疑うほかはないだろう。

アメリカは今でも原子爆弾の被害者に謝罪を一度もしたことの無い、核兵器を保有している国だ。この世の中に核兵器が存在する限り平和はないと考えている。私たち原子爆弾被害者は核兵器を屑鉄にするときまで、核兵器の製造と使用に反対し、被害者に対するアメリカの責任認定と謝罪、賠償を要求するであろう。

二つ目に、戦犯国日本は、自国の原子爆弾被害者を1957年から援護法を適用して医療の恩恵を受けるようにしたが、在外被爆者は除外した。私たち韓国原爆被害者は、27年間日本国を相手に訴訟をし、402号通達国賠訴訟に勝訴し、2003年から診療費の名目があったが日本国被害者とは差別され、粘り強い訴訟により2016年より日本国から診療費負担を適用されることになった。くやしいのは、裁判に長い間時間がかかったために、先に診療を一度も受けることができずに亡くなった靈魂に謝罪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だ。また韓国人被爆者は、被爆者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被爆者健康手帳を日本国で発行するとひどく難しい手続きが

あるために、健康手帳発行を受けることができずに、診療の恩恵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気の毒な被爆者がいる。このような問題も一日も早く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であり、また戦争防止のためには、日本政府は韓国原爆被害者に対して必ず謝罪して賠償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る。

三つ目に、私たちの国家は国民を保護しなければならない責務がある。国家が貧弱で他国の戦場に強制的に連行され、彼らに殴り殺されても抗議するあてのない、国を失った国民の悲惨な歴史を無視するというならば、どうして国民であり自分の国と考えるだろうか。 私たち10万の原爆被害者は、解放はされたが戦争は代を継いでいる。被爆74年、ただの一度も実態調査さえ行った事実がない。もう我が国もある程度、経済的に自立したと理解している。今はひとりの命も惜しみ、国家がよく気にかけているのを目を留めることができる。当然のことだ。ところで国家がなぜ唯一原爆被害者だけを冷遇するのか理解し難い。 2016年に原爆被害者特別支援法が制定されて3年目に入ったが、原爆被害者のための実質的な支援はなされていない。私たち被爆者は、日本国に対し訴訟をしたが、国家は支援しなかったし、2011年度には憲法裁判所に提起して日本軍「慰安婦」ハルモニと同じように政府に責任があるという判決になったが、行政府が責任を負わず、今まで放置している。さらに1965年に韓日国交正常化がなされ、対日請求権5億ドルを日本から政府が受け取り、すべて産業化に寄与したと理解している。その当時、私たち被爆者はどの種目によって受領したのか、外務部に問い合わせをしたが、国家機密上明らかに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言われ、日本国大平外相は含まれたと話した。しかし2006年盧武鉉大統領の在職時に一部だけ明らかになったのが、日本軍「慰安婦」被害者、サハリン残留韓国人、韓国人原爆被害者が除外されたということだった。国家が国民を37年間だまし、欺瞞政策を行った。被爆者も国民だ。国籍ない被爆者として放置してはいけない。

2019. 5. 30.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향해

核兵器のない世界をめざして

사쿠마 쿠니히코 히로시마 피단협 이사장
佐久間邦彦 広島県被団協 理事長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향해 in 서울

사쿠마 쿠니히코 히로시마 피단협 이사장

저는 히로시마에서 온 사쿠마 쿠니히코라고 합니다.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지 올해로 74년이 됩니다. 피폭 시에 저는 생후 9개월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모습을 한참이 지나서야 어머니에게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폭심지에서 서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8월 6일 아침, 저는 폭심지 반대쪽 뒷마루에서 자고 있었고, 어머니는 집안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섬광이 번쩍여, 근처에 폭탄이 떨어진 건가 싶어서 어머니는 저를 업고 뒷산의 피난소로 향하던 도중에 ‘검은 비’를 맞았습니다. 피난소에는 머리카락 손발을 다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집에 돌아와 보니 폭풍으로 유리창은 날아가고, 벽은 무너지고, 기둥은 기울어 있었습니다.

단 한 발의 원폭으로 인한 폭풍, 열선, 방사능의 영향으로 1945년 말까지 돌아가신 분들은 14만 명 전후 가량입니다. 저는 폭심지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원폭의 영향은 받지 않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10살과 11살 때, 두 달 가량 죽 학교를 쉬었습니다. 간장과 신장에 각각 병이 생겼고, 몸이 나른하고 식욕도 없어 “난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머니는 피폭 직후부터 몸이 안 좋아졌지만, 영양실조인 저를 키워주셨습니

다. 1963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적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원인 불명의 병에 시달리며 입퇴원을 반복하다 1998년에 87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제 병도 검은 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1996년, ‘검은 비’라는 책을 읽은 뒤였습니다. 그 후에 제가 검은 비를 맞은 것을 증명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11년, 방사선영향연구소(방영연)가 “검은 비를 맞았다”고 답한 1만 3천 명의 데이터(1950년대에 조사)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중에 저희 어머니는 “YES”라고 대답했었기에 비로소 피폭자였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히로시마 피단협에서 피폭자 상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는 “자신이 피폭을 당한 게 아닌가” 혹은 “피폭 때문에 병에 걸린 게 아닌가” 하는 등의 상담을 듣습니다. 그중에는 암과 백혈병, 심근경색 등으로 돌아가신 분, 요양 중인 분, 그리고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되는 게 아닌가 고민하다 상담하러 오는 분도 있습니다. 피폭자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으며, 피폭 2세, 3세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74년 전의 사건은 절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원폭증으로 사람이 죽고 괴로워하는 현실을 보면 핵무기는 악마의 무기이자 절대악이며, 핵무기의 비인도성은 누가 봐도 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피폭자는 신속한 핵무기 폐절을 바라며, 핵무기를 금지, 폐절하는 조약을 맺을 것을 모든 나라에 요구하는 “히로시마·나가사키의 피폭자가 호소하는 핵무기 폐절 국제 서명”을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억 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에서는 작년 3월, 피폭자 7단체가 모여 피폭자 국제 서명 히로시마현 추진 연합회를 결성했습니다. 이 7단체 중에는 한국원폭피해자 대책특별위원회와 히로시마현 조선인 피폭자 협의회 분들도 참가하고 있으며, 이 “피폭자 국제 서명” 행동은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국제적인 활동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2017년 7월에는 핵무기금지조약이 유엔에서 채택되었습니다. 금지조약을 조기에 발효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서명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피폭자는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지구상에 1만 4천 발 여의 핵무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인류와 핵무기는 공존할 수 없다”는 점을 세계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노 모어 히로시마, 노 모어 나가사키, 노 모어 피폭자, 노 모어 워.

核兵器のない世界をめざして in ソウル

佐久間邦彦 広島県被団協 理事長

私は広島から来ました佐久間邦彦と申します。広島に原爆が投下されてから、今年で74年になります。被爆時、私は生後九か月でしたので、当時の様子を母から聞いたのはずっと後からでした。私の家は爆心地から西方約3kmです。

8月6日の朝、私は、爆心地と反対側の縁側で寝ており、母は屋内で洗濯中でした。突然閃光が走り、近くに爆弾が落ち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母は私を背負って裏山の避難所に向かう途中で「黒い雨」に濡れました。避難所には、頭や手足を負傷した人が横になっていました。しばらくして家に帰ると、爆風で窓ガラスは吹き飛び、壁は崩れ落ち、柱は傾いていました。

たった一発の原爆による、爆風、熱線、放射能の影響で、1945年末までに亡くなった人達は、14万人前後です。私は爆心地から遠距離だったので、原爆の影響は受けていないと思っていました。しかし、10才と11才の時、二か月位続けて学校を休みました。肝臓と腎臓をそれぞれ患い、体がだるく食欲もなく、「自分は死ぬ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した。

母は被爆直後から体調を崩しながらも、栄養失調の私を育ててくれました。1963年、乳がんと診断され、全摘出手術をしました。その後も原因不明の病に苦しみ、入退院を繰り返し、1998年87才で亡くなりました。

母が乳がんと診断され、私の病気も黒い雨が原因ではと思うようになったのは、1966年、「黒い雨」という本を読んだからです。その後、私が黒い雨を浴びたことを裏付ける事実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それは2011年、放射線影響研究所(放影研)が「黒い雨に遭った」と答えた1万3千人のデータ(1950年代に調査)を保管していたことがわかり、その中に私の母親は「YES」と回答していたことで初めて被爆者であったことを実感しました。

私は広島県被団協で被爆者相談活動をしています。「相談者は自分が被爆をし

たのではないか」とか「被爆が原因で病気になったのではないか」など相談を受けます。その中には今でも、癌や白血病、心筋梗塞などで亡くなる人、療養中の人、そしていずれ自分もそうなりはしないかということで悩み、相談に訪れる人もあります。被爆者は肉体的にも精神的にも苦しみの中で生きており、また被爆二世、三世への影響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悩んでいます。74年前の出来事は決して過去のことでありません。いまだに原爆症で亡くなり、苦しむ現実を見ると、核兵器は悪魔の兵器であり、絶対悪であり、核兵器の非人道性は誰の目から見ても明らかです。

私たち被爆者は、すみやかな核兵器廃絶を願い、核兵器を禁止し廃絶する条約を結ぶことをすべての国に求める、“ヒロシマ・ナガサキの被爆者が訴える核兵器廃絶国際署名”を2020年までに世界で数億筆の署名を集めようとよびかけています。

広島では昨年3月、被爆者7団体が集まってを結成しました。この7団体の中には韓国原爆被害者対策特別委員会と広島県朝鮮人被爆者協議会の方々も参加されており、この「ヒバクシャ国際署名」の取り組みは他の地域ではみられない国際的な活動だと言っても過言ではありません。

2017年7月には核兵器禁止条約が国連で採択されました。禁止条約の早期発効を目指すためにも署名活動が重要だと思います。

私達被爆者は世界中の多くの人達と共に、世界に1万4千発余りの核兵器が存在していることを真剣に受け止め、「人類と核兵器は共存できない」ことを世界に訴えたいと思います。

ノーモアヒロシマ、ノーモアナガサキ、ノーモアヒバクシャ、ノーモアウオー

피폭자에게 정의·보상을

被爆者に正義・補償を

후지와라 히데후미 후쿠시마 생협병원 의사,
 전일본민의련 피폭문제위원회 위원장
 藤原 秀文 (福島生協病院医師)
 広島中央保健生活協同組合理事長
 全日本民医連被ばく問題委員会委員長

비핵, 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 포럼
 분과회: [피폭자에게 정의, 보상을-한일 피폭자 교류회]

후지와라 히데후미(후쿠시마 생협병원 의사)
 히로시마 중앙 보건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전일본민의련 피폭문제위원회 위원장

저는 히로시마시의 피폭지에서 서쪽으로 약 1.7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후쿠시마 생협병원에 근무하는 내과의사입니다. 지금도 진료를 받는 환자의 약 3분의 1이 피폭자입니다. 저는 전후 11년이 지난 1956년에 히로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피폭 경험은 없으며, 피폭의 실상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 피폭자들이 전후에 태어난 제게 피폭 당시의 실상, 피폭 후의 어려움, 그리고 73년에 걸친 인생 역경을 진료 중에 조금씩 이야기해주십니다.

피폭 후 7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여러 기억을 잊지 못한 채 살고 계시는 피폭자의 실상과 그 기억을 소개하며, 핵무기의 비인도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먼저 피폭 당시의 실상에 대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8월 6일에는 히로시마,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라는 신형 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존속을 좌우하는 새로운 메시지였습니다.

피폭 후의 자료와 기록을 정리, 편집한 『원폭방사선의 인체영향(개정 제2판)』(2012년, 분코도)에 따르면, 1945년 12월까지의 ‘급성기 사망’은 히로시

마에서 11.4만 명, 나가사키에서 7.3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군인 및 히로시마에서 작업하던 조선인 사망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당시 4만 명이상이었다고 하며, 그 중 약 반이 사망했다고 추산됩니다. 당시 행정기능이 괴멸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앞서 말한) 『원폭방사선의 인체영향』에 따르면, 1년이 경과한 1946년 8월 10일 시점에서 히로시마에서는 118,661명, 나가사키에서는 73,884명이 사망했으며, 1986년 UN에는 ‘조기 사망자수’에 대해 히로시마가 14(±1)만 명, 나가사키가 7(±1)만 명이라고 보고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첫 2주 동안 사망자 중 88.7%가 사망하였으며, 대부분이 8주 이내에 사망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모두 폭심지에서 1.2km 거리에서의 사망률은 약 50%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주요 원인은 전체 사망의 20%가 폭풍으로 인한 척추, 골반골절 등의 외상, 20%가 방사선 장애, 60%가 열풍 및 2차적 화재로 인한 열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량의 반수 치사량(LD50)은, 골수선량으로 2.7~3.1Gy라고 봅니다. 즉 약 3~4Sv의 방사선에 노출된 피폭자의 50%는 방사선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이, 이 핵폭탄의 ‘비인도성’의 첫 번째 특징은 뭐니 해도 ‘순간·기습성’입니다. 지금까지의 전쟁에서 한 발의 폭탄이 100명 이상의 시민을 단번에 살육한 적이 있었을까요? 많아봤자 몇 명, 혹은 십 여 명이 고작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핵폭탄은 그 1만 배라는 어마어마한 위력으로 시민들의 목숨을 순식간에 빼앗을 수 있습니다. 핵폭탄의 비인도성이 바로 이런 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파괴력이야말로 핵보유국이 핵무기를 고집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무차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간·기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래되는 제2의 ‘비인도성’ 특징입니다. 원래 국가 간의 전쟁이란, 국가가 동원한 전투원이 서로에게 무력을 행사하고, 그 결과를 쫓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폭탄은 비전투원, 즉 시가지에서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시민들 머리 위에 투하되어 폭발했습니다. 고령자를 비롯해, 여성, 임산부, 학생, 아이들에 이르는 모든 비전투원을 대상으로 순식간에 무차별적으로, 대량 살육을 저질렀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자, 비인도성의 극치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 핵폭탄은 가족과 시민사회, 지역 커뮤니티를 뿌리째 파괴했습니다. 제3의 ‘비인도성’은 바로 ‘순간·기습성’과 ‘무차별성’을 배경으로 한 ‘근절성’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자는 한순간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독거 노인, 홀몸이 된 부부, 그리고 원폭 고아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시민사회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커뮤니티까지 파괴했고, 살아남은 피폭자를 받쳐줄 생활 기반은 뿌리째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그 기반을 잃었고, 이 세상에서 버림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폭자들은, 그 후 심신 양면에 다양한 후유장애를 갖고 수많은 역경을 겪으며 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빈곤과 생활고입니다. 목숨은 부지했지만 거처와 몸을 맡길 곳을 잃고 직장도 잃게 됩니다. 새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일하고 싶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게으르다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복귀할 기회를 빼앗깁니다. 그로 인해 무교육, 혹은 저교육이라는 교육 환경에 처하게 되어 계산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글자도 못 읽는 피폭자가 있습니다. 얼굴과 몸에 생긴 화상 흉터로 인해 결혼을 포기한 젊은 여성도 많이 있습니다. 방사능이 옳는다는 헛소문으로 인해 피폭자에 대한 수많은 차별이 생겨났습니다. 이로 인해 피폭당한 사실 자체를 숨기며 살아온 피폭자도 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 “날치기든 사기든 닥치는 대로 했다”고 솔직하게 말해준 피폭자도 있습니다. 살아남은 수많은 피폭자가 필사적으로 그 목숨을 연명해온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피폭자들은 지금도 그 핵폭탄으로 인해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남은 피폭자들은 그 후에 적극적으로 인생을 재건하려고 나섭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피폭 후 5년가량이 지나자 가족과 친구, 지인이 백혈병에 걸려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제4의 ‘비인도성’은 방사선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의 ‘계속성, 생애성’입니다. 백혈병과 암 질환이 발병할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피폭자는 평생 건강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피폭자의 ‘급성기 사망’ 중 대부분은 피폭 후 약 2개월 안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살아남은 대다수의 피폭자는 원폭의 공포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혹독한 상황이긴 해도 살아갈 방도를 찾아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합니다. 하지만 힘겹게 살아남은 피폭자는 그 후에도 방사선의 만발성 장애라는 것에 시달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핵폭탄 때문이라는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직 그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당시의 의학과 역학으로도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마침내 갑상선암과 유방암 등의 발병이 원폭 피해자에게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폭 방사선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고, 피폭자들도 서서히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폭자는 언제 암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을 떠안은 채 살아가게 됩니다. 피폭자는 암을 발견하면 원폭 때문이다, 원폭에 당해서 그렇다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암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 간염, 심근경색, 고혈압증, 만성 간장병(CKD) 등과 같은 비암질환의 발병도 비피폭자와 비교했을 때 유의차가 있다는 사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원폭 방사선은 평생에 걸쳐 피폭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피해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피폭자는 당시의 생지옥 같은 상황을 지금도 떠올리곤 합니다. 이것도 ‘계속성’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집에 깔린 부모 형제를 버리고 도망쳤다, 바닥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도망쳤다 등과 같이 자신의 행위를 속죄하고 싶어 하는 피폭자가 많이 있습니다. “친구는 죽고 난 살아남았다, 친구가 죽어서 난 살 수 있었다, 보기도도 처참한 친구의 모습’과 같이, 정말로 괴로웠던 체험이 70년이 지나서도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피폭자의 고통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상,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핵폭탄의 비인도성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저는 ‘순간·기습성’, ‘무차별성’, ‘근절성’, ‘계속성, 생애성’이라는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핵무기’는 핵 에너지를 이용한 엄청난 거대한 파괴력을 가지는 한편으로 대략의 방사선을 내뿜는 무기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무기에는 없는, 질적으로 차원이 전혀 다른 특수한 폭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로 봤을 때 인류의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비인도’적 무기입니다.

이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일본에 한정된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언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만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지구상 어디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용을 허용하지 않도록 국제 여론을 고양시켜야 합니다. 핵무기 금지조약이 여러 나라와 지역으로 확산되길 바랍니다.

인류를 위해, 핵무기를 이 세상에서 없애도록 합시다.

노 모어 피폭자.

非核・平和のための日韓国際フォーラム

分科会：「被爆者に正義・補償を一日韓被爆者交流」

藤原 秀文（福島生協病院医師）

広島中央保健生活協同組合理事長

全日本民医連被ばく問題委員会委員長

私は、広島市の爆心地から西側約1.7kmに位置する福島生協病院に勤務する内科医師です。今でも、診療を行っている患者さんのおよそ3分の1が被爆者です。私は、戦後11年、1956年に広島で生まれました。当然被爆体験はなく、被爆

の実相は知りません。しかし多くの被爆者の方が、戦後生まれの私に、被爆当時の実相、被爆後の苦難、そして73年にわたる人生の生き様を、診察中に少しずつ語ってくれます。

被爆後70年以上が過ぎ、今もなお様々な思いをはせて生き続けている被爆者の実相とその思いを紹介させていただき、核兵器の非人道性を明らかに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

まずは、被爆当時の実相です。ご存知の通り、8月6日に広島、9日に長崎と原子爆弾という新型爆弾が投下されました。それは人類の存続を左右するという新たなメッセージでした。

被爆後の資料や記録を整理編集した『原爆放射線の人体影響（改訂第2版）』（2012、文光堂）によれば、1945年12月までの「急性期死亡」は、広島で11.4万人、長崎で7.3万人と示されています。この中には、軍人および広島で作業をしていた朝鮮半島の人々の死亡者は含まれていません。当時4万人以上いたと言われ、その約半数が死亡したのではないかと推計されています。当時行政機能は壊滅しているため、正確な数字を示すことはできません。

また（前述の）「原爆放射線の人体影響」によると、1年が経過した、1946年8月10日時点で、広島では118,661人、長崎で73,884人の方が亡くなられたとあり、そして1986年の国連には「早期死亡者数」は、広島で14（±1）万人、長崎で7（±1）万人と報告されていると記載されています。初めの2週間で、88.7%の方が亡くなられ、ほとんどの方が8週以内に亡くなられています。広島、長崎とも爆心地から1.2kmの距離での死亡率は、ほぼ50%です。そして死亡の主因は、全死亡の20%が爆風による脊椎・骨盤骨折等の外傷であり、20%が放射線障害、60%が熱線ならびに二次的な火災による熱傷によるとされています。また放射線量としての半致死量（LD₅₀）は、骨髄線量として2.7~3.1Gyとされています。つまり、およそ3~4Svの放射線を受けた被爆者の50%は放射線死に至ったということです。

これまで示したように、この核爆弾の「非人道性」の第一の特徴は、何と言っても「瞬時・奇襲性」です。これまでの戦争で、一発の爆弾が果たして100人以上の市民を一気に殺戮することができたのでしょうか。多くても数人、あるいは十数人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その一万倍というとてつもない威力で市民の命を瞬時に奪うことを可能にしたのです。この核爆弾の非人道性がここに 있습니다。しかしこの巨大な破壊力こそが核保有国が核兵器に固執する理由があるのだと思います。

そして次に「無差別性」です。それは「瞬時・奇襲性」があるからこそもたらされる第二の「非人道性」の特徴です。本来、国家間の戦争というのは、国家が動員した戦闘員が互いに武力を行使して、その結果を追求するというものです。しかしこの核爆弾は、非戦闘員である、市街地に普通に生活をしている広島、長崎の市民の天空に投下され、炸裂しました。高齢者をはじめ、婦人・妊婦、学生・子どもまで、あらゆる非戦闘員を対象に、瞬時にして無差別・大量に殺戮しました。本当に痛ましいことであり、非人道性の極みと言う他ありません。

さらにこの核爆弾は、家族や市民社会、地域コミュニティを根こそぎ破壊しました。つまり第三の「非人道性」は、「瞬時・奇襲性」と「無差別性」を背景とした「根絶性」です。広島・長崎の被爆者は、多くの家族を瞬時にして失いました。その結果、独居老人、単身男性や未亡人、そして原爆孤児が多数発生しました。市民社会のシステムだけでなく、コミュニティも破壊し、生き残った被爆者を支える生活基盤は根こそぎ失われました。多くの市民が根絶やしにされ、この世から見捨てられました。こうした被爆者は、その後心身に様々な後遺障害を抱えました。そして多くの困難にみまわれながら生き続けることとなります。先ず直面する問題は、貧困と生活苦です。いのちは救われました、しかし住みかや身を寄せる場を失いました。そして職を失いました。たやすく新たな職に就くことはできません。働きたくても身体が動かないので怠け者扱いされます。子どもたちは就学復帰の機会が奪われます。結果的に無教育あるいは低教育という教育環境のもとにおかれ、ろくに計算もできない、字もまともに読めない被爆者がいます。顔や体にケロイドができ結婚をあきらめた若い女性も多くなりました。放射能がうつるといったデマが流れ、被爆者への様々な差別が生まれました。このため被爆した事実そのものを隠しながら生きていった被爆者もいます。生きていくために、「かっぱらいや人をだましたり、何でもやったよ」と正直に語ってくれる被爆者もいます。生き残った多くの被爆者が、死に物狂いで生きてきたことがよく分かります。被爆者は、あの核爆弾で人生が変えられたと今も思い続けています。

生き残った多くの被爆者は、その後前向きに人生の再興に歩み出します。しかしそんな中、被爆後5年くらいして、家族や友人・知人が白血病を発症し、この世を去っていきました。第四の「非人道性」は、放射線が人体に影響を及ぼすという意味での「継続性・生涯性」です。白血病やがん疾患が発症す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ことで、被爆者は生涯に亘る健康影響の危惧と不安を持ち続けることとなります。被爆者の「急性期死亡」の多くは、被爆後ほぼ2カ月でした。ここを生き延びた多くの被爆者は、原爆の恐怖はこれで終わったと思ったことでしょう。

それぞれ厳しい状況の中にあっても、生き延びるすべを見つけながら何とか生きていきました。しかしやっと生き延びた被爆者は、その後も放射線の晩発性障害というものに苦しめられていきます。当初被爆者は、それが自ら受けた核爆弾のせいだということはなかなか受け止めきれません。まだ周知されたものではなかったからです。当時の医学や疫学でも、まだ十分に解明されていませんでした。その後やがて甲状腺がんや乳がんなどの発症が、原爆被爆者に多いことが分かっていきます。原爆放射線が影響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てきて、被爆者の中でも徐々に認知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そして被爆者はいつがんが発症す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不安を抱えながら生き続けるようになりました。被爆者は、がんが見つかったとき、原爆にあったからだ、原爆にやられたと自覚するようになります。またがん疾患だけでなく、慢性肝炎、心筋梗塞、高血圧症や慢性腎臓病（CKD）などの非がん疾患の発症も、非被爆者との間に有意差があるということが、徐々に分かってきています。原爆放射線は生涯にわたり被爆者を苦しめ続けるということです。

しかし放射線による健康被害というだけでなく、被爆者は当時の生き地獄の様子が今もなおフラッシュバックしてくることがあります。これも「継続性」のひとつと言えると思います。家屋の下敷きになった親や兄弟を見捨てて逃げた、足もとで助けを求める人を無視して逃げたなど、自らの贖罪の念を引きずっている被爆者が多くいます。「友は死に、自分は生きた。友の死によって自らの生を得ることができた、見るも無残な友の姿」など、本当につらい体験が70年過ぎててもよみがえってきます。それは生き続ける被爆者の苦しみのひとつになっています。

以上、具体的な事例をもって、原子爆弾の非人道性を話してきました。

私は、「瞬時・奇襲性」、「無差別性」、「根絶性」、「継続性・生涯性」と4つにまとめました。「核兵器」は、核エネルギーを活用したとてつもなく巨大な破壊力を持つ一方で、大量の放射線を放つという兵器です。それはこれまでの兵器にない、全く質的に次元の違う特殊な爆弾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そしてその規模からして人類の存続そのものを脅かしかねない「非人道」的兵器です。

広島・長崎、日本に限った問題ではないはずです。いつこのようなことが起きても仕方がないという状況に至ることだけは絶対に避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地球上のどこにも核兵器を使用しない、させない国際世論の高揚が求められます。核兵器禁止条約が多く国や地域に広が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

人類のために、核兵器をこの世からなくしましょう。

ノーモア・ヒバクシャ。

한국의 핵발전소 노동자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韓国の核発電所(原発)労働者の 業務上疾病認定基準の問題点と改善方向

박찬호 반핵의사회 운영위원
朴贊浩(パク・チャンホ、反核医師会運営委員)

한국의 핵발전소 노동자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박찬호(반핵의사회 운영위원)

1. 핵발전소의 방사선 선량규제

한국에서 방사선 피폭 관련 영역은 핵발전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이 있다. 의료영역이나 각종 산업에서도 방사선 피폭 작업들이 존재한다. 방사선에 대한 선량규제는 이런 모든 영역에 모두 적용한다. 한국 정부는 대체로 ICRP의 권고를 그대로 반영한다.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별표1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선량규제는 ICRP의 90년 권고사항을 옮겨 놓은 것이다. 개괄적인 특징을 설명한다면 특정 수치를 허용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선량한도”와 “등가선량한도”라는 개념을 적용한다. 선량한도는 집단을 세 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각각 적용하는 데, 첫째와 둘째 범주가 노동자의 직업과 관련된 내용이며, 셋째 범주는 일반인에게 적용한다. 이들 세 범주의 집단에 대해 ‘수정체’와 ‘손 • 발 및 피부’에 해당하는 적용한도를 각각 별도로 지정하였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 한국의 선량규제(원자력법시행령 별표1)

번호	구분	유효선량한도	등가선량한도	
			수정체	손·발 및 피부
1	방사선작업종사자	연간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	연간 150	연간 500
2	수시출입자, 운반종사자 및 법 제96조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 등의 목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한 18세 미만인 사람	연간 6	연간 15	연간 5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람	연간 1	연간 15	연간 50

(단위 ; mSv,밀리시버트)

위의 표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연간’이라는 개념과, 선량한도 개념 자체에 있다.

‘연간’이라는 개념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위의 표 중에서 번호 2의 범주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2018년 12월에 4mSv에 피폭하고, 2019년 또다시 4mSv에 피폭했다면 불과 2달 만에 8mSv나 폭로된 것이지만, 이는 연간개념에서 봤을 때 선량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선량한도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허용기준치의 개념이 아니다. 방사선은 단 1mSv라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자의적인(=사회 • 경제적인) 기준에 따라 임의로 설정한 것이다. 때문에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선량한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단적인 근거로 일본에서는 위 3의 범주에 적용하는 선량한도를 20mSv로 규정한다.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무조건 수용하다보니 선량한도에 대한 국내의 토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한다.

2. 핵발전소 노동자의 직업병 인정기준

핵발전소 노동자가 작업 중 방사선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적용하는 직업병 인정기준에 대해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고시한 ‘방사선 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을(이하 ‘원안위 인정기준’) 우선 적용한다. 대개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업무상 질병 관련 기관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한국의 핵발전소 노동자에 대한 ‘방사선 직업병 인정기준’은 ‘원안위’에서 담당한다. 한국정부는 이를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 따른 안전강화대책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과연 이것이 노동

자에게 유리한 것인지는 평가해 봐야 한다.

‘원안위 인정기준’은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한다. 이의 핵심내용은 5가지 내용이다.

- 1) ‘인과확률’이라는 계산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 2) 대량의 방사선에 피폭한 경우(작업기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음)
- 3) 백혈병의 경우엔 작업력 2년이 경과하고 인과확률이 33% 이상일 때 인정
- 4) 총 16개의 고형암을 나열하고 작업력 5년이 경과하고 인과확률이 50% 이상일 때 인정
- 5) 3개의 고형암은 방사선 직업병에서 제외함

이상의 ‘원안위 인정기준’은 선량규제가 ICRP의 권고사항을 그대로 수용한 것과 같이, ICRP의 철학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방사선 관련 직업병 인정기준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ICRP라는 조직과 이들의 권고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ICRP라는 조직의 설립배경이나 권고사항의 변화과정을 모르고서는 핵 개발세력들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 한국의 핵발전소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핵 개발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다.

3. ICRP(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와 주요 권고 내용에 대한 평가

1928년 ICRP의 전신인 IXRPC(the International X-ray and Radium Protection Committee, 국제 X선 및 라듐방호 자문위원회)가 탄생했다. 설립 계기는 1920년대 방사선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가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X선 장치와 라듐의 이용, 또 의학적 진단·치료 장비를 급속히 보급한 결과 방사선과 의사나 기사, 또 방사선을 쬐인 환자들 사이에서 방사선의 급성증상과 만성증상, 게다가 치명적인 암이 무수히 발생했다. 라듐의 경우에는 시계의 숫자판에 야광도료를 칠하는 작업에 종사했던 미국 여성노동자 중에, 1924년경부터 골육종과 재생불량성 빈혈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속출했다. 미국 노동부와 공중위생국이 전국적 조사를 진행해야 할 만큼 큰 사회문제로 대두하였다. IXRPC는 노동자들의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직업병 방지를 주요 목적으로 탄생했다. 그러나 미국의 핵 개발세력은 IXRPC를 핵 개발 추진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주요 핵 개발 찬성 인사들을 포함시켜 3분의2가량을 확보하여 변질시켰다. 나카가와야쓰오中川保雄는 그의 명저 [방사선피폭의 역사]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전신인 IXRPC는 방사선 관련학회 협의를 중심으로 방사선으로 인한 직업병을 방지하기 위해 탄생했다. 일종의 피폭방호를 위한 과학자들의 학술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ICRP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3국 협의, 즉 맨해튼 계획의 전후(戰後) 진행 결과 중의 하나였다. 조직의 성격과 목적도 크게 변했다. 방사선방호를 위한 전후의 국제 조직은 미국의 주도하에 핵무기와 핵 발전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만들었다. 말하자면 ICRP는 예전 과학자의 조직이었으나, 핵발전소 개발 추진세력이 과학을 빙자하여 만든 국제적인 협조조직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1)

1950년 설립이후 ICRP권고는 총 6회가 있었다. 현재의 방사선 피폭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1977년과 90년의 권고이다. 이 외에 가장 최근 권고인 2007년 권고안도 간략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자.

1950년대~60년대를 거치면서 세계적인 반핵운동이 확산되고, 과학자들은 방사선의 유해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런 흐름 속에 핵 개발 세력들은 논리적 빈곤성을 면치 못했으며 떠밀리듯 몇 가지 쟁점사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1) 방사선과 암이나 백혈병의 상관관계에 대한 마지못한 인정, 2) 문턱선량은 없다는 주장에 대한 인정이 그것이다. 수세에 몰린 핵 개발 세력은 민간분야의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BEAR위원회를²⁾ 만들고 한발 더 나아간다. 소위 ‘리스크-베네피트론’을³⁾ 개발한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에 ICRP의 핵심 철학이었던 이런 논리마저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리스크를 수용해야 하는 사람과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왜 달라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에 답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핵 개발 세력은 1973년 새로운 알라라(ALARA ;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원칙 발표와 함께 ‘리스크-베네피트론’을 ‘코스트-베네피트론’으로 변경하였다. ‘리스크-베네피트론’은 방사선으로 인한 ‘리스크’가 있다고 해도 핵 개발로 인한 ‘베네피트’가 더 크기 때문에 리스크를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코스트-베네피트론’은 핵개발로 인한 방사선 리스크를 단순히 ‘코스트’로만 다루겠다는 의미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비용’으로만 보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때부터 ICRP는 방사선 피폭자의 질병발생이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낮다는 식의 논리를 제기한다. 리스크라는 말도 없애고, 핵발전소의 운영비용도 더 낮추자는 의도가 배경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맨 처음 “가능한 최저수준까지 낮게(to the lowest possible level)”라는 ICRP의 원칙은 “가능한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낮게(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로 변경했다.

이런 상황에서 1977년 ICRP는 새로운 권고내용을 발표하였다. 1977년의 권고는 향후 핵개발을 손쉽게 추진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방사선 피폭 방호를 관철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허용선량 개념을 포기하고 ‘선량당량’을 사용할 것, 가장 민감한 특정 장기에 대한 선량으로 피폭을 제한하려는 ‘결정 장기’라는 종래의 견해를 포기할 것, 3개월 3렘(30mSv)의 제한량 및 5렘(50mSv) × (연령 - 18세)의 연령 공식을 포기하고 전신(全身) 5렘(50mSv)으로 할 것, 공중 피폭에 관해서는 알라라(ALALA)원칙을 기초로 대폭 개정할 것.”등이다. 이상의 권고가 갖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1) 방사선 피폭방호를 비용관점으로 변경
- 2) 방사선 피폭 인정이나 피폭 수준에 대해선 기존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조사를 그대로 인정
- 3) 정당화, 최적화, 선량한도라는 3대 체계를 강요.
- 4) 피폭 기준의 완화.(대량 피폭 인정, 12개월 피폭기준을 ‘연간’이라는 표현으로 변경, 건강진단 횟수와 항목을 대폭 축소)
- 5) 허용선량 개념대신 유효선량이라는 개념을 도입
- 6) 방사선 피폭을 여러 위험요소중의 하나로만 평가(가중 개념의 외면)
- 7) 성인만을 기준으로 선량을 설정

위 내용 중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항으로서 현재 한국 등 세계의 핵발전소 추진 국가들이 선량개념으로 제한하는 소위 “유효선량”에 대한 문제이다. 유효선량은 당초의 허용선량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훨씬 줄어든다. 예컨대 망간의 경우 13배 과소평가, 스트론튬의 경우 11.5배 과소평가 한다. 이는 ICRP가 비용 때문에 피폭선량을 실제적으로 더 낮추기 어렵다고 보고 형식적이거나 피폭선량을 줄이기 위한 과학적 눈속임에 불과하다. 핵발전소 개발을 위해 ICRP는 처음으로 속임수를 동원했다.⁴⁾

이후 ICRP는 1) 미국에서 중성자탄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히로시마 나가사키 피폭조사의 문제점과⁵⁾ 2) 헨포드 핵시설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사망률을 조사한 맨큐소 등의 연구 발표, 3) 1986년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등으로 인하여 기존 권고를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결국 1990년 ICRP는 새로운 권고를 발표하였다.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서 노동자의 연간 선량한도를 5렘(50밀리 시버트)에 그대로 놔두고, 5년간 10렘(100밀리 시버트)의 누적 선량한도를 병행하는 점에 있다. 이것은 1년과 5년 합산한 피폭선량 제한값 설정을 목표로 하는 이중기준의 적용이다. 핵발전소 피폭노동자의 대부분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사회적 약자임을 감안할 때 상당수가 1~2년, 길어봤자 몇 년 일을 한 후에 핵발전소를 떠난다. 이들 대부분이 방사능피폭으로 건강을 잃기 때문이다. 이중기준의 적용은 핵개발 세력이 핵발전소 하청 노동

자를 일회용품으로 사용하고 버리겠다는 국제적인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하청 피폭노동자에게 누적 선량 기준은 아무 의미가 없다. 만일 하청 노동자가 장기간 피폭 노동에 종사하게 되면, 그런 경우의 누적 선량 기준이란 피폭선량이 제한 값에 도달했을 때 해고시켜 버린다는 점을 의미한다.

표2. ICRP 권고내용의 변화

년	노동자 (렘/년)	일반인 (렘/년)	선량한도 개념	선량제한의 일반원칙
1950	15 (0.3렘/주)	-	허용선량	가능한 최저수준까지 낮게 (to the lowest possible level)
1958	5	0.5	허용선량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낮게 (as low as practicable : ALAP)
1965	5	0.5	작업자 : 허용선량 공중 : 선량당량 한도	쉽게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낮게 (as low as readily achievable : ALARA)
1977	5	0.5	선량당량 한도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낮게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 ALARA)
1990	5 내지 10 /5년	0.1	선량당량 한도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낮게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 ALARA)

(출처 ; [방사선피폭의 역사])

ICRP의 2007년 권고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하는 긴급', 사고 수습과정인 '현존'과 평상시의 상황인 '계획'의 세 가지 범주로 구별한 피폭관리가 제일 중요한 특징이다. 체르노빌 사고로부터 교훈을 얻어 핵 개발 세력이 사고에서 평상시로 이행하는 동안에는 '고선량 • 대량피폭'을 전제로 '참고레벨'(기준선량)을 설정하여 피폭을 관리한다. 말하자면 '긴급'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500~1000밀리 시버트'라는 고선량 상태를 합리화 해준 것이며, '현존'에서는 "평상시보다 피폭 선량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일정하게 장기간 지속중인 선량"을 합리화 한 것이다. 즉 주민들은 '1~20밀리 시버트/년'을 기준으로 오염지역에서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다고 제시한 것이다. 사고 때문에 발생한 오염지역의 고선량 피폭을 합리화하면서 생명은 경시하고 비용은 줄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런 경우의 가장 큰 문제는 어린이나 임산부에 대한 사실상의 포기, 특별히 복구 작업에 참여하는 하청노동자들의 포기정책이라는 점에 있다. ICRP

는 “대표적 인물”의 피폭선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물학적 사회적 건강 취약계층을 일체 무시하는 것이다. 사실 ICRP가 제시하는 참고레벨 20mSv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수치에 불과하다. ICRP의 2007년 권고는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일본에서 현실화했다. ICRP의 2007년 보고서에 대해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 European Commission on Radiological Risk)의 평가는 “폐지”외엔 대안이 없었다.

“2007 ICRP 연구보고서에 대한 간략한 검토에 의하면, 이 모델이 1990년에 발표된 이후 본질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이 모델의 오류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와 주장들이 전체적으로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ICRP는 전리방사선 피폭에 대한 동일한 리스크계수를 계속 지지하고 있으며, 이 모델은 여전히 환경에 방출되는 한계량을 정하는 기초이다. ICRP 2007 모델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논의하지 않는다: 이 모델은 선택적이고, 편협하다. 그리고 이 장에서 개진한 과학의 철학적 요구사항을 전혀 수용하지도 않는다. 부록에 있는 레스보스 선언문에서 요구하듯이, ICRP 모델은 이제 폐기되어야만 한다.”⁶⁾

4. 한국의 ‘원안위 인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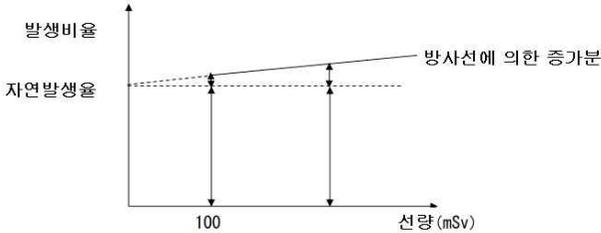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한국의 핵발전소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원안위 인정기준’은 5가지의 주요 내용을 안고 있다. 이외에도 노동자들의 직업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상의 문제들이 다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타 제도상의 문제들’이라는 제목으로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원안위의 인정기준을 집중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4-1. 인과확률의 문제

복잡한 수식을 동반하는 소위 ‘인과확률’은 논리상 일반인들의 암 발생 확률을 바탕으로 방사선으로 인한 추가 확률을 구하는 것으로서 ICRP의 1977년도 권고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유효 선량”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직접적인 의미는 다음 그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노동자의 직업병이 방사선으로 인해 발생할 확률이 몇 %인가를 구하는 공식이다. 암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예컨대 생활이나 흡연, 기존 질병, 연령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순수하게 방사선의 원인

확률을 구해보자는 취지다.

그림1. 인과확률의 의미



인과확률 공식은 국내에서는 2004년 임현술 등에 의한 “과기부고시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선연구”라는 연구보고서에서 구체적인 공식 등의 지침을 마련했다. 동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업무상질병(특히 암)인정 청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몇 사례는 객관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선량에서 방사선에 의한 업무상 암 발생으로 인정받은 바 있으며, 이를 통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인과확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⁷⁾ 인과확률은 처음부터 노동자에 대한 업무상 암의 인정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음을 시사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15년 ‘안전보건공단’에서 위 임현술 등에 의한 “방사선 노출에 의한 암 발생 가능성 추정을 위한 인과확률 프로그램 개발 연구”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암 발생률 등을 고려한 인과확률을 개발했으나 원리는 대동소이하다.

인과확률의 논리적인 의미는 직업과 특정 질병의 발생이 직업을 원인으로 발생할 확률이다. 따라서 0%라면 모를까, 논리적으로 1% 이상이면 모두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인과성이 10% 이상이면 이것은 사실 통계적으로는 엄청난 숫자라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인과확률을 국제기구에서 권고했다고 하면서 채택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한 2010년 IAEA, ILO, WHO 국제공동권고(2010)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과확률 프로그램이 보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즉 인과확률은 현대의 질병 대부분이 직업과의 연관성, 즉 ‘업무기인성’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하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50% 이상일 경우에는 전액보상, 대체로 10~50%는 부분보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인정기준으로 이용하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이다. 국제기구에서는 보상에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권고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상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즉 직업성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한 것에 우선적인 문제가 있다.

일본도 원폭증 인정에 대해 인과확률을 우리처럼 질병인정기준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다. 일본의 경우 2001년 원폭증 환자를 인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원인확률’(PC ; probability of causation)이라고 명명했다. 원인확률은 "히로시마 • 나가사키 피폭자의 역학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질병이 원폭의 방사선에 기인한다고 생각되는 확률이며, 이 수치의 크기에 따라 원폭증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⁸⁾ 원인확률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방사선으로 인한 일정한 건강영향이 있다고 추정한다. 원인확률 10%미만은 가능성이 낮다고 추정한다. 다만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기왕력, 환경인자, 생활력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2008년 원인확률이라는 제도 자체를 폐지했다. 한국은 일본에서 이미 폐지한 공식을 아직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나마 50% 이상만 인정하는 규정만 적용하고 50% 미만 ~ 10% 이상자에 대한 심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이렇듯 인과확률 제도는 인정기준의 담을 높이는 것으로 활용해 왔다. 사람들은 복잡한 수식을 동원하면 그럴듯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ICRP의 유효선량이라는 개념자체가 이미 속임수이다. 인과확률은 폐지해야 마땅하다. 이런 수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 European Commission on Radiological Risk)의 다음과 같은 주장을 되새겨 봐야 한다.

“과학적 객관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수학적 모델링을 통한 작업에 의존하는 경향을 따르기 보다는 ‘창문 밖을 보아야’ look out of the window만 한다고 믿는다.”⁹⁾

4-2. 방사선이 유발하는 직업성 암 인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안위 인정기준’에는 백혈병과 고형암 16개를 방사선을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암으로서 규정하였다. 백혈병의 경우엔 직업력 2년 이상의 규정과 고형암의 경우엔 직업력 5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사선피폭 때문에 암이 언제 발병할 것인가의 문제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는 백혈병의 인정조건으로서 1) 방사선에 상당량 피폭을 확인($5\text{mSv} \times \text{근무연수}$)하고, 2) 피폭 이후 최소한 1년이 경과하여 발병한 경우에 인정한다. 일본은 1년의 직업력이고 한국은 2년의 직업력이다. 이러한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가의 문제는 충분히 검증된 의학적 기준이라기보다는 전

적으로 행정편의적인 기준이다. 백혈병은 2년, 고형암은 5년이라는 피폭기간을 규정한 것은 개별 노동자들의 방사선 감수성을 무시하고, 피폭량이나 연령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과학적인 규정이다. 산재보상의 취지에서 ‘개연성’ 혹은 ‘상당인과관계’ 개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고형암의 종류를 16개로 확정하여 다른 암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방사선의 영향조사에서는 방사선이 모든 고형암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포함 안된 다수의 고형암을 포함시켰다.

셋째, 암 이외의 질병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특별히 심장질환 등 순환기계통의 장애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로서 인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인 만성 질환의 발생이 방사선 노출로 증가한다는 주장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미나는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노출된 사람의 만성질환 발생은 1.5배로 높은 수치가 아니지만, 만성질환자의 전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들 중 방사선이 원인이 되어 질환을 얻은 사람의 비율이 1%라 하더라도 실제 숫자는 많은 거다. 전체 사회의 공중보건학적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넷째, 인정기준 제10조에는 “제외되는 고형암”이라는 제목으로 3개의 고형암을 열거한다. 대상은 “1. 악성종괴종, 2. 호지킨스림프종, 3. 흑색종”이다. 일단 호지킨스림프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 보면 원인중의 하나로 ‘방사선’을 언급하고 있다.¹⁰⁾ 이 병으로 현재도 소송중인 방사선 노동자가 있다.¹¹⁾ 해당 노동자가 소송을 하게 된 계기는 물론 주치의의 방사선 언급이었다. 다만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호지킨스림프종을 방사선 고형암에서 제외하고 있다. 어쨌든 이렇게 구체적인 고형암을 제외할 경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어떤 검토를 했는지 의문이다. 구체적으로 3개의 고형암을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정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내용상의 차이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직업병 리스트 그중에서도 방사선으로 인한 직업성 암에 대해서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과 ‘원안위 인정기준’ 양쪽에서 규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방사선이라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인정기준이 두 개가 있는 셈이다. 방사선으로 인한 암에 대해서는 두 규정에서 차이가 있다. 아래 표를 참조하면 형식상 원안위 인정기준이 더 많은 암을 나열하고 있으나, 이러한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표3. 방사선이 유발하는 암 리스트

구분	암의종류	비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 침샘암, 2. 식도암, 3. 위	뼈암과 중추신경계암은 원안

<p>별표 3 10항 버</p>	<p>암, 4. 대장암, 5. 폐암, 6. 뼈암, 7. 피부의 기저세포암, 8. 유방암, 9. 신장암, 10. 방광암, 11. 뇌 및 중추신경계암, 12. 갑상선암, 13.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만성 골수성 백혈병</p>	<p>위 인정기준에 없음.</p>
<p>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 제8조 ~ 제9조</p>	<p>1. 간암, 2. 갑상선암, 3. 난소암, 4. 뇌암, 5. 다발성골수종, 6. 대장암, 7. 방광암, 8. 비호지킨스림프종, 9. 식도암, 10. 신장암, 11. 여성유방암, 12. 위암, 13. 췌장암, 14. 타액선암, 15. 폐암, 16. 피부암 17. 백혈병</p>	<p>간암, 난소암,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스림프종, 췌장암은 산재보상법 시행령 별표 3에는 없음.</p>

5. 선량규제의 적정성 문제

선량규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선량 피폭에 대한 문제이다. 위에서 인용한 “ECRR 보고서”외에도 핵 개발세력들이 장악한 소위 “베어 세븐 보고서 (VEIR-VII)”등¹²⁾에서도 저선량이라도 건강 영향이 있다는 소위 LNT(linear no-threshold)모델을 채택하는 실정이다. 특히 갑상선 암에 대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¹³⁾ ICRP는 민간조직이고 핵 개발세력들이 장악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한국 자체적으로 선량규제에 대한 객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일반인은 1mSv로 규정하면서 작업자들에 대해서는 5년 100mSv로 규정하는 객관성은 어디에도 없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비용으로 환산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ICRP의 논리는 사실상 파탄난 상태이다.

선량규제와 관련해서는 사람에게 대한 규제만이 아니라 예컨대 핵 폐기물 관리구역에 대한 선량규제나, 방사선 관리구역에 대한 선량규제가 적정한지의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현행 ICRP의 선량규제는 비용을 염두에 두고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에 불과하다. 보다 향상된 선량규제는 최대한 낮게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작업별, 영역별로 세분화하면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6. 기타 제도상의 문제들

6-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배제

한국의 방사선 관련 노동자들 중에 핵발전소 노동자의 경우에만 산업안전보건법의(이하 산안법) 적용 제외를 받는다. 핵발전소 노동자만 적용 배제되는 산안법은 총 23개 조항에 달한다. 대개의 조항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에 별도 규정하고는 있으나, 특별히 노동자의 주체적 보건예방활동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거나, 유해작업 도급금지 조항 등을 포함시킨 것은 반노동자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산안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와 동수로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해당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논의와 조치를 할 수 있다. 작업장의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일 잘 알 수 있고, 제일 절박한 문제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적용 배제는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각종 안전 보건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아울러 유해작업은 도급을 금지하는 것이 산업안전법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는 하청노동 없이는 운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핵발전소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항과 도급 금지 조항 적용배제는 철회해야 한다.

6-2) 건강관리수첩의 미교부

한국 정부는 방사선 관련 노동자들 중에서 비파괴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만 건강관리수첩을 적용한다. 핵 발전소의 현장 노동자들에게도 똑같이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 노동자들 본인이 자신의 피폭량을 늘 확인하면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

6-3) 피폭통계의 현실반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노동자들의 피폭통계를 평균수치만 발표하고, 기관별로도 평균수치만 발표한다.

표4. 최근 5년간 업종별 평균피폭선량 현황 (2018년 말 현재, 단위:mSv)

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업종별	평균선량	평균선량	평균선량	평균선량	평균선량
산업체	0.09	0.09	0.14	0.10	0.08
비파괴검사	2.37	1.77	1.24	1.02	1.69
의료기관	0.55	0.45	0.38	0.41	0.39
연구기관	0.02	0.04	0.02	0.03	0.03
교육기관	0.06	0.04	0.02	0.02	0.02
공공기관	0.41	0.37	0.32	0.28	0.26
군사기관	0.08	0.01	0.01	0.08	0.11
발전소(원전)	0.58	0.59	0.76	0.51	0.57
합계*	0.72	0.60	0.55	0.40	0.36

주) 합계의 종사자수는 업종별 중복 인원이 포함된 인원수임

(출처 ; 원안위 홈페이지)

방사선 관리에서 평균선량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개개인들의 업무 자체가 다를뿐더러 업무 장소에 따라서도 피폭량이 달라진다. 제대로 된 피폭선량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작업영역별로 구분하고, 또한 원청-하청의 구분도 시행해야 한다. 이런 자료를 산출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적 과장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숨기고 있는 것뿐이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근무환경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국민들 특히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도 이러한 피폭선량을 알아야 한다.

6-4) 판독특이자에 대한 의문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는 판독특이자에 대해 “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 나. 선량계의 훼손·분실 등으로 인하여 선량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사람, 다. 위원회가 정하는 선량계 교체주기를 2개월 이상 지난 후 선량계를 제출한 사람”의 항목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독특이자는 매년 100명 이상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표5. 최근 10년간 판독특이자 발생현황

연도별	2017년 연감	2016년 연감	2015년 연감	2014년 연감	2013년 연감	2012년 연감	2011년 연감
2007년							77
2008년						165	165
2009년					149	149	149
2010년				109	109	109	109
2011년			15	15	15	15	15
2012년		87	54	54	54	54	

2013년	113	113	35	35	35		
2014년	119	119	183	183			
2015년	109	109	114				
2016년	110	113					
2017년	79						

(출처 ; 각 연도 방사선안전연감, 명)

짐작하겠지만, 관독특이자는 최소한 선량한도 이상의 피폭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다. 관독특이자에 대해선 원자력연감에 발표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정보공개가 없다. 아울러 시간이 경과하면서 관독특이자의 숫자가 달라지는 것도 대단히 의아한 일이다. 위 표에서 보면 연도는 원자력연감의 발행연도이다. 통상 당해 연도 관독특이자에 대해선 잠정수치라서 다음해에 수정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미 몇 년이나 경과한 연도의 관독특이자 수치가 변하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 또한 2010년에 109명이었던 관독특이자가 2011년에 15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사실 등도 의문점을 남긴다. 이런 점만 놓고 보면 관독특이자 관리가 적정한 것인지 신뢰성을 확신할 수 없다. 아울러 관독특이자에 대한 통계 자체도 위 가~다항의 항목별, 각 기관별로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들은 국회차원에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6-5) TLD착용의 문제

TLD는 Thermoluminescence Dosimeter의 약자로서 열형광선량계라고 부른다. 핵발전소에서는 모두 이것을 착용한다. 당연한 것이지만 노동자 개인별로 착용한다. 원안위에서는 TLD에 기록된 수치를 근거로 연간 50mSv초과자를 선별하고, 또 연평균 선량인 20mSv를 넘는 사람에 대해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현장 노동자에게 TLD의 기록으로 인하여 통보를 받는다는 것은 곧 “해고”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에게 TLD는 자신의 선량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선량이 연간 한계치에 도달하지 않도록 수치를 조작해야 하는 도구이다. 예컨대 핵 발전소의 노동자들은 방사선 관리구역에 들어갈 경우 반드시 자신의 TLD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 자신의 선량누적치가 연간 한계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으면 작업 전에 떼고 일을 해야 한다. 예방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공식적인 수치를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TLD 수치를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절대로 TLD를 뺄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하나 실제로는 묵인한다.

원안위에서는 TLD를 착용해야 하는 방사선 관리구역의 기준을 연간 6mSv이상을 피폭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핵 발전소 내의 비 관리 구역에서도 늘 방사선이 흐른다. 특히나 모든 핵발전소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냉각수가 흐르는 배관은 방사선 누출의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의 피폭의사 히다순타로肥田舜太郎는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배관 속 열과 방사선으로 인해 부식되고 틈이 생기게 돼 이때부터 방사선이 스며 나온다. 이는 막을 수 없다. 완전하게 막으려면 그 관을, 안쪽은 놔둔다고 해도 바깥쪽만은 아주 두껍게 해버리면 가능할지 모른다. 그런 설비투자를 한다면 전기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¹⁴⁾ 요컨대 배관을 가급적 안전하게 차폐하고자 할 경우 핵 개발세력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용’문제가 대두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한다. 이런 문제는 노동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일정하게 영향을 준다. 대체로 모든 핵발전소의 배관 유지보수는 하청노동자들이 맡는다. 일상적인 배관 유지보수 작업에는 TLD를 착용하진 않는다. 직경이 큰 배관은 사람이 직접 배관 안으로 들어가 물때를 씻어낸다고 노동자들은 증언한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한다면 핵발전소 내의 모든 현장 작업자에 대해서는 TLD를 착용하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

6-6) ‘고시’체계의 문제

대체로 직업성 질병의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세부 내용을 정해놓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이후 한국정부는 원자력 안전법을 제정하였다. 명분은 원자력을 더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다.¹⁵⁾ 그러나 일반적인 직업병에 대한 인정기준은 법률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독 방사선에 대한 인정기준만을 따로 떼 내어 원안위의 고시 형태를 채택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는 원자력 행정의 비밀주의, 일방주의, 행정편의주의 때문이다. 고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이다. 그러나 법령의(대통령령이나 국무총리령) 제정이나 개정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고시와 다르다. 현행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사실상 많은 영향을 미치고, 법원에서 법규 명령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훈령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하고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시는 이러한 형식을 전혀 거치지 않는다.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7. 정규직 보장 투쟁의 중요성

핵 발전소의 하청 노동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제기했다. 특히 2018년 말에는 국회에서 공청회도 있었다. 현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하고 있으나, 핵 개발 추진 세력들의 방해로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한다. 핵 발전소는 우선 하청노동자에게 피폭을 강요한다. 그 다음 지역의 건강 취약 계층인 어린아이나 임산부에게 상대적으로 고선량을 강요한다. 이런 사람들의 희생 없이 핵발전소는 운영

이 어렵다. 지금까지 다양한 여러 통계들이 있으나 일단 필자는 다음 통계를 제시한다. 현재도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하청노동자가 절반을 넘는다.

표6. 고용형태별 핵발전소 노동자 현황

		고리	한빛	월성	한울	계
인 원 (명)	총원	4,225	2,917	4,142	4,461	15,775
	정규직	2,223	1,396	1,583	1,911	7,113
	비정규직	2,031	1,521	2,559	2,550	8,662
	기간제(직접고용)	25	22	23	15	85
	하청업체-1(간접고용)	1,371	955	1,337	1,574	5,237
	하청업체-2(파견/추가인력)	636	544	1,199	961	3,340
비 중 (%)	정규직	52	48	38	43	45
	비정규직	48	52	62	57	55
	기간제(직접고용)	1	1	1	0	1
	하청업체-1(간접고용)	32	33	32	35	33
	하청업체-2(파견/추가인력)	15	19	29	22	21

(자료 ; 한수원 국회제출자료, 2015년 7월 기준)

ICRP 선량규제가 5년 100mSv 이내 이고, 연간 최고 50mSv를 인정한다는 내용은 하청 인력을 겨냥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선량이 높더라도, 1~2년 고용하다가 피폭을 중단시키면 괜찮다는 발상. 그러나 이는 한번 쓰고 버리겠다는 발상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유해 작업을 금지한 산업안전법을 적용에서 배제하면서, 핵 발전소는 노동자들의 창발적 안전보건 활동이나 주체적 예방활동을 진행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는 정규직화 될 경우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하청 노동자에게 단기간 고선량을 강요해도 장기간 근무를 계속해야 하는 정규직에게 고선량을 강요할 수 없다. 선량 규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노동자들에게 암이나 각종 질병이 줄을 이을 것이다. 핵 발전소의 노동자 근무환경의 개선은 정규직화를 달성했을 때 비로소 노동자들이 주체로 나서면서 실제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다.

韓国の核発電所(原発)労働者の業務上疾病認定基準の問題点と改善方向

朴賛浩(パク・チャンホ、反核医師会運営委員)

1. 核発電所の放射線線量規制

韓国において放射線被曝に関連する領域は、核発電所だけでなく多様な領域がある。医療の領域や各種産業でも放射線被曝作業が存在する。放射線に対する線量規制はこういった全部の領域にすべて適用する。韓国政府は概してICRPの勧告をそのまま反映している。「原子力安全法」施行令別表1に具体的に規定した線量規制は、ICRPの90年勧告事項から転載したものである。概括的な特徴を説明するならば、特定数値を許容基準で適用するのではなく、「有効線量限度」と「等価線量限度」という概念を適用する。線量限度は集団を三つのカテゴリーに区分しそれぞれ適用するが、一番目と二番目のカテゴリーが労働者の職業に関連した内容であり、三番目のカテゴリーは一般人に適用する。これらの三つのカテゴリーの集団について、「水晶体」と「手・足及び皮膚」に該当する適用限度をそれぞれ別途指定した。これを表で現わすと次の通りになる。

表1. 韓国の線量規制(原子力法施行令 別表1)

番号	区分	有効線量限度	等価線量限度	
			水晶体	手・足及び皮膚
1	放射線作業従事者	年間50を越えない範囲で5年間100	年間150	年間500
2	随時出入りする者、運搬従事者及び法第96条但書に基づき教育訓練などの目的で原子力安全委員会が認めた18才未満である者	年間6	年間15	年間50

3	第1号及び第2号以外の者	年間 1	年間 15	年間 50
---	--------------	------	-------	-------

(単位：mSv、ミリシーベルト)

上の表で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は、「年間」という概念と、線量限度の概念自体にある。

「年間」という概念は、毎年1月1日から12月31日までを適用するものとして、例えば上の表のうち、番号2のカテゴリーに該当する労働者が2018年12月に4mSvに被曝し、2019年また再び4mSvに被曝したとすれば、わずか2か月で8mSvも露出したことになるが、これは年間の概念でみたとき、線量限度を遵守したものとみなす。

線量限度は、労働者を保護するために必ず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許容基準値の概念ではない。放射線はたった1mSvでも人体に有害な影響を及ぼす恐れがあるため、あくまでも恣意的な(=社会・経済的な)基準により任意で設定したものである。そのため状況が発生すると、このような線量限度はいつでも変わる可能性がある。端的な根拠として、日本では上記3のカテゴリーに適用する線量限度を20mSvと規定する。国際機構の勧告事項を無条件で受け入れたところ、線量限度に対する韓国国内の議論はほとんどなされなかった状態である。これについては、後に再び説明する。

2. 核発電所労働者の職業病認定基準

核発電所労働者が作業中に放射線によって疾病が発生したとき、適用する職業病認定基準については、原子力安全委員会(以下、原安委)が告示した「放射線作業従事者などの業務上疾病認定範囲に関する規定」(以下、「原安委認定基準」)をまず適用する。大抵の国家では、一般的な業務上疾病関連機関がこれを担当していることに比べて、韓国の核発電所労働者に対する「放射線職業病認定基準」は、「原安委」が担当する。韓国政府は、これを日本の福島核発電所事故にともなう安全強化対策のためだと明らかにしている。果たしてこれが労働者にとって有利なことかどうかは評価してみなければならない。

「原安委認定基準」は合計11個の条項で構成される。この中心的な内容は5つの内容である。

- 1) 「因果確率」という計算式を適用しており、
- 2) 大量の放射線に被曝した場合(作業期間についての規定が別途ない)

3) 白血病の場合には、作業暦2年が経過して因果確率が33%以上である場合に認定

4) 合計16の固形がんを挙げ、作業暦5年が経過して因果確率が50%以上である場合に認定

5) 3つの固形がんは放射線職業病から除外する

以上の「原安委認定基準」は、線量規制がICRPの勧告事項をそのまま受け入れたものであることと同じく、ICRPの哲学をそのまま受容した。したがって韓国の放射線に関連する職業病認定基準の問題点を議論するためには、まずICRPという組織とこれらの勧告内容が何なのかを具体的に確認してみる必要がある。ICRPという組織の設立背景や勧告事項の変化過程を知らずに、核開発勢力の論理を理解することはできない。韓国の核発電所労働者に対する政策は、核開発勢力の論理にそのまま従う。

3. ICRP(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国際放射線防護委員会)と主な勧告内容に対する評価

1928年、ICRPの前身であるIXRPC(the International X-ray and Radium Protection Committee、国際X線およびラジウム防護諮問委員会)が誕生した。設立の契機は、1920年代に放射線による業務上の災害が世界的に多く発生したためであった。第1次世界大戦中にX線装置とラジウムの利用、また医学的診断・治療設備を急速に普及させた結果、放射線科医師や技師、また放射線を投射された患者の間で放射線の急性症状と慢性症状、加えて致命的ながんが無数に発生した。ラジウムの場合には、時計の数字版に蛍光塗料を塗る作業に従事していたアメリカ女性労働者のうち、1924年頃から骨肉腫と再生不良性貧血によって生命を失う場合が続出した。アメリカ労働部と公衆衛生局が全国的調査を進めなければならない程、大きな社会問題として浮上した。IXRPCは労働者の放射線被曝による職業病防止を主な目的として誕生した。しかしアメリカの核開発勢力は、IXRPCを核開発推進組織にするために主要な核開発賛成の人々を含ませ、3分の2ほどを確保して変質させた。中川保雄は、彼の名著『放射線被曝の歴史』でこれを次の通り評価した。

「前身のIXRPCは、放射線関連学協会を主体として、放射線による職業病を防ぐために生まれた。それは、被曝防護のための、科学者たちによる学術組織と言えた。しかしICRPは、アメリカを中心とする三国協議、すなわちマンハッタン計画の戦後のいま一つの産物であった。そして組織の性格と目的が大き

く変わった。放射線防護のための戦後の国際的体制は、アメリカの主導の下に、核兵器と原子力開発の推進者たちにより、その推進体制に沿うものとして生み出された。ICRPは、かつての科学者の組織から、それを隠れ蓑とする原子力開発推進者による国際的協調組織へと変質させられたのである。」

1950年の設立以後、ICRP勧告は合計6回行われた。現在の放射線被曝と関連して重要なのは1977年と90年の勧告である。この他に最も最近の勧告である2007年勧告案も簡略に検討してみることにしよう。

1950年代～60年代を経ながら世界的な反核運動が広がり、科学者は放射線の有害性に対する問題を続けて提起した。このような流れの中で核開発勢力は、論理的な貧困性を免れることができず、迫られるようにいくつかの争点事項を認めないわけにはいかなかった。1)放射線とがんや白血病の相関関係に対するやむを得ない認定、2)しきい線量はないという主張に対する認定がそれである。守勢に追い込まれた核開発勢力は、民間分野の「専門家」を動員してBEAR委員会をつくり、もう一步踏み出す。いわゆる「リスクベネフィット論」をつくり出したのだ。しかし1960年代にICRPの核心哲学であったこのような論理さえ維持することができない状況が発生した。リスクを受け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人と恩恵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人が、なぜ異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かに対する問題提起に返答ができなかったためだ。核開発勢力は、1973年に新しいアララ(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原則の発表とともに「リスクベネフィット論」を「コストベネフィット論」に変更した。「リスクベネフィット論」は、放射線による「リスク」があったとしても、核開発による「ベネフィット」がもっと大きいためにリスクを受け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論理であった。「コストベネフィット論」は、核開発による放射線リスクを単純に「コスト」でのみ扱うという意味だ。人間の生命と健康を「費用」のみで見るという宣言であった。この時からICRPは、放射線被曝者の疾病発生が交通事故死亡者より低いといった論理を提起する。リスクという言葉もなくし、核発電所の運営費用もさらに低くしようという意図が背景にあ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一番はじめに「可能な最低水準まで低く(to the lowest possible level)」であったICRPの原則は、「可能な限り合理的に達成できる水準において低く(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に変更した。

このような状況で、1977年ICRPは新しい勧告内容を発表した。1977年の勧告は今後核開発を容易に推進し、経済的観点において放射線被曝防護を貫徹する内容で満たされた。具体的にみると、「許容線量概念をあきらめて「線量当量」を使うこと、最も敏感な特定臓器に対する線量で被曝を制限しようとする「決定

臓器」という従来の見解を放棄すること、3ヶ月3レム(30mSv)の制限量および5レム(50mSv) × (年齢 - 18才)の年齢公式を放棄して、全身5レム(50mSv)にすること、公衆被曝に関しては、アララ(ALALA)原則を基礎に大幅に改正すること」などである。以上の勧告が持つ問題点は次のとおりである。

- 1) 放射線被曝防護を費用の観点から変更
- 2) 放射線被曝認定や被曝水準に対しては既存の広島、長崎調査をそのまま認定
- 3) 正当化、最適化、線量限度という3大体系を強要。
- 4) 被曝基準の緩和(大量被曝認定、12ヶ月被曝基準を「年間」という表現に変更、健康診断回数と項目を大幅に縮小)
- 5) 許容線量の概念の代わりに有効線量という概念を導入
- 6) 放射線被曝を色々な危険要素の中の一つとしてのみ評価(荷重概念を無視)
- 7) 成人だけを基準に線量を設定

上記の内容の中で、私たちが留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として、現在韓国など世界の核発電所推進国家が線量概念として制限するいわゆる「有効線量」に対する問題である。有効線量は当初の許容線量で計算したときよりはるかに減少する。例えばマンガンの場合、13倍の過小評価となり、ストロンチウムの場合11.5倍の過小評価となる。これは、ICRPが費用の点から被曝線量を実際にさらに低めるのが難しいとみなし、形式的ではあるが被曝線量を減らすための科学的な目くらましに過ぎない。核発電所開発のためにICRPは初めていかさまを動員した。

以後ICRPは、1)アメリカで中性子弾の開発過程であらわれた広島、長崎被曝調査の問題点と2)ハンフォード核施設で仕事をしてきた労働者の死亡率を調査したマンキューソなどの研究発表、3) 1986年のチェルノブイリ核発電所事故などによって既存の勧告を修正するしかない状況に直面した。結局、1990年にICRPは新しい勧告を発表した。最も重要な特徴は、労働者の年間線量限度を5レム(50ミリシーベルト)とそのままにしておき、5年間10レム(100ミリシーベルト)の累積線量限度を併行する点にある。これは1年と5年の合算した被曝線量制限値の設定を目標にする二重基準の適用である。核発電所の被曝労働者の大部分が不安定な雇用状態にある社会的弱者であることを考慮するとき、相当数が1~2年、長くとも数年仕事をした後核発電所をやめる。彼らの大部分が放射能被曝により健康を損なうためだ。二重基準の適用は、核開発勢力が核発電所の下請け労働者を使い捨て品として使用し捨てるという国際的な宣言と同じことである。下請け被曝労働者にとって積算線量基準は何の意味も持たない。万が一、下請け労働者が長期間被曝労働に従事することになれば、そのような場合の積算線量基準とは、被曝線量が制限値に到達したとき解雇してしまうという点を意味する。

表2. ICRP勧告内容の変化

年	労働者 (レム/ 年)	一般人 (レム/ 年)	線量 限度の 概念	線量制限の一般原則
1950	15 (0.3レム/週)	-	許容 線量	可能な最低水準まで低く (to the lowest possible level)
1958	5	0.5	許容 線量	実行可能な水準まで低く (as low as practicable : ALAP)
1965	5	0.5	作業 者: 許容 線量 公衆: 線量 当量 限度	容易に達成可能な水準で低く (as low as readily achievable : ALARA)
1977	5	0.5	線量 当量 限度	合理的に達成できる水準で低く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 ALARA)
1990	5 ないし 10 / 5 年	0.1	線量 当量 限度	合理的に達成できる水準で低く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 ALARA)

(出典：『放射線被曝の歴史』)

ICRPの2007年勧告は、事故が発生する場合に該当する「緊急」、事故収拾過程

である「現存」と平常時の状況である「計画」の三種類のカテゴリーに区別した被曝管理が一番重要な特徴だ。チェルノブイリ事故から教訓を得て核開発勢力が事故から平常時に移行する間には「高線量・大量被曝」を前提に「参考レベル」(基準線量)を設定して被曝を管理する。言うなれば、「緊急」は事故収拾過程において「500~1000ミリシーベルト」という高線量状態を合理化したものであり、「現存」では「平常時より被曝線量が相対的に高いが、一定で長期間持続中の線量」を合理化したものだ。すなわち、住民たちは「1~20ミリシーベルト/年」を基準として汚染地域で引き続き生活することができると提示したのである。事故のために発生した汚染地域の高線量被曝を合理化しつつ、生命は軽視して費用は減らそうとする目的を持っている。こういう場合の最も大きい問題は、子供や妊婦に対する事実上の放棄、特に復旧作業に参加する下請け労働者の放棄政策という点にある。ICRPは、「代表的人物」の被曝線量を基準としなければならぬと主張する。生物学的・社会的な健康脆弱階層を一切無視するものである。事実ICRPが提示する参考レベル20mSvは何の科学的根拠もない数値に過ぎない。ICRPの2007年勧告は、2011年福島核発電所事故で日本で現実のものとなった。ICRPの2007年報告書に対するヨーロッパ放射線リスク委員会(ECRR European Commission on Radiological Risk)の評価は、「廃止」のほかには代案がなかった。

「2007 ICRP研究報告書に対する簡略な検討によると、このモデルが1990年に発表された以後、本質的に何の変化もなかった上、このモデルの誤りを科学的に立証する新しい証拠と主張が全体的に無視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明確に示している。ICRPは電離放射線被曝に対する同一のリスク係数をずっと支持しており、このモデルは相変らず環境に放出される限界量を定める基礎となっている。ICRP 2007モデルは以下のような証拠について議論しない:このモデルは選択的で、偏狭である。そしてこの章で陳述した科学の哲学的要求事項を全く受け入れもしない。付録にあるレスボス宣言文で要求しているように、ICRPモデルはもう廃棄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4. 韓国の「原安委認定基準」の問題点と改善方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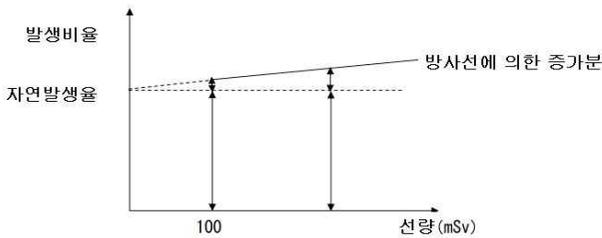
先にも言及したが、韓国の核発電所労働者に適用する「原安委認定基準は、5種

類の主な内容を抱えている。その他にも労働者の職業病に直・間接的に影響を及ぼす制度上の問題が多数ある。このような問題に対しては、「その他の制度上の問題」という題名で後に扱うことにし、ここでは原案委の認定基準を集中的に評価し、これに対する代案を提示する。

4-1. 因果確率の問題

複雑な数式を伴う、いわゆる「因果確率」は、論理上一般人のがん発生確率を基に放射線による追加確率を求めるものとして、ICRPの1977年度勧告から現れ始めた「有効線量」概念を適用したものである。直接的な意味は次の図に示すように、労働者の職業病が放射線により発生する確率が何 %なのかを求める公式である。がんを誘発する様々な要因、例えば生活や喫煙、既存の疾病、年齢などの変数を考慮して純粹に放射線の原因確率を求めようという趣旨である。

図1. 因果確率の意味



因果確率公式は、国内では2004年イム・ヒョンスルなどによる「科学技術部告示『放射線作業従事者などの業務上疾病認定範囲に関する規定』の改善研究」という研究報告書で具体的な公式などの指針を準備した。同研究報告書によれば、「放射線作業従事者の業務上疾病(特になん)認定請求が続いている中、いくつかの事例は客観的な水準に達することのできない線量で放射線による業務上のがん発生と認められており、これを通じて放射線作業従事者の業務上疾病認定基準に対する否定的な認識が拡大している実情」と因果確率に対する必要性を強調した。因果確率は、初めから労働者に対する業務上がんの認定基準を強化するために準備したことを示唆する表現といえる。最も最近では、2015年「安全保健公団」において、上記のイム・ヒョンスルなどによる「放射線露出によるがん発生の可能性推定のための因果確率プログラム開発研究」という研究報告書を通じて、最近のがん発生率などを考慮した因果確率をつくり出したのだが、原理は大

同小異である。

因果確率の論理的な意味は、職業と特定疾病の発生が職業を原因として発生する確率だ。したがって、0%ならば違うとしても、論理的に1%以上ならばすべて因果性があるとみなすのが正しい。因果性が10%以上ならば、これは実際、統計的には途方もない数字だとみなさなければならない。我が国の安全保健公団では、因果確率を国際機構で勧告したといいつつ採択を正当化している。しかし安全保健公団で提示した2010年のIAEA、ILO、WHO国際共同勧告(2010)を具体的に調べれば、因果確率プログラムが補償のためのプログラムであるのがわかる。すなわち、因果確率は現代における疾病の大部分が職業との関連性、すなわち「業務起因性」を明らかに判断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め、補償をするために開発したプログラムなのである。したがって、50%以上である場合には全額補償、概して10~50%は部分補償をするのであるが、これを我が国では認定基準として利用することが決定的な問題なのである。国際機構では補償に活用するためのプログラムとして勧告したのだが、我が国では事実上の認定可否を決める、すなわち職業性の有無を判断する基準として適用したことに優先的な問題がある。

日本も原爆症認定に対して因果確率を我々のように疾病認定基準として適用した事例がある。日本の場合、2001年に原爆症患者を認めるための道具を開発し、これを「原因確率」(PC: probability of causation)と命名した。原因確率は「広島・長崎被爆者の疫学調査結果に基づいており、疾病が原爆の放射線に起因すると考えられる確率であり、この数値の大きさにより原爆症であるのか、そうでないのかを判断する」という意味を持っていた。原因確率が50%以上である場合には、放射線による一定の健康への影響があると推定する。原因確率10%未満は可能性が低いと推定する。ただし、機械的に適用して判断するのではなく、申請者の既往歴、環境因子、生活力なども総合的に勘案する。問題は、色々な論議があったため2008年に原因確率という制度自体を廃止した。韓国は、日本ですでに廃止した公式を未だに運用している状況であり、その上50%以上のみを認める規定だけ適用し、50%未満~10%以上の者に対する審査を基本的に封じ込めている。このように因果確率制度は認定基準の塀を高めるものとして活用されてきた。人々は複雑な数式を動員すると、もっともらしい科学的根拠があるものと勘違いする。先にも明らかにしたが、ICRPの有効線量という概念自体がすでにトリックである。因果確率は廃止して当然である。このような数式を好む人々はヨーロッパ放射線リスク委員会(ECRR European Commission on Radiological Risk)の次のような主張を反芻してみなければならない。

「科学的客観性を追求するという点において、数学的モデリ

ングを通じた作業に依存する傾向に従うよりは、『窓の外を見なく
ては』 (look out of the window) いけないと信じる。」

4-2. 放射線が誘発する職業性がん認定の問題点と改善方向

先で言及した通り、「原安委認定基準」には、白血病と16の固形がんを、放射線を原因に発生しうるがんとして規定した。白血病の場合には職業暦2年以上の規定と、固形がんの場合には職業暦5年以上を満たさ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ような規定が持つ問題点は次のとおりだ。

まず、放射線被曝のために、がんがいつ発病するのかという問題は一律的に規定できない。日本の場合は、白血病の認定条件として、1) 放射線に相当量の被曝を確認(5mSv ×勤務年数)と、2) 被曝以後、最低1年が経過して発病した場合に認める。日本は1年の職業暦で韓国は2年の職業暦だ。このような差がどのように発生するのかという問題は、十分に検証された医学的基準というよりは、全面的に行政の便宜的な基準である。白血病は2年、固形がんは5年という被曝期間を規定したことは、個別労働者の放射線感受性を無視して、被曝量や年齢などを全く考慮しなかった非科学的な規定である。労災補償の趣旨における「蓋然性」あるいは「相当因果関係」の概念を積極的に活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

次に、固形がんの種類を16に確定し、他のがんの発生可能性を根本的に遮断した。広島、長崎の原爆放射線の影響調査では、放射線がすべての固形がんに一定の影響を与えるものとされている。アメリカやフランスなどの場合、我が国には含まれない多数の固形がんを含んでいる。

第3に、がん以外の病気に対しては事実上認定しないでいるという問題がある。特に心臓疾患など循環器系統の障害は具体的な研究結果として認められている。最近では成人慢性疾患の発生が放射線露出により増加するという主張もたくさん出てきている。ハ・ミナは、「放射線に露出しなかった人に比べて、露出した人の慢性疾患の発生は1.5倍で高い数値ではないが、慢性疾患の全体数字が大きい
ため、彼らのうち放射線が原因になって疾患を患う人の比率が1%といっても実際の数字は大きいのである。全体社会の公衆保健学的意味が大きい」と主張した。

第4に、認定基準第10条には、「除外される固形がん」という題名で3つの固形がんを挙げている。対象は、「1. 悪性中皮腫、2. ホジキンリンパ腫、3. 黒色腫」である。とりあえずホジキンリンパ腫については、例えばインターネットポータルサイトで検索をしてみると、原因の中の一つとして「放射線」に言及している。この病気で現在も訴訟中の放射線労働者がいる。該当労働者が訴訟をすることになった契機はもちろん主治医の放射線についての言及だった。ただし、アメリカでも我が国のようにホジキンリンパ腫を放射線固形がんから除外してい

る。とにかくこのように具体的な固形がんを除く場合、十分な検討が成り立たなければならないが、どのような検討をしたのか疑問である。具体的に3つの固形がんを除外できるのかどうかに対しては専門家たちの精密な検討がなければならないと見る。

第5に、産業災害補償保険法との内容上の差の問題がある。我が国の職業病リストの中でも、放射線による職業性がんについては、産災補償保険法施行令別表3と「原安委認定基準」両方で規定している。言うなれば、放射線という同一の対象に対して認定基準が二つあるというわけである。放射線によるがんに対しては二つの規定で差がある。下の表を参照すると、形式上原安委の認定基準がより多くのがんを挙げているが、このような差がどのように発生するのかどうかに対しては全く検討しないでいる。

表3. 放射線が誘発するがんリスト

区分	がんの種類	備考
産業災害補償保険法 施行令別表3 10項	1. 唾液腺がん、2. 食道がん、3. 胃がん、 4. 大腸がん、5. 肺がん、6. 骨肉腫、7. 皮膚の基底細胞がん、8. 乳がん、9. 腎臓がん、10. 膀胱がん、11. 脳および中枢神経系がん、12. 甲状腺がん、 13. 急性リンパ性白血病および急性・慢性骨髄性白血病	骨肉腫と中枢神経系がんは原安委認定基準にない。
放射線作業従事者な	1. 肝臓がん、2. 甲状	肝臓がん、卵巣が

<p>どの業務上認定疾病範囲に関する規定第8条～第9条</p>	<p>腺がん、3. 卵巣がん、4. 脳腫瘍、5. 多発性骨髄腫、6. 大腸がん、7. 膀胱がん、8. 非ホジキンリンパ腫、9. 食道がん、10. 腎臓がん、11. 女性乳がん、12. 胃がん、13. すい臓がん、14. 唾液腺がん、15. 肺がん、16. 皮膚がん17. 白血病</p>	<p>ん、多発性骨髄腫、非ホジキンリンパ腫、すい臓がんは産災補償法施行令別表3にはない。</p>
---------------------------------	---	--

5. 線量規制における適正性の問題

線量規制と関連して最も重要なことは、低線量被曝についての問題である。上記で引用した「ECRR報告書」のほかにも、核開発勢力が掌握したいいわゆる「BEIR-VII報告書」などにおいても、低線量であっても健康に影響があるといういわゆるLNT(linear no-threshold)モデルを採択しているのが実情だ。特に、甲状腺がんについての事例は無数にある。ICRPは民間組織であり、核開発勢力が掌握している組織という点から、これを無条件に受け入れることはありえない。韓国が自主的に線量規制について客観的に議論することが必要だ。一般人は1mSvに規定すると同時に、作業員については5年で100mSvに規定する客観性はどこにもない。人の生命と健康を費用に換算せずには出てくることのない発想である。ICRPの論理は、事実上破綻している状態である。

線量規制と関連して、人に対する規制だけでなく例えば核廃棄物管理区域に対する線量規制や、放射線管理区域に対する線量規制が適正なのかについての問題も共に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現行ICRPの線量規制は、費用を念頭に置いて一律的に付与する方式に過ぎない。より向上した線量規制は最大限低く維持するという原則の下に作業別、領域別に細分化すると同時に、統一された基準を適用する必要がある。

6. その他制度上の問題

6-1)産業安全保健法の適用除外

韓国における放射線関連の労働者のうち、核発電所労働者の場合のみ産業安全保健法の(以下、産安法)適用除外となる。核発電所労働者のみ適用除外される産安法は、合計23個の条項に達する。大概の条項が原子力安全法施行令などで別途規定してはいるが、特に労働者の主体的な保健予防活動を事実上封じ込めていたり、有害作業請負禁止条項などを含ませたことは、反労働者的措置といえることができる。例えば、産安法の産業安全保健委員会は、使用者と同数で構成する委員会として、該当事業場の安全と保健を増進させるために必要な議論と措置を行うことができる。作業場の危険要素に対しては、現場で仕事をする労働者が一番よく理解することができ、一番切迫した問題である。産業安全保健委員会の適用除外は、労働者が主体的に参加する各種安全保健活動を基本的に封じ込める。合わせて有害作業は請負を禁止することが産業安全法の趣旨にもかかわらず、核発電所は下請け労働なしでは運営できないのが現実である。核発電所の産業安全保健委員会の条項と請負禁止条項適用除外は撤回しなければならない。

6-2)健康管理手帳の未交付

韓国政府は、放射線関連の労働者のうち、非破壊業務に従事する労働者にのみ健康管理手帳を適用する。核発電所の現場労働者にも同じように健康管理手帳を交付して労働者本人が自身の被曝量をいつも確認すると同時に、予防活動ができるように政策支援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6-3)被曝統計の現実反映

原子力安全委員会は、労働者の被曝統計を平均数値のみ発表し、機関別でも平均数値だけ発表する。

表4. 最近5年間の業種別平均被曝線量の現況(2018年末時点、単位:mSv)

年度	2014 年	2015 年	2016 年	2017 年	2018 年
業種別	平均	平均	平均	平均	平均

	線量	線量	線量	線量	線量
産業体	0.09	0.09	0.14	0.10	0.08
非破壊 検査	2.37	1.77	1.24	1.02	1.69
医療機 関	0.55	0.45	0.38	0.41	0.39
研究機 関	0.02	0.04	0.02	0.03	0.03
教育機 関	0.06	0.04	0.02	0.02	0.02
公共機 関	0.41	0.37	0.32	0.28	0.26
軍事機 関	0.08	0.01	0.01	0.08	0.11
発電所 (原発)	0.58	0.59	0.76	0.51	0.57
合計*	0.72	0.60	0.55	0.40	0.36

注) 合計の従事者数は、業種別の重複人員が含まれた人数である

(出典：原安委ホームページ)

放射線管理において平均線量というのは何の意味もない。一人一人の業務自体が違っただけでなく業務場所によっても被曝量が変わる。きちんとした被曝線量を具体的に確認するためには作業領域別に区分し、また元請け-下請けの区分も施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ような資料を算出しにくいのではない。ただ社会的波紋が大きくなることを懸念して隠しているだけである。労働者は自身の勤務環境を知らなければならない権利があり、国民、特に核発電所の地域住民もこのよう

な被曝線量を知らなければならない。

6-4)判読特異者に対する疑問点

原子力安全法施行令第2条には、判読特異者に対して「イ. 線量限度を超過して放射線に被曝した者。ロ. 線量計の毀損・紛失などによって線量判読が不可能になった者。ハ. 委員会が定める線量計の交換周期を2ヶ月以上過ぎた後、線量計を提出した者」の項目のうち、いずれか一つに該当する場合だと規定している。判読特異者は、毎年100名以上発生しているのが実情だ。

表5. 最近10年間における判読特異者の発生現況

年度別	2017年 年鑑	2016年 年鑑	2015年 年鑑	2014年 年鑑	2013年 年鑑	2012年 年鑑	2011年 年鑑
2007年							77
2008年						165	165
2009年					149	149	149
2010年				109	109	109	109
2011年			15	15	15	15	15
2012年		87	54	54	54	54	
2013年	113	113	35	35	35		
2014年	119	119	183	183			
2015年	109	109	114				

2016年	110	113					
2017年	79						

(出典：各年度放射線安全年鑑、名)

読者は察するだろうが、判読特異者は最低でも線量限度以上の被曝可能性が濃厚な人だ。判読特異者については、原子力年鑑に発表するほかに特別な情報公開がない。合わせて、時間が経過して判読特異者の数字が変わるのも非常に疑わしいことだ。上記の表を見ると、年度は原子力年鑑の発行年度である。通常、当該年度判読特異者については、暫定数値なので翌年に修正されるのはありえると考ええる。しかしすでに数年も経過した年度の判読特異者の数値が変わるのは納得がいかない。また、2010年に109名だった判読特異者が2011年に15名に急激に減少した事実なども疑問点を残す。このような点だけおいてみれば、判読特異者の管理が適正なものなのか信頼性を確信できない。合わせて判読特異者に対する統計自体も上記のイ～ハ項の項目別、各機関別に算出することが望ましい。このような点は国会レベルで十分に検証できるだろうと考える。

6-5) TLD着用の問題

TLDは Thermoluminescent Dosimeterの略字として熱蛍光線量計と呼ぶ。核発電所では全員これを着用する。当然のことだが労働者個人別で着用する。原安委ではTLDに記録された数値を根拠に年間50mSv超過者を選別して、また年平均線量の20mSvを超える人に対して通知する役割をする。現場労働者にとって、TLDの記録によって通知を受けるということは、すなわち「解雇」を意味する。そのことから労働者にとってTLDは自身の線量を教えてくれる道具ではなく、自身の線量が年間限界値に到達しないように数値を操作しなければならない道具なのである。例えば、核発電所の労働者は放射線管理区域に入る場合、必ず自身のTLD数値を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自身の線量積算分が年間限界値に到達する可能性があれば作業前に外して仕事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予防の目的というよりは公式的な数値を出さないようにするためにTLD数値を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絶対にTLDを外す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実際には黙認される。

原安委ではTLDを着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放射線管理区域の基準を、年間6mSv以上を被曝する可能性がある場所と規定した。しかし核発電所内の非管理区域でも常に放射線が流れる。とりわけ、すべての核発電所の中心機能を担当する冷却

水が流れる配管は放射線漏出の重要な地点といえる。日本の被爆医師、肥田舜太郎は、核発電所を稼動して一定の時間が経過すれば「配管の中の熱と放射線により腐食し隙間ができ、このときから放射線が漏れ出る。これは防止できない。完全に防ごうとするならその管を、内側はおいておくとしても外側だけはとても厚くしてしまえば可能かもしれない。そのような設備投資をするととなると電気料金が上がるほかはない」と主張した。要するに配管をできるだけ安全に遮蔽しようとする場合、核開発勢力が最も重要だと考える「費用」問題が浮上するため、これを無視する。このような問題は労働者にだけでなく、地域住民にも一定の影響を与える。概してすべての核発電所の配管メンテナンスは、下請け労働者が引き受ける。日常的な配管メンテナンス作業にはTLDを着用はしない。直径が大きい配管は、人が直接配管の中に入って水垢を洗い落とすと労働者は証言する。人の生命と健康を優先するならば、核発電所内のすべての現場作業員に対してはTLDを着用するように制度を変更しなければならない。

6-6) 「告示」体系の問題

概して職業性疾病の認定基準については、産業安全保健法施行令や施行規則に詳しい内容を定めている。福島核発電所事故以後、韓国政府は原子力安全法を制定した。名分は原子力をより安全に運営するためだ。しかし一般的な職業病に対する認定基準は法律の形態と規定しているが、唯一放射線に対する認定基準だけを別に取り出して原安委の告示形態を採択するのは、批判を受けて当然である。これは原子力行政の秘密主義、一方主義、行政便宜主義のためである。告示は、「法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一定の事項を一般に知らせるための文書」である。しかし法令(大統領令や国務総理令)の制定や改正は一定の手順を踏ま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点で告示とは違う。現行「行政手続き法」第46条に基づき、国民の権利・義務に事実上多くの影響を及ぼし、裁判所でも法規命令的な効力を認めている訓令は、インターネットホームページなどに20日以上行政予告をして意見提出手順を踏まなければならない。告示はこのような形式を全く経ない。国民の理解が相容れない事項に対して意見を取りまとめさえしないということは深刻な問題である。

7. 正規職保障闘争の重要性

核発電所の下請け労働問題は多くの人々が提起した。特に、2018年末には国会で公聴会も行われた。現政権もこのような点を意識しているが、核開発推進勢

力の妨害でなかなか進展を見ることができない。核発電所は、まず下請け労働者に被曝を強要する。その次に地域の健康脆弱階層である子供や妊婦に相対的に高線量を強要する。このような人々の犠牲なくして核発電所は運営が難しい。今まで多様で色々な統計があったが、ひとまず筆者は次の統計を提示する。現在も大同小異だという点で大きな無理がないとみている。下請け労働者が半数を越える。

表6. 雇用形態別の核発電所労働者現況

		コ リ	ハン ビット	ウォル ソン	ハヌ ル	合 計
人 数(名)	総数	4,225	2,917	4,142	4,461	15,775
	正規職	2,223	1,396	1,583	1,911	7,113
	非正規職	2,031	1,521	2,559	2,550	8,662
	期間制(直接雇用)	25	22	23	15	85
	下請け業者-1(間接雇用)	1,371	955	1,337	1,574	5,237
	下請け業者-2(派遣/追加人材)	636	544	1,199	961	3,340
割 合(%)	正規職	52	48	38	43	45
	非正規職	48	52	62	57	55
	期間制(直接雇用)	1	1	1	0	1
	下請け業者-1(間接	32	33	32	35	33

	雇用)					
	下請け業者-2(派遣 /追加人材)	15	19	29	22	21

(資料：韓国水力原子力 国会提出資料、2015年7月基準)

ICRP線量規制が5年100mSv以内であり、年間最高50mSvを認めるという内容は下請け人材を狙ったものである。相対的に線量が高くても、1～2年雇用して被曝を中断させれば大丈夫だという発想だ。しかし、これは一回使って捨てるという発想と全く違うところがない。有害作業を禁止した産業安全法を適用から除外すると、核発電所は労働者の創造的な安全保健活動や主体的な予防活動を進めづらい。このような問題は正規職化される場合、相当部分解消することができる。下請け労働者には短期間高線量を強要しても、長期間勤務を継続しなければならない正規職には高線量を強要できない。線量規制自体を根本的に改善せずには労働者のがんや各種疾病が列をなすだろう。核発電所の労働者勤務環境の改善は、正規職化を達成した時はじめて労働者が主体として前に立ち、実際的な改善を成し遂げることができる。

『増補 放射線被曝の歴史—アメリカ原爆開発から福島原発事故まで—』、中川保雄、明石書店、2011年、35ページ、

BEAR(Committees on the Biological Effects of Atomic Radiation). 注) 10を参照

核開発勢力は当時、これを『サイエンス』という雑誌に発表した。中心的な内容は次の通りである。

「核兵器と原子力発電開発で得られる利益を受容するなら、開発に必然的に伴う放射線被ばくによる生物学的リスクを一定部分受け入れるしかない。許容線量値は、利益とリスクのバランスを考慮して定める必要がある。社会経済的利益と放射線による生物学的リスクの均衡を考慮することは、現在の限られた知識では正確に算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が、欠陥を純粋に欠陥としてのみ認めるならば、現時点でも最善の評価を下すことができる。このような意味において、低線量被ばくのリスクを評価するとしたら、リスクの大きさを決定する要素として、一般大衆の許容線量については、人類が誕生以降、歴史課程を通じて継続的に被ばくした自然放射線の水準と関連させて考えてみるることができる。リスクと利益(ベネフィット)のバランスをとった一般人の許容線量は、自然放射線、年間100ミリレム(1ミリシーベルト)を超えない範囲でなければならないのだ。」(上記の本、116ページ)

しかし、このような主張にも依然として生物学的リスクが不可避だという点だけは認めざるを得なかった。生物・医学的な根拠から、放射線による疾病の「実際の発生は無視する程度」という論理で被ばくを正当化してみても、リスクがあるという点是不変であるというのが体系の核心だ。

科学的には、それ自体が矛盾した説明である。「社会経済的利益」と「生命と健康の損失」という対立構図が大変な矛盾であったが、1960年代を経て、核開発推進勢力の核心哲学として作用した。

上記の本、156ページ

特に当時から反核運動において主張されてきた広島・長崎被爆調査の問題点は次のとおりである。

①

1945年9月初めまでの急性死亡のみを対象に評価し、1945年10月から12月まで続いた急性死亡は評価から除外

② 爆心地から2km以内の人のみ調査し、2km以外の人を除外

③ 急性死亡を核爆弾投下後、40日に制限し実際には実に3か月間続いたそのほかの急性死亡を除外

④ 調査対象を広島・長崎居住者のみに制限

⑤ 高線量被爆者と低線量被爆者を比較対象する誤った方法を採用

「欧州放射線リスク委員会(ECRR)

2010年勧告事項、電離放射線の低線量被曝による健康上の影響」、ソン・ジュヒョン翻訳、39ページ

「科学技術部告示『放射線作業従事者などの業務上疾病認定範囲に関する規定』の改善研究」最終報告書、イム・ヒョンスルほか、2004年11月、本文1ページ

インターネットのヤフーというポータルサイトで多様な検索を通じて確認した内容である。

上記ECRR勧告20ページ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5XXXH002105>

<https://nonukesnews.kr/1402>

BEIRは、Committee on the Biological Effects of Ionizing

Radiationの略字として通常、「電離放射線の生物学的影響に関する諮問委員会」と呼ぶ。これは、既存のBEAR (Committees on the Biological Effects of Atomic

Radiation)委員会と一文字が違うだけである。つまり、「原子(Atomic)」放射線が「電離(Ionizing)」放射線に変わったのである。中川保雄

によると、学界がまるで第三者のように登場し、放射線被曝を無視しながら原子力産業を擁護する役割を果たしている。一種の「御用科学者」といえる。歴史上初の事例がBEAR委員会である。BEIRもこうした性向をそのまま持っている。BEAR委員会と同様に、BEIR委員会の後ろにも原子力発電独占大企業があることは明らかだ。では、なぜ原子放射線から電離放射線に変わったのか。それは核問題の主要領域が核実験による「放射性降下物」問題から「核発電所」問題に変わったからだ。今まで7回の報告書を発刊している。これらは、BEIR-IとIIではいわゆる「コスト-ベネフィット論」の論理を提供した。BEIR-IIIでは委員会の強硬派の勝利によっていわゆる放射線量の「しきい値」を認めた。(直線関係ではないふっくらした曲線関係)。BEIR-Vでは、放射線の発がんリスクを従来よりも3~4倍修正したが、線量の影響関係が依然として直線ではなく曲線の関係が正しいと主張した。BEIR-VIIでは直線関係(いわゆるLNTモデルの採択)を採択する真似をしている。このような点だけでも大きな成果といえるが、低線量被ばくによるバイスタンダー(bystander)

効果や心血管系疾患の誘発可能性は証拠が不足していると主張した。要するにBEIR報告書は、反核運動と各種医学資料の集中的な提起を仕方なく受け入れる程度で、核推進勢力の立場を擁護することに重点を置く。

韓国水力原子力(韓水原)の正規職労組では、甲状腺がんを「風邪」と呼ぶ。風邪のようにありふれているためである。韓水原正規職の中には、甲状腺がんの手術を受けた人はかなり多いが、彼らが労災補償申請をしない

非核・平和のための日韓国際フォーラム

ためにこのような事実が公式的にあらわれていない。推定するに、こういった事実が明るみに出る場合、核発電所の運営に支障を与えかねず、核開発の当為性が揺らぐかもしれないためである。

『肥田舜太郎が語るいま、どうしても伝えておきたいこと 内部被曝とたたかい、自らのいのちを生かすために』、肥田舜太郎著、バク・チャンホ訳、健康メディア協同組合、168ページ

Workshop④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따른 피폭 가능성 관리기준과 한국내 원자력발전소 방사능폐기물 방출에 따른 주변주민피폭관리기준의 비교

日本産水産物の輸入にともなう被ばく可能性管理基準と
韓国における原子力発電所放射能廃棄物放出にともなう
周辺住民の被ばく管理基準の比較

백도명 반핵의사회 공동대표

白道明 (ペク・ドミョン、反核医師会共同代表、ソウル大学保健大学院教授)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따른 피폭 가능성 관리기준과 한국 내 원자력발전소 방사능폐기물 방출에 따른 주변주민 피폭 관리기준의 비교>

백도명 반핵의사회 공동대표

지난 2013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정부는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로 인한 피폭을 이유로 후쿠시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음

한편 지난 1978년 고리원전1호기의 가동을 시작으로, 한국정부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방사능폐기물 방출로 인한 주변주민들의 피폭을 허용하고 있음

원전으로부터 방출된 방사능 폐기물로 인해 오염된 자연환경에 노출되면서 주민들이 피폭된다는 점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와 원전으로부터 방사능 폐기물 방출 허용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로 판단됨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WTO 항소법정에 제출된 문건을 통해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적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보호수준(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ALOP)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이러한 한국정부의 기준이 한국 내 원전 방사능폐기물로 인한 주민노출과 관련하여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함

(1)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관리하는 한국정부가 내세우는 보호수준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적절한 보호수준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ALOP)은 다음과 같은 3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것으로 밝히고 있음

1. 정량적 기준으로서 일반인의 피폭선량이 1 mSv/yr 이하일 것
2. 정성적 기준으로서 합리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일 것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
3. 자연적 상황에 있는 일상적인 환경 (ordinary environment) 수준을 넘지 않을 것

한편 일본 정부는 정량적 기준으로서 수산물의 세슘 농도가 100 Bq/Kg수준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일반인 피폭선량 기준인 1 mSv/yr의 수준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일본정부의 보호수준이 한국정부의 적절한 보호수준을 만족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분쟁 상소기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음

5.1.4 Conclusion

A panel examining a claim under Article 5.6 of the SPS Agreement is charged with, inter alia, ascertaining the respondent's ALOP on the basis of the totality of the arguments and evidence on the Panel record. A panel is also required to identify the level of protection that would be achieved by the alternative measure proposed by the complainant. The Panel in this dispute accepted Korea's own articulation of the relevant ALOP as one containing the following elements concerning radioactivity levels in food consumed by Korean consumers: (i) the levels that exist in the ordinary environment; (ii) exposure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nd (iii) the

quantitative dose exposure of 1 mSv/year. While the Panel accepted Korea's articulation of this multi-faceted ALOP, its analysis focuses on the quantitative element of 1 mSv/year. The Panel reached conclusions with respect to Japan's alternative measure that leave unclear whether it considered the alternative measure to satisfy all of the elements of Korea's ALOP it had identified. The Panel's findings effectively subordinated the elements of ALARA and radioactivity levels "in the ordinary environment" to the quantitative element of exposure below 1 mSv/year. This is at odds with the articulation of the ALOP explicitly accepted by the Panel at the outset of its analysis.

We therefore find that the Panel erred in its application of Article 5.6 of the SPS Agreement in finding that Japan's proposed alternative measure achieves Korea's ALOP. Consequently, we reverse the Panel's findings of inconsistency with Article 5.6 with respect to: (i) the adoption of the blanket import ban (except for the ban on Pacific cod from Fukushima and Ibaraki) and the 2013 additional testing requirements; and (ii) the maintenance of all of Korea's measures.

5.1.4. 결론

패널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대한 협정(SPS 협정), 제5.6조에 대한 분쟁을 검토하는데 있어, 기록에 포함된 모든 주장과 증거에 근거하여 피제소국의 적절한 보호수준(ALOP)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패널은 제소국이 제시한 대안적 조치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보호수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패널은 본 분쟁에 있어 한국인들이 소비하는 식품의 방사능 수준에 대한 적절한 보호수준(ALOP)에 (i) 일상적인 환경에 존재하는 수준, (ii)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의’ 노출, (iii) 그리고 정량적 노출량으로서 1 mSv/year 등의 요소들이 포함된다는 한국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패널은 적절한 보호수준(ALOP)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한국의 주장을 수용하였지만, 그 분석에 있어서는 정량적 기준인 1 mSv/year만 적용하였다. 패널은 일본의 대안적 조치가 한국의 적절한 보호수준(ALOP)의 요소들을 모두 만족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1심 판정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다른 2개의 정성적 기준인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의 노출(ALARA)과 일상적 환경(ordinary environment)의 방사능 수준에 대한 요소들이 정량적 기준인 1 mSv/year에 종속되는 판정을 하였다. 이 판정은 1심 패널이 분석에서 적절한 보호수준

(ALOP)에 대한 주장을 명시적으로 수용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SPS 협정 제5.6조를 적용함에 있어 일본이 제시한 대안적 조치로도 한국의 적절한 보호수준(ALOP)을 달성할 수 있다는 1심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판정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i) 포괄적 수입금지조치 (후쿠시마와 이바라키 산 태평양 대구는 제외)와 2013년 추가 검사증명서 요구의 채택, (ii) 한국이 모든 조치를 유지하는 것 등이 제5.6조를 위반하였다는 1심 판정을 파기한다.

세계무역기구 2심 상소기구가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아래 인용한 바와 같이 특히 1심 패널이 “합리적으로 달성가능한 최대의 낮은 수준의 노출(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의 결과는 단순히 주어진 노출값이 아니라, 과정, 절차, 그리고 판단 등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ALARA는 결과가 아니라 수단에 구속된다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ALARA를 집행하는 목적에 대한 근거를 인용하였기 때문임

In particular, the Panel cited evidence concerning the objective of implementing ALARA, which stated that "ALARA is an obligation of means, and not an obligation of results, in the sense that the result of ALARA depends on processes, procedures, and judgments and is not a given value of exposure."

(2) 일본산 수산물 내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적절한 보호수준(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ALOP)에 있어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차이에 대한 검토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수산물에서 검사되는 세슘 농도를 100 Bq/Kg 기준 이하로 유지함으로써, 일반인의 수산물 섭취 등을 통한 방사능 피폭선량 1mSv/yr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일부 자료들에 근거하여, 현행 일본 정부의 수산물 검사 기준이 한국 정부의 적절한 보호수준(ALOP)을 충족한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음

일본 정부 주장에 대한 검토

일본 정부의 주장은 아래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오염된 수산물로부터 초래되는

건강영향이 야기되기까지의 과정을 수산물 일부 시료 내의 세슘 농도를 통해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음

수산물 -> 일부 시료 -> 세슘 -> 다른 방사능오염물질 포함 전체 방사능 물질 -> 피폭선량 -> 개인적 민감성 -> 건강영향

즉 좀 더 구체적으로 전체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들이 전제되고 있음

· 수산물 내의 세슘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표본 검사를 통해, 전체 수산물의 세슘 오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가정

· 수산물 내의 세슘 농도 검사 자체의 오차나 변이가 측정하고자 하는 수준에서 항상 최소한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가정

· 이렇게 조사된 수산물 내의 세슘 농도가 수산물 내의 다른 방사능 오염물질을 대표할 수 있다는 가정, 즉 수산물 내의 세슘 농도와 반감기가 훨씬 더 긴 스트론튬의 농도는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음으로써 서로 비례하는 농도라는 가정

· 그 이외 세슘 농도를 기반으로 계산되는 피폭선량으로 초래되는 건강영향의 확률이 내부 피폭에 따른 여러 개인적 민감성이나 특수한 신체 조건 등을 감안하고서도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가정

즉 일본 정부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방사능 피폭으로 인하여 건강영향이 초래된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인한 불확실성들을 모두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하여 전체 피폭선량과 그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임

- 수산물 섭취량
- 개인적 민감성
- 표본 시료 검사 시스템
- 세슘 측정방법
- 원전으로부터 방출된 세슘과 다른 방사능 오염물질과의 관계
- 방사능 오염물질로부터의 피폭선량 계산
- 피폭에 따른 건강영향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한 검토

한국 정부의 주장은 일반인 피폭선량 한도 1 mSv/yr의 정량적 기준은 관리상의 최대 한계치로서,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인지 내지는 일상적인 환경에서 기대되는 자연적 수준인지에 대한 정성적인 판단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피폭선량 최대 한계치 이하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그러한 관리가 작동될 수 있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일본정부의 세슘 농도 기준을 지키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량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수산물 시료 내의 세슘과 다른 방사능오염물질 특히 스트론튬 간의 관계가 일정하지 않음
- 동일한 시점에서 검사시료 내의 세슘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음

이 같은 한국정부의 주장은 일본정부 주장의 논리와 비교할 때, 세슘이나 다른 방사능 동위원소의 측정치들과 그들 간 관계에 있어서의 변이로 대표되는 불확실성을 비롯하여, 각 단계별 변이가 어떠한 상태인지, 그리고 그러한 단계별 변이를 파악하고 최소화시키는지를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음

더 나아가 이러한 주장은 전체 원전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능 오염물질 관리의 단계별 과정들을 모두 망라하면서 어떻게 관리가 합리적으로 달성가능한 수준까지 노출을 낮추고 있는지, 즉 ALARA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정성적 판단과 맞닿아 있을 수도 있음,

즉 식품 내 방사능 오염물질이 현재 어떤 수준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기보다, 좀 더 나아가 오염물질 수준 변이의 시간적 추세 및 공간적 차이에 대한 정성적 검토를 통해 현재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관리가 그러한 가능성을 감안하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음

그러나 한국정부의 기준들은 ALARA 기준과 자연 방사능 수준으로서의 기준들을 어떻게 적용하여 전체 관리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세슘 100 Bq/Kg이라는 정량적 기준이 전체 관리의 최종적인 결과를 담보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여러 단계별 가정들과 그러한 가정들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각 단계별 변이에 대한 자료들을 만들고 검토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확인하기 어려움

(3) 한국 내 원전으로부터의 주민 피폭선량의 관리에 대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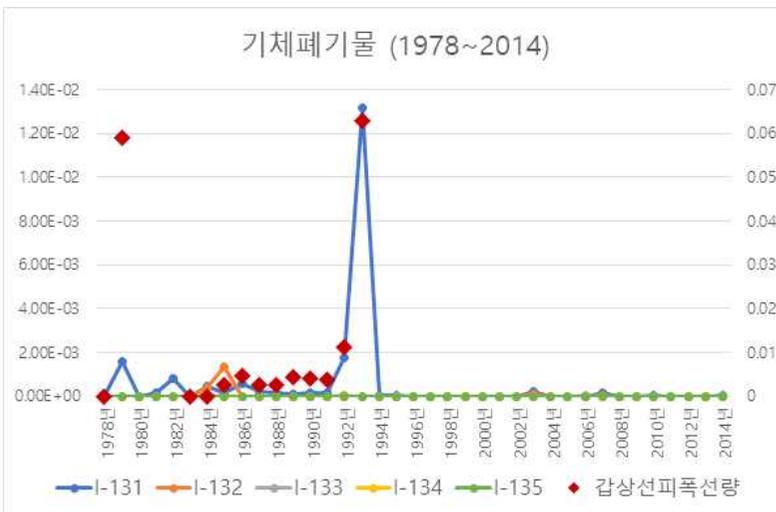
주민피폭선량 감시체계와 한국의 보호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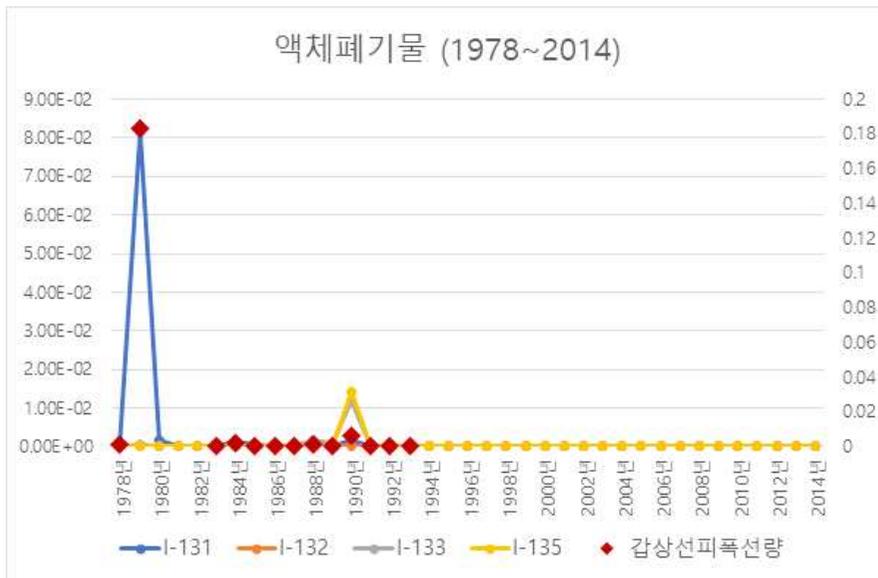
한국 원전 주변주민들의 환경방사능 피폭을 감시하기 위해 세 가지 자료를 구축하고 있음

- 원전으로부터의 방사능 폐기물 방출에 따른 방출량 자료
- 원전 주변 환경에서 측정되는 환경 방사능 자료
- 방출량 자료와 노출 모델에 근거한 원전 주변 주민들이 노출되는 피폭선량 자료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의 정확도, 신뢰도 등에 대한 평가기준, 그리고 자료들의 정량적 결과에 근거한 피폭관리에 대한 구체적 관리기준은 찾을 수 없음

고리원전 1호기의 방사능폐기물 방출량 자료





좀 더 구체적으로 원전으로부터의 방사능 폐기물 배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의 이상 소견이 확인되고 있음

- 지난 1979년, 그리고 1993년 각각 평상시의 수천 배가 넘는 양의 기체 및 액체 폐기물이 배출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정확한 원인과 관리 변경 상황이 확인되고 있지 않음
- 지난 1981년부터 83년까지 주민들의 피폭선량이 추정 계산되지 않았음
- 지난 1979년 해조류의 방사능 요오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환경방사능 측정의 질관리와 정도관리에 대한 자료가 없음
- 그 외 방출된 방사능의 핵종이 얼마큼 완벽하게 파악되었는지에 대한 기본 자료가 없음

이러한 자료의 이상을 바탕으로 검토하였을 때, 한국 정부가 수행하였던 원자력발전소 관리의 맹점은 다음과 같음

» 아래에 제시된 예와 같이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따라 건강 영향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기까지의 구체적 단계들과 그러한 단계를 아우르는 전체 관리 틀이 없음

원자력발전소 운영 -> 방사능 폐기물 방출 -> 환경 오염 -> 대기, 수질, 식품 등을 통한 노출 -> 피폭 선량 -> 건강영향

» 최종적인 문제에 이르기 이전의 과정에 대한 관리를 통해 어떻게 원전 운영과 건강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각 기준별 관리 대안이 없음

- 측정의 불확실성: 각 단계별 측정 방법 및 자료 생산 방식
- 평가의 불확실성: 측정에 따른 변이의 범위와 평가 기준
- 대안의 불확실성: 평가 기준에 따라 제시될 수 있는 서로 다른 관리 대안들
- 관리의 불확실성: 관리 대안에 따른 문제 해결 여부의 확인
- 관리체계의 불확실성: 최종적인 문제 발생에 대한 추적 관찰

앞서 지적된 원전으로부터의 방사능 폐기물 방출과 관련된 자료에 근거하여 검토하였을 때, 실제 평가와 대안도출에 있어, 한국 정부는 자연 방사능 수준과 ALARA 원칙에 따른 기준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한편 현재 라돈이 방출되는 침대로 인한 건강 영향의 관리가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이 WTO 항소기구에 제출한 한국 정부의 적절한 보호기준 (Acceptable Level of Protection, ALOP)을 어떻게 자체적인 방사능 오염 제품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주목되고 있음

한국 정보의 ALOP

1 mSv/yr의 기준 이외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

Ordinary environment (자연 방사능 수준)

日本産水産物の輸入にともなう被ばく可能性管理基準と韓国における
原子力発電所放射能廃棄物放出にともなう
周辺住民の被ばく管理基準の比較

白道明（ペク・ドミョン、反核医師会共同代表、
ソウル大学保健大学院教授）

2013年の福島原発事故以後、韓国政府は放射能に汚染された水産物による被ばくを理由に福島地域を中心にした日本産水産物の輸入を規制している。

一方、1978年の古里(コリ)原発1号機の稼働をはじめ、韓国政府は原子力発電所の稼働にともなう放射能廃棄物放出による周辺住民の被ばくを許容している。

原発から放出された放射能廃棄物によって汚染された自然環境にさらされ、住民が被ばくするという点で日本産水産物の輸入規制と原発からの放射能廃棄物放出の許容は互いに関連している問題と判断される。

日本産水産物の輸入と関連して、日本政府と異なる立場を取っている韓国政府は、WTO控訴法廷に提出した文書を通じて、韓国の立場から日本産水産物の輸入に適用するのに適切だと判断される保護水準(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ALOP)を提示しており、日本産水産物の輸入と関連したこのような韓国政府の基準が、韓国における原発放射能廃棄物による住民への露出と関連して実際に適用されているかを検討する。

(1) 日本産水産物の輸入を管理する韓国政府が打ち立てた保護水準

日本産水産物の輸入に対し、韓国政府が採択している適正な保護水準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ALOP)は、次のような3つの要素から成り立つものと明らかにしている。

1. 定量的基準として、一般人の被ばく線量が1 mSv/yr以下であること
2. 定性的基準として、合理的に可能な水準で最も低い水準であること(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
3. 自然的状況にある日常的な環境(ordinary environment)の水準を越えないこと

一方、日本政府は定量的基準として水産物のセシウム濃度が100 Bq/Kgの水準を越えないようにすることによって、一般人の被ばく線量基準である1 mSv/yrの水準を守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点を強調することにより、日本政府の保護水準が韓国政府の適切な保護水準を満たすという立場を表明したが、これに対する世界貿易機関(World Trade Organization, WTO)紛争上訴機構の判断は次のとおりである。

5.1.4 Conclusion

A panel examining a claim under Article 5.6 of the SPS Agreement is charged with, inter alia, ascertaining the respondent's ALOP on the basis of the totality of the arguments and evidence on the Panel record. A panel is also required to identify the level of protection that would be achieved by the alternative measure proposed by the complainant. The Panel in this dispute accepted Korea's own articulation of the relevant ALOP as one containing the following elements concerning radioactivity levels in food consumed by Korean consumers: (i) the levels that exist in the ordinary environment; (ii) exposure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nd (iii) the quantitative dose exposure of 1 mSv/year. While the Panel accepted Korea's articulation of this multi-faceted ALOP, its analysis focuses on the quantitative element of 1 mSv/year. The Panel reached conclusions with respect to Japan's alternative measure that leave unclear whether it considered the alternative measure to satisfy all of the elements of Korea's ALOP it had identified. The Panel's findings effectively subordinated the

elements of ALARA and radioactivity levels "in the ordinary environment" to the quantitative element of exposure below 1 mSv/year. This is at odds with the articulation of the ALOP explicitly accepted by the Panel at the outset of its analysis.

We therefore find that the Panel erred in its application of Article 5.6 of the SPS Agreement in finding that Japan's proposed alternative measure achieves Korea's ALOP. Consequently, we reverse the Panel's findings of inconsistency with Article 5.6 with respect to: (i) the adoption of the blanket import ban (except for the ban on Pacific cod from Fukushima and Ibaraki) and the 2013 additional testing requirements; and (ii) the maintenance of all of Korea's measures.

5.1.4. 結論

パネルは、衛生および植物衛生措置の適用に対する協定(SPS協定)、第5.6条に対する紛争を検討するにあたって、記録に含まれたすべての主張と証拠に基づき被提訴国の適切な保護水準(ALOP)を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パネルは提訴国が提示した代案的措置を通じて達成されることができ保護水準を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パネルは、本紛争において韓国人が消費する食品の放射能水準に対する適切な保護水準(ALOP)に (i)日常的な環境に存在する水準、(ii) 「合理的に達成可能な、最も低い水準の」露出、(iii)そして定量的露出量として1 mSv/yearなどの要素が含まれるという韓国の主張を受け入れた。パネルは、適切な保護水準(ALOP)の多様な側面に対する韓国の主張を受け入れたが、その分析においては定量的基準である1 mSv/yearのみ適用した。パネルは、日本の代案的措置が韓国の適切な保護水準(ALOP)の要素をすべて満たすのか否かが不明確な状態において1審判定を下した。結果的に、他の2つの定性的基準である合理的に達成可能な最も低い水準の露出(ALARA)と日常的環境(ordinary environment)の放射能水準に対する要素が定量的基準である1 mSv/yearに従属する判定をした。この判定は、1審パネルが分析において適切な保護水準(ALOP)に対する主張を明らかに受け入れたことと一致しない。

したがって私たちは、SPS協定第5.6条を適用するにあたり、日本が提示した代案的措置も韓国の適切な保護水準(ALOP)を達成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ふ1審判定が誤ったと判定する。結論的に私たちは、(i) 包括的輸入禁止措置(福島とに茨城産マダラは除外)と2013年の追加検査証明書要求の採択、(ii) 韓国がすべての措置を維持することなどが第5.6条を違反したといふ1審判決を破棄する。

世界貿易機関2審上訴機構がこのような結論を下すことができたのは、下記に引用する通り、特に1審パネルが「合理的に達成可能な最も低い水準の露出(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の結果は、単純に与えられた露出値ではなく、過程、手続き、そして判断などに左右されるという点でALARAは結果ではなく手段に拘束されるという点」を言及することによって、ALARAを執行する目的に対する根拠を引用したためである。

In particular, the Panel cited evidence concerning the objective of implementing ALARA, which stated that "ALARA is an obligation of means, and not an obligation of results, in the sense that the result of ALARA depends on processes, procedures, and judgments and is not a given value of exposure."

(2) 日本産水産物の放射能汚染に対する適切な保護水準(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ALOP)における日本政府と韓国政府間の差についての検討

日本政府は、今まで水産物で検査されるセシウム濃度を100 Bq/Kg基準以下に維持することにより、一般人の水産物摂取等を通じた放射能被ばく線量1mSv/yr基準を満たすことができるといふ一部資料に基づいて、現行の日本政府の水産物検査基準が韓国政府の適切な保護水準(ALOP)を満たすという立場を維持してきた。

日本政府の主張に対する検討

日本政府の主張は、下に提示された通り、汚染された水産物からもたらされる健康への影響が引き起こされるまでの過程を、水産物の一部試料のセシウム濃度

を通じて把握し管理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仮定に基づいている。

水産物 → 一部試料 → セシウム → 他の放射能汚染物質を含む全体の放射能物質 → 被ばく線量 → 個人の敏感性 → 健康への影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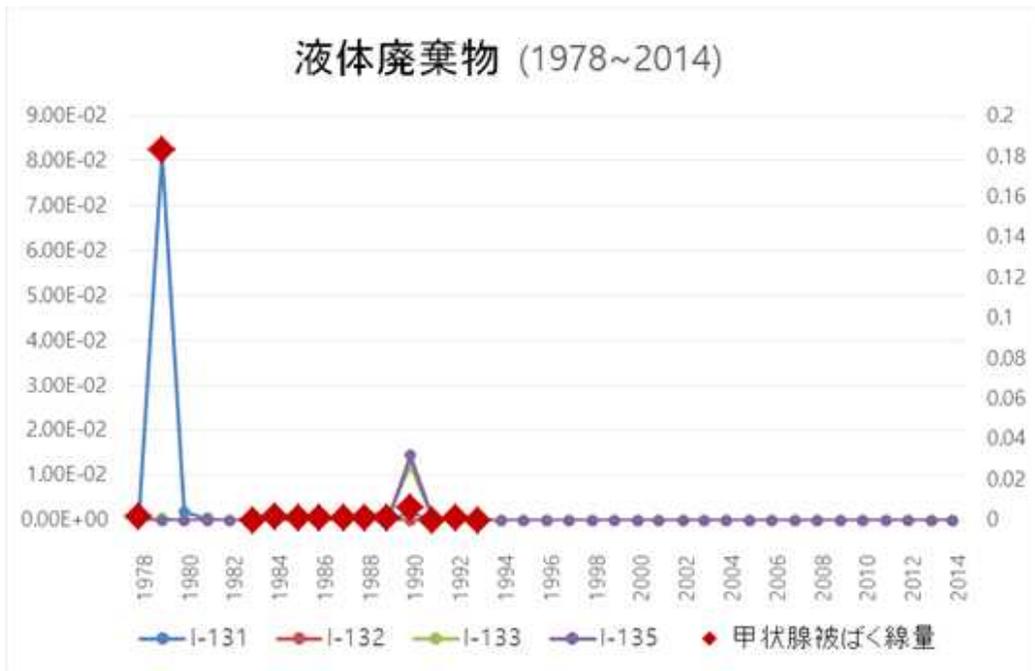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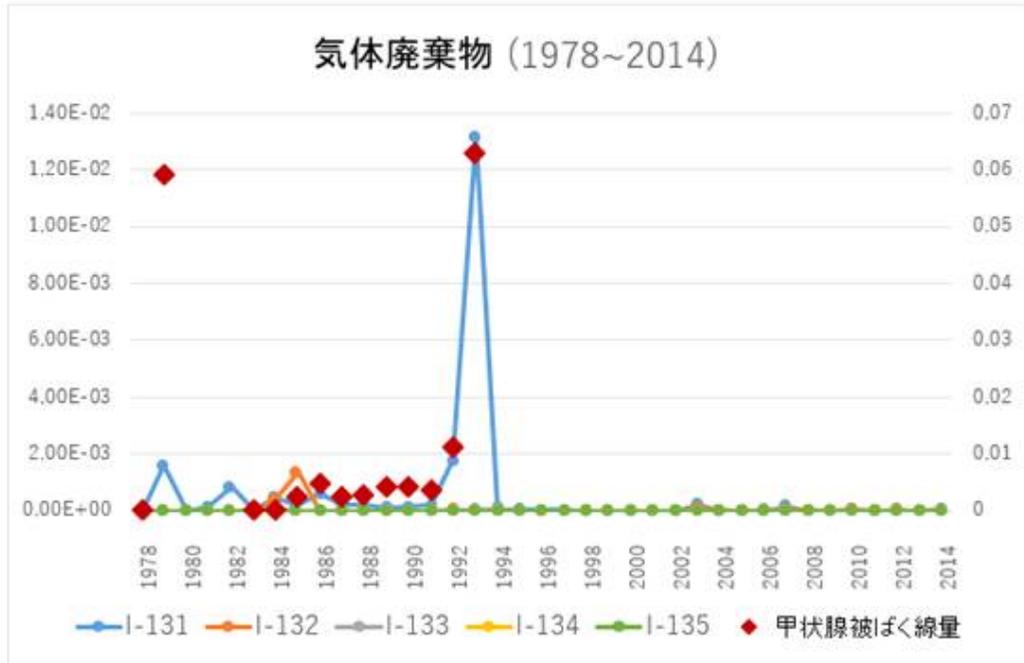
つまりもう少し具体的には、全体の過程について次のような仮定が前提になっている。

- ・ 水産物内のセシウムが等しく分布していて、これに対する標本検査を通じて、全体の水産物のセシウム汚染現況を把握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仮定
- ・ 水産物内のセシウム濃度検査自体の誤差や変移が、測定しようとする水準において常に最小限で維持され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仮定
- ・ このように調査された水産物のセシウム濃度が、水産物の他の放射能汚染物質を代表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仮定、すなわち水産物のセシウム濃度と半減期がはるかに長いストロンチウムの濃度は、一定の関係を結んでいることによって互いに比例する濃度であるという仮定
- ・ その他にセシウム濃度をベースに計算される被ばく線量によりもたらされる健康への影響の確率が、内部被ばくにともなう様々な個人の敏感性や特殊な身体条件などを勘案しても十分な根拠を基に把握され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仮定
- ・ すなわち日本政府の主張は、次の通り、放射能被ばくによって健康に影響がもたらされる確率に影響を及ぼす要因による不確実性を全部把握して、これを勘案して全体被ばく線量とそれによる健康への影響に対する管理が成り立つことができるという主張である。
- ・ 水産物摂取量
- ・ 個人的敏感性
- ・ 標本試料検査システム
- ・ セシウム測定方法
- ・ 原発から放出されたセシウムと他の放射能汚染物質との関係
- ・ 放射能汚染物質からの被ばく線量計算

- ・ 被ばくにともなう健康への影響
- ・ 韓国政府の主張に対する検討
- ・ 韓国政府の主張は、一般人の被ばく線量限度1 mSv/yrの定量的基準は管理上の最大限界値として、合理的に達成可能な最も低い水準なのか、ないしは日常的な環境において期待される自然的水準なのかに対する定性的な判断を通じて管理することによって、被ばく線量最大限界値以下で管理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主張であるが、そういった管理が作動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根拠を具体的に提示してはしない。
- ・ ただし次のような点で、日本政府のセシウム濃度基準を守るのか否かに対する定量的判断が充分でないこともありうるという点を強調している。
- ・ 水産物試料内のセシウムと異なる放射能汚染物質、特にストロンチウムとの間の関係が一定でない
- ・ 同一の時点でも検査試料内のセシウムの分布が均一でない
- ・ このような韓国政府の主張は、日本政府の主張の論理と比較する時、セシウムや他の放射能同位元素の測定値とそれらの間の関係における変移として代表される不確実性をはじめとして、各段階別の変移がいかなる状態なのか、そしてそのような段階別の変移を把握して最小化させるかを定性的に判断することの重要性を強調することで理解されうる。
- ・ さらに、このような主張は、全体の原発から放出される放射能汚染物質管理の段階別過程を全部網羅すると同時に、どのように管理が合理的に達成可能な水準まで露出を低くしているのか、すなわちALARA基準が適用されるのかに対する定性的判断と互いに抵触していることもありうる。
- ・ すなわち、食品の放射能汚染物質が現在どのような水準なのかを確認することにとどまるより、もう少し踏み込んで汚染物質の水準変移の時間的傾向および空間的差に対する定性的検討を通じて、現在よりさらに低い水準に下げられる可能性があるのか、そして管理がそのような可能性を考慮すると同時に成り立つのかに対する判断を含むものと理解されうる。

- ・
- ・ しかし韓国政府の基準は、ALARA基準と自然放射能水準としての基準をどのように適用して全体の管理目的が達成されることができるとを具体的に説明できず、実際のセシウム100 Bq/Kgという定量的基準が全体管理の最終的な結果を担保するために必要な様々な段階別仮定と、そういう仮定が成立するかを確認するために必要な各段階別変移に対する資料を作り検討する具体的な努力を確認しにくい。
- ・ (3) 韓国における原発からの住民被ばく線量の管理に対する検討
- ・ 住民被ばく線量の監視体系と韓国の保護基準
- ・ 韓国における原発周辺住民の環境放射能被ばくを監視するために三つの資料を作成している。
 - ・ 原発からの放射能廃棄物放出にともなう放出量資料
 - ・ 原発の周辺環境において測定される環境放射能の資料
 - ・ 放出量資料と露出モデルに基づいた原発周辺住民が露出する被ばく線量資料
- ・ しかしこのような資料の正確度、信頼度などに対する評価基準、そして資料の定量的結果に基づいた被ばく管理に対する具体的な管理基準は見つけることができない。

· 古里原発1号機の放射能廃棄物の放出量資料



· もう少し具体的に、原発からの放射能廃棄物の排出と関連して次のような資料の異常所見が確認されている。

- ・ 1979年、そして1993年にそれぞれ平常時の数千倍を越す量の気体および液体廃棄物が排出されたと確認されたが、その正確な原因と管理変更状況が確認されていない。
 - ・ 1981年から83年までの住民の被ばく線量が推定計算されていない
 - ・ 1979年に海草類の放射能ヨウ素測定がされていない
 - ・ 環境放射能測定の質管理と程度管理に対する資料がない
 - ・ その他放出された放射能の核種がどのくらい完璧に把握されたのかに対する基本資料がない
- ・ このような資料の異常を基に検討した場合、韓国政府が遂行した原子力発電所管理の盲点は次のとおりである。
- 下記に提示された例の通り、原子力発電所の運営により健康への影響という問題が発生するまでの具体的な段階とそのような段階を合わせる全体管理の枠組みがない
 - 原子力発電所の運営 → 放射能廃棄物の放出 → 環境汚染 → 大気、水質、食品などを通じた露出 → 被ばく線量 → 健康への影響
 - 最終的な問題に達する以前の過程に対する管理を通じて、どのように原発運営と健康への影響が変わることができるのかに対する判断基準と各基準別の管理代案がない
- ・ 測定の不確実性：各段階別測定方法および資料生産方式
 - ・ 評価の不確実性：測定にともなう変移の範囲と評価基準
 - ・ 代案の不確実性：評価基準により提示されるうる各々異なる管理代案
 - ・ 管理の不確実性：管理代案による問題解決の可否の確認
 - ・ 管理体系の不確実性：最終的な問題発生に対する追跡観察
- ・ 先に指摘した原発からの放射能廃棄物放出に関連した資料に基づいて検討した場合、実際の評価と代案導出において、韓国政府は自然放射能水準とALARA原則に基づく基準を全く適用しなかったと判断されている。
- ・ 一方、現在ラドンが放出されるベッドによる健康への影響の管理が社会問

題として提起されており、次の通りWTO控訴機構に提出した韓国政府の適切な保護基準(Acceptable Level of Protection, ALOP)をどのように自主的な放射能汚染製品に適用するのかについてが注目されている。

- ・
- ・ 韓国政府のALOP
 - ・ 1 mSv/yrの基準以外
 - ・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
 - ・ Ordinary environment (自然放射能水準)

한국의 보건의료운동과 반전평화운동

韓国の保健医療運動と反戦平和運動

우석균 인의협 공동대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仁義協共同代表,保健医療団体連合政策委員長 ウ・ソクギョン

한국의 보건의료운동과 반전평화운동

우 석 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역사상 가장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가장 크게 위협한 것은 역병과 폭력이었고, 이 폭력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전쟁이었다. 따라서 전쟁은 인류의 건강을 향한 운동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보건의료운동도 반전평화운동과 긴밀한 연관을 맺어왔다.

이 글은 이번 행사의 취지에 맞게 한국의 보건의료운동이 어떻게 반전평화운동 반핵운동을 벌여왔는지를 간단히 그 흐름을 살펴보려는 글이다. 이 글은 인의협과 보건의료단체연합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되었으며 대략적 흐름을 보는 글로서 본의 아니게 누락된 운동들도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사회운동의 역사적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보건의료운동이 새롭게 다시 시작된 것은 1970년에 들어와서였다. 그리고 보건의료운동이 인의협이나 건치, 건약, 청한 등의 대중단체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가 되어서였다 그 당시 반전평화운동은 주로 통일운동과 미군의 핵무기 반대운동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흐름이 보건의료운동에 나타난 것은 보건의료학생운동에서 었다.

1987년 창립된 인의협은 발기취지문에서 앞으로 벌여나갈 활동으로 “인도주

의적 보건의료의 실천을 위한 사업”을 하나로 들고 그중 하나로 “재난이나 질병의 집단발생에 대한 의료구조 및 역학조사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초기에 매향리 미군기지 소음조사사업과 필리핀에서의 핵전쟁 방지 국제 의사회(IPPNW) 총회 참석 등으로 나타났다.

1. 매향리 미군기지 역학조사로 시작된 미군기지 반대운동

서울에서 차량으로 약 2시간 가량 떨어진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에는 미 공군 사격장이 있었다. 이 공군 사격장은 1968년에 건설된 이후 폐쇄될 때까지 군 비행기의 사격과 소음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 이 마을들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의 하루 평균 10-13시간 동안 60-70 대의 전폭기들이 날아와 1 대당 평균 10 회 이상 모두 600-700 회의 폭탄투하 연습 및 기총소사 훈련을 하고 있다.

인의협은 1989년 4월 매향 1,2,3 리의 주민 150 명을 대상으로 소음에 의한 건강 피해를 조사한 결과 매향리 주민들의 33.3%가 난청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매향리 지역 주민들의 평균 혈압이 138 mm Hg로 소음이 없는 인근의 호곡리 주민의 평균 혈압 127 mm Hg 를 크게 웃돌았고, 고혈압환자 발생률도 호곡리 지역보다 4배 높은 24% 를 기록했다는 것을 조사했다.

이 소음조사와 난청 등의 역학조사결과를 근거로 1988년 12월부터 미 공군 사격장 이전을 요구하면서 매향리 주민들이 저항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 계기로 지역 주민들의 자생적인 투쟁력에 기반하여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미 군사기지와 관련된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가칭 '미군기지 주민 피해 공동대책위원회'구성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²³⁾ 보건의료운동이 한국의 미군기지 반대운동이 시작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매향리 미군기지 소음조사활동은 2000년 6월 4일과 5일 매향리,석천리 남녀 주민 28명과 대조군인 10km 인근 주곡1,2리 주민 30명 등 모두 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학조사로 이어졌다. 이 조사결과 매향리 일대 지역주민들의 청력은 대조군인 주곡리 주민들에 비해 현저히 저하돼 있었으며 중금속 농도 조사에서는 피해지역 주민의 혈중 납농도가 평균 3.42 /dl에 달해 납을 다루는 근로자 평균치 2.03 /dl의 1.7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산사례 조사결과 피해지역에서 10명의 임신부중 2명이 임신 초기 "비정상적인 유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16명의 임신부를 조사한 대조지역에서는 이런 사례가 관찰되지 않았

23) 매향리 미군사격장 소음, 1994. 환경운동연합 참조

다.

이 결과를 근거로 한 주민들의 소송이 승소로 끝났고 미군 쿠니기지는 2005년 폐쇄된다. 매향리 주민들의 승리를 계기로 미군기지 반환운동은 하나의 전기를 맞았고 같은 운동이 군산, 대구, 춘천 등 미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서도 진행되었으며 이 운동에도 인의협이 모두 관여하였다. 그리고 기지폐쇄운동은 대체로 승리로 끝났다.

이 운동은 용산 미군기지의 중금속 방류사건에 대한 항의운동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미군기지반대운동은 주한미군의 기지들의 폐쇄와 평택으로 이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운동에도 인의협이나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함께했다.

이러한 운동은 최근 제주도의 강정해군기지 반대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많은 회원들이 강정해군기지 반대운동에 참여하였다. 또 이 운동은 경북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THAAD)미사일 반대운동으로도 이어졌다. 사드배치 반대운동에는 사드의 전자파가 미치는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에 대한 보건의료운동의 대응도 있었다. 최근에는 미국이 용산 평택 부산 등에서 진행한 세균전 대응활동 실험인 주피터 프로그램(JUPITR program)에 반대하는 운동도 있었다.

2. 이라크 파병반대운동과 베트남 의료지원 등 반전운동

보다 대규모의 대중적 반전운동은 이라크파병 반대운동이었다. 미국은 9.11 사태이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였고 인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에 대해 반대시위를 벌였다. 한국에서의 대규모 반전시위가 벌어진 것은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파병이 계기가 되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라크 전쟁발발 시기부터 국제반전시위를 함께 벌였고 UN의 이름으로 자행된 경제봉쇄가 이라크 어린이 60만 명을 죽인 사실을 폭로하여 반전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이라크 파병반대운동은 “이라크 어린이에게 폭탄이 아니라 의약품” 캠페인으로 발전하였다. 한겨레신문과 함께한 이 캠페인은 한국의 4대교단과 시민단체들과 함께 하는 모금운동으로 이어졌고 4주간의 캠페인으로 6억 원을 모아 이 돈으로 이라크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하게 되었다.

2003년 3월 약 30명의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의료지원단이 전쟁발발과 함께 이라크에 들어가 주로 요르단 등에서 구입한 의약품을 전달하고 현지에서 한 달 이상 진료소를 운영하였다. 이 진료소와 함께 이라크 어린이들에 대한 학용품의 지원 등이 있었고 이라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심리조사가 함께 진행되었다. 이 역학조사 결과는 이라크의 “98%의 어린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살 수 없을

까봐 걱정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 전쟁의 비극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2003년 5월에는 1억원의 모금이 더 이루어져 이를 다시 지원하기 위해 마지막 의료지원단을 이라크에 파견하였고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 이들은 의료지원과 역학조사를 진행하였다. 전쟁이 미친 기아와 영양실조, 의료자원의 파괴, 생활인프라의 파괴가 미친 건강에 대한 피해 등이 조사되었고 발표되었다. 현지 진료소는 현지에 남기고 온 의약품과 의료기구들로 유지되었었다.

이러한 의료지원은 전쟁의 실상을 한국 사람들에게 알리고 평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데 매우큰 역할을 하였고 이라크 의료지원단은 그 당시 경험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데 강연회 등에 참여하여 노력하였고 이후 2003년과 2004년의 한국의 이라크 반전운동 및 파병반대운동의 대중적 전개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파병반대운동과 반전운동은 그 이후로도 꾸준히 이어졌다.

이러한 반전평화운동은 베트남 파병에 대한 반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9년 한국 사회에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알려졌고 시민 사회에서는 끔찍한 전쟁의 상처를 사죄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당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직접 베트남 현지 피해 지역을 찾아 갔고 치과 진료 활동을 통해 평화와 화해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2000년 ‘화해와 평화를 위한 베트남 진료단’이란 이름으로 현지에서 첫 치과 진료를 시작했으며 회원들의 뜻을 모아 2002년 베트남평화의료연대로 단체명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치과의사뿐 아니라 2004년에는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소속 한의사들이 활동에 동참하며 학살 피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한의과 진료를 시작했다. 이 활동은 현재도 <베트남평화의료연대>가 계속하고 있으며 건치와 청한의 주요활동의 하나다²⁴⁾.

3. “북 어린이에게 의약품을” 활동과 어린이 의약품 지원본부, 남북교류운동

1996년 북에 수해가 발생하고 90년대 중 후반부터 북에 대규모 기근이 발생했다. 이는 같은 민족으로 그리고 같은 의료인으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96년부터 북에 보건의료단체들이 모금을 통해 유니세프를 통한 지원을 했다.

97년 기근이 확대되자 인의협은 건치 청한 건약 등 다른 단체들과 함께 “북한 어린이에게 의약품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캠페인은 북에 대한 식량지원

24) 베트남평화의료연대, 평연소개 <https://www.medi4peace.org/x/about>

이 군사지원이 된다(“북에 보낸 쌀, 포탄되어 돌아온다”)는 우익들의 압력에 굴복한 김영삼 정부의 북 지원 거부와 북지원운동 탄압에 맞선 운동방식으로 고안된 것이기도 했다.

이 캠페인은 사실상 2003년의 이라크 의료지원 캠페인의 모델 역할을 했는데 이때도 한겨레신문과 공동캠페인을 했고 4대 종교 교단이 함께했다. 6개월 이상 진행된 캠페인을 통해 30억원 이상을 모았고 이를 북에 전달했다. 이 캠페인이 북에 대한 민간차원의 대규모 지원의 시초였다.

이때 북한 어린이 의약품지원본부를 결성했고 이 단체를 통해 북의 기근 실상을 알릴 수 있었다. 북에 괴물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살고 있음을 알렸다. 이 운동은 2001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은 물론 남북의료 교류사업, 북에 대한 의학저널지원, 의료기구 및 의약품 공장건설 지원, 병원건설지원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운동이 남북의 긴장완화와 평화에 기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4. 반핵운동과 평화운동

3.11은 한국에서의 반핵운동이 대중운동으로 되살아나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일본 민이렌(民医連)과의 연대로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 등의 활동을 알고 있었고 이것이 3,11 사태에 대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빗물 방사성요오드(I-131) 및 방사성세슘(Cs-137/134) 분석결과
단위 : Bq/L

측정소	채취일시	측정일시	I-131	Cs-137/ Cs-134	합계
서울	4.7. 10:00	4.7. 16:00 ~4.8. 10:00	1.81 (0.0291*)	불검출	1.81 (0.0291)
				0.387 (0.0037)	
대전	4.7. 10:00	4.7. 13:00 ~4.8. 10:00	1.40 (0.0225)	0.334 (0.0046)	2.121 (0.0303)
				0.406 (0.0039)	
광주	4.7. 10:00	4.7. 16:00 ~4.8. 10:00	2.69 (0.0430)	0.379 (0.0035)	3.475 (0.0504)
				0.299 (0.0028)	
부산	4.7. 10:00	4.7. 10:00 ~4.8. 10:00	2.49 (0.0400)	0.273 (0.0038)	3.062 (0.0466)
				0.978 (0.0093)	
제주	4.7. 10:00	4.7. 21:00 0~4.8. 10:00	2.81 (0.0451)	0.928 (0.0129)	4.716 (0.0622)

주) ()안은 연간피폭선량*으로 환산한 값으로 단위는 mSv
* 연간피폭선량 : 검출된 농도의 빗물을 1년 동안 마셨을 경우의 피폭선량
※ X-ray 1회 촬영 시 받는 선량은 약 0.1mSv, 일반인의 연간 피폭선량 한도는 1mSv

그림 10 2003년 4월 7일 한국에서 내린 비의 지역별 방사능 수치.

한국에서는 3.11 이 단지 일본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직접 피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했다. 실제로 4월 한국에서 3.11 이후 4월 7일 처음 비가 내렸을 때 한국의 비에는 1.81(서울)~4.71(제주)Bq/L의 방사능이 포함되었다.

이후에도 일본 후쿠시마 현과 그 주위 농산물과 수산물 등에서 방사능이 계속 검출되었고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은 안전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맞서 안전한 방사능 기준치는 없으며 방사능은 축적된다는 사실을 알려나갔다. 이 활동에는 일본 민이렌의 3.11과 방사능 리플렛 번역, 배포도 포함된다. 이러한 운동은 한국이 탈핵으로 정책을 전환시킨 대중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움직임은 반핵의사회의 창립으로 이어졌다. 반핵의사회는 정부가 원전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결과가 왜곡되었고 사실은 원전주변주민들이 암 유병률과 발생률이 높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원전을 새로 지으려는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과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반핵운동은 3.11 이후의 반핵운동이 주된 운동이지만 그 이전에도 있었다. 인의협 창립직후 다수의 회원들이 필리핀의 IPPNW 총회에 참석을 하였던 바도 있다. 또 2003년 부안 저준위 핵폐기장 설립 반대운동 당시 이에 운동에 보건 의료운동도 참여하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주민들의 불안과 경찰 폭행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역학조사 결과 경찰의 폭력이 ‘폭도에 대한 대응’이라는 경찰당국의 선전과는 달리 피해자들이 노인과 여성들이 다수였고 머리 상처가 주로 후두부에 나있는 것 등으로 보아 경찰의 폭행은 ‘경찰을 피해 도망가는 무방비 시위군중에 대한 폭력’이었음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에서의 비핵운동은 핵무기 반대운동과는 어느 정도 경계가 있는데 보건의료운동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반도내 핵 긴장을 유지하고 높이려는 미국과 일본의 핵무장과 군비강화에 반대하고 북의 핵무기에도 반대하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5. 소결

한국에서의 보건의료운동의 반전평화운동은 국제적인 반전운동의 참여와 한국의 외국으로의 파병반대운동, 미군기지 반대운동, 북 지원운동과 남북교류운동, 핵무기 반대운동과 핵발전소 반대운동 등으로 이루어져 왔다. 지금은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에 대항하는 운동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현

재 미·일-중의 제국주의적 갈등이 첨예하게 강화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려면 그 어느 때보다 동아시아 민중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일 보건의료인간의 평화와 반핵을 위한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쟁반대와 평화를 위한 한일 보건의료운동의 연대를 강화하자!

공동주최단체 소개 및 메시지

団体紹介とメッセージ

日本

▶ 新日本婦人の会



新日本婦人の会

New Japan Women's Association (NJWA/Shinfujin)

新日本婦人の会（新婦人）は、1962年10月19日、女性運動家の平塚らいてうなど各界の著名な女性32人の呼びかけで、5つの目的を掲げて創立。

<5つの目的>

- 核戦争の危険から女性と子どもの生命を守ります
- 憲法改悪に反対、軍国主義復活を阻止します
- 生活の向上、女性の権利、子どものしあわせのために力をあわせます
- 日本の独立と民主主義、女性の解放をかちとります
- 世界の女性と手をつなぎ、永遠の平和をうちたてます

会の目的に賛同する女性は誰でも入会でき、やりたいことや困っていることなどどんな要求も実現する女性団体。多彩な要求別のサークルで楽しんでいる。

全国の地域や職場に8600の班、市区町村に900の支部、47全都道府県に本部、全国を結ぶ中央本部がある。個人加盟では最大の女性団体で、会員は約13万3000人、週刊「新婦人しんぶん」（21万部）を発行。日本婦人団体連合会、国際婦人年連絡会に参加し、女性の共同をすすめている。

2003年に国連経済社会理事会の特別協議資格を取得。国連NGOとして、国連の会議に代表を派遣し、国際的な到達を運動に生かしている。毎年夏の原水爆禁止世界大会と核兵器なくそうそう女性のつどいで、女性平和基金の招待者を始め海外の女性たちと交流を広げている。

신일본부인회

New Japan Women's Association (NJWA/Shinfujin)

신일본부인회(신부인)는 1962년 10월 19일, 여성운동가인 히라츠카 라이초 등 각계의 저명한 여성 32인의 주창으로 다섯 가지 목적을 내세우며 창립.

<5개의 목적>

- 핵전쟁의 위협에서 여성과 아이들의 생명을 지킵니다.
- 헌법 개악에 반대하고 군국주의 부활을 저지합니다.
- 생활의 향상, 여성의 권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힘을 모읍니다.
- 일본의 독립과 민주주의, 여성의 해방을 쟁취합니다.
- 세계의 여성과 손을 잡고 영원한 평화를 확립합니다.

모임의 목적에 찬동하는 여성은 누구라도 입회할 수 있으며, 하고 싶은 것이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 등 어떤 요구라도 실현할 수 있는 여성 단체로서 다채로운 서클 활동이 가능하다.

전국의 지역과 직장에 8600개의 반, 시구읍면에 900개의 지부, 47 도도부현 모두에 본부, 전국을 연결하는 중앙 본부가 있다. 개인 가맹으로는 최대 규모의 여성 단체로, 회원은 약 13만3000명, '신부인 신문'(21만 부)을 발행. 일본부인 단체연합회, 국제부인연락회에 참가해 여성의 공동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03년에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의 특별협의 지위를 취득. 유엔 NGO로서 유엔 회의에 대표를 파견해 국제적인 성취를 운동에 살리고 있다. 매해 여름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와 핵무기를 없애기 위한 여성 모임에서 여성 평화기금 초대자를 비롯, 해외의 여성들과 교류를 넓히고 있다.

▶ 原水爆禁止日本協議会（日本原水協）

原水爆禁止日本協議会(日本原水協)は、原水爆禁止を目的に活動している諸分野の団体・個人の団体協議体であり、労働、商工団体、農民、医療機関、女性、平和、文化、スポーツ、青年、学生、国際友好など約60の全国組織と、全国47都道府県原水協・個人で構成されている。

第二次世界大戦後、米国の全面占領下に置かれた日本では、1945年広島・長崎の原爆被害に関わる報道や運動は厳しく規制された。国民的な原水爆禁止運動誕生のきっかけとなったのは、1954年3月1日、米国による太平洋ビキニ環礁での水

爆実験とそれによる現地住民や日本漁船の被害、太平洋の放射能汚染だった。日本全土に広がった原水爆禁止署名の数は日本の有権者の過半数の3158万余筆に達し、1955年8月、広島・長崎で原水爆禁止世界大会が開催された。日本原水協は同年9月、核戦争阻止、核兵器全面禁止・廃絶、被爆者援護・連帯を三つの基本目標として結成され、以来、この基本目標を指針に、国民諸階層のなかと全国の草の根で恒常的に活動している。

日本原水協は、毎年8月に開催される原水爆禁止世界大会の実行委員会の一員として開催にあっている。世界大会に向けては、5月6日から全国11のコースで10万人が参加する原水爆禁止国民平和大行進を行っている。また核兵器禁止の署名運動、被爆者援護のための募金運動などに、全国の草の根で日々活動に取り組んでいる。

【加盟】 国連社会経済理事会登録非政府組織 (ECOSOC-NGO)、国際平和ビューロー (IPB)

【連絡先】 〒113-8464 東京都文京区湯島2-4-4 Tel: 81-3-5842-6034
Fax: 81-3-5842-6033

Email: antiatom@topaz.plala.or.jp URL: <http://www.antiatom.org/>

원수폭금지 일본협의회(일본원수협)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일본원수협)는 원수폭금지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제 분야의 단체 및 개인의 협의체로서, 노동, 상공단체, 농민, 의료기관, 여성, 평화, 문화, 스포츠, 청년, 학생, 국제우호 등에 관련한 약 60개의 전국조직과 전국 47개 도도부현 원수협 및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차세계대전 후, 미국의 점령 하에 놓인 일본에서는 1945년에 있었던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에 관한 보도와 운동은 엄격히 규제되었다. 국민적인 원수폭금지 운동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1954년 3월 1일, 미국이 태평양 비키니 환초에서 실시한 수소폭탄 실험과 그로 인한 현지 주민, 일본 어선의 피해, 태평양의 방사능 오염이었다. 일본 전역으로 확산된 원수폭금지 서명자 수는 일본 유권자의 과반수인 3158만여 개에 달했고, 1955년 8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원수폭금지 세계대회가 개최되게 되었다. 일본원수협은 그해 9월, 핵전쟁 저지, 핵무기 전면 금지 및 폐절, 피폭자 원호와 연대를 3대 기본 목표로 해서 결성되었으며, 이 기본 목표를 방침으로 삼아 여러 계층과 연대, 전국적 대중운동을 해오고 있다.

일본원수협은 매해 8월에 개최되는 원수폭금지세계대회 실행위원회의 일원으로서 개최를 주도하고 있다. 그에 앞서 5월 6일부터 전국 11개의 코스에서 10

만 명이 참가하는 원수폭금지 국민평화대행진이 열린다. 또한 핵무기금지 서명 운동, 피폭자 원호를 위한 모금운동 등에 전국적인 대중운동으로서 일상적으로 활동에 임하고 있다.

[가맹] 유엔사회경제이사회 등록비정부조직(ECOSCO-NGO), 국제평화 뷰로(IPB)

[연락처] 113-8464 도쿄도 분쿄구 유시마 2-4-4 (〒113-8464 東京都文京区湯島2-4-4) Tel: 81-3-5842-6034 Fax: 81-3-5842-6033

Email: antiatom@topaz.plala.or.jp URL: <http://www.antiatom.org/>

▶ 全国労働組合総連合（全労連）

全国労働組合総連合（全労連）は、1989年11月に誕生しました。大幅賃上げや労働時間の短縮、労働法制の規制緩和に反対し人間らしい労働条件を求めるたたかいはじめ、「社会保障、教育の充実」、「消費税減税」「TPPなど自由貿易反対」や平和・民主主義を守る課題など国民生活、社会全般にかかわる目標をかかげています。

全労連は19の産業別全国組合（単産）と47の都道府県組合（地方組織＝ローカルセンター）で構成され、全国で約100万人の組合員がいます。組合員が主人公の活動を基本に、組合員の政党支持・政治活動の自由を保障し、全国的な統一闘争を進めています。また、国民的な要求実現のための共同や世界の労働者との連帯も大きく広げています。

▶ 日本民主医療機関連合会（全日本民医連）

戦後、医療に恵まれない人々の要求にこたえようと、地域住民と医療従事者が手をたずさえ、民主的な医療機関が各地につくられました。全日本民主医療機関連合会(全日本民医連)は、これらの連合会として1953年に結成されました。以後、半世紀以上にわたって地域の人々にささえられ、身近な医療機関として活動しています。

綱領で「人類の生命と健康を破壊する一切の戦争政策に反対し、核兵器をなくし、平和と環境をまもります」としており、広島長崎被曝者医療をはじめ、ビキニ被曝者、福島第一原発事故被害者、辺野古新基地建設反対運動連帯、遺棄毒ガス被害者、ハルモニの各支援に取り組んでいます。

現在、民医連に加盟する事業所は、全国に1700カ所を超え、約8万2千人の職員と、医療生活協同組合員や友の会会員約350万人の方々が、ともに保健・医

療・福祉の総合的な活動、安心して住み続けられるまちづくり運動を進めています。

전후, 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의료 종사자가 연계해 민주적인 의료기관이 각지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전일본민의련)는 이러한 기관들의 연합회로서 1953년 결성되었습니다. 이후, 반세기 넘게 지역 주민들의 후원 속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파괴하는 일체의 전쟁 정책에 반대하며, 핵무기를 없애고 평화와 환경을 지킨다”는 강령을 갖고 있으며, 히로시마, 나가사키 피폭자 의료를 비롯, 비키니 피폭자,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피해자, 헤노코 신기지 건설 반대운동 연대, 유기 독가스 피해자, ‘할머니’의 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민의련에 가맹한 사업소는 전국 1700곳을 넘으며, 약 8만 2천 명의 직원과 의료생활협동조합원, 동호회 회원 약 350만 명의 분들이 함께 보건, 의료, 복지의 종합적인 활동과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協力団体(협력단체)

- ▶ 日本原水爆被害者団体協議会(일본원수폭피해단체협의회)
- ▶ 戦争させない・9条壊すな！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전쟁을 시키지 말라・9조를 부수지 말라! 총궐기행동 실행위원회)

韩国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약칭 민주노총)은 100년에 걸친 한국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1995년 11월 11일 창립했습니다. 2,500만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동기본권, 임금,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자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투쟁합니다.

2016년 겨울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의 민주주의로 확대하고자 업종과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민주노총의 문을 두드리려 현재 민주노총은 100만 여명의 조합원을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약하는 모든 요소들을 철폐하고 누구나 노조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작은 사업장 노동자, 이주노동자를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전략조직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더 넓고 더 큰 단결을 위해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 산별노조운동을 강화하고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까지 폭넓게 대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노동자 국제주의 강화와 국제노동운동의 발전과 인권의 신장에 기여하고 전쟁과 핵무기 위협에 맞서 세계평화를 실현해 나가려고 합니다.

민주노총은 16개 산별노동조합의 총연맹이며 전국 16개 도·광역시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全国民主労働組合総連盟

全国民主労働組合総連盟(略：民主労総)は100年に及ぶ韓国の自主的で民主的な労働組合運動の歴史と伝統を継承・発展させることを目的に1995年11月11日創立されました。2,500万人の労働者の人間らしい生活のために労働基本権、賃金、労働時間などの労働条件の改善と労働者の政治・経済・社会的な地位の向上のために戦っています。

2016年冬のろうそくデモを起点に多くの労働者たちが広場民主主義を働き場の民主主義に拡張させようと、業種と雇用形態を問わず民主労総の門を叩いて、現在民主労総は100万人強の組合員を代表することになります。労働者の団結権を妨げる全ての要因を撤廃し、誰もが労組活動ができる世界を目指しています。特に非正規職の労働者、小規模企業の労働者、移住労働者たちを効果的に組織するために戦略組織化事業を展開しています。より広く、より硬く団結するために個別会社の枠を乗り越えた産別労組運動を強化し、まだ組織化されていない非正規労働者の利害と要求まで幅広く代弁するために尽力しています。

民主労総は新自由主義の世界化に立ち向かって、労働者の国際主義の強化と国際労働運動の発展、人権の伸長へ貢献しながら、戦争と核兵器の脅威と戦いながら世界平和を実現していきたいと思えます。

民主労総は16の産別労働組合の総連盟であり、全国道・広域市の16ヶ所に地域本部があります。

▶ 반핵의사회

반핵의사회는 2012년 1월 창립하여 7년째 탈핵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반대, 핵무기 개발 반대를 통해 평화와 안전이 오기를 회구합니다.

反核医師会

反核医師会は2012年1月に創立して7年の間脱核運動をしてきました。原子力発電所の反対、核兵器開発の反対をしながら平和と安全が来るのを望みます。

▶ 사회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는 1998년 IMF 이후,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새로운 대안적 사회운동을 일구어 나가기 위해 ▲사회운동의 변혁적 사상·이념의 재건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에 대한 국제적·민중적 대안의 모색과 실천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의 혁신을 기치로 출범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등 전 세계 민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 폭력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며, 노동조합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의 역량 강화와 노동자 민중의 단결과 연대의 힘에 기초하여 새로운 대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9길 14-1 거산빌딩 3층 [우 03984]

☎02-778-4001 / www.pssp.org / pssp4001@gmail.com /

Facebook) socialmovementfocus

社会進歩連帯

社会進歩連帯は1998年IMF以来、新自由主義に対抗する新たな社会運動を築き上げていくため、▲社会運動の変革及び思想・理念の再建▲新自由主義金融・軍事世界化に反する国際的・民衆的な提案の模索と実践▲労働者運動と女性運動の革新を求めて発足しました。

社会進歩連帯は労働者、農民、貧民、女性など全世界の民衆への搾取と抑圧、暴力を深刻化させる新自由主義に反対し、労働組合運動をはじめとする大衆運動の力の強化と労働者民衆の団結と連帯の力に基づいて新しい世界を建設するために活動している団体です。

住所: ソウル市麻浦区東橋路29道14-1 3階[郵便番号03984]

☎ +82-2-778-4001 / www.pssp.org / pssp4001@gmail.com / Facebook)
socialmovementfocus

▶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는 성평등한 한반도,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풀뿌리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여성과 젊은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평화활동가, 전문가, 모든 파트너들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된 한국의 연대체입니다.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활동해 온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전국여성연대에 의해 창립되었습니다.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는 2020년까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교육과 조직, 평화과정에서의 여성참여 등의 주창활동을 전개하는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End the War”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본 캠페인은 평화와자유를위한여성국제연맹(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위민크로스디엠지(Women Cross DMZ), 노벨위민스이니셔티브(Nobel Women's Initiative)와 함께 비핵화, 평화과정에서의 여성참여, 제재해제, 인도적지원에 대한 주창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여성연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의제개발,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동북아 여성평화활동가들과의 연대, UN과 UN회원국, 미 의회에서의 한반도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공공외교 활동 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걸음을 걸어 나가고자 합니다.

女性平和運動ネットワーク(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

「女性平和運動ネットワーク」はジェンダー平等な朝鮮半島、戦争なき世界を目指して草の根の女性たちの声を集め、女性や若い女性たちの力量を強化し、平和活動家、専門家、全てのパートナーたちからの協力を図るため、新しく立ち上げた韓国の連帯体です。

여성平和運動ネットワークは非核化と平和体制構築のために活動してきた韓国女性団体連合、平和をつくる女性会、韓国YWCA連合会、全国女性連帯により創立されました。

여성平和運動ネットワークは2020年まで朝鮮半島における平和協定締結に向けた教育や組織、平和プロセスでの女性参画などのアドボカシー活動であるグローバルキャンペーン「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End the War」を繰り広げています。

このキャンペーンは 婦人国際平和自由連盟(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ウィメン・クロスDMZ(Women Cross DMZ)、ノーベル・ウィメンズ・イニシアティブ(Nobel Women's Initiative)とともに非核化、平和プロセスでの女性参画、制裁解除、人道支援に関連したアドボカシー活動を展開しています。とりわけ、女性たちの連帯を通じた朝鮮半島の平和プロセスアジェンダ開発、朝鮮半島及び東北アジアの平和に向けての東北アジア・女性平和活動家との連帯、国連と国連加盟国、米国議会内部へ朝鮮半島の女性たちの声を届ける公共外交活動などを通じて朝鮮半島での平和実現に向けた歩みを始めたいと思います。

メールアドレス : KWMP2020@gmail.com

ファクス : +82-2-6959-9329

▶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이 조직은 2017년, 당시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달마산에 배치하겠다는 발표 이후 이를 막기 위해 결성되었다. 성주 소성리는 원불교 제2대 교조인 정산 송규 종사의 탄생가와 스승을 만나고자 기도한 달마산 기도터가 있고, 원불교 창시자인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를 만나러 간 구도순례의 성지로서, 삼동윤리의 가르침을 통해 상생 평화 하나의 세계를 제창하시고 실천하신 정산 종사의 가르침을 받들어 성주성지를 수호하며, 대한민국과 동북아의 평화를 깨뜨리는 전쟁무기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평화를 이뤄내기 위해 만든 원불교의 특별조직이다.

대한민국에서 탄생한 현대불교인 원불교의 성지가 전쟁무기로 짓밟히고, 대한민국 국민은 접근도 할 수 없는 미군기지가 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종교적 양심과 결의로 사드기지 입구에 천막교당을 설치하고 기도와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원불교비대위는 소성리 주민대책위와 사드저지전국행동 등의 제 시민사회단

체 연대체와 ‘소성리 평화회의’를 구성, 사드배치 과정의 불법성과 평화정세에 역행하는 사드철회의 필요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7년 4월과 9월에 걸쳐 경찰병력 8,000여명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진행된 사드배치를 막기 위한 비폭력 저항운동과 미군은 물론 유류 등 미군관련 어떤 장비나 차량도 마을을 지나 사드기지로 진입할 수 없도록 막는 미군 반입 저지 활동, 평화를 구하는 100배 기도를 800일(5월 19일 기준)째 이어가고 있다. 또한 현재의 사드기지가 있는 달피산 골프장을 ‘세계평화공원’으로 선포하고 전쟁무기 사드를 뽑아내고, 종교의 성지, 평화의 성지로 복원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円仏教聖地守護非常対策委員会

大韓民国で誕生した現代仏教である円仏教の聖地が、戦争武器によって踏みにじられ、大韓民国の国民は接近もできない米軍基地になることは、必ず止めるべきであると宗教的良心と決意を持って、臨時配置されたサード基地の入り口に、天幕教堂を設置し、祈禱と座り込みを続けている。

円仏教聖地守護非常対策委員会は、韶成里住民対策委員会とサード阻止全国行動などの諸市民社会団体と連帯を組んで「韶成里平和会議」を構成し、サード配置過程の不法性と平和情勢に逆行するサードの撤廃必要性を、国内外に知らせる連帯活動を行っている。

2017年4月と9月にかけて、警察兵力8,000余名を動員し、暴力的に行われたサード配置を阻止するための非暴力抵抗運動と、米軍は無論、油類など米軍と関連を持つどんな装備と車両も、村を横切ってサード基地に進入できないよう米軍搬入阻止活動、平和を求める100回の伏拝祈禱を800日間（今年5月19日まで）続けている。なお現在のサード基地があるダルマ山のゴルフ場を「世界平和公園」として宣布し、戦争武器サードを引き抜き、宗教の聖地、平和の聖地に復元するための活動を行っている。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1987년 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겪으면서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던 의사들이 모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를 만들었다.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바람직한 의사상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설립 초기 상봉동 진폐증 역학조사, 문송면 군 수은 중독사건부터 매향리 미공

군 사격장 주변 주민 피해 문제,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사건, 노숙인 진료, 세월호 유가족 단식진료,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수많은 단식농성·고공농성 노동자 진료활동, 2016년 광화문 촛불광장에서 진료소 운영, 최근 난민의료지원까지 다양한 진료활동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동과 정부의 의료영리화, 영리병원허용에 반대하는 다양한 정책활동, 북한 어린이 의약품 지원과 같은 반전평화활동 등도 하고 있다.

우리는 자본과 권력에 당당하게 맞서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활동으로 평등하고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세상을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

人道主義実践医師協議会

1987年の民主抗争と労働者大闘争をのなか、医療人としての社会的役割を悩んでいた医師たちが集まって人道主義実践医師協議会(人医協)を作った。医療人としての社会的責任を果たし、人々の健康のために努力する望ましい医師像を確立していくことが私たちの目標である。

設立当初上鳳洞(サンボンドン)塵肺症の疫学調査、およびムン・ソンミョン群の水銀中毒死事件から梅香里米空軍射撃場周辺に住んでいた住民の被害問題、源進(ウォンジン)レーヨン二硫化炭素中毒事件、ホームレス診療、セウォル号遺族のハンスト診療、白南基(ペク·난기)農民死亡事件、数々のハンスト·高空座り込み労働者診療活動、2016年光化門蠟燭広場での診療所活動、最近難民医療支援にいたるまで、様々な診療活動をしている。

健康保険の保障性の拡大·医療の公共性強化のための運動と政府の医療営利化、営利病院許容に反対する様々な政策活動もしてあり、北朝鮮の子供のための薬のサポートなどの反戦平和活動もしている。

私たちは、資本と権力に堂々と立ち向かって社会的弱者と少数者の側に立って彼らと苦楽を共にする医師になるために努力している。私たちの活動によって一日でも早く誰もが平等で平和に生きられる、健康な世界を作り上げたいと思う。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Women Making Peace)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1997년 3월 28일 창립되었습니다. 평화여성회 창립

멤버들은 1991~3년 동경-서울-평양-동경에서 열린 남-북-일본 여성들의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한국실행위원회 멤버들이었습니다. 1994년 이후 북핵 위기로 토론회가 지속되지 못하고, 1995년 이후 북한의 홍수피해로 식량난이 심각해지던 시기에, 전문적 여성평화·통일운동단체의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북한여성과 아동지원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남북여성교류, 북한여성과 어린이 지원, 평화군축운동,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군사주의 반대운동, 평화문화(평화감수성)운동,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활동,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활동과 국가행동계획 수립(2014년) 이후 민간자문단 활동, DMZ 여성평화걷기 활동, 여성평화연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여성평화운동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한반도 평화과정에서의 의미 있는 참여 모델을 발굴함으로써 성평등한 한반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정책제안, 대중적 캠페인, 국제연대활동, 여성평화전문가 역량강화, 젠더와 평화교육 등의 차원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5길 6 여성미래센터 4층

전화: 02-929-4846/4847, 팩스: 02-929-4843

홈페이지: www.peacewomen.or.kr

平和をつくる女性会(Women Making Peace)

「平和をつくる女性会（以下、平和女性会）」は1997年3月28日に創立されました。平和女性会の創立メンバーたちは1991年から1993年まで東京-ソウル-平壤-東京で開かれた南・北・日本女性たちの「アジアの平和と女性の役割」討論会の韓国実行委員会のメンバーたちでした。1994年以降、北朝鮮の核危機により討論会は継続せず、1995年からは北朝鮮の水害による食料危機が深刻化された時期に専門的な女性平和・統一運動団体設立の必要性に共感し、北側の女性と児童支援キャンペーンを皮切りに平和をつくる女性会が発足されました。

この22年間、平和女性会は南北女性交流、北側の女性と児童支援、平和軍縮運動、良心的兵役拒否運動、軍国主義反対運動、平和文化（平和感受性）運動、葛藤解決と平和教育、朝鮮半島の核問題解決のための国際連帯活動、国連安保理決議第1325号に関連して韓国政府へ行動計画作成を促進する活動と行動計画完成（2014年）以降の民間諮問団活動、ウィメン・クロスDMZ活動、女性平和研究な

도 다양한分野での韓国女性平和運動の歴史を作り上げてきました。これから平和女性会は朝鮮半島の平和プロセスでの意味のある参画モデル発掘を基盤として、ジェンダー平等な朝鮮半島をつくっていくための政策提案、大衆向けのキャンペーン、国際連帯活動、女性平和専門家の力量強化、ジェンダーと平和教育などの側面から努力していききたいと思います。

- 홈페이지 : www.peacewomen.or.kr
- メールアドレス : wmp@peacewomen.or.kr
- 住所 : ソウル市永登浦区国会大路55キル 6 女性未来センター4階
- 電話 : +82-(0)2- 929-4846 / 4847、
- ファクス : +82-(0)2-929-4843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SPARK)

상임대표 : 문규현 | 사무실 : (03751)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2층)
| spark946.org | F : [peaceonekorea](https://www.facebook.com/peaceonekorea) | twitter @[spark946](https://twitter.com/spark946) | youtube : [sparkpeaceone](https://www.youtube.com/channel/UCspkpeaceone)

조직소개 : 전국 14개 지역의 노동자, 농민, 교사, 청년, 시민, 여성 등 3000명이 회원 활동

활동목표 : 비핵군축, 민족자주, 평화·통일, 세계 평화

활동역사 : 한국의 자주평화운동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다 - 평통사는 창립 이후 줄곧 자주, 그 중에서도 군사·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정책 결정에서 진보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투쟁해옴.

주요활동 : 매항리 폭격장 폐쇄 투쟁, 효순미순 두 여중생 투쟁, 국방예산 삭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협정 반대, 평택기지 확장 반대 투쟁, 제주해군기지 건설저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반대, 한미일 MD구축 및 사드배치 반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한국피폭자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7.27일을 기념하여 매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평화홀씨마당 개최

정체성 : 1994년 창립 이후 25년간의 활동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非核・平和のための日韓国際フォーラム

실현, 한미동맹 해체, 국방개혁과 국방비 삭감, 평화군축과 군사적 신뢰구축, 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평통사 정체성으로 확립

平和と統一を開く人々 (ピョントンサ)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SPARK)

常任代表: 文奎鉉 (문·규현) | 事務所: 〒03751 서울 서대문구 경畿大路5길27 (2階) | spark946.org | F: peaceonekorea | twitter @spark946 | youtube:sparkpeaceone

組織紹介: 全国14地域の労働者、農民、教師、青年、市民、女性など3000人の会員が活動中。

活動目標: 非核軍縮、民族自主、平和・統一、世界平和

活動史: 韓国の自主平和運動にくっきりとした足跡を残すーピョントンサは創立以来ずっと自主、とりわけ軍事・安保分野を中心に政府の政策決定に進歩勢力の声を反映するため闘争してきた。

主な活動: 梅香里 (메향리) 爆撃場閉鎖闘争、ヒョスニ・미소니女子中学生 (米軍装甲車轢殺事件) 闘争、国防予算削減、駐韓米軍防衛費分担協定反対、平澤 (평택) 基地拡張反対闘争、済州 (제주) 海軍基地建設阻止、日本の集团的自衛権行使反対、韓米日ミサイル防衛構築・サード配備反対、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破棄、韓国被爆者問題解決のための闘争、停戦協定締結日の7月27日を記念して、毎年、朝鮮半島非核化と平和協定締結を求める「平和の種を飛ばそう広場」を開催している。

アイデンティティ: 1994年創立以来、25年間の活動によって、朝鮮半島非核化と平和協定の実現、韓米同盟の解体、国防改革と国防費削減、平和軍縮と軍事的信頼構築、軍作戦統制権返還などをピョントンサのアイデンティティとして確立。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고 여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와 함께 활동하는 여성단체

들의 연합체입니다.

1987년 창립한 이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의 젠더 불평등에 대항하며 성평등한 사회구조로의 변혁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2018년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For Gender Justice',  한국여성단체연합 2019년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 다'를 기조로, 사회 규범과 가치, 제도와 정책 등 각 분야에 서 성평등에 기반한 실질적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최근에는 미투운동, 낙태죄 폐지 등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에 맞서왔고 정치, 경제, 사회의 각 분야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성평등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다양한 경로의 남북 여성 교류 사업을 활성화 하고, 여성주의적 평화담론과 평화운동 방법을 모색, 실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omen21.or.kr>, 전자우편 : kwau@women21.or.kr
 유선전화 : (82) 2-313-1632, 팩스 : (82) 2-313-1649

성평등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서 연대하는 한국과 일본의 모든 활동가들에게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먼 길 와 주신 일본 활동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과 일본의 연대를 통한 비핵과 평화의 메시지는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 곳곳에서 성평등한 평화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맞잡은 손 놓지 말고 평화의 세상을 함께 상상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韓国女性団体連合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韓国女性団体連合（以下、女性連合）」は持続可能なジェンダー平等社会を実現し、女性の人権を保障する社会を目指して全国7支部、28会員団体とともに活動している女性団体の連合体です。

1987年創立以来、政治・社会・文化・経済・環境など全ての領域において、ジェンダー不平等に対抗し、ジェンダー平等な社会構造への変革に向けて取り組んできました。2018年は「自分の暮らしを変えるジェンダー平等な民主主義-For Gender Justice」、2019年には「ジェンダー平等が民主主義の完成である」というスローガンを掲げ、社会規範や価値、制度や政策など各分野でのジェン

ダー平等に基づいた実質的な変化を遂げるために活動しています。

ジェンダー平等な民主主義を実現するため、最近ではMeToo運動、墮胎罪廃止などジェンダーを基盤にした女性に対する暴力と女性の身体に対する統制に立ち向かいつつ、政治・経済・社会の各分野においての女性の代表性を拡大するために努力してきました。また、ジェンダー平等な朝鮮半島の平和体制づくりのため、様々な経路を通して南北女性交流事業を活発化し、フェミニズム視点からの平和談論や平和運動を模索、実践しています。

- ・ ホームページ : <http://women21.or.kr>,
- ・ メールアドレス : kwau@women21.or.kr
- ・ 住所 : ソウル市永登浦区国会大路55キル 6 女性未来センター501号
- ・ 電話 : +(82)-(0)2-313-1632, ファクス : +(82)-(0)2-313-1649

▶ 国会市民정치포럼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

国会市民정치포럼은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진보적인 국회의원 모임입니다. 본 포럼은 '시민정치' 활성화를 목표로 정당과 시민운동, 국회와 시민사회의 협력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개발, 입법개정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토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는 격동적인 정세 속에 있습니다. 이번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포은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 과제를 함께 모색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비핵화, 평화, 성평등, 핵 개발의 반인도적 반환정적 영향을 축소하기 위한 논의를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모쪼록 이번 포럼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동아시아 평화 공존 공영의 지혜를 모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国会市民政治フォーラム 李貞味(이·ジョン미·国会議員、正義黨)

国会市民政治フォーラムは、新しい政治を渴望する市民の要求に応えるために作られた進歩的な国会議員の会です。本フォーラムは'市民政治'の活性化を目指し政党と市民運動、また国会と市民社会の協力と発展を支援するために作られました。このため、政策開発や立法改正方向などについての様々な研究および討論を展開しています。

現在東アジアは激動的な情勢の中にあります。今回の非核化・平和に向けた韓日国

際フォーラムは、韓日市民社会の連帯を共に模索するために準備されました。東北アジアの非核化、平和、男女同権、核開発の反人道的・反環境的影響を縮小するための論議を共に探すことを期待します。

今回のフォーラムが韓半島の非核化による東アジア平和、共存、また共栄の知恵を集める機会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 정의당

정의당 평화로운한반도본부 본부장 김종대(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평화로운 한반도 본부장 국회의원 김종대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하나의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북미 간 확연한 입장 차이로 무산 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유의미한 대화가 단절된 북-미 관계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요구가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최근 단거리 발사체를 연이어 발사하며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렵게 트인 한반도 비핵화의 물꼬가 거슬러 막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과감한 조치로 중재자를 넘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의 당사자 자리 잡아, 북한이 안정적인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한반도의 평화 협상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포럼을 통해서, 한반도가 평화로 나아가는 길에 많은 지혜가 모이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오랜 시간 정성을 쏟아주신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및 정치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正義党 平和な韓半島本部 本部長 キム・ジョンデ (国会議員)

こんにちは。正義党の平和な韓半島本部長のキムジョンデと申します。韓半島の平和を念願する一つの心で、今日この場に集まってくださった皆様に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

ハノイ米朝首脳会談が米朝間の明確な立場の違いから白紙になりてから3ヶ月が経ちました。有意義な対話が断絶した米朝関係で、北朝鮮は自分たちの要求が切迫していることを示すために、最近、短距離発射体を相次いで発射し、政治的意図

を現わしています。

苦勞して開けた韓半島非核化の扉が逆って塞がれることがあってはなりません。大韓民国は、大胆な措置で仲裁者を超え、韓半島と東アジアの平和の当事者になり、北朝鮮が安定的な非核化の道に進むよう積極的に案内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本格的な韓半島の平和交渉はこれからが始まります。

明日まで続くフォーラムを通じて、韓半島が平和に進む道に多くの知恵が集まることを期待します。もう一度、ご参加くださった皆様に感謝し、今日のフォーラムを成功的に開催するため、長い間ご尽力頂いた韓国と日本の市民・社会团体、学界及び政治関係者の皆様にも深い感謝の意をお伝えします。

－ 협력단체 (協力団体)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원불교평화행동

▶ 합천평화의집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 이로 인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약 70만 명의 사람들이 피폭을 당했다. 그곳에는 강제징용 등으로 일본으로 건너갔던 당시의 수많은 조선인들도 있었다. 현재까지도 한국인 원폭피해자 수, 사망자 수 및 피해 정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히로시마에서 약 5만 명, 나가사키에서 약 2만 명이 피폭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중 히로시마에서 약 3만 명, 나가사키에서 약 1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생존자 중 확인된 숫자인 2만 3천여 명이 한반도 남쪽으로 귀국했다. 하지만 살아남은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방치되고 외면당한 채 후유증과 빈곤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또 하나의 피해자인 한국원폭피해자 2세 환우들도 대물림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현재 전국에 약 1,300여명의 원폭2세 환우는 일반인에 비해 빈혈, 심근경색, 천식, 정신분열증, 우울증, 백혈병 등의 질병 발병률이 3.4배~89배나 높기에 평생 질병과 장애, 사회의 차별, 국가의 방치 속에서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한국원폭피해자 2세 환우를 위한 쉼터인 [합천평화의집]은 2002년 한국원폭피해자 2세인 고 김형률 씨의 커밍아웃으로 시작된 한국원폭2세 인권운동의 성과를 모아, 2010년 3월 1일 ‘한국의 히로시마’ 합천에 설립된 시

민단체이다. 한국원폭피해자 1세와 2,3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활동에 주력하면서 핵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비핵 평화의 실현을 위한 평화운동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원폭피해자와 그 후손의 실질적인 인권개선 등의 활동 및 평화나들이, 합천비핵평화대회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쉽터를 마련해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陝川 (ハプチョン) 平和の家紹介〕

1945年8月6日と9日、日本の広島と長崎に原子爆弾が投下された。これによって広島と長崎で約70万人の人々が被爆した。当時そこには強制徴用などで日本に渡った数多くの朝鮮人もあった。現在までも韓国人原爆被害者数,死亡者数および被害程度について正確に把握されずにいるが、広島で約5万人、長崎で約2万人が被爆したものと推定されている。この内、広島で約3万人、長崎で約1万人が命を失ったし、生存者のうち、確認された数、2万 3千人余りが韓半島の南の方に帰国した。しかし、生き残った韓国人原爆被害者は放置、疎外されたまま後遺症と貧困の中で苦痛な生活を送っている。

もう一つの被害者である韓国原爆被害者2世患友も親から受け継いだ苦痛の中で生きている。現在全国に約1,300人余りの原爆2世患友は一般人に比べて貧血、心筋梗塞、喘息、精神分裂症、うつ病、白血病などの病気発病率が3.4倍～89倍も高いので一生病気と障害、社会の差別、国家の放置の中で苦しい毎日を送っている。韓国原爆被害者2世患友のための憩い場である「陝川 (ハプチョン) 平和の家」は2002年韓国原爆2世被害者である故金亨律 (キム・ヒョンニユル) さんのカミングアウトで始まった韓国原爆2世患友の人権運動の成果を集めて、2010年3月1日‘韓国の広島’陝川 (ハプチョン) に設立された市民団体だ。韓国原爆被害者1世と2,3世の人権と福祉のための活動に注力しつつ、核被害者に対する社会的認識普及と非核平和の実現のための平和運動にも努めている。また、原爆被害者とその子孫の実質的な人権改善などの活動および平和外出、陝川 (ハプチョン) 非核平和大会などの多様な行事を開催して、憩い場を用意して疎通と交流の場として位置づけている。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국제포럼 실행위원
非核・平和のための日韓国際フォーラム実行委員

- 김진영 김·진ヨン(사회진보연대, 社会進歩連帶)
류미경 류·미ギョン(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全国民主労働組合總連盟)
박석민 박·소크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全国民主労働組合總連盟)
양이현경 양·이·현·경(한국여성단체연합, 韓國女性団体連合)
오혜란 오·헤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平和と統一を開く人々)
이보라 이·보라(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人道主義實踐醫師協議會)
이준규 이·준·규(한신대통일평화정책연구원, 韓神大學統一平和政策研究員)
정은아 정·은·아(한국여성단체연합, 韓國女性団体連合)
조영 조·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人道主義實踐醫師協議會)
조은숙 조·은·숙(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圓仏教ソングジュ聖地守護非常對策委員會)

- 朝戸理恵子 아사토 리에코(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 原水爆禁止日本協議會)
河村玲子 카와무라 레이코(신일본부인회, 新日本婦人の會)
土田弥生 츠치다 야요이(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 原水爆禁止日本協議會)
宮澤洋子 미야자와 요코(전일본민의련, 全日本民医連)
平野恵美子 히라노 에미코(신일본부인회, 新日本婦人の會)
布施恵輔 후세 케이스케(전국노동조합총연합, 全国労働組合總連合)
安井正和 야스이 마사카즈(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 原水爆禁止日本協議會)

- 1) [増補 放射線被ばくの歴史ーアメリカ原爆開発から福島原発事故までー], 中川保雄, 明石書店, 2011년, 35쪽.
- 2) BEAR(Committees on the Biological Effects of Atomic Radiation). 주) 10을 참조
- 3) 핵 개발 세력은 당시 이를 [사이언스]라는 잡지에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무기와 핵 발전 개발로 얻어지는 이익을 수용한다면, 개발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생물학적 리스크를 일정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허용 선량치는 이익과 리스크의 균형을 고려해 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 이익과 방사선으로 인한 생물학적 리스크의 균형을 고려한다는 것은 현재의 제한된 지식으로는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으나, 결함을 순수하게 결함으로서만 인정한다면 현시점에서 최선의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저선량 피폭의 리스크를 평가한다면, 리스크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일반 대중의 허용선량에 대해서는 인류가 탄생이후 역사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폭한 자연 방사선의 수준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리스크와 이익(베네피트)의 균형을 잡은 일반인의 허용선량은 자연방사선 연간 100밀리렘(1밀리시버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어야 할 것이다.”(위의 책 116쪽)
 그러나 이런 주장에도 여전히 생물학적 리스크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생물·의학적인 근거에서 방사선으로 인한 질병의 “실제 발생은 무시할 정도이다”라는 논리로 피폭을 정당화해 봐야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불변 하는 것이 체계의 핵심이다. 과학적으로는 자체가 모순된 설명이다. ‘사회 경제적 이익’과 ‘생명과 건강의 손실’이라는 대립구도가 엄청난 모순이었으나, 1960년대를 거쳐 핵 개발 추진세력의 핵심철학으로 작용하였다.
- 4) 위의 책 156쪽
- 5) 특별히 당시부터 반핵운동에서 주장했던 히로시마 나가사키 피폭조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① 1945년 9월초까지의 급성사망 만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194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진 급성사망은 평가에서 제외
 - ② 폭심지로부터 2km 이내의 사람만 조사하고 2km이외의 사람은 제외
 - ③ 급성사망을 핵폭탄 투하 후 40일로 제한하고 실제로는 무려 3개월간 지속된 여타의 급성사망 제외
 - ④ 조사대상을 히로시마 나가사키 거주자로만 제한
 - ⑤ 고선량 피폭자와 저선량 피폭자를 비교대조하는 잘못된 방법을 채택
- 6)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 2010년 권고사항, 전리방사선의 저선량 피폭에 따른 건강상의 영향들], 송주현 번역, 39쪽
- 7) “과기부 고시 ‘방사선작업종사자들의 업무상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선 연구” 최종보고서, 임현술 외, 2004년 11월, 본문 1쪽
- 8) 인터넷 야후라는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검색을 통해 확인한 내용임.
- 9) 위 ECRR권고 20쪽
- 10)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5XXXH002105>
- 11) <https://nonukesnews.kr/1402>
- 12) BEIR는 Committee on the Biological Effects of Ionizing Radiation의 약자로서 통상 ‘전리 방사선 생물학적 영향에 대한 자문위원회’라고 부른다. 이것은 기존의 BEAR(Committees on

the Biological Effects of Atomic Radiation)위원회와 한글자만 틀리다. 즉 ‘원자(Atomic)’ 방사선이 ‘전리(Ionizing)’방사선으로 바뀐 것이다. 나카가와야쓰오에 의하면 학계가 마치 제3자처럼 등장하여 방사선 피폭을 무시하면서 원자력 산업을 옹호하는 역할을 한다. 일종의 ‘정치꾼 과학자’라고 할 수 있다. 역사상 첫 사례가 바로 BEAR 위원회이다. BEIR도 이런 성향을 그대로 갖고 있다. BEAR위원회와 마찬가지로 BEIR 위원회의 뒤에도 핵 발전 독점대기업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왜 원자방사선에서 전리방사선으로 바뀐 것인가? 그것은 핵문제의 주요 영역이 핵 실험으로 인한 ‘낙진’ 문제에서 ‘핵발전소’ 문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7회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들은 BEIR-I과 II에서는 소위 “코스트-베네피트론”의 논리를 제공했다. BEIR-III에서는 위원회 강경파의 승리로 인하여 소위 방사선 선량의 ‘문턱값’을 인정했다.(직선 관계가 아닌 불룩한 곡선관계) BEIR-V에서는 방사선의 발암리스크를 기존보다 3~4배 수정했으나, 선량 영향관계가 여전히 직선이 아니라 곡선관계가 맞다고 주장했다. BEIR-VII에서는 직선관계를(소위 LNT모델의 채택) 채택하는 흉내를 내고 있다. 이런 점만으로도 큰 성과라 할 수 있으나, 저선량 피폭으로 인한 바이스텐더(bystander) 효과나 심혈관계 질환의 유발가능성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BEIR 보고서는 반핵운동과 각종 의학 자료들의 집중적인 제기를 마지못해 수용하는 선에서 핵추진세력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13) 한수원 정규직 노조에서는 갑상선 암을 “감기”라고 부른다. 감기처럼 흔하기 때문이다. 한수원 정규직 중에서 갑상선 암 수술을 받은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이들이 산재보상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추정하건데 이런 사실들이 들어날 경우 핵발전소 운영에 차질을 줄지 모르고, 핵 개발의 당위성이 흔들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14) [생명을 살리는 반핵], 히다순타로지음, 박찬호옮김, 건강미디어협동조합, 168쪽

15) 원자력 안전법의 최초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하도록 하여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와 원자력이용 및 진흥체제를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이행함은 물론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